

경 제 · 인 문 사 회 연 구 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08-03

•

인문 정책과 경제사회·예술·과학기술 정책의 상호연계 증대방안

연구책임자 : 조주연(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8년 인문정책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요 약

- 산업사회로부터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한 21세기의 학문에 대한 요구는 순수 학문의 전문적 분과 체계를 탈피한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지식의 생산임.
- 이를 위해서는 학문의 제 분과들이 균형 발전하는 가운데 상호 연계를 이루면서 융합되어야 함.
- 그러나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이 일어나기 시작한 20세기 후반에는 새 시대의 학문적 요구가 수요자 중심의 실용성에 치우쳐 이해되었고,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대학 개혁이 단행되면서 기초 학문, 특히 인문학은 세계적으로 위기에 빠짐.
-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5·31교육개혁의 뒤를 이은 학부제의 도입 이후 인문학은 존폐의 위기에 처하여 1996년 인문학 위기 선언을 촉발했으며,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06년에 다시 한 번 반복됨.
- 1996년과 2006년 사이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은, 특히 2002년 이후 지원 금액의 측면에서는 결코 적지 않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의 위기 상황 개선이라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인문학에 대한 지원이 통합 학문을 위한 제반 학문간의 상호 연계라는 학문 정책의 큰 그림 없이 인문학에만 긴급 수혈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주요 원인임.
- 이런 방식의 지원은 지식기반사회의 요청에 부응하는 인문학의 변화를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지원금을 둘러싼 인문학계 내부의 소모적인 경쟁을 부추기는 역효과마저 있음.
-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문 정책의 획기적 개선이 있어야 하나,

현재 한국에는 인문 정책을 연구하는 기구조차 없고, 더 근본적으로는 학문 정책 자체가 과학기술에 치중해서 통합 학문 체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

- 이러한 한국적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고가 되는 해외의 사례로는 일본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를 들 수 있음.
 - 일본은 2001년-2002년 사이에 한시적인 기구로 인문사회과학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인문학의 위기에 대응했으며, 그 결과로 시작된 인문사회과학프로젝트는 기존의 분과 체계에 안주하던 인문학의 실천성과 학제성을 끌어내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인사프로젝트에 배분되는 지원금은 일본학술진흥회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문학의 회생과 이를 발판으로 한 학문의 균형 발전 및 통합 학문의 육성으로의 진전은 기대하기 힘들. 이러한 상황은 인문학의 위기가 학문의 균형 발전이라는 견지에서 차지하는 심각한 의미에 대한 일본의 이해 부족을 시사하며, 이는 인사특위라는 한시적인 기구로 인문학의 위기에 대응하려 한 결과임. 따라서 일본의 경우는 특별위원회의 설치 정도로는 인문학의 위기 및 통합적 학문 체계의 구축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사례임.
 - 이에 반해 영국은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위원회(디어링 위원회, 1997)에서 출발했으나 제도적인 기구의 설립(AHRB, 1998)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일본과는 차이가 있음. 14개월 동안의 연구, 240번의 회의, 380번의 공청회를 거쳐 산출된 디어링 리포트는 인문학을 포함한 기초학문의 위기가 영국의 고등교육 및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립된 AHRB는 신자유주의의 압력 아래 극도의 위축 상태에 빠져 있던 예술과 인문학을 진흥하

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했음. 그러나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통합 학문의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AHRB는 2005년 AHRC로 발전했으며, 이로써 영국의 학문지원기구들의 통합체인 RCUK의 산하기구가 되었고, 이를 통해 영국의 인문학은 경제사회, 예술, 과학기술 등의 제반 학문 분야들과 상호연계된 통합 연구와 결합하면서 순수한 분과학문체계를 탈피하여 오늘날의 사회적, 역사적 삶에 이바지하는 실천적이고도 통합적인 학문으로 나아가고 있음. 따라서 영국의 경우는 제도적인 기구의 설립이 인문학 자체의 건전한 육성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통합 학문 체계의 일원으로 육성하는 21세기적 인문학 진흥정책의 선결조건임을 시사함.

- 가장 바람직한 사례는 프랑스임. 프랑스는 CNRS를 통해 기초 학문에 대한 지원과 통합적인 연구를 일찍이 1939년부터 해왔음. 이에 따라 CNRS 산하의 SHS(인문사회분과)는 다른 학문 분과들과 연계하는 연구를 활발하게, 때로는 주도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SHS는 MHS(인문학의 집)이라는 제도를 통해 정부 차원의 연구와 지역 대학의 연구를 연계하는 구조를 활성화시키고 있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CNRS가 매년 박사급 연구원들을 채용해서 국가적 연구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임. 2008년 현재 CNRS에 채용되어 있는 박사급 연구원은 11,600명이고, 이 가운데 SHS 소속의 연구원은 2,160명(2002년 기준)임.
- ° 위와 같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은 4가지임.
 - 1)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에 특별위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 인문정책연구위원회를 인문정책연구원으로 독립, 발전시켜야 함. 이를 통해서만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인문학의 변화를 견인하고 나아가 통합 학문 체계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할 수 있을 것임.

2) 현재 과학기술계로만 배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인문사회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 연구개발비가 특정 분야에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 학문 체계의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 구성도 학문적 균형을 위한 안배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자문위원 안에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위원이 적어도 1인씩은 포함되도록 재구성해야 함.

4) 여전히 산업시대의 연구 수요에 맞추어 경제학 전공자가 40%에 육박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공 분포를 지식기반사회의 연구 수요에 따라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인문학 전공자를 대폭 채용하는 것은 통합적인 연구를 위한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인문학 전공의 고급인력이 처해 있는 극심한 적체 상태를 대폭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 효과가 기대됨.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2장 한국의 학문지원기구와 정책: 현황과 문제	5
1. 한국의 학문지원기구: 현황	5
1.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6
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15
1.3.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1
2. 한국의 학문지원정책: 문제	48
2.1. 지원 분야의 심각한 편중	49
2.2. 통합연구지원정책의 미비	59
제3장 외국의 학문지원기구와 정책: 사례 연구	70
1. 외국의 학문지원기구: 현황	70
1.1. 일본: 인문·사회과학특별위원회와 일본학술진흥회	71
1.2. 영국: AHRC와 RCUK	122
1.3. 프랑스: SHS와 CNRS	170
2. 외국의 학문지원정책: 분석과 시사점	226
2.1. 일본	226
2.2. 영국	228
2.3. 프랑스	231

제4장 인문학 진흥과 학문 분야간 상호연계 정책 개선 방안	234
〈부록 1〉 한국 R&D 예산의 운용 현황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편의 필요성〉	238
〈부록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출연연 연구책임자급 이상 연구위원 전공 현황〉	246
참고문헌	248

표 차 례

〈본 문〉

[표 1] 경인연, 기기연, 산기연 2006-2008 예결산액	50
[표 2] 학진 1996-2005 인문학/이학 지원 과제 수 및 금액 비교표	52
[표 3] 학진 1996-2005 인문사회/이공학 지원 과제 수 및 금액 비교표	55
[표 4] 학진 및 과학재단 인문사회/기초과학 사업별 지원 예결산 비교표	57
[표 5] 학진 및 과학재단 인문사회/과학기술 사업별 지원 예결산 퍼센티지 비교표	58
[표 6] 경인연, 기기연, 산기연 2006-2008 예결산액 대비 협동연구 사업비 규모 및 백분율	60
[표 7] 학진 1996-2007 인문사회분야 전체 지원 과제 수 및 인문사회 분야 학제간/협동연구/공동연구 지원사업 과제 수	61
[표 8] 학진 1996-2007 인문사회분야 전체 지원금 대비 인문사회분야 학제간/협동연구/공동연구 지원금 비교표	62
[표 9] 학진 2006-2007 인문사회 기초연구과제 지원사업 단독연구와 공동연구의 과제 수 및 지원금 비교표	65
[표 10] 1996-2007 사이 학진 인문사회분야 및 인문학 분야 학제간/ 협동연구/공동연구 지원사업 과제 수 비교표	67
[표 11] 1996-2007 사이 학진 인문사회 분야 학제간/협동연구/공동연구 지원금 대비 인문학 분야 학제간/협동연구/공동연구 지원금 비교표	68
[표 12] 학문영역의 발란스 1: 석사학위 취득자의 전공분야별 구성(%)	85
[표 13] 학문영역의 발란스 2: 박사학위 취득자의 전공분야별 구성(%)	85
[표 14] 인사특위 관련 회의 및 경과	88

[표 15] 인문·사회과학의 진흥 정책	95
[표 16] 일본학술진흥회 연혁, 1932~2007	102
[표 17] 2008년도 일본학술진흥회 사업별 예산액	105
[표 18] AHRC 연구 지원 위원회 심사 패널 분야 및 주관 위원	145
[표 19] AHRC 대학원생지원위원회 심사 패널 분야 및 주관위원	146
[표 20] 2008현재 AHRC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략적 연구 프로그램 목록	151
[표 21] 2007년-2008년 SHS에 할당된 예산 비교표	187
[표 22] 2005년-2006년 SHS에 할당된 정부보조금 비교	187
[표 23] SHS의 국제협력프로그램	193
[표 24] CNRS 연구직 2006년도 신규채용 현황	209
[표 25] CNRS 정규직 연구원 월 급여 세전 수령액	210
[표 26] CNRS의 12대 목표(2008)	215
[표 27] CNRS 지역 대표부. 2008년 현재 총 19개	218
[표 28] CNRS 직원의 지역별 분포도	219

〈부 록〉

[표 1] 한국, 미국, 영국 R&D 예산의 기초연구 및 개발연구 비중	238
[표 2] 정부와 민간 R&D 단계별 비중	239
[표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 절차(2008)	243
[표 4] 교육과학기술부 제출 R&D 예산배정사업 심의 현황	244

그림 차례

〈본 문〉

[그림 1] 2008년 현재 한국의 학문·예술 지원기구 현황	5
[그림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직·구성	8
[그림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조직·구성 (2008년 9월 현재)	13
[그림 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조직·구성	17
[그림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요사업별 예산	18
[그림 6] 기초기술연구회 조직·구성	23
[그림 7] 기초기술연구회 주요사업별 예산	25
[그림 8] 산업기술연구회 조직·구성	28
[그림 9] 산업기술연구회 주요사업별 예산	29
[그림 10] 한국학술진흥재단 조직·구성 (2008년 11월 현재)	33
[그림 11] 학술진흥재단의 주요사업별 예산	34
[그림 12] 한국과학재단 조직·구성	40
[그림 13] 한국과학재단 주요사업별 예산	41
[그림 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 조직·구성	45
[그림 15] 문화예술위원회 주요사업별 예산	46
[그림 16] 경인연, 기기연, 산기연 예결산 비교 그래프	51
[그림 17] 학술진흥재단 인문학/이학 지원 과제 수 비교 그래프	53
[그림 18] 학술진흥재단 인문학/이학 지원 금액 비교 그래프	54
[그림 19] 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이공학 지원 과제 수 비교 그래프	56
[그림 20] 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이공학 지원 금액 비교 그래프	56
[그림 21] 학진 및 과학재단 인문사회/과학기술 사업별 지원 예결산 비교 그래프	58

[그림 22] 학진 및 과학재단 인문사회/과학기술 지원 예결산 금액 비교 그래프	59
[그림 23] 학진 및 과학재단 인문사회/기초과학 지원 예결산 퍼센티지 비교 그래프	59
[그림 24] 경인연, 기기연, 산기연 2006-2008 예결산액 대비 협동연구 사업비 비교 그래프	60
[그림 25] 1996-2007 사이 학진 인문사회분야 지원 전체 과제 수 대비 인문사회 분야 학제간/협동연구/공동연구 지원 과제 수 증감 추이 비교 그래프	62
[그림 26] 1996-2007 사이 학진 인문사회분야 전체 지원금 대비 학제간 /협동연구/공동연구 지원금 비교 그래프	64
[그림 27] 학진 2006-2007 인문사회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 단독연구와 공동연구의 과제 수 비교 그래프	65
[그림 28] 학진 2006-2007 인문사회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 단독연구와 공동연구의 지원금 비교 그래프	66
[그림 29] 1996-2007 사이 학진 인문사회분야 및 인문학 분야 학제간/ 협동연구/공동연구 지원사업 과제 수 증감 추이	68
[그림 30] 1996-2007 사이 학진 인문사회 분야 학제간/협동연구/공동연 구 지원금 대비 인문학 분야 학제간/협동연구/공동연구 지원금 비교 그래프	69
[그림 31]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장래상』의 주요 내용	78
[그림 32] 『지』의 세기를 리드하는 대학개혁	79
[그림 33] 석사학위분포도 국가별 비교	86
[그림 34] 박사학위분포도 국가별 비교	87
[그림 35] 일본학술진흥회 예산액 추이, 2003~2007	106
[그림 36] 인사프로젝트연구사업의 전체 실행체계	108

[그림 37] 인사프로젝트연구사업의 단계별 구축과정	110
[그림 38] 인사프로젝트사업 연구영역의 세부 구조	111
[그림 39] AHRC와 정부 조직도	143
[그림 40] AHRC 조직도	144
[그림 41] 2006-07년 AHRC의 지출 내역서	148
[그림 42] RCUK와 정부 조직과의 관계	161
[그림 43] RCUK 2005-06 예산	162
[그림 44] RCUK 및 산하 연구회 예산, 2007/08 및 향후 3년	163
[그림 45] 각 분야의 학생 분포(1992년)	179
[그림 46] SHS의 조직도	183
[그림 47] MSH 전국 분포도(2006)	186
[그림 48] CNRS 조직도	202
[그림 49] CNRS 2001-06 예산	212
[그림 50] 산하 분과별 연구활동에 할당된 2008년 CNRS 예산 그래프	214
[그림 51] CNRS 직원의 지역별 인원수 및 분포도	220
[그림 52] CNRS 직원 전근의 성격과 비율	221
[그림 53] 외국 국적 정규직 직원 일람표(2006)	223
[그림 54] 대륙별 외국인 직원 수 (2006년 12월 31일자 집계)	223
[그림 55] 한국의 학문·예술 기구 개편 제안도	237

〈부 록〉

[그림 1] 교육과학기술부 조직도.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2008)	241
[그림 2] 교육인적자원부 조직도. 출처: 과거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2007)	242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흔히 21세기로의 전환을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지난 20세기를 지배한 산업사회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와는 다른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새 시대의 성격, 새로운 시대와 이전 시대 사이의 관계, 그리고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복잡적이고, 현재 진행 중인 논점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산업사회로부터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이 기존의 학문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 산업사회는 그 사회의 조직 원리인 분업화, 전문화의 노선을 따라 대학을 연구와 교육의 거점으로 분화시켰으며, 이러한 대학에서 발전한 것은 전문적 분과 체계에 입각한 순수학문 또는 강단학문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이러한 분과적 학문 체계를 넘어설 것이 요청되고 있다. 시대와 사회가 변함에 따라 지식 환경도 변화했기 때문이다.

우선 대학의 탈중심화를 들 수 있다. 오랫동안 대학은 지식의 산실이자 전당으로서 연구와 교육의 기능을 독점해왔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입각한 21세기 네트워크 혁명의 시대에는 지식의 생산과 유통이 더 이상 대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연구의 거점은 대학 밖의 기업 부설 연구소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학술연구 공동체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며, 교육의 거점 또한 사설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인터넷 가상공간에서의 온라인학습에 이르기까지 대학 바깥으로 무한히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위한 연구와 교육이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서게 된 이 상황은 또한 대학이 독점해온 학문과 교육 개념에 대한 불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지식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창출하기도 했던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은 특정 분과들에서 생산된 지식을 쉽고 빠르게 유통시키며, 이에 따라 순수한 지식의 단순한 습득은 그 자체로 큰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즉 학문 영역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새로운 지식 영역이 계속 출현하는 상황에서 분과라는 고립되고 한정된 영역에서 생산된 지식의 효용은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이다. 이제 지식의 습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식의 활용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분과적 원천들에서 생산된 지식을 창조적으로 연계한 통합적 지식이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세기 후반에 세계 각지의 대학은 엘리트교육에서 대중교육으로 나아갔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70-80%가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분명하다. 대중화 단계의 대학 교육에서 요구되는 것은 실용적인 지식이다. 세세한 분과 체계에 입각하여 순수한 학문 탐구를 목표로 각 분야의 전문가 교육에 주력해온 것이 현대 대학의 관행이었다면, 이러한 대학이 지식에 대한 오늘날의 새로운 요구를 잘 수용할 수 없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지식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 각국은 1980-90년대에 저마다 고등교육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와 교육을 혁신하고자 했다. 이는 20세기의 산업사회가 낳은 분과적 순수 학문 체계를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통합적 실용 학문 체계로 변화시키으로써 대학의 연구 및 교육을 시대 및 사회의 요구와 결합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이었다. 시대상황이 변화했으므로 이에 발맞춘 대학의 변화는 불가피했던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이를 위한 고등교육개혁이 연구와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 학문의 위기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인문학의 위기이다.

그러나 시대상황의 변화라는 외적인 요인만이 인문학에 위기를 초래한 것은 아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문학에 대해서도 분과를 벗어난 학문 통합에의 적극적 기여라는 요청이 제기되었건만, 한국의 인문학은 문사철 위주의 전통적인 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학문 틀을 모색하는 데 전향적 이고도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 역시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학문 체계에 대한 전망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인문학계의 위기 선언이 되풀이된 1996년과 2006년 사이, 그리고 오늘 이 시점까지도 정부의 인문정책은 학문의 균형 발전 및 통합적 학문 체계의 성장이라는 큰 그림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채, 빈사상태에 빠진 인문학에 긴급 수혈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인문학의 입장에서 위기의식의 존속이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책 효과의 미미함과 같은 난감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교육 정책은 있으나 학문 정책은 없는, 또는 학문 정책이 교육 정책에 종속되어 있는 한국의 특수한 학문적 상황(안삼환 외, 2005) 때문이었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학문 정책이 부재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 부처별로 이루어진 학문 지원이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 편중 및 학문 분야간 상호연계의 결핍돌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문 정책의 현주소는 불균형과 연계 부재의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이는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학문의 균형 발전과 통합적 학문 체계의 성장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생각할 때 시급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학문 정책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그 가운데에서도 사각지대에 속하는 인문정책을 중심으로 학문의 제반 분야 간 상호연계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우선 한국의 학문 기구와 정책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는 인문, 경제·사회, 예술,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적 지원 기구와 정책이 포괄적으로 조사될 것이다. 이 조사는 현재 한국의 학문 지원 체계가 지니고 있는 특성과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줄 기초 연구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해외의 학문 기구와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는 고등교육개혁을 통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려 한 여러 나라의 시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해외 여러 나라 가운데 일본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의 사례를 선택했다. 세 나라는 모두 고등교육개혁과 이로 인한 인문학의 위기를 경험했으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있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각 나라가 지닌 인문학의 전통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인문학 위기에 대한 대응의 방식들 또한 차이가 있으나,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차이들은 우리가 개발해야 할 정책적 노력의 향방을 다양하게 시사해주는 장점으로 작용하리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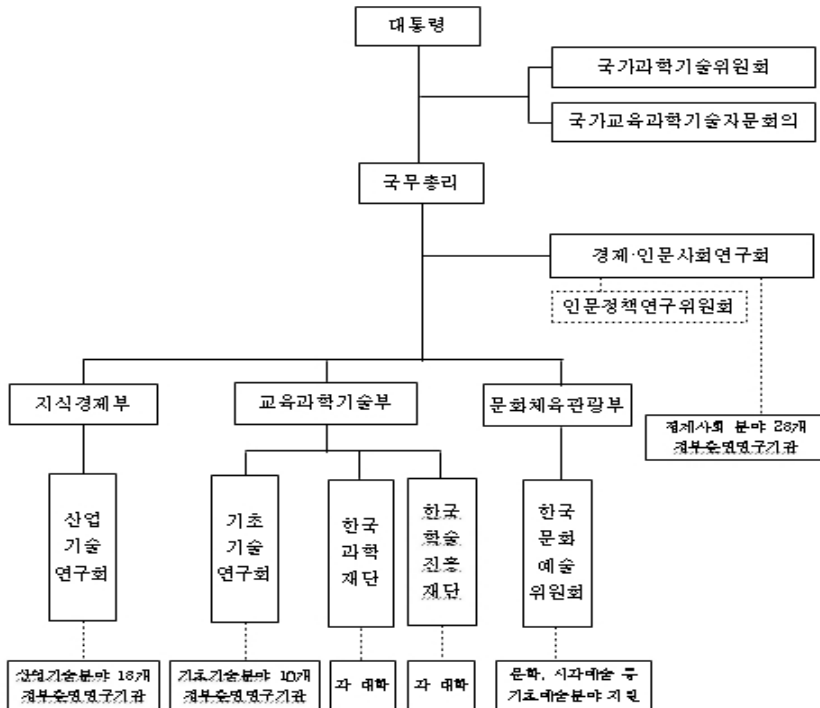
위와 같은 범위의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현지 연구원 활용)를 바탕으로 하고, 이후 우리나라에 맞는 통합적 학문 정책을 도출하는 작업을 위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제2장 한국의 학문지원기구와 정책: 현황과 문제

1. 한국의 학문지원기구: 현황

2008년 11월 현재, 인문, 경제사회, 예술,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하여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공적 지원체계 가운데 주요한 정책 기구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 2008년 현재 한국의 학문·예술 지원기구 현황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학문 기구들을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대통령 산하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둘째,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을 지원·관리하는 기관인,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셋째, 기타 정부부처 산하 기구로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¹⁾,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단 이 기구들의 조직과 예산, 정책들을 정리해볼 것인데, 이는 재 한국의 학문지원 기구들은 저마다 각 분야의 정책을 내세우는 데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그리하여 분야 간 연계가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더욱이 각 분야 간에 커다란 불균형이 있다는 점 등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1.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 관련 주요 학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각각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또 의장으로 하고 있는 대통령 산하 기관이다. 두 기구는 동일한 분야에 대해 유사한 정책을 주관하지만 서로 별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 계획들을 확정하는 심의 기구이고,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해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확대된 기구이다. 2008년 8월 27일자로 공포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10월 29일 첫 번째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절에서는 두 기구의 조직과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대한민국 최상급 학문지원 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

1)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은 2009년 1월, 통합될 예정이다. 두 재단의 통합과 관련된 내용은 1.3.에서 언급하게 될 것이다.

다. 다만,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아직 세부 조직과 정책이 공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신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조직과 정책을 참고로 제시한다.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로 약칭)는 국가과학기술정책 사업의 수행주체가 다원화되고 그 투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1999년 1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기술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발족되었다. 국과위에서는 연 3회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데, 4월에는 전년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평가하고, 7월에는 차년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검토·심의하며, 12월에는 차년도 과학기술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회의들을 통해 국과위는 과학기술의 주요정책 및 연구개발 계획을 세우고,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을 조정하며,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의 예산배분 방향설정 및 조정과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 조직

[그림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직·구성



국과위는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5개의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본회의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두고 23인 이내 위원들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진흥 주요정책과 종합계획을 수립·조정한다. 운영위원회는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및 민간에서 온 35인 이내 위원들이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 검토·조정한다. 전문위원회는 주력기간산업전문위, 거대기술전문위, 국가주도기술전문위, 첨단융복합기술전문위, 사회기반기술전문위로 구성되며, 각 위

원회마다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을 두고 있다. 주력기간산업전문위에서는 차세대 이동통신, 차세대 반도체 등 신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야 및 자동차, 철강, 섬유 등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분야를 담당하고, 거대기술전문위에서는 우주개발, 해양, 극지, 핵융합 등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는 분야를, 국가주도기술전문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환경 기술 사업화 등 공익을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분야를 담당하며, 첨단융복합기술전문위에서는 나노기반, 인지과학 등의 분야를, 사회기반기술전문위에서는 보건의료기술개발 분야 등을 담당한다.

□ 정책 현황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의 과학기술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범부처적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주요 과학기술정책·사업에 대한 관계 부처 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한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를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국가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한다. 과학기술위원회의 사업을 중·장기 과학기술발전 정책 계획과 2008년 신정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으로 나누어 간략히 정리한다.

- 중·장기 정책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25년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을 수립해 21세기 미래사회 전개 방향을 예측하고 과학기술의 대응 역할을 분석, 과학기술발전의 장기 비전을 정립·제시한다. 또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우주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통한 세계 10위권 진입을 꾀하고

2010년까지 국내기술에 의해 저궤도 실용위성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며, 2015년까지 선진 3대국 수준의 나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나노 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 밖에 ‘지방과 학기술진흥 종합계획’과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진행하고 있다.

- 2008년 신정부 정책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비효율성을 제거하며, R&D 주체의 역량 강화 및 자원배분·성과확산 시스템의 선진화를 꾀하고, 정부 R&D 투자의 전략적 배분을 도모한다. 이 중 자원배분·성과확산 시스템의 선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신정부가 제안한 정책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통합적 연구 관리 기관을 구축하여 연구기관의 일원화·전문화를 꾀하는 정책이다. 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의 산하 주요연구기관을 통합하고자 하는데,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의 통합 문제가 주목되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정부 R&D 투자의 전략적 배분을 위해 중점투자분야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섬유 등을 꼽고 그 핵심 기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며, 기술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의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사업성에 따라 선택,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식기반 서비스 사업기술개발 강화를 꾀하여, 지능형 생산시스템 기술, 통신·방송융합 기술, 콘텐츠 기술 등의 IT 기반 지식 서비스를 강화하고, 디자인, 컨설팅 등 서비스 사업에 R&D를 확대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나아가 미래의 경제·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학제 및 이종기술 간의 결합을 통해 확보하는 혁신기술로서의 융합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이공학과 인문사회, 과학과 예술 등 학제 간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2)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최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편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혁신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1991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대통령 직속기구였다. 과학기술 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정례자문회의는 월 2회 개최했다. 정책·제도·기술 분야로 나누어 활동했으며, 연구결과는 정책참고자료·포럼자료로 발간했다. 그밖에 자문과제를 추진할 때는 정부 관계부처 및 유관단체와 간담회, 공동정책포럼 등을 실시했다.

이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확대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2008년 10월 29일 첫 회의를 열고 교육과 인재정책, 과학기술정책을 아우르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활동을 개시했다. 이 회의에서는 15명의 민간자문위원²⁾이 위촉되었는데, 이는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기존 30명이던 위원 수를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자문회의의 개편은 정부조직 개편과 유사기능 통합 등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에게 교육·인재정책과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첫 회의에서 새 자문회의가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정책의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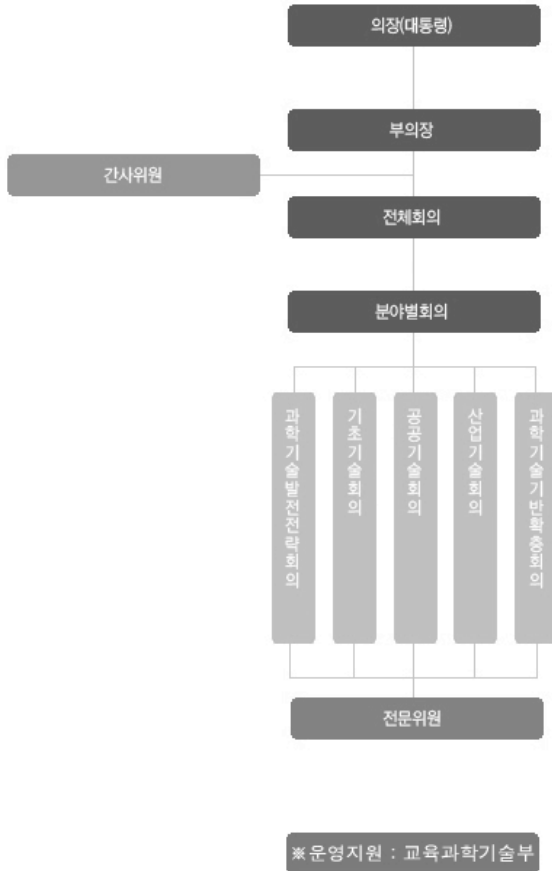
- 2) 새로운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이돈희 한국열린교육협의회 이사장(전 교육부 장관)이 부의장으로 위촉되었으며, 그밖에 박범훈 중앙대 총장, 김영실 한동대 총장, 이종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양윤선 (주)메디포스트 대표이사, 허숙 경인교대 총장, 민경찬 연세대 대학원장, 주복남 서울 태릉중 교장, 오세정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 이기호 경북전문대 학장, 이인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장,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회장, 강신영 전남대 공과대학장,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 학생 모두의 잠재력을 키워내는 미래형 교육과정
- 대학 및 공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 대입제도
-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는 교원인사제도
- 학교 자율화 완성을 위한 교육법령 개편
- 저소득층 인재의 발굴과 지원
-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 경로를 제공하는 직업교육체제 개편
- 녹색성장을 위한 융합기술 개발
-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 배출을 위한 여건 조성
- 수학, 과학교육 강화 등

새 자문회의의 조직과 정책 방향이 세부적으로 공시되지 않은 현재의 시점에서 참고로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조직과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직

〔그림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조직·구성(2008년 9월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과학기술부 총리를 부의장으로 두며,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간사로 했다. 전체 회의는 과학기술발전전략회의, 기초기술회의, 공공기술회의, 산업기술회의, 과학기술기반확충회의로 구성되었고, 각 회의마다 5인 내외의 자문위원

을 두었다. 그 밖에 전문위원으로 위원장 1인과 간사위원 1인 외 11인의 위원을 두었다.

□ 정책 현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 자문보고를 활성화하고자 하여, 5개 분야별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토론 및 자문회의를 추진하며, 단기 현안과제에 대한 자문보고를 수시로 행한다. 과학기술발전전략회의에서는 분야별 회의를 총괄하고 과학기술기본정책 및 최근 현안사항을 담당하며, 기초기술회의에서는 기초과학 육성 정책 및 원천 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공공기술회의는 보건의료, 에너지, 환경, 해양, 원자력, 우주·항공 등 미래기술 및 공공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한다. 산업기술회의에서는 정보, 기계, 섬유 등 산업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정책을 담당하고, 과학기술기반확충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인력양성, 국제협력, 연구시설개편, 과학 문화 확산 등에 관한 정책을 담당한다. 이하 전체 회의의 2008년 몇 가지 주요 연구 정책을 간략히 정리한다.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서비스 혁신 전략

현재 한국은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지식서비스 인력의 질적 수준이 낮고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글로벌 경쟁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 혁신 활동 측면에서는 서비스 기술혁신 활동비용과 서비스 연구개발 투자액의 저조한 측면이 두드러진다. 그리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식서비스 산업정책과 혁신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식서비스 혁신 프로그램을 발달시키며, 지식서비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제를 정책으로 제안, 그에 관해 자문한다.

- 과학기술과 인류 발전

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과 인류 발전에 대해 개괄하고 그 바람직한 방향을 정향한다. 한국이 21세기 세계 강국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기술발전도 중요하지만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시급하며 과학과 기술 간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도모가 필요하다는 점을 자문회의는 시사하고 있다.

- 기초과학 연구 진흥을 위한 이과대학 육성 방안

지식기반경제에서 경쟁력의 핵심은 창의적인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역량과 체계를 갖추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기초과학의 강화와,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이과대학의 육성이 필요하다. 자문회의에 따르면 이를 위해서는 기초과학분야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더불어 대학의 연구 및 교육환경의 개선, 그리고 이과대학의 구조조정 및 통합화가 필요하다.

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는 모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관리하는 기구들이다. 각각 경제·인문사회 분야, 기초과학기술 분야, 산업기술 분야에 중점을 둔 연구지원정책을 담당한다고 하지만, 인문 분야는 완전히 누락되어 있다.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관리하는 기구임에도 그 소관 23개 출연연은 연구 영역과 인적 구성 모두에서 사회과학, 특히 경제학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세 기구 모두 소관 연구기관들 사이의 협동 연구를 지원하지만, 그러한 연계는 각 기구별 학문 분야의 한정된 범위 내에 머무는 경향

이 있다. 나아가 세 기구의 예산을 비교해보면 학문 분야 별 지원의 불균형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점들에 유의하며 각 기구의 조직, 예산, 정책 현황을 간략히 정리한다.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연’으로 약칭)는 1999년 1월 제정 공포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999년 3월 설립된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가 2005년 7월 통합된 기관이다. 두 연구회는 그 이전 개별 부처에 소속되어 해당 부처의 이해관계 및 단기 정책수요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을 독립시켜 연구 및 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이를 지원·관리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되었다.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 사업 정책의 지원 및 지식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통합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기획 및 연구기관 발전방향의 기획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기관들 사이의 기능을 조정·정비하고,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을 평가하며, 연구기관간의 협동 연구를 지원한다. 소관기관으로 23개 출연연과 1개의 정책개발센터가 있다.

□ 조직

〔그림 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조직·구성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사장 1인을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된 이사회와 1인의 감사, 경영지원실과 기획평가실로 구성된 사무국으로 조직되어 있다. 경영지원실은 다시 창의경영팀과 예산팀, 재무팀으로, 기획평가실은 기획팀과 평가팀으로 나뉘어 각 업무를 담당한다. 경인연은 그 밖에 주요기구로 기획평가위원회와 경영협의회,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기획평가위원회는 전체회의와 경인연 소관 23개 출연연의 전문 분야들을 아우르는 4개의 분과위원회, 즉 경제정책분과·자원인프라분과·인적자원분과·공공정책분과로 구성되어, 연구기관간의 기능조정 및 정비 업무를 지원하고 해당 연구분야의 장기발전방향에 대한 기획과 자문을 하며, 4개 분과위원회별 소속위원 각 1인과 외부 평가전문가를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된 평가특별위

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협동연구사업 관리위원회, 국정과제 연구위원회, 인문정책연구위원회로 조직되어 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소관 23개 연구기관으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있다.

□ 예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06년 결산은 총 72억 7천만원, 2007년 결산은 68억 4천 1백만원, 2008년 총예산은 87억 8천 2백만원이다. 연구회의 주요사업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요사업별 예산

구 분	2003년 결산	2004년 결산	2005년 결산	2006년 결산	2007년 결산	2008년 예산
평가사업	-	-	445	436	468	510
연구기획사업	-	-	135	87	495	375
협동연구사업	-	-	1,000	1,500	1,050	1,050
국정과제사업	-	-	418	496	-	-
인문정책사업	-	-	428	393	525	549
연구기관 인센티브	-	-	800	882	882	882
동북아문화공동체사업	-	-	-	710	-	-
경영혁신사업	-	-	-	-	90	100
협동연구 기획 및 관리사업	-	-	-	-	150	150
연구사업 분석·관리사업	-	-	-	-	200	689
지속가능발전 국가정책연구	-	-	-	-	-	500
교육훈련사업	-	-	-	-	-	50
연구기관 원장 성과연봉	-	-	-	-	-	805

(금액단위 : 백만원)

□ 정책 현황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책은 연구·발전방향기획, 기능조정·정비, 연구기관평가, 협동연구지원, 혁신업무추진, 사업계획·예산심의, 연구회 기획사업 추진 등이 있다. 이 모든 정책은 경제·사회 분야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며, 다른 분야와의 연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실정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주요 정책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 연구·발전방향 기획

국가 R&D정책에 부합하는 출연연 연구추진 방향 정립, 국가 비전에 부응하는 국가의제 개발,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정연구과제 개발 및 관리 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회는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기획을 경제정책분야, 자원·인프라분야, 인적자원분야, 공공정책분야로 나누어 분야별로 추진한다. 연구회는 그밖에 국정연구과제 개발 관리, 국내외 연구개발 정책 동향분석, 선진 연구기관 운영체제 벤치마킹, 장기 발전과제 발굴 및 실천방안 수립 등을 수행하고 있다.

- 협동연구지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회와 연구기관간의 긴밀한 연구협력체제 유지, 범국가적 정책현안에 대한 수시협동연구 활성화, 협동연구를 통한 국가 주요정책과제 연구 및 시너지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협동연구 방향 및 연구 과제를 발굴·지원하며, 유사·중복 연구 과제를 검토하여 협동연구사업으로 전환시킨다. 또 협동연구사업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고, 협동연구사업 관리위원회 및 심사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008년도에는 총 31개 협동연구사업이 추진 중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가원이 주관하는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 비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주관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 패러다임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 ‘한·중 FTA 협동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관 ‘지식정보화의 전면화를 위한 공공정보화 혁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 ‘경제·사회양극화의 현황과 대응방안’,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관 ‘도시지역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협동연구 역시 경제·사회 각 분야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밖의 분야와의 연계는 활성화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 대부분의 협동연구사업이 경제·사회 문제에 치중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 학제간 연계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몇몇 기관들에서 학제간 연계에 관한 연구들이 드물게 이루어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7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 ‘과학기술과 사회과학 연계’라는 제목 아래 두 학문 간의 진정한 융합 및 이를 통한 새로운 학제 성립을 꾀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및 교육의 학제적 재구성이라는 내부적 동기와 과학기술의 경제·사회적 정당성 확보라는 외부적 동기가 맞물리면서 당시 두 학문의 연계 논의가 활발하게 일기 시작했으나, 연구 보고서에서는 여전히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과 사회과학을 어떻게 하나의 학문체계로서 또는 실무기법으로서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내지 모형개발의 노력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박용태, 1997). 한편 같은 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생명가치와 환경윤리 학제간 연구’라는 제목 아래,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을 생명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윤리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학제간 협력 과정을 거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연과학의 새로운 변화와 생명가치, 생명가치와 생명공학, 생명가치와 정보기술, 생명가치와 환경기술, 생명가치 고양을 위한 과학기술,

생태적 위기와 환경윤리, 생명가치와 대안적 사회체제 등의 세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김중기 외, 1997).

- 인문정책연구사업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학계의 지적과 사회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에는 인문정책을 전담하는 연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이미 인문사회연구회의 초기부터 국정감사(1999년, 2000년)를 통해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인문정책을 전담하는 연구기관의 설립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그러나 제반사항의 미비로 인문정책연구원의 설립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2002년 인문사회연구회는 내부에 인문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의 인문학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2005년 인문사회연구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된 이후에도 인문정책연구위원회는 연구회의 특별위원회의 하나로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인문정책연구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한국 내 어느 기관에서도 수행하지 않는 인문정책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인문정책연구위원회가 구성된 2002년부터 시작된 인문정책연구는 연차별로 대 주제를 설정하고 2007년까지 총 84권의 인문정책연구총서를 발간했다. 인문정책연구위원회는 2008년 인문정책연구사업단을 신설하고 인문학 박사학위 소지자들로 이루어진 연구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문정책에 대한 연구의 전문화와 체계화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인문정책연구사업은 2008년 현재, ‘인문학의 자기혁신’이라는 대주제 아래 수행된 총 7개의 과제와 더불어, 인문학에 대한 정부부처의 수요조사에 입각한 3개의 수시 과제, 기존의 인문정책연구 결과물들에 대한 성과분석,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 운영 등으로 다변화,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문정책연구위원회는 인문학 관련 국내외 학술행사도

개최해왔는데, 국내 행사로는 2002년부터 각각 8회씩 운영된 인문정책 포럼과 심포지엄이 있고, 국제 행사로는 2004년부터 시작된 한·일인문 정책포럼과 2005년부터 시작된 한·중 인문학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 인문학 국제학술회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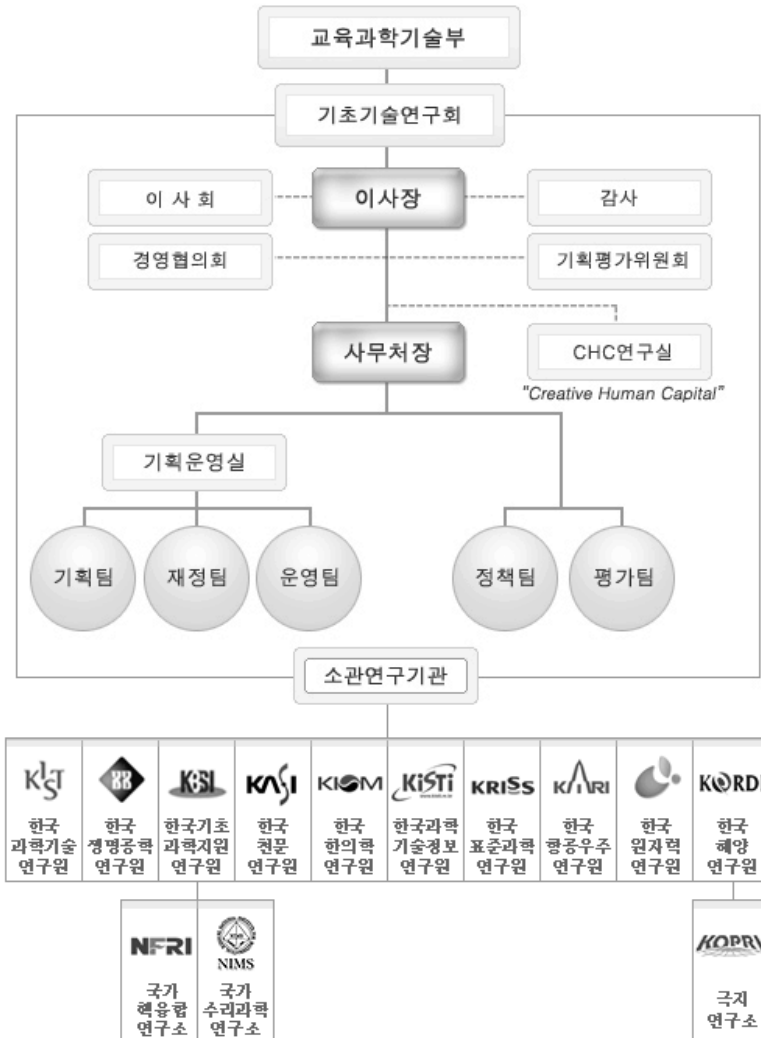
인문정책연구사업에서는 인문학과 타 학문분야 사이의 연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학제간 연구’를 대주제로 하여 산출된 2006년도의 인문정책연구총서에서 잘 드러난다.

2) 기초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이하 ‘기기연’으로 약칭)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으로, 기초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 사업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9년 3월 설립되었다. 기기연의 설립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연구회는 기초기술분야의 연구기획과 소관연구기관 발전방향을 기획하며, 소관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 평가, 소관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 지원, 국가과학기술분야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조직

〔그림 6〕 기초기술연구회 조직·구성



기초기술연구회 임무수행을 위한 행정조직인 사무처는 기획운영실, 평가관리팀, 정책팀으로 구성된다. 기획운영실은 다시 기획팀, 재정팀, 운영팀으로 나뉘어 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무처는 그 밖에 이사회, 경영협의회, 기획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연구회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기초기술연구회 정책팀은 연구회의 기획 기능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를 담당하며, 기초기술분야 발전방향 연구기획, 소관연구기관 기능정립 및 발전방향 기획연구 등을 수행한다.

기초기술연구회의 소관기관으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이 있으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기관으로는 국가핵융합연구소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기관으로는 극지연구소가 있다. 이들 연구기관이 전문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업적을 창출하도록 육성·지원하는 것이 기기연의 역할이다.

□ 예산

기초기술연구회의 2006년 결산은 87억 3천 3백만원, 2007년 결산은 145억 2천 2백만원, 2008년 총예산은 274억 7천 5백만원으로, 앞서 살펴보았던 경제·인문사회 분야 지원기관의 예산에 비해 높은 액수이며 또한 매년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기초기술연구회의 주요사업별 예산은 아래와 같다.

〔그림 7〕 기초기술연구회 주요사업별 예산

구 분	2003년 결산	2004년 결산	2005년 결산	2006년 결산	2007년 결산	2008년 예산
연구기획사업	74	127	48	40	58	1,850
기관평가사업	173	169	173	188	233	464
협동연구사업	3,262	4,294	4,336	6,688	12,170	21,437

(금액단위 : 백만원)

□ 정책 현황

기초기술연구회는 국내·외 과학기술정책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기기연과 출연연 운영전략 및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기초기술분야 발전을 위한 부문별·기능별 연구개발방향 및 추진전략을 수립, 과학기술 주변의 환경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기기연이 꾀하는 것은 기기연의 기획기능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이다. 기기연의 활동은 크게 연구 및 발전방향 기획사업, 소관연구기관 평가사업, 협동연구지원사업, 연구회 조직운영 및 관리기능 제고의 네 가지로 나뉜다. 그 중 연구 및 발전방향 기획사업 분야에서는 ‘미래기술포럼’ 운영사업, STRM(Strategic TRM) 기획사업, 지식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사업, 소관연구기관 연구 성과 기여도 분석 사업, 소관연구기관 중점연구영역 경쟁력 분석 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미래기술포럼’ 운영사업

기기연은 기초기술분야의 발전방향 및 연구방향을 정립하고, 소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방향 및 실행전략을 도출, 기기연 및 소관연구기관의 역할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 4회 ‘미래기술포럼’을, 연 12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미래전략산업으로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핵심원천기술의 R&D 방향을 탐색·설정한다. 또 기술융합에 따른

기술혁신 주체 간 원활한 정보의 공유 및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할 R&D 협력 및 분담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 성장 및 발전 잠재력을 확충·지원할 수 있는 연구정책 및 소관연구기관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미래기술포럼’의 주제들로는, ‘국가 미래산업 창출을 위한 Technology Road Map 설정’, ‘21세기 생명공학기술의 전망’, ‘Intelligent 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 ‘기초기술의 역할 및 경쟁력 확보 전략 모색’, ‘기초기술연구 진흥과 창조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이 있다.

- 지식정보 공유시스템(e-연구회) 구축사업

기초기술분야 연구정보 공유를 위한 ‘기초기술연구정보망(e-연구회)’를 구축, 연구개발 정보 활용도 제고를 통해 연구기획의 전략성을 추구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연구회는 연구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산·학·연 협동연구지원 시스템 및 출연(연) 연구 성과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성한다.

- 소관연구기관 평가사업

먼저 기기연은 평가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도구 개발 및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또 전문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평가 전 자체평가, 업무보고, 워크숍, 성과보고회를 실시한다. 끝으로 평가결과의 활용 및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한다.

- 협동연구지원사업

기기연은 소관연구기관 간 또는 소관연구기관과 산·학·연 외부기관 간 다학제적 협동연구과제 지원을 꾀하며, 연구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과제 지원에 힘쓴다. 협동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방

식은 국가적으로 우선 필요한 전략적 연구 개발 분야를 기기연에서 기획, 과제당 5억원 이내의 예산을 3~5년간 지원하는 것과, 자유공모과제를 각 3억원 이내로 1~3년간 지원하는 것의 두 가지이다. 그 밖에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의 공통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 연구 과제를 지원한다.

3) 산업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이하 '산기연'으로 약칭)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업기술 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 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9년 3월에 설립되었다.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이며, 소관으로 1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두고 있다. 산업기술 연구 분야의 연구 기획과 소관연구기관의 발전방향 기획, 소관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 평가, 협동연구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8〕 산업기술연구회 조직·구성



산업기술연구회는 이사회, 경영협의회, 기획평가위원회의 3개 위원회와 기획팀, 평가관리팀, 정책팀, 성과관리팀, 산연네트워크TF팀, 행정효율화 TF팀의 6개 팀으로 조직된다. 각 팀은 5명 이내의 팀원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는 이사장 외 13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경영협의회는 연구회 이사장, 이사 및 소관연구기관의 기관장으로 구성된다. 기획평가위원회는 전기·전자 분야, 기계·재료·생산기술 분야, 화학·식품 분야, 기관 운영 분야로 나뉘며 1인의 간사와 각 분야 5명 이내 위원들이 있어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산업기술연구회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전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총 13개 소관연구

기관이 있다.

□ 예산

산업기술연구회의 2006년도 결산은 108억 3천 7백만원, 2007년도 결산은 111억 5천 5백만원, 2008년 총예산은 108억 2백만원이다. 산업기술연구회의 주요사업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

[그림 9] 산업기술연구회 주요사업별 예산

구 분	2003년 결산	2004년 결산	2005년 결산	2006년 결산	2007년 결산	2008년 예산
연구기획사업	188	129	59	31	82	530
협동연구사업	3,606	4,564	4,706	8,175	8,222	7,446
출연(연)연구성과확산지원사업비	-	-	-	581	959	1,000
소관연구기관 평가사업	193	190	225	216	217	270

(금액단위 : 백만원)

□ 정책 현황

산업기술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전문화 및 집중화를 유도하고, 산업기술분야 연구 기획을 담당한다. 또 소관연구기관 간 협동연구를 지원하며, 공통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기관들의 발전방향을 기획한다. 나아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연구 과제와 사업의 국제화를 추진, 해외 네트워크 체계 수립을 통해 연구 성과를 확산·발전시키고자 한다. 다음 몇 가지 주요 정책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 소관연구기관 발전을 위한 기획사업 추진

출연연 지원·육성을 위한 연구회의 역할 및 경영전략을 정립하고, 정책연구의 활성화를 통하여 소관연구기관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각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 기관 간의 유사·중복

기능은 조정하고 고유기능은 심층연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출연연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항시 유도하며, 산·학·연 관련 연구 분야와 경쟁 및 협조의 틀을 마련해준다.

- 협동연구사업

출연연의 역량을 기반으로 기간산업기술과 신산업기술의 균형·융합 발전을 선도하고, 고부가가치의 연구개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산기연은 기관 간, 학제 간 전략적인 협동연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동시에 기관별 고유 기능 심화를 위한 과제를 수행, 산업기술 연구 분야 중 잠재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집중 육성한다. 수행된 협동연구과제로는 생산기술(연), 기계(연), 전기(연), 화학(연), 전자통신(연)이 함께 한 ‘차세대 냉각시스템 기술개발’, 식품(연), 한의학(연), 화학(연), 안전성(연)이 함께 한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기능성 식품·천연물의약 소재 개발’, 화학(연)과 일본의 AIST가 공동 연구한 ‘유용 생촉매 발굴을 위한 국제 협력 연구’ 등이 있다.

- 국제 협력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각 출연 연구기관별로 추진하던 국제협력 업무를 산업기술연구회가 중심으로 되어 원천기술 및 대형·융합 기술 분야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로서 추진한다. 산기연은 유사한 연구개발체제를 지닌 3개국(독일의 Fh.G, 일본의 AIST, 베트남의 NCST)의 연구기관 운영형태를 조사·분석하고 기관 간 MOU를 체결하며, 향후 각국의 과학기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부족한 기술 분야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연구 성과를 제고한다. 이러한 국제 협력 과정은 먼저 양 기관의 중점 연구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을 거쳐, 공동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심포지움을 개최한 후 연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산업기술연구회 정기 세미나 개최

산기연은 소관연구기관의 공통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산기연의 정책사항을 발굴 및 추진하기 위해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소관연구기관 간의 업무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연구생산성 향상 방안을 도출한다. 진행된 주요 세미나로는 ‘출연연구기관의 기업설립 활성화 방안 세미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성과 경제성 분석결과 발표회’ 등이 있다.

1.3.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금까지 살펴본 대통령 및 국무총리 산하 또는 부처 소속의 기구들이 서는 인문학과 예술에 대한 지원기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정부에 인문학과 예술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구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그것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신정부 정책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2008년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학문 융합의 시대에 한국에서 학문 지원을 담당하는 두 대표 기관이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재 추진 중인 통합이 과학 분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거세게 일고 있다. 또 많은 연구자들은 상향식으로 기초연구를 지원하던 기관(학진)과 하향식으로 대형국책사업을 지원하던 기관(과학재단)의 물리적 통합이 오히려 그 전문성과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이 출범하는 통합재단이 바람직한 학문지원기구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상향식 기초연구지원 강화, 대학의 연구기반조성 강화, 미래 핵심 인력의 양성체제 강화, 학술연구정보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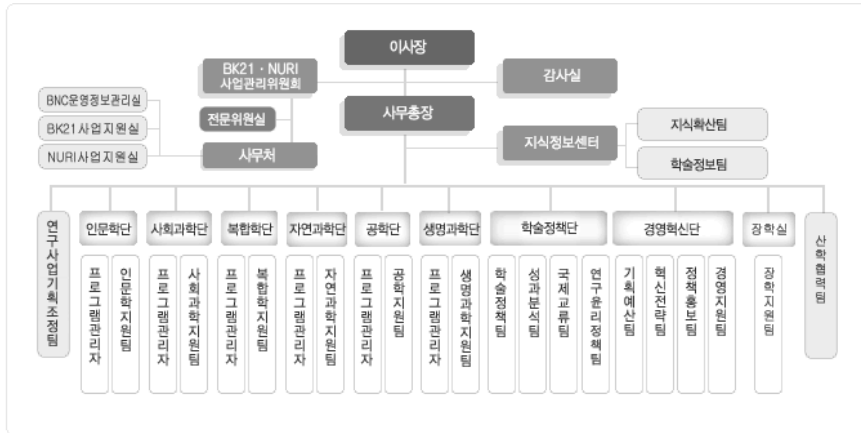
강화,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연구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학술진흥재단 소식지 2008. 7.). 현재까지 별도의 두 재단으로 남아있는 각 기구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특성과 조직, 예산, 정책 현황에 대해 정리해본다.

1)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으로 약칭)은 1979년 12월 28일 학술진흥법(現 학술진흥및학자급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제정에 의거하여, 1981년 4월 6일 설립되었다. 설립초기인 80년대에 학진은 장기적인 학술진흥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추진기반조성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90년대에는 연구지원 확대와 학술지원 인프라의 체계화에 주력하였다. 27년이 지난 오늘날 학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 학문분야를 지원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학술진흥기관으로서 분야별 맞춤형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 조직

〔그림 10〕 한국학술진흥재단 조직·구성(2008년 11월 현재)



학진은 8단 1센터 1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예전에 학진은 사업단위로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했으나, 연구현장에 더 밀착한 연구지원행정을 가능케 하기 위해 2006년 8개의 학문분야별 단을 조직하는 형태로 개편되었다. 인문학단, 사회과학단, 복합학단, 자연과학단, 공학단, 생명과학단, 학술정책단, 경영혁신단으로 조직된 8단은 각 50명 이내의 분과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단은 개별 분야의 과제 심사, 선정 및 사후 관리를 담당하고, 분야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BK21·NURI사업관리위원회는 국가 주도의 대형 인적자원개발사업인 BK21 및 NURI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여 사업목표를 바르게 달성하기 위해 2006년 8월 1일 출범하였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실을 운영하며, 사무처에서 운영지원정보관리실, BK21사업지원실, NURI사업지원실의 3실을 운영한다. 끝으로 재단에는 1개의 지식정보센터가 있는데, 지식정보센터는 학술정보팀과 지식확산팀으로 구성된다. 학술정보팀은 재단의 모든 사

업과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개발·관리하고, 지식확산팀은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활성시키기 위한 학술진흥기반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 예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6년도 결산은 6609억 8천 4백만원, 2007년도 결산은 9996억 1천 6백만원이었으며 2008년도 예산은 1조 425억 6천 9백만원으로, 각 단과 센터의 연구지원 분야가 다양하고 그 범위가 넓은 만큼 여타의 학문기구 가운데 월등한 금액이 배정되어 있다. 학진의 주요사업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학술진흥재단의 주요사업별 예산

구 분	2003년 결산	2004년 결산	2005년 결산	2006년 결산	2007년 결산	2008년 예산
출연금사업비	5,046	5,763	5,676	4,506	4,130	4,513
학자금지원사업	11,299	14,433	8,728	1,957	3,765	5,300
농촌출신학자금지원사업	36,122	59,022	60,444	63,170	70,826	81,838
사도장학금지원사업	2,136	1,236	485	-	-	-
이공계학자금지원사업	29,014	67,133	59,471	-	-	-
학자금용자이차보전사업	0	0	48,423	-	-	-
학술연구조성사업	219,246	221,925	301,751	-	-	-
BK21 지원사업	19,021	19,604	21,058	5,467	276,857	271,162
NURI 지원사업	0	1,456	186,917	249,936	241,772	246,300
교과교육공동연구	-	-	704	725	736	735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지원	-	-	-	9,999	9,991	10,000
인문사회 학술연구조성사업	-	-	-	107,242	140,727	153,840
기초과학 학술연구조성사업	-	-	-	165,077	196,357	207,595
대학선도TLO지원	-	-	-	5,719	5,647	5,800
여학생공학교육선도대학지원	-	-	-	378	956	1,000

(금액단위 : 백만원)

□ 정책 현황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개별 학문 분야에 따라 우수연구지원, 특정목적사업, 국제교류사업, 학술기반구축, 학자금지원, 대학기반지원, 상학협력사업, 학술지평가 등의 정책을 따로 혹은 공동으로 수행한다. 8개단 가운데 학문 분야별 6개단의 정책을 간략히 정리한다.

- 인문학단

인문학단은 인문사회분야의 기초가 되는 연구를 지원하여 창조적인 지식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초연구과제지원>을 담당한다. 또 인문학 분야의 우수 <박사논문출판지원>을 통해 연구 성과의 소통성을 제고함으로써 한국 인문학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명저번역지원>을 통해 동서양의 명저를 체계적으로 번역, 보급하여 번역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 인문학 부흥의 전기를 마련한다. 그 밖에 인문학단은 <신진교수연구지원>, <시민인문강좌지원>, <인문저술지원>, <우수학자지원>, <중점연구소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인문학단의 우수연구지원 정책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2007년부터 시작된 <인문한국지원사업>(HK 사업)이 있다. <인문한국지원사업>은 대학의 인문학연구소를 지원함으로써, 학과별 분과 체계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회적으로 적실성이 높고 창의적인 연구를 지원하고자 설계되었다. <인문한국지원사업>은 인문분야와 해외지역연구분야로 나뉘며, 인문분야에서는 학문적·사회적 필요성을 갖는 장기 기획 연구 아젠다를 지원하고, 해외지역연구분야에서는 인문적 기초에 기반한 지역연구의 인프라와 국제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해외지역 전문가를 양성한다. 매년 6월경 사업을 공고하고, 8월경 신청서를 접수받으며, 11월경 선정 연구소를 발표, 지원한다. 2008년에는 연간 5~8억원 규모로 각 분야별 4개 내외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 10년간 지원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인문한국지원사업>의 인문 분야는 과제 중심이 아니라 아젠다(지속적 목적추구) 중심 사업으로, 연구결과만 나오면 되는 프로젝트(특정과제) 사업과 달리, 지속가능한 연구활동능력을 가진 연구소 자체가 사업의 최종 성과물이다. 따라서 올해 인문 분야에 응모하는 연구소들에게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의 주제 및 내용, 운영방식을 설계할 것이 특히 권고되고 있다. 한편 해외지역연구분야의 경우 아젠다 보다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종합적 지역 연구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또 해외 분야에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학제 간 연구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었는데, 이는 대상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두 학문이 결합된 종합연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에 따른, 2008년도의 특이사항이다. 2007년도 인문분야에서는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의 '인문학 진흥을 위한 인문치료학',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의 '로컬리티의 인문학', 연세대학교 미디어아트 연구소의 '상상력과 테크놀로지—기계와 인간의 인문학' 외 13개 아젠다가 선정되었고, 해외지역연구 분야에서는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의 '일본연구의 세계적 거점 구축',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의 '지중해 지역의 문명 간 교류 유형 연구',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의 '유라시아 정체성과 문명 공존: 유라시아학 체계정립과 지역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3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 사회과학단

사회과학단은 초·중등학교 교과 교육 및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지원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개혁 내용의 효과적인 현장 구현 및 연구결과의 현장 확산에 기여하고자 <교과교육공동연구>를 수행한다. 또 소외 학문, 희귀 학문 분야의 연구 지속성을 담보하고 대학 교육 내용의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문사회 분야를 중심

으로 〈보호학문분야 강의지원〉을 추진한다. 한편 남북 간 학술 차원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남북학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국가 정책적·전략적 차원의 필요에 의한 과제를 지원하는 〈남북학술교류지원〉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 밖에 사회과학단에서는 〈기초연구과제지원〉, 〈우수학자지원〉 등이 수행된다.

- 자연과학단

자연과학단에서는 개인 또는 소규모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이공분야)기초연구과제지원’을 담당하며, 신진 이공계 석박사과정생이 연구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도록 하는 ‘문제 해결형 인력양성지원’을 수행한다. ‘여성과학자지원’ 정책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기 쉬운 여성과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지역대학 우수과학자지원’을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 연구역량을 제고한다. 자연과학단은 그 밖에 ‘이공계 교육과정 개발지원’, ‘중점연구소 지원’, ‘우수학자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 공학단

공학단은 기초공학의 연구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 아래 우수한 연구자와 연구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미래 원천 기술개발과 차세대 고급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연구중심 대학육성사업’과 ‘지역대학 우수과학자지원’을 추진한다. 또 ‘여성과학자 지원’, ‘학문 후속세대 양성’, ‘신진교수 연구지원’ 등을 담당한다.

- 생명과학단

생명과학단은 재단에서 수행하는 학술연구조성사업의 신청 과제 중 의약학, 농수해양학 분야의 신청과제에 대한 심사, 평가를 담당하고 있

다. ‘국제공동연구 지원’을 통해 국내 이공계열 신진교수, 대학(원)생, 연구원들이 해외연수 및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선도한다. 또 ‘문제 해결형 인력양성지원’, ‘여성과학자 지원’,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 ‘학문 후속세대 양성’ 등을 수행한다.

- 복합학단

복합학단은 학진에 설치된 6개 학문 분야별 사업단 가운데에서 통합 학문적 요구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단이다. 실제로 복합학단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복합학단은 “복합학, 예술체육학 분야 등 학제간 분야의 연구비 지원 업무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융합 발전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복합학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복합학단의 실상은 위와 같은 소개와 큰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복합학단은 총 5개의 사업(〈고급지식확산〉, 〈국제연구인력교류〉, 〈외국인교수초빙〉, 〈학문후속세대양성〉, 〈학술단체지원〉)을 주관하고, 총 4개의 사업(〈우수학자지원(인문사회)〉, 〈신진교수연구지원(인문사회)〉, 〈중점연구소지원(인문사회)〉 〈기초연구과제지원(인문사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업 가운데에서 학문 제 분야의 융합 발전이라는 복합학단의 임무를 분명히 드러내는 사업을 찾기는 힘들다. 예컨대, 〈고급지식확산지원사업〉은 고등교육기관이 수행해 온 연구결과 및 고급 지식, 이론의 확산과 가공을 통해 고급 지식의 교육적 활용과 창의적인 미래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통합적인 연구의 촉진보다 연구의 활용성 강화에 더 비중이 있는 사업이다. 또한 〈국제연구인력교류지원(해외우수학생 및 해외신진우수과학자 초청)사업〉은 외국의 우수연구원 및 과학자를 국내에 유치하여 학생연구원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인 과학기술 협력 및 해외진출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과학 분야에 한정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 학제간지원사업 · 협동연구지원사업

학술진흥재단이 학문 통합적 연구를 유도하기 위한 학제 간 연구지원의 첫걸음을 뗀 것은 1996년의 일이었다. 1996년 학진은 소식지를 통하여, 1) 학제 간 공동연구를 공개 발굴 지원함으로써 공동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 2) 분야별 심사로 위축될 수 있는 학제 간 공동연구를 활성화시키며, 3) 학문의 발전추세에 부응하여 다학문적 대형연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제 간 연구지원사업을 수행·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학술재단 소식지, 1996). 그러나 통합 연구를 위한 학진의 이 첫 시도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해서 1998년, 시작된 지 3년만에 중단되고 만다. 가장 큰 패인은 학제간 공동연구의 과제가 연구의 질, 연구결과의 효율성 등에서 일반연구와 차별화되지 못했다는 점이었지만, 그밖에도 학문분야 비중의 불균형과 선정과제의 빈약성, 산학협동 시스템의 제도적 지원미비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었다(이종수, 2000). 한 마디로,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인식되었으나 개별 분과의 연구와는 전혀 다른 이 새로운 연구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준비가 여러 점에서 부족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 분야들의 연계를 통해 공동연구를 추진하려는 학진의 노력은 1999년 〈협동연구지원사업〉으로 다시 시작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다만, 〈협동연구지원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2002년도에 66.9%라는 낮은 효율치에서 2003년도에는 100%로 개선되었다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걸쳐 효율치가 각각 62.6%, 49.9%로 다시 낮아지는 추세이다(김민희,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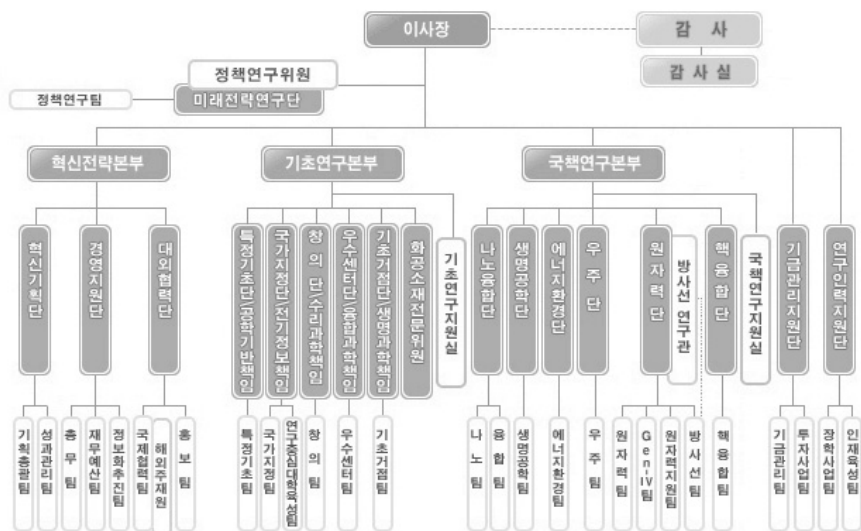
2)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재단은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구축을 위해 기초과학지원, 미래원천 기술개발, 원자력 연구개발, 국제협력, 연구진흥, 과학기술진흥기금 관리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연구지원 기관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으로, ‘한국과학재단법(법률 제 2943호)’에 의거하여 1977년 설립되었다.

□ 조직

〔그림 12〕 한국과학재단 조직·구성



한국과학재단은 1위원과 3본부로 구성된다. 3본부인 혁신전략본부, 기초연구본부, 정책연구본부에는 각각 3개, 6개, 9개의 부서가 소속되어 있고 부서별로 또 다시 몇몇 소속 팀을 두고 있다.

☐ 예산

한국과학재단의 고유사업 예산은 2006년 1조 205억 3천 7백만원, 2007년 1조 1,570억 7천 7백만원, 2008년 1조 5,348억 7천 2백만원으로 여느 학문 기구에 비해 월등한 액수이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나아가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이에 더해지는데, 2006년 기금은 6,839억 1천 2백만원이었고, 2007년 기금은 6,434억 3천 9백만원이었으며, 2008년 기금은 4,650억 9백만원이다. 기금 계정 자체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학재단의 주요사업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

[그림 13] 한국과학재단 주요사업별 예산

구 분	2003년 결산	2004년 결산	2005년 결산	2006년 결산	2007년 결산	2008년 예산
기초과학연구사업	259,875	289,656	193,895	206,552	271,873	313,821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31,641	112,353	177,066	378,108	384,984	406,608
기관고유사업	26,293	14,830	16,607	17,790	18,354	20,890
특정연구개발사업	-	-	95,376	95,800	67,808	235,600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	161,928	169,430	170,649	175,908
과학기술국제화사업	-	-	26,033	6,896	-	-
정부위임사업비	2,063	2,463	6,991	6,981	6,439	8,907
간접비(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7,080	7,482	11,441	11,513	13,215	14,032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	-	-	-	77,084	80,214	85,900
우주개발사업	-	-	-	-	-	214,506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	-	-	-	-	58,700
기타수탁연구사업	1,352	30,252	1,123	1,439	2,390	-

(금액단위 : 백만원)

□ 정책 현황

한국과학재단은 과학기술연구 활동의 지원, 연구 장학금 및 연구 장려금의 지원, 과학기술교육의 향상·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과학기술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을 주 기능으로 하여 각종 정책을 수행한다. 과학기술 분야의 몇몇 정책들을 간략히 정리한다.

- 기초과학연구사업

한국과학재단은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새로운 지식기술 창출과 원천기술 확보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연구리더육성, 우수연구집단육성, 기초연구기반구축, 연구중심대학육성의 사업을 추진한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과학기술 전 분야(인접 인문사회과학분야 포함)의 창의성 높은 학제 간 공동연구 또는 창의 중심의 개인연구를 통해 기초연구능력을 배양하고 우수연구인력을 양성하며,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기초·원천기술 분야의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한 우수한 연구실을 발굴·육성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 과학과 공학 부문의 우수연구센터, 기초 의과학 연구센터를 조직·체계화하여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학제 간 복합학문과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선도하기 위해 국가핵심연구센터를 구성, 지원한다.

- 특정연구 개발사업

재단은 미래원천·핵심기반기술 및 대형복합·공공원천기술 등의 전략적 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특정연구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바이오 기술 분야’ 지원을 통해 바이오경제를 주도할 미래 핵심 원천 기술 확보 및 기반 확충을 꾀하고, ‘나노 기술 분야’를 지원하여 현존 기술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핵심기술 개발로 신규시장을 창출하며, ‘에너지·환경 기술 분야’를 육성해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En-Topia 시대를 대비한 에너지·환경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한다. 또 삶의 질 수요에 부응하는 사회 안전과 공공복지기술을 개발, ‘안전·복지 기술 분야’ 진흥에 힘쓰고, ‘미래 유망 기술 분야’와 ‘우주 기술 분야’를 지원한다.

-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

재단은 원자력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와 등위원소 활용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원자력 기술 개발 사업, 원자력 연구기반 확충 사업, 방사선 기술 개발 사업으로 나누어 수행한다. 원자력 기술 개발 사업에서는 5년간('07~'11) 7,425억원을 투입, 미래형원자로시스템, 원자력안전, 핵연료주기, 방사선기반기술, 고유강점기술 육성, 원전기술혁신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한다. 원자력 연구기반 확충 사업은 5년간 1,149억원을 투입하여 연구시설 및 이용기반 구축과 미래연구 및 인력기반 확충을 도모한다. 방사선 기술 개발 사업에서는 5년간 1,191억원을 투입, 방사선융합 및 의학기술개발 등 5개 분야를 지원한다.

- 핵융합 에너지 개발 진흥 사업

재단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핵융합 에너지 개발 진흥 사업을 추진한다. 핵융합 반응을 통해 대용량의 전기 생산 가능성을 공학적으로 최종 실증하기 위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과학재단은 특히 핵융합사원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맡으며, 사업수행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지급한다. 또한 이 사업을 위해 ITER 한국사업단을 산하에 두고 장치 개발·제작, 핵심기술연구개발, 사업 연구·관리를 수행한다. 이 밖에 핵융합 에너지 개발 진흥 사업에서는 KSTAR 건설운영사업, 핵융합연구소기관수행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 국제협력사업

재단은 국제협력사업에 힘을 쏟아 선진국과의 과학 기술 제휴를 강화하고 해외 과학기술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 및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지원사업과 인력교류사업을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국제학술회의 지원 사업, 글로벌 사이언스 리더쉽 지원 사업, 과학자 교류 지원 사업, 일본 연수 특별 프로그램, 한·독 대학원생 교류 지원 사업, 한·호 신진과학자 교류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초예술의 진흥을 위한 총본산이자 최고의결기구로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다. 2005년 8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위원회로 변경된 특수법인으로 2007년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기금관리형 준정부 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현장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11명의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문화예술정책을 이끌어내며, 민간이 공공영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공공영역이 민간에 참여하는 동시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의 기초예술 분야와 문화산업의 비영리적 실험영역을 대상으로 그 창조와 매개, 향유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것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예술의 자생력을 신장시키고, 예술 창조를 견인하며, 예술적 융성과 사회생산력의 신장을 동시에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이 주는 창조적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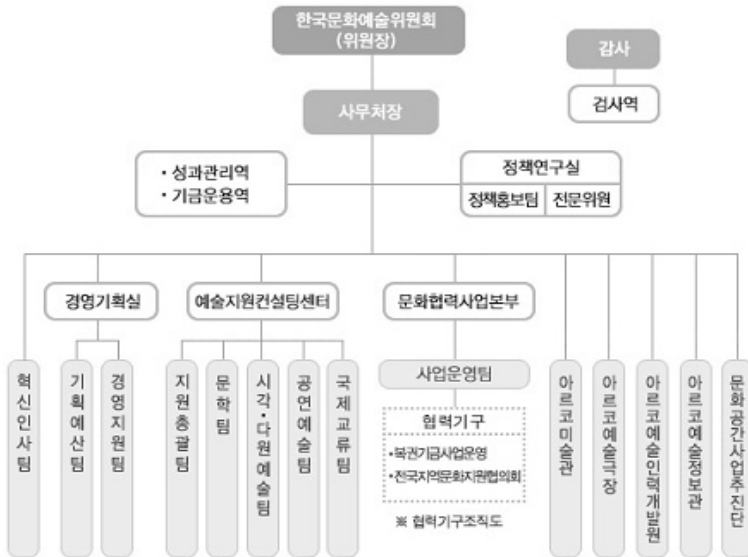
□ 조직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비상임위원을 둔 12개의 소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12개위 소위원회는 문학위원회, 시각예술위원회, 연극위원회, 무용위원회, 음악위원회, 다원예술위원회, 전통예술위원회, 남북 및 국제문화교류 위원회, 지역문화위원회, 정책위원회, 기초예술의 가치 확산 위원회,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위원회이다. 각

소위원회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 방향 제안 및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 심의를 주관한다.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무처는 감사, 사무처장 및 2실 1센터 1본부 9팀 3역 5시설로 구성된다. 사무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수립, 위원회 운영, 연구·조사, 홍보 및 출판을 담당하는 정책연구실(정책홍보팀, 전문위원), 예산, 회계,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경영기획실(기획예산팀, 경영지원팀),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심의·평가 및 분야별 창작·연구·보급 업무를 담당하는 예술지원컨설팅센터(지원총괄팀, 문학팀, 시각·다원예술팀, 공연예술팀, 국제교류팀), 복권기금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협력사업본부, 그리고 운영시설로는 아르코미술관, 아르코예술극장,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아르코예술정보관, 문화공간사업추진단 등 5개의 문화기반시설이 있다. 정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115명의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 조직·구성



□ 예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06년도 결산은 5,249억 6천 6백만원, 2007년도 결산은 4,782억 7천 2백만원, 2008년 총예산은 4,197억 8백만원이다. 위원회의 주요사업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

[그림 15] 문화예술위원회 주요사업별 예산

구 분	2003년 결산	2004년 결산	2005년 결산	2006년 결산	2007년 결산	2008년 예산
문화예술향수기회확대	10,749	50,430	60,580	39,146	-	-
문화예술교류활성화	1,825	2,195	4,626	4,668	-	-
문화예술매개활동확대	0	0	0	16,006	-	-
지역문화활성화	0	0	0	28,124	-	-
지역문화예술의진흥	-	4,791	8,222	12,044	11,027	11,148
예술의국제협력증진	-	2,155	4,664	4,668	4,433	5,135
새로운예술세계의개척	-	1,075	3,833	5,985	5,578	5,557
예술현장의자생력확보	-	12,534	28,472	11,305	2,654	9,355
예술의생활화	-	8,957	13,237	7,770	9,290	5,000
예술의사회적역활확대	-	8,957	13,237	7,770	9,290	5,000
예술의가치확산과보전	-	6,219	8,575	12,193	11,262	8,711
예술가의창조역량강화	-	6,839	9,637	16,239	15,902	18,544

(금액단위 : 백만원)

□ 정책 현황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의 생활화를 장려하고 창작 환경을 개선, 새로운 예술을 발굴·육성하고자 하며, 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고 보전하기를 꾀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문화 예술의 창작과 보급을 지원하고, 문화 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국제 문화예술 교류를 지원한다. 위원회의 정책 사업으로는 크게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과 교육 프로그램 추진 사업이 있다. 이밖에 2007년 추진되었던 8대 지원목표별 지원사업과 그 성과를 덧붙여 개괄한다.

-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조성·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 진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재원이다. 문예진흥기금은 공연장을 비롯한 문화시설의 입장료에 일정액을 부가한 모금과 문예진흥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익,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체사업 수입, 국고와 방송발전기금 등 공공부문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과 문화일반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문학 분야의 경우 청소년 문예지 발간 지원, 문학 공간 활성화 지원 등을,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 지원 등을 특수 사업으로 진행하며, 그 밖에 전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 신진 예술가 지원, 국제 예술교류활동 지원,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 등을 진행한다.

- 교육프로그램

문화예술위원회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크게 3가지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상설 예술강좌를 열어 문학, 음악, 시각예술, 연극, 무용, 다원예술 각 분야별 입문 강좌, 정기 예술 감상회, 초청 강연회 등을 추진한다. 또 아르코 예술극장에서는 연 2회 어린이 연극 놀이교실을 열어 주제별 연극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로 하여금 직접 공연 예술을 체험, 표현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르코 예술인력 개발원에서는 무대예술실무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문화행정, 예술경영, 무대예술 등 예술 창조자와 향수자를 매개하여 인력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꾀하는 단기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아르코 공연예술 아카데미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연·무대예술 교육기관으로 무대미술,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의상, 연기·춤, 극작·비평, 연출·안무 분야 인재를 양성, 2년 동

안 교육하여 예술적 창조 능력을 개발시키고 무대공연분야 첨단 전문기술을 교육하며 예술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 2007년 8대 지원목표별 지원사업

2007년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중장기 비전 및 전략 계획에 따라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예술 현장의 자생력 확보,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예술의 생활화,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새로운 예술 세계의 개척, 예술의 가치 확산과 보전 등 8대 지원목표별 사업방향을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원사업의 총예산은 1,072억 4,177만원이었다.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86.3%에서 예술의 생활화 100%까지 거쳐 비교적 높은 집행률을 나타냈으며, 공연예술 각 분야의 취약한 부분을 집중 강화하기 위한 공연예술프로그램 특성화 사업을 신규 운영하였다.

2. 한국의 학문지원정책: 문제

1절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학문과 예술 관련 지원기구 및 각 기구별 정책 현황이 지니고 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이다.

- 1) 현재 한국의 학문 기구와 정책의 공적인 체계는 인문, 경제사회, 예술, 과학기술의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라는 특정 분야에 지원이 집중되는 심각한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 2)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학문 통합은 인문, 경제사회, 예술, 과학기술의 전 분야 사이의 상호연계를 요청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이 상호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분야별로 학제 간/협동/공동연구가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학문의 상호연계는

오직 과학기술 분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통합 연구를 견인하려는 학제 간 내지 협동연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눈에 띄게 미비하고, 이는 인문학 분야의 경우 가장 심각하다.

이러한 두 가지 큰 문제점을 1절에서 다룬 한국의 학문지원기구별로 세세히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2.1. 지원 분야의 심각한 편중

첫째,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현재 한국에서 학문지원 관련 최상위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오직 또는 거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에 집중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치중 현상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든 최근 개편되기 이전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든, 이러한 정부 기구들의 관심사는 ‘과학’보다 ‘기술’이며, 특히 산업 또는 시장성과 직결되는 기술이 집중 지원을 받고 있다.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술이나 시장성이 있는 기술에 대한 관심 자체에는 물론 잘못이 없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이러한 관심이 단기적 이익이나 전망에 속박되어, 그 기술을 가능하도록 하는 과학적 기반에 대한 관심을 도외시하는 경우, 기술 자체도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잘못일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한국의 과학기술계가 처해 있는 현실임은 인문학에서나 마찬가지로 절박하게 표명되곤 하는 기초과학 분야의 위기의식이 분명하게 대변한다.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한 국가의 최상위 학문지원 기구가 학문적 포괄성을 전혀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일 것이다. 이는 여러 학문 분야간 지원정책의 불균형을 방증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책들의 연계를 통해 학문 융합으로 나아가는 첫걸음도 땔 수

없도록 하는 심각한 맹점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이렇게 학문 분야간 지원 정책의 편중 내지 불균형이라는 문제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지원, 관리하는 연구회 조직들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현재 연구회 조직들은 대통령 산하의 최상위 기구들과는 달리, 경제·인문사회과학 분야, 기초기술 분야, 산업기술 분야 등, 세칭 문과와 이과를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구회 단위에서도 과학기술 쪽으로의 편중이 현실인데, 이는 예산의 규모를 비교해 볼 때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의 최근 3년간 예결산 규모³⁾를 비교해보면, 기초기술연구회의 예산은 무려 314%나 급증한 데 반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예산은 2007년에 오히려 감소했다가 2008년에 120% 늘어난 데 그쳐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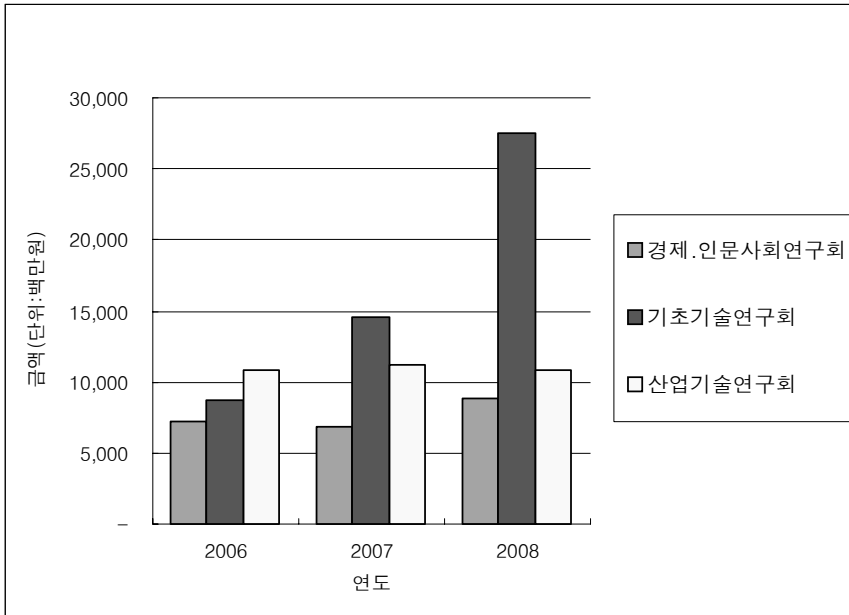
[표 1] 경인연, 기기연, 산기연 2006-2008 예결산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2006	7,270백만원	8,733백만원	10,837백만원
2007	6,841백만원	14,522백만원	11,155백만원
2008	8,782백만원	27,475백만원	10,802백만원

출처: 경인연, 기기연, 산기연 홈페이지 경영공시 예결산표 재구성

3) [표 1]에 제시한 세 연구회의 최근 3년간 예결산액은 오로지 연구회 자체의 예결산액으로, 소관 연구기관들의 예결산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일 소관 기관들의 예결산액까지 포함해서 계산한다면, 경인연과 기기연 및 산기연 사이의 지원금액 격차는 더욱 극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그림 16〕 경인연, 기기연, 산기연 예결산 비교 그래프



출처: 경인연, 기기연, 산기연 홈페이지 경영공시 예결산표 재구성

더 심각한 문제는 학문 분야별 편중 현상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의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모두 연구 영역과 인적 구성 모두에서 사회과학, 특히 경제학에 편중되어 있을 뿐, 인문학 분야는 완전히 누락되어 있다.⁴⁾ 현재 한국에서 인문 분야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 곳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설치된 특별위원회 가운데 하나인 인문정책연구위원회가 유일하지만, 이는 제도적, 물적 한계가 커서 인문학계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식기반사회라는 새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인문학의 진흥 및 활용을 추진하는 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다. 결국 현재처럼 정부출연 인문정책연구기관 자체가 부재하는 상황에서는 인문

4) 부록 2 참고.

학의 시대적 변화 및 체계적 진흥을 기대하기 어렵고, 나아가 인문학과 경제사회, 과학기술 등의 타 분야를 연계하는 통합학문적 연구가 출발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대학 차원의 연구에 대한 정부 부처의 지원에서도 학문적 편중 현상은 일관되게 나타난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러한 학문적 불균형 내지 과학기술 편중 현상은 학술진흥재단을 살펴볼 때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학진은 대학에서의 연구를 중심으로 학문의 전분야를 지원한다. 이러한 학진의 학문분야별 지원사업에서, 첫 번째 인문학 위기 선언이 나온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실시한 인문학과 자연과학(이학)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양 분야의 지원 비중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2년도 이후에는 인문학 부문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은 역전 현상마저 보이는 것이다. 1996년-2005년 사이 학진의 인문학/이학 지원 과제수 및 지원금을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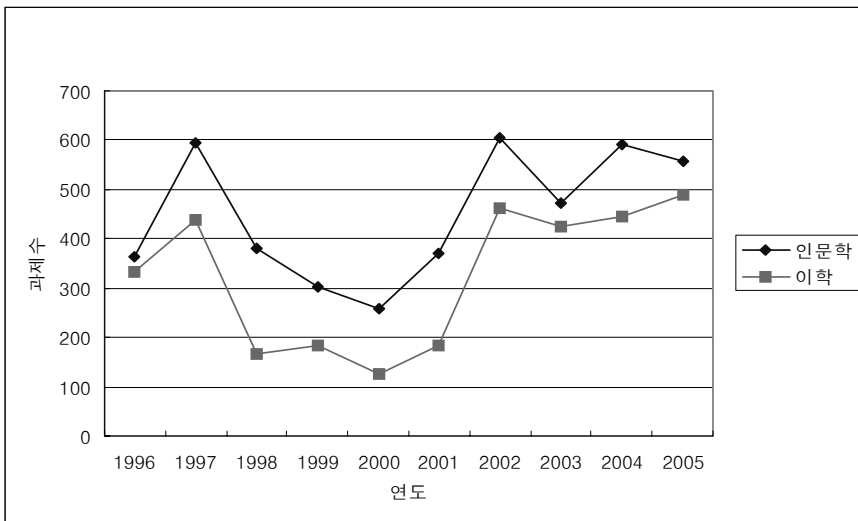
[표 2] 학진 1996-2005 인문학/이학 지원 과제수 및 금액 비교표

		인 문 학	이 학
1996	과제 수	363	334
	금액	3,509,300천원	5,947,200천원
1997	과제 수	594	438
	금액	6,350,000천원	7,098,500천원
1998	과제 수	379	167
	금액	4,874,500천원	4,609,000천원
1999	과제 수	304	185
	금액	6,713,288천원	8,512,500천원
2000	과제 수	258	127

	금액	4,945,452천원	4,133,616천원
2001	과제 수	371	183
	금액	5,356,570천원	3,648,000천원
2002	과제 수	606	463
	금액	84,398,013천원	52,080,712천원
2003	과제 수	474	426
	금액	32,821,813천원	26,980,428천원
2004	과제 수	591	445
	금액	24,544,013천원	15,977,324천원
2005	과제 수	556	490
	금액	33,323,054천원	31,404,53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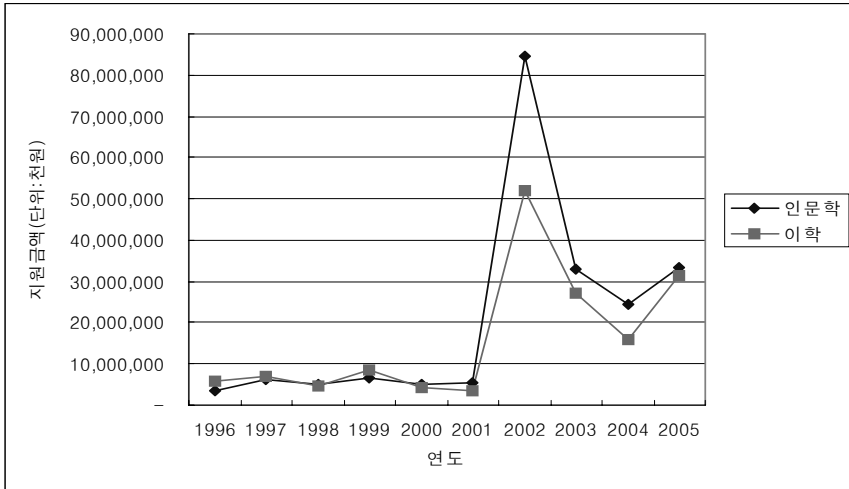
출처: 학술진흥재단, 『2007 학술연구지원통계연보』 (2007) 재구성.

[그림 17] 학술진흥재단 인문학/이학 지원 과제 수 비교 그래프



출처: 학술진흥재단, 『2007 학술연구지원통계연보』 (2007) 재구성.

[그림 18] 학술진흥재단 인문학/이학 지원 금액 비교 그래프



출처: 학술진흥재단, 『2007 학술연구지원통계연보』(2007)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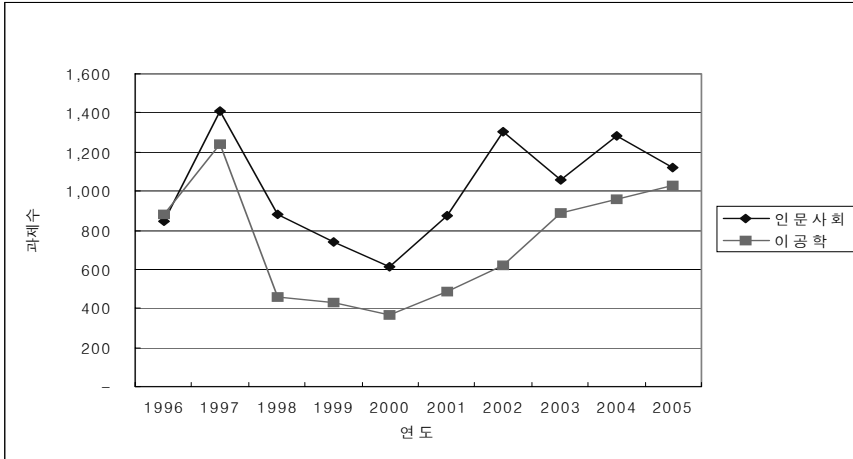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이학)을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이공학)로 확대해서 살펴보아도 별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1996년-2005년 사이 학진의 인문사회과학/이공학 대비 지원 과제수 및 지원금을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학진 1996-2005 인문사회/이공학 지원 과제 수
및 금액 비교표**

		인 문 사 회	이 공 학
1996	과제 수	844	881
	금액	9,538,900천원	16,102,000천원
1997	과제 수	1,408	1,242
	금액	16,012,500천원	22,298,500천원
1998	과제 수	883	459
	금액	12,445,450천원	12,425,500천원
1999	과제 수	738	429
	금액	17,845,988천원	16,969,500천원
2000	과제 수	612	364
	금액	12,590,424천원	10,147,161천원
2001	과제 수	876	484
	금액	13,619,545천원	9,190,376천원
2002	과제 수	1,302	621
	금액	141,646,437천원	66,027,036천원
2003	과제 수	1,058	885
	금액	58,656,386천원	39,456,774천원
2004	과제 수	1,282	958
	금액	42,596,987천원	32,133,532천원
2005	과제 수	1,120	1,032
	금액	53,389,588천원	48,892,90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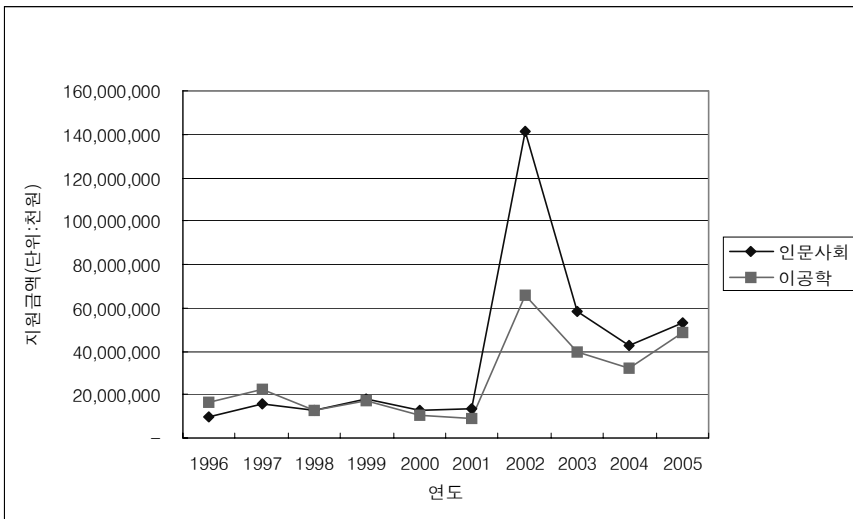
출처: 학술진흥재단, 『2007 학술연구지원통계연보』(2007) 재구성.

[그림 19] 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이공학 지원 과제 수 비교 그래프



출처: 학술진흥재단, 『2007 학술연구지원통계연보』(2007) 재구성.

[그림 20] 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이공학 지원 금액 비교 그래프



출처: 학술진흥재단, 『2007 학술연구지원통계연보』(2007)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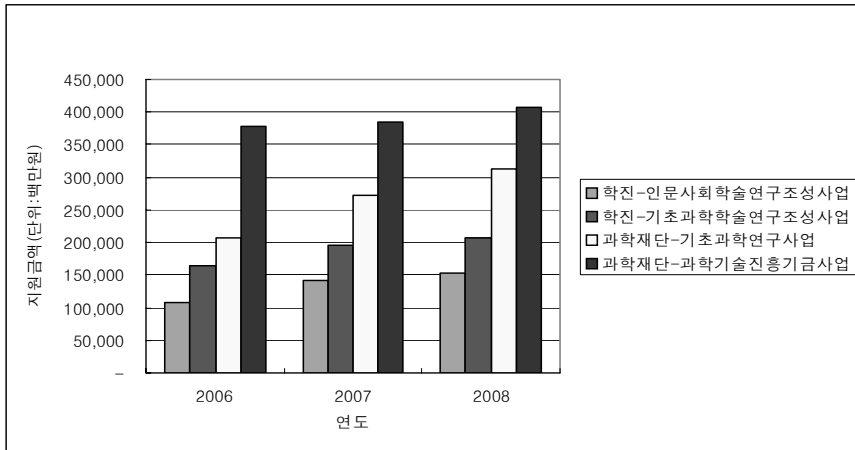
그렇다면 2006년에 또다시 인문학 위기 선언을 유발한 인문학자들의 위기의식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한 의문은 한국과학재단에서 제공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지원을 고려하면 저절로 해소된다. 1절에서 살펴본 대로, 한국과학재단은 이 보고서에서 검토한 여느 학문 기구에 비해 월등하게 큰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이 예산은 전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지원된다. 이는 학문 전 분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 사이의 큰 차이점이다. 과학재단의 지원 사업은 기초과학연구사업, 과학기술진흥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우주개발사업 등 과학기술의 여러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업에 투자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기초과학연구사업과 과학기술진흥사업의 두 사업 지원금만을 고려해도 인문사회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지원 규모는 막대한 차이를 드러낸다. 2006-2008년의 3년간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의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지원 규모를 통합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표와 그래프가 나온다.

[표 4] 학진 및 과학재단 인문사회/기초과학 사업별 지원 예결산 비교표

	〈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 학술연구조성사업	〈학술진흥재단〉 기초과학 학술연구조성사업	〈과학재단〉 기초과학 연구사업	〈과학재단〉 과학기술진흥 기금사업
2006	107,242백만원 (13%)	165,077백만원 (19%)	206,552백만원 (24%)	378,108백만원 (44%)
2007	140,727백만원 (14%)	196,357백만원 (20%)	271,873백만원 (27%)	384,984백만원 (39%)
2008	153,840백만원 (14%)	207,595백만원 (19%)	313,821백만원 (29%)	406,608백만원 (38%)

출처: 학술진흥재단 및 과학재단 홈페이지 경영공시 예결산표 재구성

〔그림 21〕 학진 및 과학재단 인문사회/과학기술 사업별 지원 예결산 비교 그래프



그래프. 출처: 학술진흥재단 및 과학재단 홈페이지 경영공시 예결산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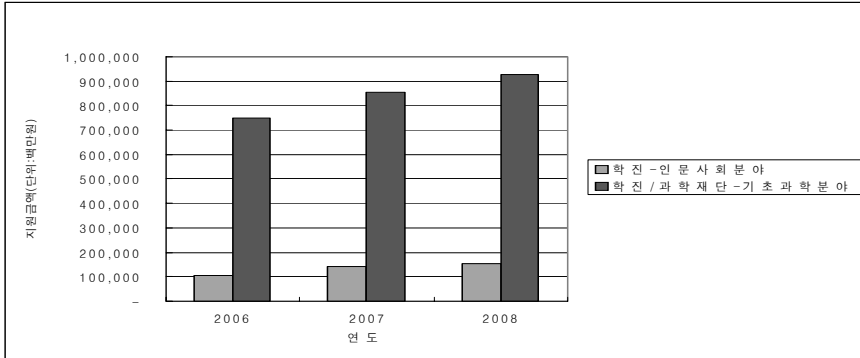
결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규모 사이에는 심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금액과 백분율로 환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학진 및 과학재단 인문사회/과학기술 사업별 지원 예결산 퍼센티지 비교표

	인문사회분야	과학기술분야		
	〈학술진흥재단〉	〈학술진흥재단〉	〈과학재단〉	〈과학재단〉
	인문사회 학술연구조성사업	기초과학 학술연구조성사업	기초과학 연구사업	과학기술진흥 기금사업
2006	13% 107,242백만원	87% (19% + 24% + 44%) 749,737백만원		
2007	14% 140,727백만원	86% (20% + 27% + 39%) 853,214백만원		
2008	14% 153,840백만원	86% (19% + 29% + 38%) 928,024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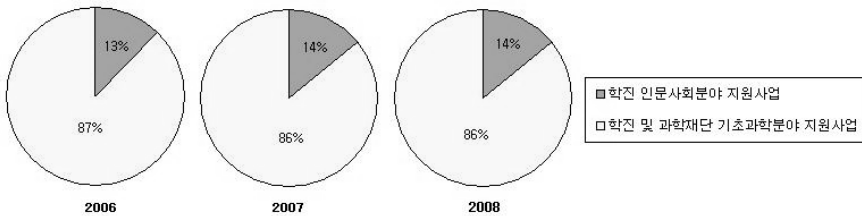
출처: 학술진흥재단, 과학재단 홈페이지 경영공시 예결산표 재구성

[그림 22] 학진 및 과학재단 인문사회/과학기술 지원 예결산 금액 비교 그래프



출처: 학술진흥재단 및 과학재단 홈페이지 경영공시 예결산표 재구성

[그림 23] 학진 및 과학재단 인문사회/기초과학 지원 예결산 퍼센티지 비교 그래프.



출처: 학술진흥재단 및 과학재단 홈페이지 경영공시 예결산표 재구성

2.2. 통합연구지원정책의 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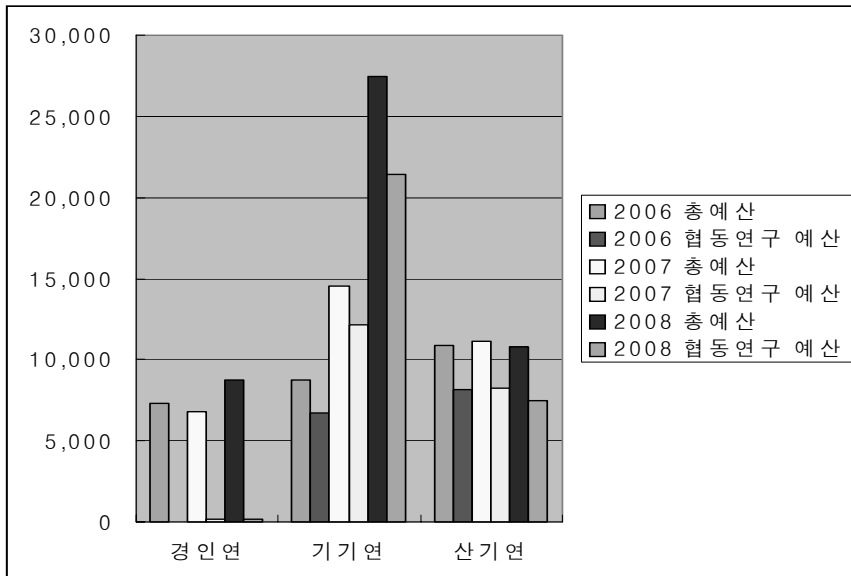
21세기의 통합학문적 요구에 부응하는 학제 간 또는 협동 연구에 대한 지원이 학문 분야별로 큰 차이가 난다. 다음 표와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기기연구와 산기연구의 경우, 양 기구의 예산에서 협동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다.

**[표 6] 경인연, 기기연, 산기연 2006-2008 예결산액 대비
협동연구사업비 규모 및 백분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2006	총예산	7,270	8,733	10,837
	협동연구 예산	-	6,688 (76.5%)	8,175(75.4%)
2007	총예산	6,841	14,522	11,155
	협동연구 예산	150 (2.1%)	12,170 (83.8%)	8,222(73.7%)
2008	총예산	8,782	27,475	10,802
	협동연구 예산	150 (1.7%)	21,437 (78.0%)	7,446(68.9%)

단위: 백만원, 출처: 경인연, 기기연, 산기연 홈페이지 경영공시 예결산표 재구성

**[그림 24] 경인연, 기기연, 산기연 2006-2008 예결산액 대비
협동연구사업비 비교 그래프**



출처: 경인연, 기기연, 산기연 홈페이지 경영공시 예결산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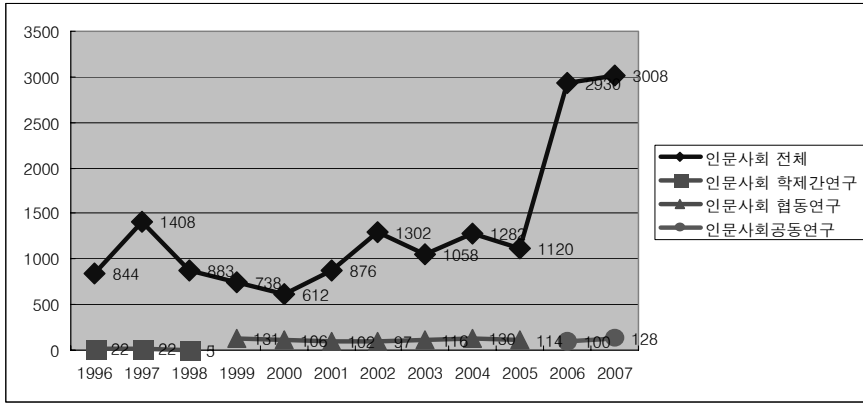
그러나 경인연의 경우는 협동연구의 지원 비중이 1-2%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통합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데 비해,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분과성 극복의 노력이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술진흥재단이 1996년부터 시도해온 인문사회 분야 학제 간 연구, 협동연구, 공동연구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아도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우선 1996년~2007년 사이 인문사회분야 전체 지원 과제 수 및 지원금 대비 학제간/협동/공동연구 지원 과제 수 및 지원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학진 1996-2007 인문사회분야 전체 지원 과제 수 및
인문사회 분야 학제 간/협동연구/공동연구 지원사업 과제 수

	인문사회 전체	인문사회 학제 간 연구	인문사회 협동연구	인문사회 공동연구
1996	844	22 (2.6%)	-	-
1997	1408	22 (1.6%)	-	-
1998	883	5 (0.6%)	-	-
1999	738	-	131 (17.8%)	-
2000	612	-	106 (17.3%)	-
2001	876	-	102 (11.6%)	-
2002	1302	-	97 (7.5%)	-
2003	1058	-	116 (11.0%)	-
2004	1282	-	130 (10.1%)	-
2005	1120	-	114 (10.2%)	-
2006	2930	-	-	100 (3.4%)
2007	3008	-	-	128 (4.3%)

괄호안은 인문사회분야 전체 과제수 대비 학제 간/협동연구/공동연구 과제 수 백분율.
자료: 학술진흥재단, 2007, 2008 『학술연구지원통계연보』 재구성.

[그림 25] 1996-2007 사이 학진 인문사회분야 지원 전체 과제 수 대비
인문사회 분야 학제간/협동연구/공동연구 지원 과제 수 증감 추이 비교 그래프



출처: 학술진흥재단, 2007, 2008 『학술연구지원통계연보』 재구성.

[표 8] 학진 1996-2007 인문사회분야 전체 지원금 대비
인문사회분야 학제 간/협동연구/공동연구 지원금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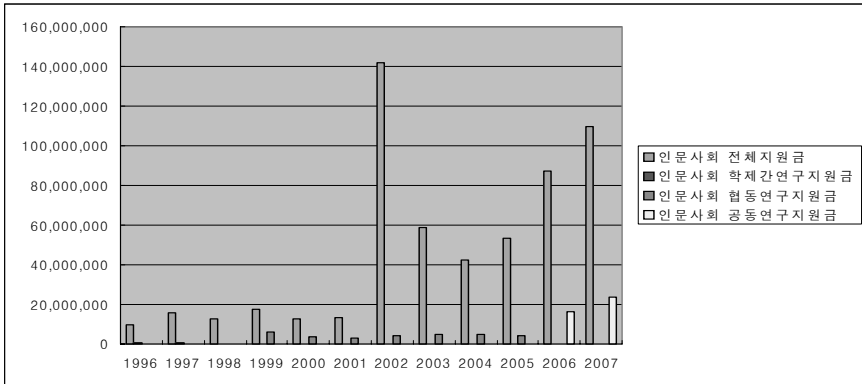
인문사회 분야		학제 간 연구지원	협동연구	공동연구
1996	지원금	533,000 (5.5%)	-	-
	인문사회 분야 전체 지원금	9,538,900		
1997	지원금	364,500 (2.2%)	-	-
	인문사회분야 전체 지원금	16,012,500		
1998	지원금	136,000 (1%)	-	-
	인문사회분야 전체 지원금	12,445,450		
1999	지원금	-	5,941,900 (33%)	-

	인문사회분야 전체 지원금		17,845,988	
2000	지원금	-	3,396,124 (26.9%)	-
	인문사회분야 전체 지원금		12,590,424	
2001	지원금	-	2,794,465 (20.5%)	-
	인문사회분야 전체 지원금		13,619,545	
2002	지원금	-	4,285,712 (3%)	-
	인문사회분야 전체 지원금		141,646,437	
2003	지원금	-	4,677,225 (7.9%)	-
	인문사회분야 전체 지원금		58,656,386	
2004	지원금	-	4,904,216 (11.5%)	-
	인문사회분야 전체 지원금		42,596,987	
2005	지원금	-	4,239,651 (7.9%)	-
	인문사회분야 전체 지원금		53,389,588	
2006	지원금	-	-	16,549,229 (38.9%)
	인문사회분야 전체 지원금			42,512,241
2007	지원금	-	-	23,536,019 (21.4%)
	인문사회분야 전체 지원금			109,847,102

단위: 천원, 괄호안은 인문사회분야 전체 지원금 대비 학제 간 및 협동연구 지원금 백분율

출처: 학술진흥재단, 2007, 2008 『학술연구지원통계연보』 재구성.

[그림 26] 1996-2007 사이 학진 인문사회분야 전체 지원금 대비 학제간/협동연구/공동연구 지원금 비교 그래프



출처: 학술진흥재단, 2007, 2008 『학술연구지원통계연보』 재구성.

위의 표와 그래프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네 가지 사항이다. 1) 1996-98년 사이 학제간연구 과제수와 지원금에 비해 1999년 이후 협동연구 과제수와 지원금은 대폭 상승했다는 것, 2) 협동연구 과제수와 지원금의 절대 규모 자체는 큰 진폭 없이 비슷하게 유지되었다는 것, 3) 그러나 2002년 이후 인문사회분야 전체 지원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전체 지원금 대비 협동연구 지원금의 비중은 한 자리 수로 급감했다는 것 (2004년도는 제외), 4) 협동연구를 흡수하여 2006년부터 새로 시작된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에서 공동연구의 지원금은 인문사회분야 전체 지원금의 20% 가량으로 증가([표 8], [그림 26] 참고)했으나, 지원 과제수는 오히려 5% 이하로 급감([표 7], [그림 25] 참고)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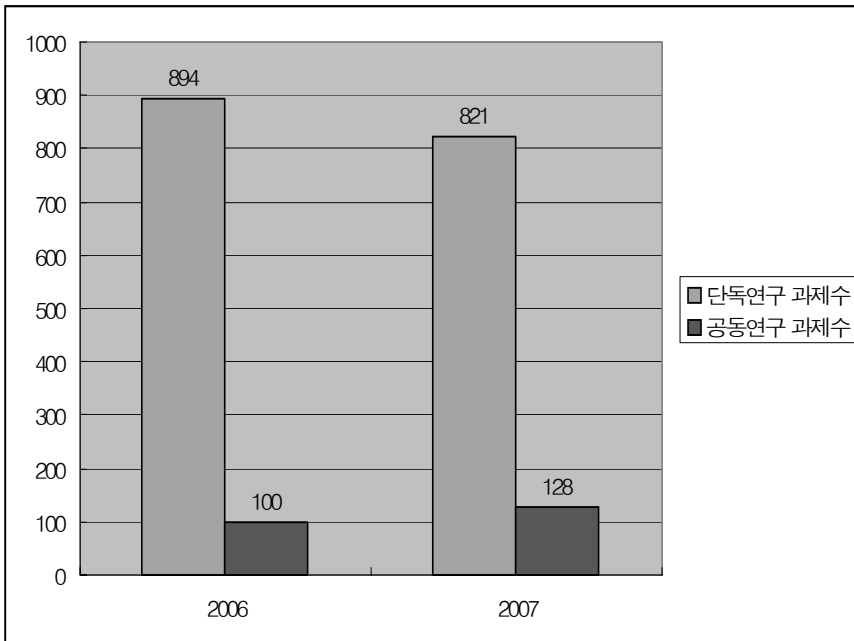
지원금과 과제수 차이의 이러한 편차를 이해하기 위해 2006-07년 사이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에서 단독연구와 공동연구의 과제수와 지원금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다음과 같았다.

〔표 9〕 학진 2006-2007 인문사회 기초연구과제 지원사업
단독연구와 공동연구의 과제 수 및 지원금 비교표

		단 독 연 구	공 동 연 구
2006	과제 수	894	100
	지원금	13,005,921	16,549,229
2007	과제 수	821	128
	지원금	13,587,048	23,536,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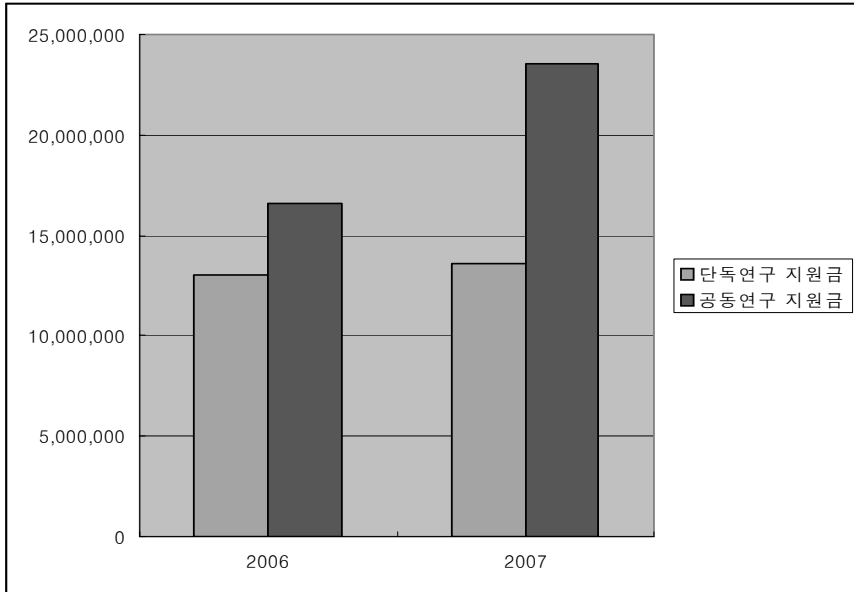
단위: 천원. 출처: 학술진흥재단, 2007, 2008 『학술연구지원통계연보』 재구성.

〔그림 27〕 학진 2006-2007 인문사회 기초연구과제 지원사업
단독연구와 공동연구의 과제수 비교 그래프



출처: 학술진흥재단, 2007, 2008 『학술연구지원통계연보』 재구성.

〔그림 28〕 학진 2006-2007 인문사회 기초연구과제 지원사업
단독연구와 공동연구의 지원금 비교 그래프



출처: 학술진흥재단, 2007, 2008 『학술연구지원통계연보』 재구성.

위의 표와 그래프는 학진의 인문사회분야 지원정책이 적어도 기초연구과제 지원사업의 경우, 공동과제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말해준다(〔그림 28〕 참고). 그러나 단독과제수와 공동과제수 사이의 차이(〔그림 27〕 참고)는 후자가 전자의 약 1/8 수준으로 아주 큰 반면, 지원금의 경우는 후자가 전자보다 127%, 173% 더 크다. 더 많은 단독과제에 배분되는 더 적은 지원금이 낮은 선정률을 의미하고, 이것이 일정하게는 인문사회분야 내부의 소모적인 경쟁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면, 학진은 개별연구를 통합 연구로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렇게,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정부 차원의 연구든 대학 차원의 연구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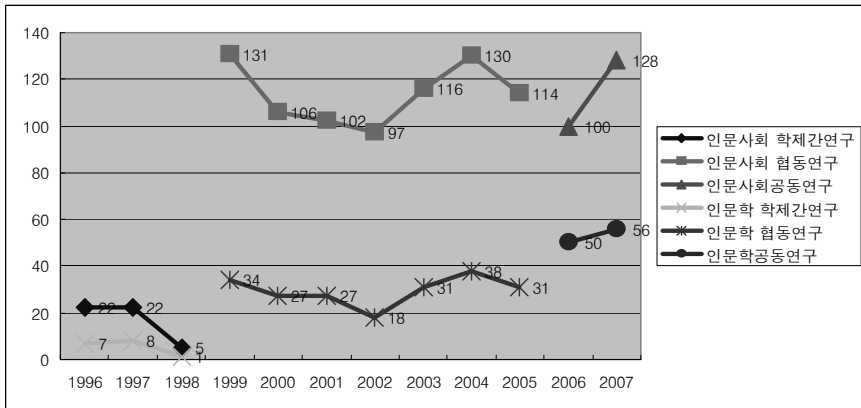
과학기술 분야에 비해, 통합연구에 대한 지원 비중이 현격히 낮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인문학 분야의 통합연구 비중을 따져보면 과제 수 및 지원금의 측면에서 인문사회 분야 전체의 1/3 수준에 머물다가 최근 1/2 선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0〕 1996-2007 사이 학진 인문사회분야 및 인문학 분야
학제간/협동연구/공동연구 지원사업 과제 수 비교표**

	인문사회 학제간연구	인문학 학제간연구	인문사회 협동연구	인문학 협동연구	인문사회공동 연구	인문학 공동연구
1996	22	7(31.8%)				
1997	22	8(36.4%)				
1998	5	1(20.0%)				
1999			131	34(26.0%)		
2000			106	27(25.5%)		
2001			102	27(26.5%)		
2002			97	18(18.6%)		
2003			116	31(26.7%)		
2004			130	38(29.2%)		
2005			114	31(27.2%)		
2006					100	50(50.0%)
2007					128	56(43.8%)

괄호안은 인문사회분야 전체 과제 수 대비 인문학 과제 수 백분율
출처: 학술진흥재단, 2007, 2008 『학술연구지원통계연보』 재구성.

[그림 29] 1996-2007 사이 학진 인문사회분야 및 인문학 분야
학제 간/협동연구/공동연구 지원사업 과제 수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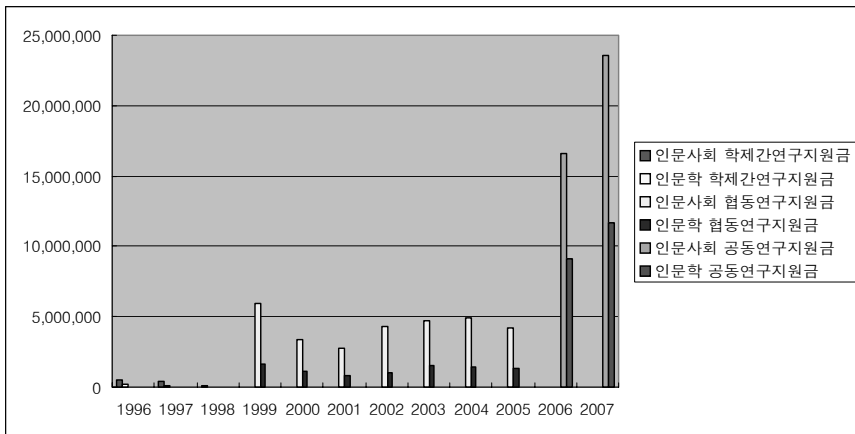
출처: 학술진흥재단, 2007, 2008 『학술연구지원통계연보』 재구성.

[표 11] 1996-2007 사이 학진 인문사회 분야 학제 간/협동연구/공동연구
지원금 대비 인문학 분야 학제 간/협동연구/공동연구 지원금 비교표

	인문사회 학제간	인문학 학제간	인문사회 협동연구	인문학 협동연구	인문사회 공동연구	인문학 공동연구
1996	533,000	177,500 (33%)				
1997	364,500	120,000 (32%)				
1998	136,000	30,000 (22%)				
1999			5,941,900	1,640,500 (27%)		
2000			3,396,124	1,091,752 (32%)		
2001			2,794,465	775,650 (27%)		
2002			4,285,712	1,005,875 (23%)		
2003			4,677,225	1,491,507 (31%)		
2004			4,904,216	1,478,380 (30%)		
2005			4,239,651	1,298,657 (30%)		
2006					16,549,229	9,134,750 (55%)
2007					23,536,019	11,717,515 (49%)

출처: 학술진흥재단, 2007, 2008 『학술연구지원통계연보』 재구성.

[그림 30] 1996-2007 사이 학진 인문사회 분야 학제 간/협동연구
/공동연구 지원금 대비 인문학 분야 학제 간/협동연구/공동연구
지원금 비교 그래프



출처: 학술진흥재단, 2007, 2008 『학술연구지원통계연보』 재구성.

통합연구와 관련된 인문학 분야의 부진한 현황은 역설적으로 인문학 분야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가장 절실하고 시급함을 말해준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학문지원기구의 현황과 정책에서 필요한 일은,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통합 학문의 기초 위에서 우선 인문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견인하고, 나아가 인문학과 타 학문 분야들 사이의 상호연계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제3장 외국의 학문지원기구와 정책: 사례 연구

1. 외국의 학문지원기구: 현황

2장에서 살펴본 대로, 한국의 학문적 상황은 지식기반사회의 요청에 부응하는 인문학의 변화를 견인하고 여러 학문 분야들 사이의 상호연계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학문지원기구와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전환에 참고가 되는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볼 것인데, 이 보고서는 일본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의 사례를 선택했다. 세 나라는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20세기 후반에 인문학의 위기를 체험했고 국가적 정책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세 나라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 또한 지니고 있다.

일본은 한시적인 인문·사회과학특별위원회(2001-02, 이후 ‘인사특위’로 약칭)를 구성하여 인문학의 위기에 대응했으며, 그 대응의 산물이 통합 학문적 방향에서 인문학의 변화를 견인하는 인문·사회과학진흥프로젝트(이후 ‘인사프로젝트’로 약칭)이나,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 배정되는 예산은 극히 미미하여,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인다. 영국은 제도적인 기구 AHRB를 설립(1998)해서 인문학의 위기에 대응했다는 점, 또한 그 기구가 비단 인문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예술도 동시에 지원하는 기구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우선 일본과 차이가 난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이러한 제도적 지원기구의 설립은 인문학을 통합 학문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으며, 그 결과로 2005년에는 AHRC로 승격되어 현재 영국의 통합학문지원기구 RCUK 아래에서 산하 7개 타 학문분야

연구회들과 활발한 통합 학문적 연구를 지원하는 발전을 이루었다. 프랑스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 이전, 일찍이 1939년부터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과 통합적인 연구를 함께 추진해온 사례이다. 그 결과 통합연구기구인 CNRS 산하에서 인문사회분과인 SHS는 다른 학문 분야들과 상호연계를 통한 연구를 활발하게, 때로는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인문학의 갱신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절에서는 세 나라의 사례를 상세히 살펴볼 것인데, 우선 각 나라별 인문학의 전통 및 위기, 그 위기에 대한 대응, 인문학의 궁극적 진흥책으로서의 통합 학문에 대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

1.1. 일본: 인문사회과학특별위원회와 일본학술진흥회

1) 일본의 인문학 전통과 위기

1-1) 일본의 인문학 전통

일본의 인문학은 일본 교육제도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 해 왔다. 일본은 1889년 일본제국주의 헌법이 제정되면서 천황중심의 근대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1890년에는 교육칙어가 발표되었는데, 이는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국가의 형성을 국민에게 철저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 교육칙어가 바로 근대 일본교육의 근본 방침이 된다. 이처럼 근대 일본의 교육 및 연구는 1887년 전후로 형성되기 시작한 국가주의 사상의 영향을 강력히 받는데, 이런 경향은 특히 1894년의 청일전쟁과 1895년의 3국간섭을 계기로 매우 강해진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근대 일본에서는 이미 명치시대(1868. 1~1912. 7)부터 국가와 천황제의 요구에 부응하는 분야로서 자연과학 분야의 학문이 매우 발달하게 되고, 그 결과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학자들도

탄생하게 된다. 예컨대, 의학 분야의 경우 대표적인 인물은 北里柴三郎(기타사토, 독일에서 유학하고 귀국후에는 전염병연구소를 설립, 파상풍균의 순수배양, 디프테리아의 혈청치료 등을 발견), 志賀潔(시가, 전염병연구소에서 배웠으며, 적리균을 발견), 野口英世(노구치, 황열병의 연구, 매독스피로헤타의 배양), 秦佐八郎(신사, 매독 치료법 살발산을 만듦) 등이 있다. 화학분야에서는 高峰讓吉(다카사키, 아드레날린의 발견, 다키디아스타제의 추출), 鈴木梅太郎(스즈키, 오리자닌 비타민B의 발견)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지학·생물학에서는 木村榮(기무라, Z형 지축변동의 신방식을 발견), 大森房吉(오오모리, 오오모리공식, 오오모리 지진계를 고안), 長岡半太郎(나가오카, 원자구조, 스펙쿠털의 연구) 등이 널리 알려진 학자들이다. 자연과학 분야의 이러한 약진은 명치시대에 산업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구미의 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초빙함과 동시에, 일본유학생들을 구미제국에 파견하고 국내연구시설에 충실을 기했던 정부의 정책적인 결과였다.

이 시기의 인문학도 이러한 국가주의 풍조의 영향 아래 이 풍조와 부합하는 독일 학설이 유입되기 시작한다. 반면에 정치학, 법률학 같은 사회과학의 경우 자유민권운동의 시기(“대정大正 데모크라시” 시기, 대정황제 집권기인 1912~26년을 전후로 한 민주주의, 민본주의 운동의 시기)에 영국과 프랑스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인문·사회과학의 경우 산업발달과 궤를 같이하는 자연과학 분야보다 국가차원의 발달은 미비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문·사회과학의 발달은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보다는 대학교육기관의 탄생과 사숙의 발달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대학교육기관은 1886년 학교령(명치 19년 3월에서 4월에 걸쳐, 제국대학령, 사범대학령, 중학교령, 소학교령이 공포됨)이 공포되면서 탄생했으며, 특히 제국대학과 사범대학, 그리고 전문대학은 국가의 시책 및 산업발달과 함께 정비 발달되었다. 한편 사립대학은 명치의 초기부터 설립되어

각각 독자적인 교육을 실시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慶應義塾(게이오기쥬쿠, 福澤諭吉 후쿠자와유키치 설립), 東京專門學校(동경전문학교, 1902년 早稻田와세다로 개칭, 大隈重信 오오쿠나시게노부 설립), 同志社(동지사, 新島襄 니니시마요 설립), 津田塾(츠다쥬쿠, 津田梅子 다우메코 설립) 등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명치시대에 설립된 일본의 사립대학은 명치시대 이전 에도시대의 사숙(私塾)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사숙은 에도시대 중반부터 막부시기 말까지 발전한 교육기관이었는데, 막부나 번이 설치한 공식적 교육기관과는 달리 숙주(塾主)의 개성과 유지자(有志者)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특히, 사숙은 에도시대 후기에 활발한 활동을 보여,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였다. 당시의 대표적인 사숙으로는 간기엔(咸宜園, 大分오이타, 廣瀬炎窓히로세), 나리다끼쥬쿠(鳴瀧塾, 長崎나가사키, Siebold시볼트), 마츠시다무라쥬쿠(松下村塾, 山口야마구치, 吉田松陰요시다), 테키쥬쿠(適塾, 大阪오사카, 緒方洪庵오가타), 센심도쥬쿠(洗心洞塾, 大阪오사카, 大塩平八郎오오시오), 마이키쥬쿠(梅花塾, 大阪오사카, 篠崎小竹시노자키)⁵⁾ 등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또한 에도, 교토, 오사카를 중심으로, 무명이지만 고도의 교육내용을 자랑하는 개성적인 사숙도 다수 존재했다. 에도시대의 교육수준은 매우 높아서, 무사는 물론이고, 상인이나, 농민들 사이에서도 읽기나 쓰기 등을 배우려고 하는 등 교육열이 뜨거웠다. 승려나 낭인들이 아이들에게 읽기, 쓰기, 셈 등을 가르치는 寺子屋데라코야(에도시대 서민을 위한 교육기관)에서부터, 이름이 있는 학자가 지도하여 인재를 배출한 저명한 塾쥬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숙이 존재하고 있었다. 더우기, 막부말기에 가까이 오면, 蘭學塾란가쿠쥬쿠, 兵學塾헤이가쿠쥬쿠, 醫學塾이가쿠쥬쿠 등 다양한 학문의 사

5) 괄호안의 표기는 순서대로, 사숙의 한자명, 위치하는 지명, 그리고 설립자명을 뜻한다.

숙도 등장하게 되었다.

비록 이들 사숙은 숙으로서 교육을 했던 기간은 짧으나,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또 명치 이후에도 근대교육제도 속에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의의 가운데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본의 사숙과 사립대학이 정부로부터 재정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독립해서 설립자나 뜻을 같이한 사람들의 철학과 이념에 따라 발달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가가 주도한 대학설립 및 학문연구가 산업발달에 대처하고 국가적 인재양성이란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뿐만 아니라, 사숙의 이러한 특징은 국가주의 사상에 반대하는 자유민권 및 사회주의 사상에 기초한 반정부·반번벌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한다. 요컨대, 일본의 인문·사회과학은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그에 따른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학을 요람으로 해서 발달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인문학은 중세의 위정자나 권력자로부터 정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모였던 학도들의 조합에서 출발한 서양의 대학(조합이나 공동체를 의미하는 라틴어 universitas)과도 궤를 같이한다. 중세의 대학은 독일의 베를린대학(Wilhelm von Humboldt, 1810년 창립)과 같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철학과 정치학 등의 인문·사회과학에 기초한 근대대학으로 발전했다. 근대 일본의 대학에서 인문학의 연구도 바로 이 베를린 대학을 모범으로 해서 발전했다.⁶⁾

따라서 일본의 인문·사회과학은 기본적으로 “권력으로부터 정신의 자유”를 추구했던 중세의 대학과 같이, “권력으로부터 학문의 자유”를 추구해 사회 전체의 철학적 윤리적 교양을 생산하는 전통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정부는 근대화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국가

6) 江藤 裕之, 『나가노현 간호대학 기요 8』p. 103, 2006.

적 요구를 앞세워 대학 기관 및 학문연구를 통제하고 개혁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때의 사상적 배경이 바로 국가주의와 일본제일주의인 것이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은 전후 일본정부의 고등교육개혁에서도 일관되게 관철되었다.

1-2) 일본의 고등교육개혁

일본의 고등교육은 2차대전 이후의 일본에서 서구식 민주주의의 정착과 1970년대, 80년대의 경제적 번영 그리고 안심할 수 사회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바탕이 되어 왔다. 즉, 일본의 고등교육은 산업화·선진국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에는 장기적인 경제침체(잃어버린 10년)가 이어졌고, 21세기에는 급속한 과학의 진보, 정보화, 국제화, 소자고령화, 핵가족화 등 교육을 둘러싼 상황이 크게 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최근 아베정권(2006/9/26~2007/9/26) 아래에서 사회적인 대논란을 불러일으키며 60년만에 단행된 2006년 12월의 교육기본법(1947. 3. 31. 제정공포) 개정(법률 제120호로 공포)은 지금까지의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개혁 일반에 대한 사상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아베정권은 교육개혁의 목표로 ‘애국심 고취’, ‘국가주의’ 등을 내세웠는데, 이는 바로 근현대 일본고등교육개혁의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일본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21세기 벽두부터 시작되었다. 문부과학성은 2001년 6월, 『대학을 기점으로 한 일본경제활성을 위한 구조개혁 플랜』을 작성해 발표한다. 이 플랜의 부제는 “대학이 변한다, 일본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었는데, 부제가 의미하듯 이 플랜이 대학에서 찾은 것은 신산업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제경쟁력의 강화였다. 이것이 향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본정부가 지향하는 고등교육정책의 방향성으로 관철된다. 문부과학성은 그러한 정책의 배경으로, 사회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정책으로서의 교육개혁이 1980년대 초두부터 각국의 국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선두과제로 설정되어왔음을 언급하고 있다.⁷⁾

이 시기 일본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이념이 바로 「경쟁원리」의 도입이다. 「경쟁원리」는 「대학을 기점으로 한 일본경제활성을 위한 구조개혁 플랜」과 함께 당시(2001. 6.) 책정된 「대학(국립대학)의 구조개혁 방침」등 현재의 고등교육정책에 공통되는 대학운영의 사고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일본은 이 구조개혁의 방침에 기초해 대학간 경쟁적 환경을 조성해 연구거점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했던 것이며, 그 결과로 「국공사립 톱 30」이 탄생했고, 이는 2002년부터 본격화된 「21세기 COE프로그램」으로 연결된다.⁸⁾

이러한 정책은 2004년 대학교육개혁으로 정점에 달하게 된다. 2003년 국립대학법인법(2003. 7. 16 법률 제 112호)의 제정으로부터 이듬해인 2004년 4월 단행된 대학교육개혁의 핵심은 국립대학의 법인화, 공립대학법인제도의 창설, 국립고등전문학교의 독립행정법인화 등이다. 이는 경쟁원리에 기초하여 국공사립대학에서 우수한 조직을 선정해 중점 지원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대학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2005년 1월에 취해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장래상(답신)」⁹⁾에는 「지식기반사회」시대에 있어서 고등교육과 사회의 관계를 기본으로,

7) 문부과학성, 『문부과학백서 2001년판』, 2002.

8) 일본교직원조합 『일교조의 정책 · 제도요구와 제언 2003-2004년도판』 『정책제언 16』, 2003.

9) 「중앙교육심의회」가 2005년 1월 28일 발표한 것으로, 고등교육개혁의 전반적인 방향이 구체적으로 확정돼 있다. 이태 사이트를 참조.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0/toushin/05013101.htm>

2015년 2020년을 설정한 일본의 고등교육의 장래상과 관련된 시책을 내세웠다. 그리고 2006년 3월에는 「대학원교육진흥시책요강」을 책정하여, 2007년부터는 전술한 「21세기 COE프로그램」에 이어 「글로벌 COE프로그램」을 통해 소위 국제적 매력을 지닌 대학원 교육을 구현해왔다.

나아가 2007년 6월 20일, 교육법개정(2006.12)에 따라 개정된 학교 교육법에 기초해, 문부과학성은 사회에 열린 고등교육의 전개를 향한 태세의 확보, 이공계 인재의 양성, 의료인 양성 등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의 조치를 취한다. 여기서 「사회에 열린 고등교육」의 예를 들어 보면 직장에 다니는 사회인을 대폭 받아들이는 조치와, 지역사회·산업계와의 연계정책을 들 수 있다.¹⁰⁾ 이 예를 보더라도 일본정부의 고등교육개혁은 지식기반사회로 표현되는 정보화·국제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인재육성이라는 실용주의적 국가정책이라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다.

1980년대부터 추구되어온 일본 고등개혁정책의 오늘날 귀결점은 아래 [그림 31] 과 [그림 32]에 극명히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¹¹⁾

10) 문부과학성, 『문부과학백서 2007년판』, p. 141. 2008.

11) 문부과학성, 『문부과학백서 2007년판』, pp. 132-133, 2008.

〔그림 31〕「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상」의 주요 내용

図表 2-3-2 「我が国の高等教育の将来像」の主な内容

I: 高等教育の量的変化の動向

- 全体規模の面的みからすると、高等教育の量的側面での需要はほぼ充足。ユニバーサル段階の高等教育が既に実現しつつある。



II: 高等教育の多様な機能と個性・特色の明確化

- 新時代の高等教育は、学校種（大学・短大・高専・専門学校）ごとの役割・機能を踏まえた教育研究の展開と相互の接続や連携の促進を図るとともに、各学校ごとの個性・特色を一層明確化する方向。
- 各大学は、自らの選択により、緩やかに機能別に分化（個性・特色の表れ）。

①世界的研究・教育拠点、②高度専門職業人養成、③幅広い職業人養成、④総合的教養教育、
⑤特定の専門的分野（芸術、体育等）の教育・研究、⑥地域の生涯学習機会の拠点、
⑦社会貢献機能（地域貢献、産学官連携、国際交流等）等

III: 高等教育の質の保証

- 学習者の保護や国際的通用性の保持のため、高等教育の質の保証が重要な課題。
（設置認可の的確な運用、認証機関による第三者評価システム及び自己点検・評価の充実）

IV: 高等教育機関の在り方

- 大学は自主性・自律性とともな公共的役割・社会的責任を担う。
- 大学が人材育成と学術研究の両面での使命・役割をより積極的・効果的に果たすため、大学の教員組織の在り方について見直しを行う必要。

【大学】 …… 教養教育や専門教育等の在り方を総合的に見直し再構築。
教養教育と専門基礎教育を中心に主専攻・副専攻を組み合わせた総合的教
養教育型や専門教育完成型など様々な個性・特色を持つものに分化。
【大学院】 …… 課程制大学院制度の趣旨を踏まえた大学院教育の実質化。
【短期大学】 …… 課程の修了を学位取得に結び付けるよう制度改正。
【高等専門学校】 …… 単位計算方法の改善。
【専門学校】 …… 一定の要件を満たす専門学校の卒業生への大学院入学資格の付与。

- 国公立大学それぞれの特色ある発展と高等教育全体の活性化が重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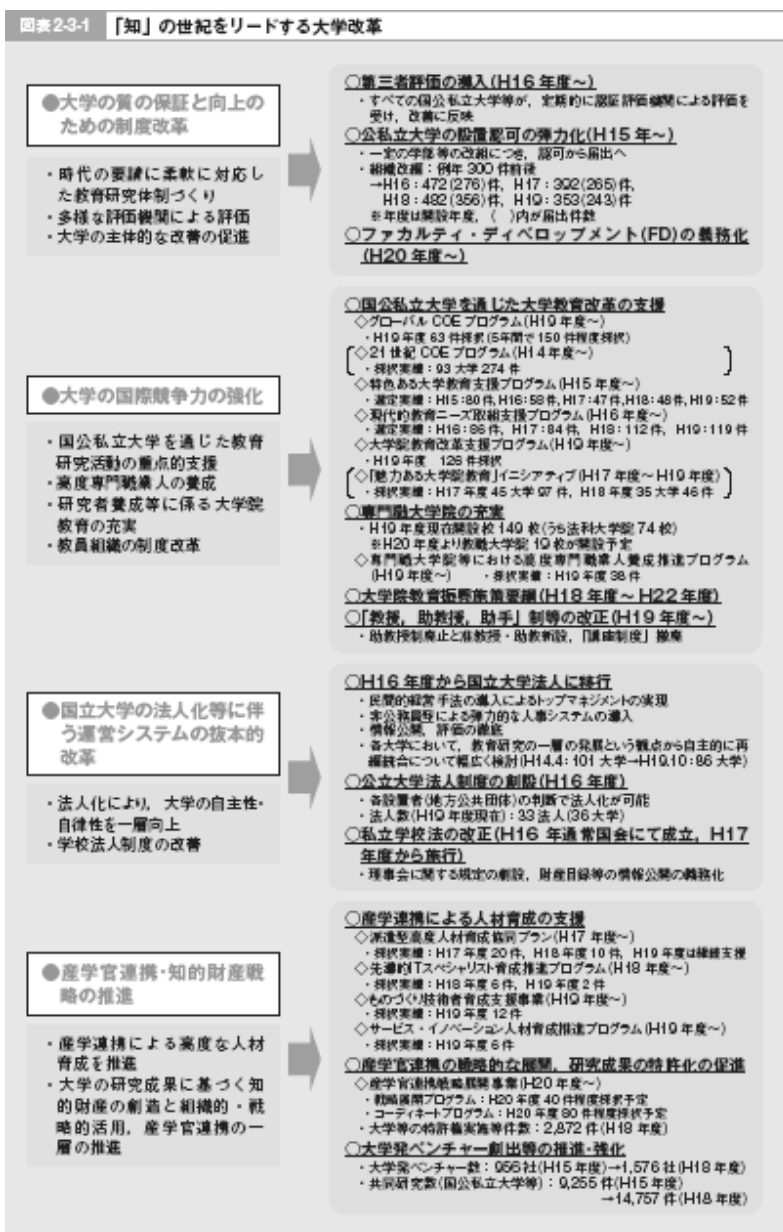
V: 高等教育の発展を目指した支援の在り方

- 高等教育への公的支出を欧米諸国並みに近づけていくよう、最大限の努力が必要。
- 今後の財政的支援は、国内的・国際的な競争の環境の中で、各高等教育機関が持つ多様な機能（個性・特色）に応じた形に移行。
→ 多様な機能に応じた多面的できめ細やかなファンディング・システムの構築。

将来像に向けて取り組むべき施策

将来像の主な内容に沿って、その内容を実現するために必要と考えられる「早急に取り組むべき重点施策（12の提言）」等について提言。

〔그림 32〕 「지」의 세기를 리드하는 대학개혁



이러한 일본교육정책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고이즈미 수상 시기(2001. 4. 26~2006. 9. 26)의 정치적 노선과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적 흐름과 무관치 않다. 그리고 그 사상 및 이념의 역사적인 배경은 1980년대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84년 나카소네 정권 시기(1982.11.27~1987.11.6)에 「임시교육심의회설치법안」에 기초해 만들어진 「임시교육심의회」(1984년-1987년 4회의 답신)는 나카소네 수상 주도하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문제 개혁을 둘러싼 「성역없는 개혁」을 주창했다. 이 임시교육심의회는 「교육의 자유화」를 내세워 규제완화를 추진했지만, 문부성과 문교 전문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교육의 개성화」로 변형되어 제안되기도 했다. 이때의 교육 자유화는 그 후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적 교육개혁의 단초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¹²⁾ 따라서 이 임시교육심의회 활동을 계기로 기존의 교육정책 기조가 보수주의에서 신보수주의로 바뀌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 후 오부치 내각시절(1998. 7. 30~2000. 4. 5)인 2000년 3월 설치된 「교육개혁국민회의」가 모리총리시절(2000. 4. 5~2001. 4. 26)인 2001년 4월까지, 교육기본법 개정과 봉사활동의 실시 등을 검토하는 등 교육일반에서 우익적 활동을 전개하며, 「교육개혁국민회의」의 보고서인 「교육을 바꾸는 17개 제안」을 내놓게 된다. 하지만 이때는 교육일반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고, 고등교육에 대한 의미있는 개혁조치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학력의 향상」을 중시하는 일반적 풍토에 대해 「인간성의 함양」 등의 정신론 부분이 많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2006년 12월 아베정권시절 「애국심 고취」를 중심으로 한 교육기본법 개정이라는 보수주의적 국가주의 사고의 배경으

12) 藤田英典(후지타히데노리) 大内裕和(오오우찌히로카즈), 「학력과 축소교육의 구조적 모순, 변화하는 교육현장」 『現代思想』2008년4월 vol.36-4, p.81, 청토사(靑土社).

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현재의 고등교육의 정치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작용해 실현된 것은 고이즈미 정권 시기라 할 수 있다. 고이즈미 시기 정책결정의 정점에 군림한 조직으로는 「경제재정자문회의」라는 것이 있었다. 이는 산업계와 경제학자들이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조직으로, 여기에서 나온 정책은 「경제재정자문회의」와 내각이 합의해 매해의 중요정책인 「경제재정운영·구조개혁기본방침」으로 결정된다.

이 「경제재정운영·구조개혁기본방침」에는 교육정책으로서 공립 비영리 교육에의 경쟁원리의 도입(2001년), 국립대학의 독립법인화, 미국식 커뮤니티 스쿨의 검토, 학력향상사업, 영어 정보 과학기술교육의 강화, 교원평가제의 도입, 대학·대학원 개혁(2003), 학력향상을 위한 학습지도 요령 개정, 교원의 급여·정수의 조정, 교육위원회 개혁, 교장권한 강화, 학교외부평가의 확대(2004년), 학교외부평가 학교선택제의 확대보급, 유아교육의 강화, 전국학력조사의 실시(2005년) 등이다. 이는 대부분 일본 경단련이나 경제동우회가 제기한 정책들로서 이를 「경제재정자문회의」를로서 현실화시켜 나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이즈미 시기의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일반의 개혁은 시장의 경쟁원리를 내세운 경제계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인 것이다.

한편, 이 시기의 교육개혁은 1996년의 「일미안전보장선언」에 이은 1997년의 「신가이드라인」, 1999년의 「주변사태법」부터 2003년 「자위대 이라크 파병」, 2004년 「유사법제」에 이르기까지 「국제공헌」이란 이름 아래 일미군사동맹의 글로벌화와 자위대 해외파병체제로 진행되는 「군사대국화」로써, 국민들에게 도덕교육, 애국심 고취라는 「대국주의적인 내셔널리즘 교육」의 강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도 한 것이다.¹³⁾

13) 교육기본법개정정보센터, 「이미 시작된 “교육기본법 개정후의 세계”」, p. 2, 2006.

결국 일본의 고등교육개혁은 한편에서 명치 이후 근대화에서부터 1970년대 고도 산업화 시기를 거쳐 현재의 정보화, 국제화 사회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이라는 기본노선에 충실히 따라왔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 그것에 맞게 교육, 훈련받고 국가가 기술과 정보화를 원하면 또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 교육에 중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정책이 전에는 군국주의로 전후에는 자유주의로 현재에는 신자유주의로 구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뜻있는 학자와 언론인의 비판적인 주장이 응당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본격적인 대학개혁이 시작되던 2001년 4월 26일자 일본학술회의¹⁴⁾의 『21세기에 있어서 인문·사회과학의 역할과 그 중요성—과학기술의 새로운 인식방법, 그리고 일본의 새로운 사회문화 시스템을 지향하며—』라는 성명서는 일본학계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준다. 일본학술회의가 일본의 인문사회, 자연과학 등 모든 과학자를 대표하는 기관이란 점에서 이들의 다음과 같은 우려는 정부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으로 균형감있는 성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학술회의는 성명에서 『지금까지 자연과학만이 과학이고 과학기술인 것 같은 이해가 존재했다. 자연과학에 편중된 과학기술의 고도의 발전은 그 자체로는 현재의 곤란한 사회적·지구적 난문을 해결해 주지 못하

14) 일본 학술회의는, 과학이 문화 국가의 기초이다라는 확신 아래, 행정, 산업 및 국민 생활에 과학을 반영, 침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49년 1월, 내각총리대신의 관할 아래, 정부로부터 독립하고 직무를 실시하는 『특별한 기관』으로서 설립되었다. 주요 직무는, 과학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해, 그 실현을 도모하는 것과, 과학에 관한 연구의 연락을 도모해, 그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 등 2가지이다. 일본학술회의는, 일본의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전 분야의 약 82만명의 과학자를 대외에 대표하는 기관이며, 210명의 회원과 약 2,000명의 제휴 회원에 의해서 직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세한 것은 아래 일본학술회의의 사이트 참조.

<http://www.scj.go.jp/ja/scj/index.html>

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국가와 사회는 인문·사회과학에 인간의 본질을 추구하는 인간의 정신생활을 윤택하게 한다는 사회적 책무의 수행을 촉진하고, 또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에 지금까지 확대되어온 연구체제 및 조건에 관련된 불균형을 시정하는 등, 적극적인 인문·사회과학의 진흥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국립대학법인화를 계기로 해서는 정부의 국가 실용주의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간다. 일본정부의 국가주의적 실용주의 고등교육개혁에 직면하여, 많은 지식인들이 1988년 제네바에서 채택된 『21세기의 고등교육전개와 행동』이란 선언을 인용해왔다.¹⁵⁾ 이 선언이, 20세기 후반의 고등교육은 선진국·후진국간 격차, 장애와 인종·성차별 등에 의한 격차, 부유한 국가를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의 사회경제적 계층화 등에 의한 여러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정부의 개혁이 초래한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이다.

결국, 많은 학자 특히 인문·사회과학자의 입장에서, 일본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국가주의적 실용주의 정책이 학문연구와 대학풍토의 변화를 수반하면서 인문·사회과학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일본 인문학의 위기

전술한 일본 인문학의 전통과 고등교육개혁 과정에 기초할 때, 현대 일본의 인문·사회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인문·사회과학의 위기는 바로 그 철학적 기반을 경시하는 국가주의적 실용주의적 정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5) 일본교직원조합 『일교조의 정책 제도요구와 제언 2007-2008년도판』 『정책제언 17』, p. 59, 2008.

그러한 정책적 귀결로서 표현되는 일본에 있어서 인문·사회과학의 위기는 대표적으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고등교육정책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예를 들면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6-2010년)에는 「과학기술입국」을 지향해 5년간 24조엔의 정부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1995년 11월 15일 공포 시행된 과학기술기본법 제1조는 「인문과학만에 관계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인문·사회과학은 과학기술정책의 틀밖에 놓이게 되었다. 물론 1999년 6월 문부성 학술심의회를 통해 관련조항이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는 과학기술창조입국」으로 바뀌지만, 구체적인 시책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못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인문·사회과학을 뚜렷이 경시하는 정책 기조 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대학원 진학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인문·사회과학의 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대학원 진학율을 비교해보면 이공농계는 32.4%에 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인문계는 4.2%에 머무르고 있다. 보다 단적인 실태는 대학원 학생의 학문 영역의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⁶⁾ [표 12]와 [표 13]¹⁷⁾은 일본의 대학원이 인문·사회과학과 이농의학계 사이에 심각한 학문적 불균형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16) 佐藤 學(사토마나부), 『학술의 동향』 「인문·사회과학의 위기에 대처하여」, pp. 8~9, 재단법인일본학술협력재단, 2007. 4.

17) 문부과학성 『교육지표의 국제비교』2004년도.

〔표 12〕 학문영역의 발란스 1: 석사학위 취득자의
전공분야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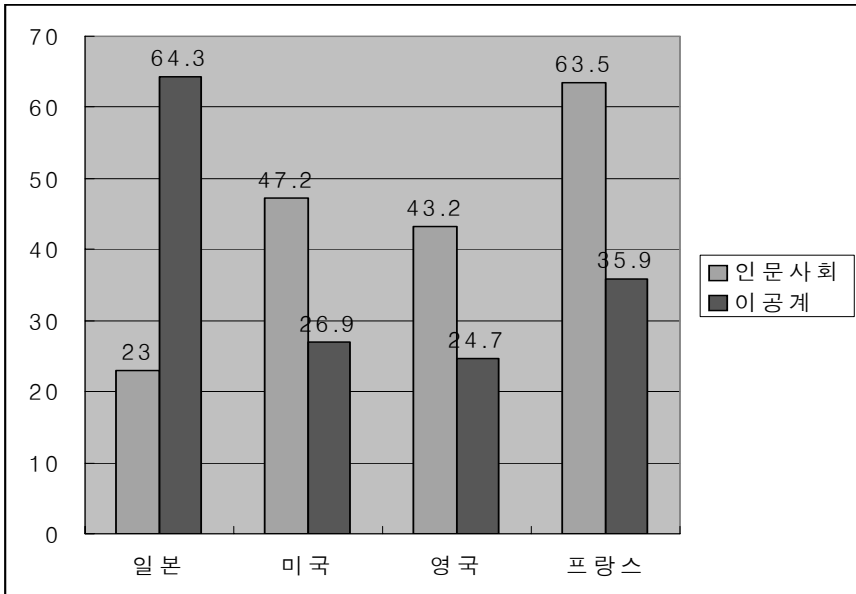
석사학위 분야	일 본	미 국	영 국	프랑스
인 문	9.3	9.6	8.5	25.0
사 회	13.7	37.6	34.7	38.5
인문사회 총합	23	47.2	43.2	63.5
이 과	9.4	2.7	9.6	
공 과	44.3	8.8	8.5	28.0
농 과	6.0	0.8	0.7	
의·보건	4.6	14.6	5.9	7.9
이공계 총합	64.3	26.9	24.7	35.9
교 육	7.5	23.5	24.3	
기 타	5.1	2.4	7.8	0.6

〔표 13〕 학문영역의 발란스 2: 박사학위 취득자의
전공분야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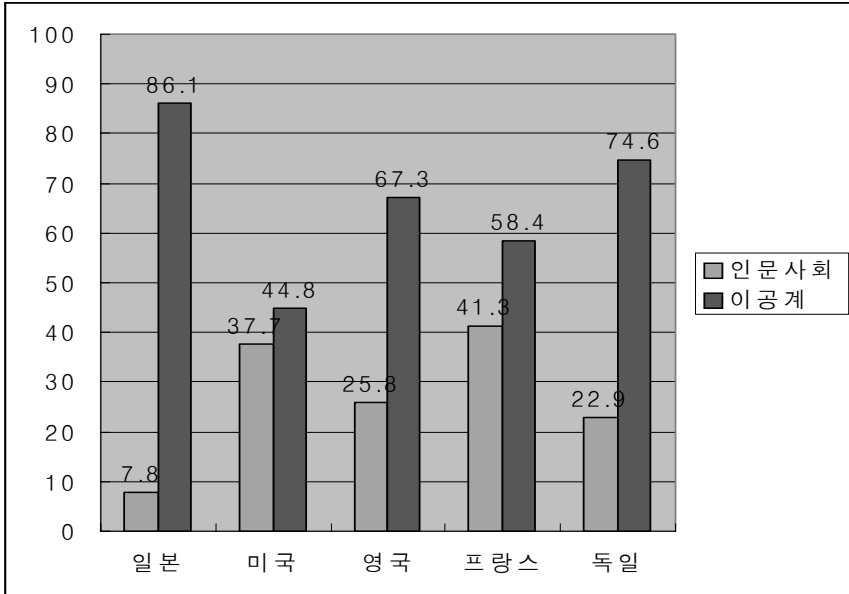
박사학위 분야	일 본	미 국	영 국	프랑스	독 일
인 문	4.0	23.7	12.9	23.3	10.4
사 회	3.8	14.0	12.9	18.0	12.5
인문사회 총합	7.8	37.7	25.8	41.3	22.9
이 과	9.8	21.4	35.3		28.4
공 과	24.7	14.5	15.5	53.6	9.2
농 과	7.7	2.5	2.6		3.9
의 보건	43.9	6.4	13.9	4.8	33.1
이공계 총합	86.1	44.8	67.3	58.4	74.6
교 육	0.8	15.0	4.3		1.1
기 타	5.3	2.5	2.6	0.3	1.4

일본 대학원은 석사과정에서 공학계에 편중돼 있고, 박사과정에서는 의학계와 공학계에 편중돼 있으며, 인문·사회과학은 경원시되고 있다. 일본 대학원의 이러한 상황을 서구의 대학원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프랑스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일본의 인문·사회과학 분야 석사와 박사취득자는 각각 프랑스의 약 1/3, 약 1/6에 불과하다([그림 33], [그림 34] 참고).

[그림 33] 석사학위 분포도 국가별 비교



〔그림 34〕 박사학위 분포도 국가별 비교



인문학의 위기가 이처럼 뚜렷해지자 일본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고, 그것이 후술할 인문·사회과학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이다.

2) 일본의 인문학 위기 대응방향과 정책

2-1) 인문·사회과학특별위원회

(1) 인문·사회과학특별위원회 조직 구성 및 역할

인문·사회과학특별위원회(이하 인사특위)는 2001년 4월,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심의회」¹⁸⁾총회의 의결에 의해, 2001년 6월 14일부터

제1차 회의를 가짐으로써 활동을 개시해 2002년 5월 30일 제11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중단한, 위「과학기술·학술심의회」의 「학술분과회」 소속 위원회 중 하나이다.

인사특위의 구성은 학자를 중심으로 한 총 13명의 위원과, 문부과학성의 과학관 4명을 기본으로 하고 어드바이저로 전문위원을 약간 두고 있다. 매회 개최되는 회의는 위원, 과학관, 전문위원들과, 그 외 사무국의 직원들이 참여해, 보고와 논의, 그리고 관련 전문 지식인의 의견청취 형식으로 진행돼 왔다. 또한 인사특위는 그 활동내용을 상위기관인 「학술분과회」에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2) 인사특위 연혁

인사특위는 아래 [표 14]와 같이 2001년 6월 14일 제1회 「과학기술 학술심의회 학술분과회」의 「인문·사회과학특별위원회」 심의회를 시작으로 총 11회의 심의회를 개최했으며, 심의회 진행과정에서 상급기관인 학술분과회에 3회 보고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⁹⁾

[표 14] 인사특위 관련 회의 및 경과

회수	일 자	회 의 명	주 요 내 용
1회	2001.6.14	인문·사회과학특위	· 향후인사특위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2회	2001.7.12	인문·사회과학특위	· 향후 인문·사회과학의 진흥방책에 대하여 · 전문가 의견청취: 板垣雄三(사카가끼, 일본

18) 「과학기술·학술심의회」는 중앙성청 등의 개혁의 일환으로, 과학기술 학술관계의 6개 심의회(항공·전자 등 기술심의회, 해양개발심의회, 자원조사심의회, 기술조사심의회, 학술심의회, 측지학심의회)의 기능을 조절·통합하면서 설치된 문부과학성 산하의 국가차원 기구이다.

19) 이는 아래 문부과학성 사이트의 「과학기술·학술심의회 학술분과회 심의경과」를 재정리한 것임. <~http://www.mext.go.jp/b_menu/shingi/gijyutu/gijyutu4/toushin/020601a.htm#c>.

회수	일 자	회 의 명	주 요 내 용
			학술회의 제1부장)
1회	2001.7.24	학술분과회의	· 인사특위 심의 상황 설명
3회	2001.9.14	인문·사회과학특위	· 인문·사회과학진흥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기반의 정비에 대하여 · 전문가의견 청취: 鳥井 弘之 委員(토리이, 일본경제신문사논설위원) 町田和彦(마찌다, 동경외국어대학 아시아아프리카언어문화연구소교수)
4회	2001.10.11	인문·사회과학특위	· 인문·사회과학진흥을 위한 진흥방책에 대해 · 전문가 의견 청취: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기반의 정비에 대해/有川 節夫 委員(아리카와, 큐슈대학교수), 연구체제(연구거점)의 정비에 대해, 石井 米雄(이시이, 간다외국어대학장) 石井 紫郎(이시이, 종합과학기술회의의원) 吉川 洋(요시카와, 동경대학대학원경제학연구과 교수)
5회	2001.11.16	인문·사회과학특위	· 인문·사회과학진흥을 위한 국제화로의 대응에 대해 · 전문가 의견 청취: 藥師寺泰藏위원(야쿠시데라, 게이오대학교수) 立本成文위원(다치모토, 교토대학동남아시아연구센터소장, 현·(카시와기, 동경대학법학부부속비교법정국제센터교수)
6회	2001.12.5	인문·사회과학특위	·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융합에 대해 · 전문가의견 청취: 加藤 尙武위원(가토, 돗토리환경대학장) 山折 哲雄(야마세츠,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소장) 黒田日出男(구로다, 동경대학사료편찬소 교수)
7회	2002.2.7	인문·사회과학특위	· 「인문·사회과학의 진흥에 관한 보고(안)」의 검토에 대해
2회	2002.2.14	학술분과회의	· 인문·사회과학특별위원회에 있어 심의상황 설명

회수	일 자	회 의 명	주 요 내 용
8회	2002.3.7	인문·사회과학특위	· 『인문·사회과학의 진흥에 관한보고(안)』의 구성에 대해
9회	2002.4.11	인문·사회과학특위	· 『인문·사회과학의 진흥에 관한보고(안)』의 구성에 대해
1회	2002.4.16	보고서초안작성 워킹그룹 회의	· 『인문·사회과학의 진흥에 대해 (가제) (보고안)』에 대해
2회	2002.5.9	보고서초안작성 워킹그룹 회의	· 『인문·사회과학의 진흥에 대해 (가제) (보 고안)』에 대해
10회	2002.5.16	인문·사회과학특위	· 『인문·사회과학의 진흥에 대해 (가제) (보 고안)』에 대해
3회	2002.5.22	보고서초안작성 워킹그룹 회의	· 『인문·사회과학의 진흥에 대해 (가제) (보 고안)』에 대해
11회	2002.5.30	인문·사회과학특위	· 『21세기의 인문·사회과학의 진흥에 대해 (가제)(보고안)』에 대해 인문·사회과학특 별위원회서 최종 정리
3회	2002.6.11	학술분과회의	· 『인문·사회과학의 진흥에 대해—21세기에 기대되는 역할에 부응하기 위한 당면의 진 흥방책—(보고안)』에 대해 학술분과회로서 최종 정리

위의 활동경과로 알 수 있듯이, 인사특위는 2002년 5월 30일 제11회 회의에서 보고안을 만드는 것으로 임무를 다했다. 그리고 2002년 6월 11일 『과학기술 학술심의회 학술분과회』가 그 보고안에 기초해, 인문·사회과학의 진흥방책에 대해 『인문·사회과학의 진흥에 대하여—21세기에 기대되는 역할에 부응하기 위한 당면의 진흥방책—(보고)』²⁰⁾를 최종 작성하였다.

20) 이 보고서는 문부과학성 사이트의 다음 주소에서 볼 수 있다. <http://www.mext.go.jp/b_menu/shingi/gijyutu/gijyutu4/toushin/020601.htm>.

이로써 인사특위 활동은 막을 내렸지만, 이 특위가 보고한 제언은 향후 일본의 인문·사회과학 진흥에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를 일본학술진흥회가 연구프로젝트 형식으로 구현하게 된다.

2-2) 인사특위의 인문학 위기 타개의 방향

인사특위의 인문학 위기 타개의 방향은 인사특위의 2002년 6월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²¹⁾ 이 보고서는 크게 3 부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1) 21세기 인문·사회과학의 사명, 2) 일본 인문·사회과학의 현상과 과제, 3) 인문·사회과학의 진흥방책이 그것이다.

1) 21세기의 인문·사회과학의 사명

우선 인사특위의 보고서는 그 첫 부분에서 현재 인문·사회과학이 처해 있는 국내외적인 현실과 보고서 작성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세계적 규모에서의 인구문제,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전이 낳은 부정적 측면, 경제 불안과 민족대립, 테러리즘의 국제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가까운 세계에서도, 매일매일의 정신불안, 사회규범의 악화, 어린이를 둘러싼 교육문제 등, 인간의 삶의 방식에 미치는 각종의 문제가 등장했다. 이러한 현대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사특위는 인문·사회과학이 갖는 비판적 역할과 문화 담당자로서의 역할, 새로운 지식 틀의 변화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의 대응 등의 사명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인사특위의 보고서는 21세기에 인문·사회과학이 지닌 사명을 다음의 4가지로 구체화시켰다.

21) 아래 이어지는 내용은 각주 20에서 언급한 사이트에 나와 있는 인사특위 보고서를 재정리한 것이다.

- (1) 인문·사회과학의 비판적 역할: 인문·사회과학에 대해서는 인간의 영위나 다양한 사회현상을 성찰 또는 비판한다고 하는 학문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정책의 당위성에 대한 음미, 과학기술의 존재방식이나, 그 사회적 침투에 대해서 모니터링(비판적 관찰과 정보의 축적)을 하는 등으로 공헌하는 것이 요구된다.
- (2) 문화의 계승과 발전: 인문·사회과학의 연구는 인간 정신생활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인문학은 인간이 현대에서 살고 있는 의미에 대해 답을 하는 등, 그 역할은 한층 중요하게 되었다. 글로벌화와 무국경화가 확대되는 오늘날, 인문·사회과학은 학문적 활동을 국제적으로 진전시킴으로써, 제민족, 제국민사회, 제지역사회의 공존, 공생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3) 현대적 제 문제의 해결에 공헌: 인문·사회과학에 대해,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현대적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사람들의 사색이나 행동의 동기나 거처의 제공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어, 인문·사회과학은 연구성과에 기초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소재의 제공·제안이라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공헌할 필요가 있다.
- (4) 지식의 틀 변환에 대한 대처: 현대의 여러 문제의 복잡성을 시각에 넣어 여러 문제의 극복과 해결을 향해, 다른 분야, 영역간의 상호접촉, 협동, 나아가 전문분야, 영역을 초월한 학문 융합의 시도도 필요하다. 이러한 대처를 통해, 각 분야, 영역의 학문이 변용을 추구해가는 가운데, 새로운 지식의 틀이 창설된다.

2) 일본 인문·사회과학의 현상과 과제

보고서는 이러한 사명을 가진 인문·사회과학이 일본에서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고 보면서, 일본 인문학이 처한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다음

과 같이 진단함과 동시에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1) 연구, 교육의 세분화와 폐쇄성의 타파: 일본의 인문·사회과학은, 명치시대 이후 주로 대학에서의 연구, 교육조직의 창설과 그 사회적 요청에 부응한 정리, 확충과 함께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학문이 진화함에 따라 인문·사회과학을 구성하는 각 분야, 영역의 전문화, 세분화가 진전되면서, 많은 경우, 연구 및 교육활동이 폐쇄된 각각의 체계 속에서 이루어져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자연과학과의 거리는 물론, 인문·사회과학 상호 또는 분야의 거리, 더욱이 같은 분야의 다른 전문영역 간에서조차 충분한 교류나 협동이 이어져왔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또한, 연구자의 과제의식이나 테마설정도 세분화된 협소관심으로 흐르는 경향이 강하고, 개개의 연구과제가 사회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자 자신의 질문과 성찰에 소극적이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연구, 교육체제는, 특정의 분야, 영역의 연구를 깊이 파헤치는 점에서는 필요하나, 학문의 발전이나, 새로운 문제의 출현에 대응하는 신 분야를 창조하여 개척해나가는 활력이라는 관점에서는 지장이 되는 점이 많고, 그 때문에 보다 유연하게 개방적인 연구, 교육체제로의 변용이 요구된다.
- (2) 현실적 과제와의 관계 강화: 지금까지의 인문·사회과학은 현실사회의 상태와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를 바탕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공헌하는 작업 등을 학술연구의 형태로 만드는 것에 소극적이었고, 연구 성과의 현실적 과제와의 관련성도 적었다. 앞으로는, 현실적인 과제해결에 대한 학문적 책임과 응답이 불가결하고, 연구 성과를 활용한 사회적 제언, 문제해결을 위한 소재의 제공 등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현실적 과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학문의 존재형태의 하나로, 정책의 실시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그에 의한 정책 평가를 포함한 정책 분석형 연구,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 제언형 연구를 추진하는 등, 학술연구와 정책과의 연계를 꾀하고, 인문·사회과학의 성과를 현실의 정책에 활용하는 것도 요구된다.

- (3) 국제적 교류 및 발신의 적극적인 대처: 일본 인문·사회과학의 개별적 연구 성과 및 수준은 제 외국과 비교했을 때 결코 열세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일본만을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각 외국간의 비교연구가 많고, 그 성과도 일본어로 표현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언어」의 문제도 있고, 영문 학술잡지의 간행, 논문투고 등 성과의 국제발신이라는 점을 포함, 인문·사회과학에 있어서 국제적인 대처가 부족했다. 또한 자연과학과 비교해, 연구성과의 발신, 평가나 영향력의 면에서 「일본에서 자족하는」 경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글로벌화, 비국경화는 당연히 학문의 세계에도 영향을 미쳐, 인문·사회과학에 있어서도, 일본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영어 등으로 세계를 향해 발신하는 조직적인 대처가 필요로 되고 있다. 나아가 세계적인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제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국제 워크숍, 심포지움, 포럼에서 외국 연구자와 대화 및 공동연구를 통해 모색할 때 일본은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3) 인문사회과학의 진흥 정책

인사특위는 인문학 위기의 타개책으로 위에서 언급한 3가지 과제에 기초해, [표 15]와 같이 4가지 방향과 구체적인 시책을 제언했다.²²⁾

[표 15] 인문·사회과학의 진흥 정책

인문·사회과학의 진흥 정책		
지향할 방향		구체적인 시책
1. 분야 간·전문 간의 협동에 의한 통합연구의 추진	→	① 과제설정형 프로젝트 연구의 추진 ②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연구의 추진
2. 젊은 연구자의 육성	→	① 넓은 시야와 지식을 소유한 인재 양성 ② 해외에서의 연구기회 확대
3. 국제적인 교류·발신의 추진	→	① 국제공동연구의 장 설정 ② 외국인 연구자의 유입 촉진 ③ 연구성과의 국제 발신
4. 연구기반의 정비	→	① 도서관 등의 기능의 충실 ② 데이터베이스의 정비와 유통촉진 ③ 연구성과 발신 시스템의 정비

자료: http://www.mext.go.jp/b_menu/shingi/gijyutu/gijyutu4/toushin/020601.htm#3에서 추출·정리.

- (1) 분야 간, 전문(영역) 간의 협동에 의한 통합적 연구의 추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21세기의 제 문제는 눈에 띄게 복잡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인문·사회과학의 제 전문 영역간의 경계를 초월한 협동작업 및 인문·사회과학 편에서의 적극적인 주도권도 요구된다. 당면한 위와 같은 과제의 해결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제형, 학융합형, 협동형의 연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22) 아래 표는 문부과학성 사이트의 『인문·사회과학의 진흥에 대하여—21세기에 기대되는 역할에 부응하기 위한 당면의 진흥 정책—(보고)의 개요』 보고서의 세번째 부분인 〈인문·사회과학의 진흥정책〉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http://www.mext.go.jp/b_menu/shingi/gijyutu/gijyutu4/toushin/020601.htm#3 참고.

▶ 「과제설정형 프로젝트 연구」의 추진

글로벌화, 정보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특히 민족, 종교, 정신생활, 사회 규범이나 제도를 둘러싼 문제 등, 현대사회에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명과 대처를 위해서는 인문·사회과학의 각 분야의 연구자가 협동하여 학제적, 학융합적으로 대처한 연구를 추진하여, 그 성과를 사회에 제언하는 것으로 발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또한 새로운 학문분야, 영역의 개척에 이어져, 일본의 인문·사회과학의 활성화에 크게 공헌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진행 방법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직면하고 있는 현실 문제를 연구자 자신이 과제로 설정하고, 이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전문화, 세분화한 학문의 통합화, 총합화를 적극적으로 전개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과제 설정형 프로젝트연구」의 추진에서는, 연구자의 주도권, 유연한 협동체제, 조절과 효과적 운영을 위한 리더십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를 추진할 때는 연구자의 주도권 하에, 학술진흥의 중핵기관인 일본학술진흥회의 기능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과, 대학 및 각 기관에 소속하고 있는 연구자의 기한제 유동화, 젊은 연구자를 포함한 프로젝트 리더의 양성 등이 불가결하다.

여러 가지 학문이 협동하는 이러한 과제설정형 프로젝트 연구의 영역 으로서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 ① 지의 유산을 시작으로 하는 일본의 존재 모습과 앞으로의 변용에 대하여 연구하는 영역
- ② 글로벌화 시대에서 다양한 가치관을 갖는 사회의 공생을 꾀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연구하는 영역
- ③ 과학기술이나 시장경제 등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에 대응한 사회윤

리시스템의 본연의 모습에 대하여 연구하는 영역

- ④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사회시스템을 배워, 장래 사회의 지속적 발전의 확보에 대하여 연구하는 영역

▶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연구」의 추진

글로벌한 레벨에서 로컬한 레벨에 이르는 다양한 레벨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각 학문이 협동하는 통합적 연구 가운데에서도 인문·사회과학의 적극적인 주도가 요구되는 복합영역이며, 그 통합성과 학제성에 있어 각 학문이 협동해야 하는 통합적 연구의 귀중한 영역의 하나이다. 거기에는, 각 지역의 문화나 역사를 연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래의 국제정치, 경제연구의 발전을 꾀하는 의미에서의, 지역의 지식에 뿌리를 둔 정책 연구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거기에는 예를 들면, 아시아, 아프리카, 이슬람권 등의 각 지역이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지역연구의 연구소나 연구센터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문헌이나 데이터를 집약하여 공용하는 장치를 정비하는 등에 보다 상호의 연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정보의 축적, 처리, 발신거점의 정비, 해외거점의 정비, 현재 있는 연구 기관을 거점으로 한 학제적, 국제적 영역의 설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 (2) 젊은 연구자의 육성: 21세기의 인문·사회과학의 사명을 짊어진 중심핵은 젊은 연구자에 있으며, 그 육성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이 특히 중요하다.

▶ 넓은 시야와 지식을 소유한 인재육성

신 분야의 개척이나 학문의 융합을 담당하는 것은, 단순한 제네럴기스

트가 아닌,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자연과학을 포함한 다른 분야도 이해할 수 있는 식견, 능력 및 지적 모험심을 같이 갖고 있는 연구자이다. 이와 같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있어서 주 전공, 부전공제 등 기존의 틀을 초월한 폭넓은 분야의 소양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본연의 모습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넓은 시야와 식견을 갖춘 인재의 육성에는, 젊은 연구자를 중심으로 유동화를 촉진하는 것이 불가결하며, 임기제의 도입과 유동적인 연구 조직의 설치 등의 대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해외에서의 연구 기회의 확대

연구의 시야를 넓히는 것과 동시에, 외국어 능력을 몸에 익히기 위해, 또한 연구상의 테마수집이나, 지역 사회로의 참여관찰이란 관점에서도, 해외 파견이나 국제 학회참가 등 젊은 연구자가 해외에서 연구 활동을 펼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도의 정비 확충 등을 꾀할 필요가 있다.

- (3) 국제적인 교류 및 발신의 추진: 일본이 연구 수준의 향상을 꾀함과 동시에 일본의 지적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현대적 여러 문제에 대처하는 국제적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일본의 연구성과를 국제적으로 발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국제공동연구의 장의 설정

인문·사회과학의 국제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각국의 연구자와 교류하고, 정보나 성과를 교환함과 동시에, 공동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본이 국내외에 있어 이러한 장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 외국인 연구자의 유입 촉진

연구자의 교류나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 연구자의 유입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있어 외국인 구성원을 확충하는 노력과 함께, 외국인 연구자를 위한 연구, 생활환경의 정비가 중요하다.

▶ 연구 성과의 국제적 발신

인문·사회과학은 [언어]를 모체로 하고 있는 특성이 있어, 연구성과의 국제발신을 위해서는, 논문 등을 외국어로 번역하고, 발표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외국어에 의한 논문작성(아카데믹 라이팅) 등의 어학교육을 충실히 하고, 통역자나 교열자의 확보 등 편집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전자적인 모체에 의한 연구성과의 발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의 충실, 개선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구미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술정보의 새로운 유통루트를 개척하는 작업과 연계하여, 국립정보학연구소가 대학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연구성과의 국제유통을 위해 대처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 (4) 연구기반의 정비: 인문·사회과학의 진흥을 꾀하기 위한 연구기반의 정비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대응하여 정보기반의 정비를 꾀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과학 연구의 심화, 고도화 등에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연구방법을 가져오고, 신 분야의 개척을 이어가는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 도서관 등의 기능의 충실

인문·사회과학의 분야에서, 도서 등의 문헌 자료는 자연과학에 있어서

실험장치와 같이, 연구에서 불가결한 기본적인 재료이며, 그 정비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 등에 있어, 매일매일 생겨나는 기록 공문서가, 적절하게 보존되어 공개되는 것이, 사실에 입각한 연구를 지지하는 데 중요하다.

- ① 도서관 목록정보의 입력 역조: 도서관에서 무엇보다 기본적인 것은 기반정비이며, 전국적인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의 정보량을 가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 ② 영상자료 등의 전자화: 인문·사회과학의 연구의 시야를 넓히고, 비교연구 등 보다 정밀한 연구를 위해서는 도서, 문서, 통계나 지도정보, 미술관, 박물관의 소장정보 등을 오리지널 화상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도서관 직원의 전문성 향상: 도서관이나 공문서관의 기능의 충실을 꾀하기 위해, 고도의 지식 및 서지검색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 데이터베이스의 정비와 유통촉진

문헌학이나 문자학 등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자체가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시아계 문자나 고문 등을 입력하기 위해, 전문적 직원의 확보가 요구된다. 데이터베이스의 유통촉진을 꾀하기 위해서는 목록정보나 소재정보에 있어, 국립정보학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통일된 규칙과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연구성과의 발신시스템의 정비

인문·사회과학의 연구성과를 사회에 효과적으로 또 알기 쉽게 발신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정보처리관련 시설 등과 협력하여 효과적인 정보발신시스템의 설계, 구축을 하는 것이 유효하다.

한편, 인문·사회과학에서 성과의 공표나 출판활동의 활성화는, 단순히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학술진흥의 관점에서 연구성과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전자적인 매체에 의한 발신시스템의 구축하는 지원책 등의 방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3-1) 일본학술진흥회의 조직과 역할

1) 인문학 진흥과 일본학술진흥회

일본의 인문·사회과학의 진흥을 위한 일본 정부의 정책적 대응의 일환이었던 인문·사회과학특별위원회의 활동은 향후 일본의 인문·사회과학 진흥방향을 제시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인사 특위의 제안은 이후 일본 최고최대의 학술진흥기관인 일본학술진흥회에 맡겨졌고, 따라서 일본학술진흥회야말로 향후 일본의 인문·사회과학의 진흥을 통한 학문의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일본 학술 진흥정책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학술진흥회는 현재, 2002년 12월 13일 제정된 독립행정법인일본학술진흥회법(법률 제59호)에 의거하여, 2003년 10월 1일에 설립된 문부과학성 소관의 독립행정법인이다. 그러나 일본학술진흥회의 역사는 70여년이 넘는데, 일찍이 1932년 12월, 일왕이 학술장려를 위해 문부대신에게 내려준 150만엔을 모태로 하여 출범한 재단법인일본학술진흥회와 1967년 9월, 일본학술진흥회법(1967. 8. 1. 법률 제123호)에 의거하

여 변경된 문부성의 특수법인일본학술진흥회를 거쳐,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학술연구의 조성, 연구자의 양성을 위한 자금의 지급, 학술에 관한 국제교류의 촉진, 그 밖의 학술진흥에 관한 사업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일본학술진흥회는 2003년 10월, 독립행정법인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사업의 탄력화와 효율화를 바탕으로 연구자와 학술연구기관에 대한 서비스를 한층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일본학술진흥회 연혁

일본의 학문을 진흥하기 위해 설립된 일본최대의 학술진흥기관인 일본학술진흥회의 70여년에 이르는 활동 연혁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6] 일본학술진흥회 연혁, 1932~2007. 출처: 일본학술진흥회
인문·사회과학진흥프로젝트연구사업 홈페이지(2008)

1932년	재단법인일본학술진흥회설립인가
1933년	산학협력연구사업, 연구원조사사업 개시
1950년	『학술월보』(월간) 발행
1953년	유네스코 쿠폰 취급개시
1959년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유동연구원, 장려연구생) 개시
1960년	외국인연구자초청사업 개시
1963년	미일과학협력사업 개시 아키시노미야기념학술상(~1995년)
1965년	아프리카지역연구센터(현나이로비연구연락센터) 개설
1967년	특수법인 일본학술진흥회 설립
1971년	영국과의 연구자교류사업 개시
1973년	국제곤충생리, 생태학센터(ICIPE)파견사업 개시 독일과의 연구자교류사업 개시
1974년	프랑스와의 연구자교류사업 개시

1976년	아시아각국과의 연구자교류사업 개시 茅(새싹)컨퍼런스개최 지원사업 개시
1978년	국유특허출원 및 실시에 관한 사업 개시 거점대학교류개시 논문박사후취득희망자에의 지원사업 개시
1982년	해외특별연구원사업개시 학술의 사회적협력 연계에 관한 사업 개시
1984년	카이로연구연락센터 개설
1985년	특별연구원사업 개시 국제생물학상 창설 중일의학연구자교류사업 개시
1988년	외국인특별연구원사업 개시
1989년	컴퓨터연구연락센터 개설
1990년	워싱턴연구연락센터 개설
1991년	한일과학협력사업 개시 본 연구연락센터 개설
1993년	일본-인도자연과학협력사업 개시
1994년	중점연구국제협력사업 개시 런던연구연락센터개시
1995년	연구자국제교류센터 설치
1996년	일본학술진흥회법 개정 미래개척학술연구추진사업 개시
1997년	일본-유럽과학협력사업 개시
1998년	일본-호주과학협력사업 개시
1999년	일본학술진흥회법 개정 과학연구비보조금의 일부이관 상호점축과학프로그램 개시
2000년	외국인저명연구자초청사업 개시
2001년	스톡홀름연구연락센터 개설 첨단과학(FoS)심포지움 개시
2002년	21세기COE프로그램 개시
2003년	학술시스템연구센터 개설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술진흥회 설립 선단연구거점사업 개시 인문·사회과학진흥프로젝트연구사업 개시 JSPS섬머프로그램 개시
2004년	일본학술진흥회상 창설 사이언스 다이얼로그 개시
2005년	대학국제전략본부강화사업 개시 아시아연구교육거점사업 개시 아시아아프리카학술기반형성사업 개시 [매력있는 대학원교육]이니셔티브 개시 연구성과의 사회환원, 보급사업 개시
2006년	과학연구비조성금 젊은연구자(start up)신설 특별연구원-RPD 개시 아시아과학기술커뮤니티형성전략 개시
2007년	과학연구비보조금 젊은연구자(S) 신설 글로벌COE프로그램 개시 대학원교육개혁지원프로그램 개시 세계톱수준 국제연구거점형성촉진 프로그램 개시 젊은연구자 국제훈련프로그램(ITP) 개시 북경연구연락센터 개설

3) 일본학술진흥회 예산

2008년 일본학술진흥회의 예산은 아래 표와 같이, 기본사업비 1,571억엔과 관련사업비 835억엔으로 총 2,406억엔(한화 약 3조 6천 9십억 원²³⁾)이다. 이중 기본사업비는 운영비교부금 289억엔과 국고보조금으로 나뉘는데, 국고보조금은 과학연구비보조금 1,267억엔, 연구거점형성비 등의 보조금 3억엔, 대학개혁추진 등 보조금 1억엔으로 구성돼 있다. 기본사업비 예산액의 99.8%는 국가의 운영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에 의해 운영된다.

23) 2008년 11월 환율 기준. 100¥=약 1500원.

[표 17] 2008년도 일본학술진흥회 사업별 예산액. 단위: 억엔.

출처: 일본학술진흥회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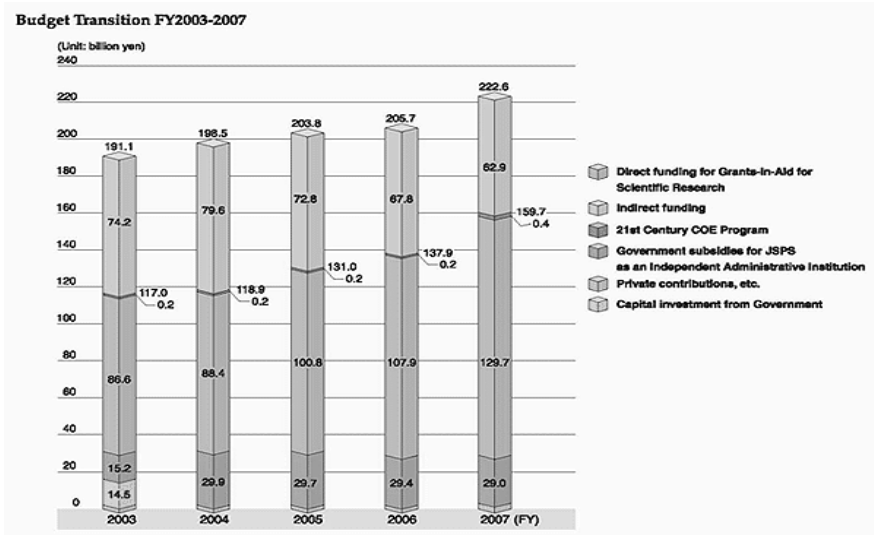
사 업 비	
운영비교부금 사업비	289
연구자원조 사업비	180
학술국제교류 사업비	88
학술응용연구 사업비 등	3
학술시스템연구센터 사업비	7
관리운영비 등	11
과학연구비 보조사업비	1,267
연구거점형성비 등 보조사업비	3
대학개혁추진 등 보조사업비	1
기부금 사업비	1
산학협력 사업비 등	3
위탁 사업비 등	7
합 계	1,571

관련사업비	
연구거점형성비 등 보조금	427
대학개혁추진 등 보조금	85
국제연구거점형성촉진 사업비 보조금	70
과학기술시험연구 위탁비	2
과학연구비 조성금	251
합 계	835

총사업비	2,406
------	-------

한편 2008년 이전 일본학진의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급격한 변동 없이 꾸준히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2003~2007년간의 예산추이는 다음과 같다.

〔그림 35〕 일본학술진흥회 예산액 추이, 2003~2007



출처: 일본학술진흥회 홈페이지

3-2) 일본학술진흥회의 학문 분야간 연계정책 방향

일본학술진흥회는 문부과학성 연구진흥국과 함께 인사특위의 보고서에 입각하여 인문·사회과학을 21세기적으로 새롭게 진흥하기 위해 인문·사회과학 진흥을 위한 프로젝트 연구사업(이하 “인사프로젝트”로 약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인사프로젝트의 진행 및 관련 제반 정책은 일본학술진흥회가 추진하는 학문 분야간 연계정책, 특히 인문·사회과학을 중심으로 한 학제적, 융합적 연구의 방향을 뚜렷이 보여준다.

1) 〈인문·사회과학진흥프로젝트연구사업〉

(1) 인사프로젝트의 목표 및 예산

인사프로젝트가 출범하던 당시에 나온 한 사업자료²⁴⁾에 의하면, 이 프

로젝트는 연구자의 주도권을 기반으로 하면서, 여러 학문이 협동해 사회 제언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인문·사회과학의 재활성화를 지향하는 실험적 사업이다. 인사프로젝트의 출발점은 종래의 인문·사회과학이 강한 분과적 색채 때문에, 윤리의 상실, 글로벌화, 지속적 사회제도의 파탄이라고 하는 현대사회의 제과제에 충분한 대응을 해오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런 만큼 인사프로젝트는 구체적인 현장의 다양한 과제에 입각해서 사회와의 제휴를 의식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과제설정형 프로젝트〉라는 것인데, 그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 제언을 할 수 있는 연구이다. 〈과제설정형 프로젝트〉라는 근본 방침에 의해 인사프로젝트는 인문·사회과학계 연구자를 중심으로 하지만, 과제에 따라 과학기술 연구자, 현장 행정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및 실무자와 협력을 해서 학제 간, 학융합적인 연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인사프로젝트는 인문·사회과학의 새로운 영역과 통합연구의 방법을 창출하고자 하며, 이로써 일본 인문·사회과학의 활성화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3년 10월부터 2008년 9월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인사프로젝트에 투입된 예산은 해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본학진의 전체 예산과 비교할 때 매우 약소하다고 할 수 있다. 첫해인 2003년도의 예산은 2억3400만엔(한화 약 35억 1천만원)이었고, 2006년과 2007년의 예산은 각각 3억 4천만엔, 3억 6천만엔(한화 약 51억원, 54억원)이었으며, 2008년에는 약 1.1억엔(한화 약 16억 5천만원)으로 확인되었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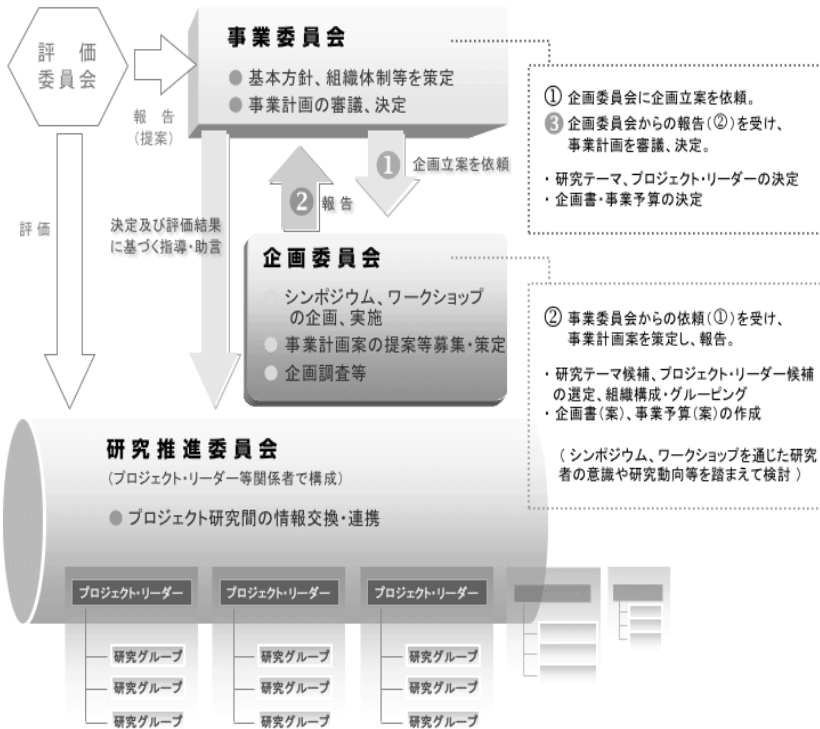
24) 일본학술진흥회, 2003 프로젝트연구사업 자료 1 (『人文・社會科學振興のためのプロジェクト研究の構築と運営について』).

25) 문부과학성 학술연구추진부회(제16회) 배부자료 2-2 참고(http://www.mext.go.jp/b_menu/shingi/gijyutu/gijyutu4/008/siryu/08012818/004.htm).

(2) 인사프로젝트의 실행체계

인사프로젝트사업은 전반적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사업위원회, 기획위원회, 연구추진위원회로 나누어 실행되고 있다.²⁶⁾

〔그림 36〕 인사프로젝트 연구사업의 전체 실행체계



출처: 일본학술진흥회 인문·사회과학진흥프로젝트연구사업 홈페이지(2008)

- ▶ 사업위원회는 기본방침, 조직체제 등을 책정하고 사업계획을 심의 및 결정한다.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은 사업위원회가 기획위원

26) 일본학술진흥회의 아래 사이트의 「본 사업의 실시체계에 대하여」참조.
http://www.jsps.go.jp/jinsha/04_system.html

회에 기획입안을 의뢰한 후 그 결과보고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사업계획에는 연구테마, 프로젝트 리더의 선정에 포함하며, 기획서 및 사업예산도 결정하게 된다. 사업위원회는 2008년 현재 일본 인문사회과학계를 대표하는 학자 10인²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학술진흥회 학술시스템연구센터 부소장(石井 紫郎)이 참관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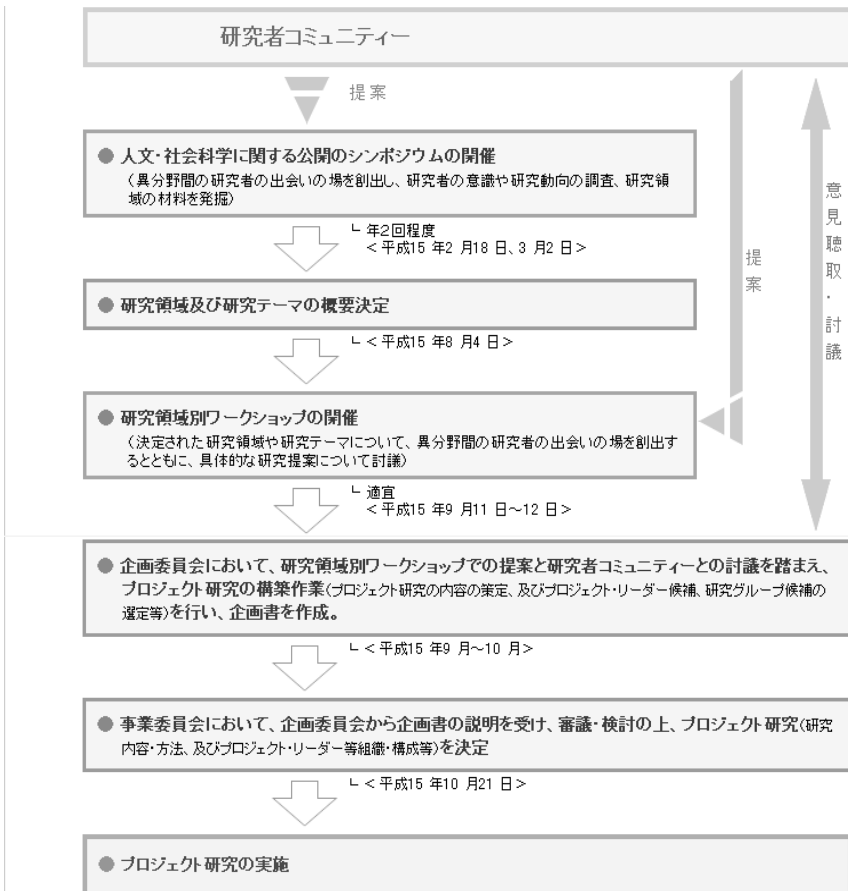
- ▶ 기획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사업위원회로부터의 의뢰를 받아 사업계획(안)을 책정해서 사업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따라서 심포지움, 워크숍의 기획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안의 제안, 모집, 책정은 물론 기획서의 조사 등도 실시한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연구테마 후보, 프로젝트 리더 후보의 선정과 조직구성·그룹핑, 기획서(안), 사업예산(안) 등을 작성하는 것 등이다.
- ▶ 연구추진위원회는 프로젝트 연구 간의 공동·제휴를 도모하기 위해, 각 프로젝트 연구의 리더를 중심으로 실제 연구의 관계자로 구성되는 연구실행조직으로, 사업위원회의 결정 및 지도를 받는다. 이 위원회에는 인사프로젝트의 5개 연구영역 프로젝트팀이 소속되어 활동하며, 각 프로젝트의 연구기간은 3-5년 정도이고, 해당예산은 2008년도의 경우 1.1억엔으로 책정돼 있다. 각 프로젝트의 연구에서 연구자의 구성은 인문·사회과학연구자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 프

27) 인사프로젝트 사업위원회 위원 10인의 이름과 직책은 다음과 같다. 池端 雪浦(前東京外國語大學長 東京外國語大學名譽教授), 位田 隆一(京都大學大學院法學研究科教授), 植田 和弘(京都大學大學院經濟學研究科、地球環境學堂教授), 樺山 紘一(印刷博物館長), 小平 桂一(總合研究大學院大學長), 立本 成文(總合地球環境學研究所長), 藤田 英典(國際基督教大學教養學部教授), 三田村雅子(フェリス女學院大學文學部教授), 村松 岐夫(學習院大學法學部教授), 鷺田 清一(大阪大學長).

로젝트가 연구부문간 연계정책에 따라 실시되는 만큼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자 혹은 회사원 같은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이처럼 세 위원회 체계로 이루어진 인사프로젝트사업이 2003년 실제로 구축되어간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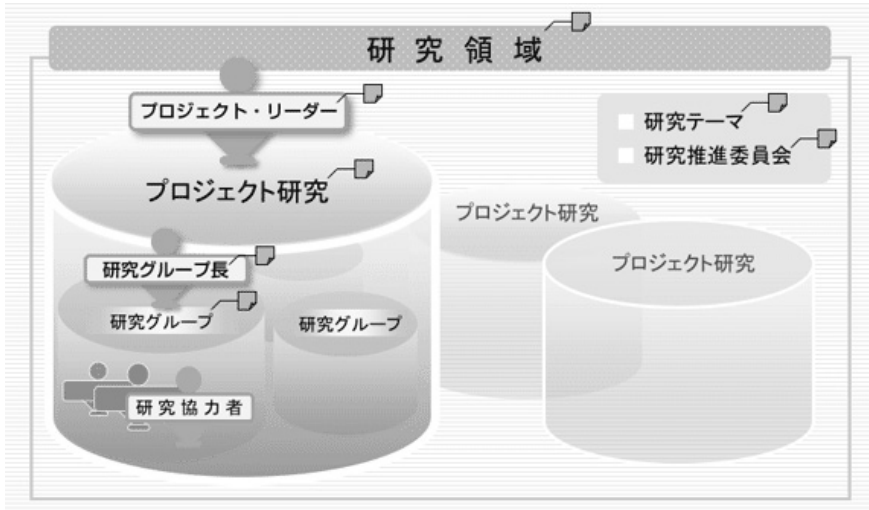
〔그림 37〕 인사프로젝트연구사업의 단계별 구축과정



출처: 일본학술진흥회 인문·사회과학진흥프로젝트연구사업 홈페이지(2008)

위와 같은 단계들을 거쳐 최종 결정된 연구영역의 세부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38〕 인사프로젝트사업 연구영역의 세부 구조



출처: 일본학술진흥회 인문·사회과학진흥프로젝트연구사업 홈페이지(2008)

- 연구 영역: 인사특위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인문·사회과학 진흥을 위한 과제 설정형 프로젝트 연구로서 추진해 가야 할 영역 및 인사 프로젝트 사업위원회가 중요하고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한 영역.
- 연구테마: 연구 영역에서 추진의 중심이 되는 연구과제. 인문·사회과학 진흥에서의 중요성·긴급성을 고려해, 연구 영역마다 몇 개의 연구테마를 마련할 수 있다.
- 프로젝트 연구: 연구테마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한 연구 조직과 연구 체제. 일반적으로, 연구테마가 프로젝트 연구의 과

제이다.

- 프로젝트 리더: 프로젝트 연구의 추진에서 중심이 되는 연구자. 프로젝트 리더는 연구 그룹장 및 멤버와의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연구 조직을 코디네이터 하며, 해당 프로젝트 연구의 연구 계획, 추진 방향, 달성 목표, 연구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기획서의 작성자.
- 연구 그룹: 프로젝트 연구를 추진하는 핵심 그룹.
- 연구 그룹장: 연구 그룹의 중심이 되는 연구자. 연구 그룹을 조직해 연구를 추진한다. 프로젝트 리더가 연구 그룹장이 될 수도 있다.
- 연구추진위원회: 프로젝트 연구 간의 공동·제휴를 도모하기 위해, 각 프로젝트 연구의 프로젝트·리더를 중심으로 한 관계자로 구성하는 위원회.

한편, 이 프로젝트는 연구분야들의 협동에 의한 성과를 사회적 제언으로 발신하고 새로운 학문분야 혹은 영역의 창출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다음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연구자의 주도권을 보장한다. 이는 현재가 직면하고 있는 현대의 여러 문제를 연구자 자신이 과제로 설정하고, 연구자의 이니셔티브, 유연한 협동체제, 조절과 효과적 운영에 있어 리더쉽을 중시한다.

둘째, 각 학문 분야의 연구자가 협동하여, 학제적, 학융합적으로 연구에 매진하도록 한다. <과제설정형 프로젝트>로 실행되는 이 연구는 학제적 협력 혹은 학융합을 전제로 한다.

셋째, 사회제언으로, 프로젝트연구의 성과를 사회에 제언하여 발신하고, 현대적 여러 문제의 해결에 공헌한다.

넷째, 프로젝트 리더를 양성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연구해나갈 수 있는 젊은 연구자를 포함한 프로젝트 리더를 양성한다.

(2) 사업내용

인사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연구프로젝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²⁸⁾

연구영역	프로젝트 연구명	프로젝트 리더	연구그룹명	그룹장
연구영역 I 지의 유산을 시작으로 하는 일본의 존재 방식과 앞으로의 병용에 대해 연구하는 영역	①일본적 지적 재산의 활용	桑子 敏雄 東工大・社會理工・教授	일본문화의 공간학 구축	桑子 敏雄 東工大・社會理工・教授
			일본형 지역네트워크와 지역통화	岡田 眞美子 兵庫縣立大・環境人間・教授
	② 잃어버린 10년의 극복 - 일본 사회시스템의 재구축	青島 矢一 一橋大・イノベーション研・准教授	일본적 품질관리의 검증	加登 豊 神戸大・経営・教授
			일본의 조직・인재육성 시스템	石川 淳 立教大・経営・准教授
			일본의 교육시스템	荻谷 剛彦 東大・教育・教授
	③ 앞으로의 교양교육	鈴木 佳秀 新潟大・現代社會・教授	교양교육의 재구축	葛西 康德 大妻女大・文・教授
			글로벌화시대에 있어서 시민성 교육	佐藤 學 東大・教育・教授
연구영역 II 글로벌화시대에 있어 다양한 가치관을 갖는 사회의 공생을 꾀하는 시스템을 연구하는 영역	①평화구축을 향한 지의 전개	黒木 英充 東外大・AA研・教授	지역연구에 의한 「인간의 안전보장」의 구축	黒木 英充 東外大・AA研・教授
			제노사이드 연구의 전개	石田 勇治 東大・總合文化・教授
			아메리카연구의 재편	古矢 旬 東大・總合文化・教授
	②다원적 공생 사회의 구축	宇田川 妙子 人間文化・民博・准教授	운동의 현장에 있어서 지의 재편의 해명	宇田川 妙子 人間文化・民博・准教授
			피재해지의 현장에 있어서 공생사회의 구축	岩崎 信彦 神戸大・文・教授
			다원적공생에 관한 국제비교의 연구	辻中 豊 筑波大・人社・教授

28) 보다 자세한 평가 부분을 포함한 사업 내용은 아래 사이트의 다음 내용을 참조. 「인문 사회과학진흥 프로젝트연구사업」연구 일람표 「프로젝트 연구일람」(연구성과에의 링크) <http://www.jsps.go.jp/jinsha/h16_pjt_list.html>.

연구영역	프로젝트 연구명	프로젝트 리더	연구그룹명	그룹장	
	③글로벌 거버 넌스의 해 명	遠藤 乾 北大・公共政策 ・教授	중층적 거버넌스의 이념과 실태의 해명	遠藤 乾 北大・公共政策・教授	
			제국과 네트워크아시아 광영경제질서의 해명	籠谷 直人 京大・人文研・教授	
	④물의 글로벌 거버넌스	中山 幹康 東大・新領域・ 教授	월경 영향평가와 물의 거버넌스	中山 幹康 東大・新領域・教授	
			『청靑의 혁명』과 물의 거버넌스	藏治光一郎 東大・愛知演習林・講 師	
	연구영역 III 과 학 기 술 이 나 시장 경제 등의 급속한 발 전이나 변 화에 대응 한 사회윤 리 시 스템 의 존재방 식에 대해 연구 하는 영역	① 버 톱 업 (bottom up)인간관 계론의 구 축	佐藤 達哉 立命館大・文・ 教授	사회변화와 인간관계의 제양상	佐藤 達哉 立命館大・文・教授
		②의료시스템 과 윤리	清水 哲郎 東大・人社・教 授	의료현장에 있어서 의사결정・문제해결・협동	清水 哲郎 東大・總合文化・教授
의료시스템과 의료전문가조직, 보험자, 민간보험관계의 역할				吉田 あつし 筑波大・システム情工 ・教授	
③과학기술거 버넌스		城山 英明 東大・法政・教 授	일본의 리스크 거버넌스・시스템의 실태 해명과 재구축의 제언	平川 秀幸 阪大・CDS・准教授	
			현장에서의 기술자 윤리시스템	大上 泰弘 帝人ファーマ・主任研 究員	
			과학기술의 진전과 국제문제—안전보장 리스크의 거버넌스—	鈴木 達治郎 電力中央研・上席研究 員	
④시장시스템 의 거버넌 스		久米 郁男 早稲田大・政経 ・教授	정책시스템과 전문지식	久米 郁男 早稲田大・政経・教授	
			시장보완・통제의 법제도 설계를 향한 지식의 재편	藤谷 武史 北大・法・准教授	
연구영역 IV		①천년지속학 의 확립	木村 武史 筑波大・人社・ 准教授	심성의 지속성에 관한 학융합적 연구	木村 武史 筑波大・人社・准教授
				도시의 지속성에 관한	村松 伸

연구영역	프로젝트 연구명	프로젝트 리더	연구그룹명	그룹장
과거에서 현대에 이르는 사회 시스템을 익혀, 앞으로의 사회의 지속적 발전의 확보에 대해 연구하는 영역	②풍부한 인간상의 획득	小長谷 有紀 人間文化・民博・教授	학융합적 연구	東大・生産研・准教授
			사회제도의 지속성에 관한 학융합적 연구	加藤 雄三 人間文化・地球研・助教
			산육産育 현장에서의 고찰	松岡 悦子 旭川医大・准教授
			전승 현장에서의 고찰	小長谷 有紀 人間文化・民博・教授
	③자원배분메카니즘과 공정	佐藤 仁 東大・新領域・准教授	가족과 인구변동의 현장에서 고찰	津谷 典子 慶應大・経済・教授
			분배문제로서의 인프라/자원개발	湊 隆幸 東大・新領域・准教授
			빈곤·격차연구	青山 和佳 日大・生物・准教授
연구영역 V ²⁹⁾ 현대사회에 있어 언어, 예술, 예술 표현의 의의와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는 영역	①전통과 국경 초월 - 멈추는 힘과 뛰어넘는 흐름의 인터랙션	沼野 充義 東大・人社・教授	자기표상의 생성과 변용	柏木 博 武蔵野美大・造形・教授
			월경越境과 다문화	楯岡 求美 神戸大・國際文化・准教授
			전통에서 창조로	福岡 正太 人間文化・民博・准教授
	②일본의 문화 정책과 뮤지엄의 미래	木下 直之 東大・人社・教授	도시정책의 과제와 예술문화의 역할에 관한 연구	小林 眞理 東大・人文・准教授
			뮤지엄의 활용과 미래—감상행동의 탈영역적 연구—	五十殿 利治 筑波大・人間総合・教授
	③문학, 예술의 사회적 매개기능	吉岡 洋 京大・文・教授	문학·예술의 사회통합적 기능의 연구	山田 廣昭 東大・總合文化・教授
			예술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실천적 연구	藤田 治彦 阪大・文・教授

29) 연구영역 V는 2005년부터 추가로 시작되었다.

(3) 사업성과

이 사업에 대한 성과는 주로 국내외 심포지움 개최 및 논문저서 등의 출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과의 보고는 해당 프로젝트가 애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지에 대한 관점에서 「학제성에 대하여」, 「사회제언에 대하여」, 「인재육성에 대하여」 등으로 구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 사업은 특정 시한을 정해 놓고 일회적으로 그 성과를 발표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제에 대한 학제적 연구자의 융합뿐 아니라 이 주제와 연관된 실생활의 행정, 시민, NPO 단체의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인사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자의 리더십을 토대로 하여 현재 사회와 지역 혹은 그 시민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끊임없이 설정하고, 이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학제적으로 결합하며, 나아가 행정 분야, 관련 단체 등 과제 관련 해당 분야의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인사프로젝트는 단순히 연구용역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그 결과를 일회성 심포지움이나 발표 그리고 서적으로 출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와 관련된 사회적, 자연적, 인간적, 과학적인 제 문제에 대하여 총체적이고도 현실적인 해답을 지속적으로 구해나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학-산-관-민을 융합하는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인사프로젝트에서 나온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연구영역 I』의 「일본적 지적 재산의 활용」이라는 프로젝트에 속하는 「일본문화의 공간학 구축」연구그룹이 제시한 2005년도까지의 성과보고와, 역시 『연구영역 I』의 「앞으로의 교양교육」이라는 프로젝트에 속하는 「교양교육의 재구축」연구그룹이 제시한 2005년도까지의 성과보고를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우선, 『연구영역 I』의 「일본적 지적재산의 활용」이라는 프로젝트 중 「일본문화의 공간학 구축」연구그룹의 보고는 아래와 같다.

프로젝트명	「일본적 지적재산의 활용」
그룹명	「일본문화의 공간학 구축」
그룹장	桑子 敏雄(구와코 도시오) 東工大・社會理工・教授

▶ 〈개요〉

〔일본문화의 공간학 구축〕연구그룹은, 일본 각지에서 전승된 지역관리의 지혜(특히 수환경관리의 지혜)를 현지에서 발굴하여, 지역의 사람들, NPO, 행정담당자와 문제를 의논하여, 해결의 방향성을 찾는 활동을 13회 정도 하였다. 이 활동의 성과로서 2가지가 명확해졌다.

하나는, 연구의 목적을 [공간의 계승과 재생]의 과제로 한 점, 또 하나는, 연구의 방법을 [필드워크숍]으로 했다는 점이다. 필드워크숍은 현지 공간에 뛰어들어, 지역의 사람과 함께 토의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필드워크와 워크숍의 융합이나, 이 융합은 연구자, 지역 주민, 행정과의 연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법이라 하겠다.

2006년 7월 16일에 사가시에서 개최한 「環有明환아리아케海 지역만들기 심포지움, 龍宮류미야로보의 선물 - 사가히라노로부터의 새로운 희망-」은, 사가현이 안고 있는 공공사업의 과제에 대해 사가현 부지사, 국토교통성의 다케오 하천사무소장도 참가하여, 참가한 지역주민과 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본 연구그룹의 최대의 연구성과의 하나이다.

▶ <학제성에 대해>

본 그룹은 철학, 지리학, 사회학 외에 건축학, 토목공학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인문계, 이공계 출신자로 지역만들기 NPO활동의 리더도 포함되어 있다. 멤버는 이미 특정 학문의 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동시에 지역만들기나 정책제언 등의 사회활동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학제성과 융합성이 눈에 띄는 특성을 갖고 있다.

멤버 각각이 이미 학제적, 융합적인 연구활동,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나, 본 연구그룹의 특색은 이 멤버가 필드워크숍이라는 방법과 공간체함을 공유하고 공간 의미의 해독에서 협동한다고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프로세스에 의해, 일본의 지역공간, 국토공간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발견되어왔다. 구체적으로는 사가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사가히라노라는 공간을 하이신산의 정상과 아리아케해의 해저에서 바라본 [류미야로부터의 희망]이라는 시점을 제안했다. 이것은 인문학과 토목공학, 건축학의 협동에 의해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다.

▶ <사회제언에 대해>

본 그룹의 멤버의 대다수는 이미 다양한 지역에서 NPO활동의 리더로 사회제언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멤버 각각의 연구스타일은 실천적이다. 본 그룹이 방법으로 한 필드워크숍이라는 방법은 특정 지역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에 걸맞게, 또는 전국적으로 공헌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진 멤버가 현지에 모여, 지역과 교류를 하면서, 문제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하는 프로세스이다. 이것은 연구를 하는 가운데 사회제언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 그 자체를 마음에 담아, 지역사람들과 함께 생각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가심포지움에서는 「사가히라노의 공간특성을 명확히 하여, 시골의 좋은 점을 보여 칭찬하면서 의논의 축을 잇고 넓힌다」라는 방향에 대해, 다수 참가자들의 찬동을 얻을 수 있었다.

▶ <인재육성에 대해>

본 그룹에 참가한 박사과정의 학생과 박사후과정의 학생의 숫자는 많지 않으나, 본 그룹에서는 기존의 학문적 틀이 아닌, 테마나 방법을 취하고 있어, 주로 3가지 점에서 인재육성의 효과를 얻었다.

프로젝트 리더라는 점에서는, 본 그룹의 멤버였던 박사과정의 학생이 학위취득과 함께,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프로젝트의 관리자를 맡은 사례가 있다.

석사과정의 학생이나 학부생을 본 연구그룹의 기획사업에 참가시킴으로써, 커다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지역 NPO활동의 젊은 리더도 참가하게 하여, 학문적 연구와 사회활동의 연계를 심화하였다. 이 점에서도 인재육성이라는 점에서 효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연구영역 I』의 「앞으로의 교양교육」이라는 프로젝트 중 「교양교육의 재구축」의 2005년도까지의 보고서이다.

프로젝트 명	「앞으로의 교양교육」
그룹명	「교양교육의 재구축」
그룹장	葛西 康德(갓사이 야스노리) 大妻女子大學・文學部・教授

▶ <개요>

2003년도와 2004년도는 전체 공개 심포지엄의 개최를 통해 멤버 사이의 교류 및 전국의 대학과 사회에 대해서 본 프로젝트 연구의 의의를 호소하는 것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그 성과를 2004년 3월 및 동년 8월에 개최한 공개 심포지엄의 보고집으로 발간했다(『보고집』 1호, 2호). 2005년도는 2004년도 말에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의 자료 정리와 보고집의 발간 준비(2권)를 행했다. 현재 최종 교정중이다.

나아가 2005년 7월에, 토호쿠 공익 문과 대학(아마가타현 츠루오카시·사카타시)에서 「앞으로의 교양 교육」이라고 하는 표제 아래 공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은 타대학교원, 고교 교원, 일반 시민도 다수 참가해, 연구 그룹의 활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진흥 프로젝트의 보급에도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동년 11월, 영국(스코틀랜드)의 연구자를 초빙한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시민 성교육」그룹 멤버의 참가를 이끌어 냈고, 화제는 중등 교육이나 비교 교육제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성과도 보고집으로써 간행한다.

▶ <학제성에 대해>

본 연구 그룹은, 「교양 교육」이라고 하는 테마의 성질상, 필연적으로 「학제적」이다.

첫째, 연구그룹 멤버는, 인문·사회·자연과학의 전 분야에 걸쳐 있다. 작년까지 (순수)과학의 분야에, 새로이 물리학(키무라)과 수학(나가오카)이 더해졌고, 「신체학·신체 운동론」(아토미)이라고 하는 독특한 분야도 제창하고 있다.

둘째, 연구테마에의 접근법도 다원적이다. 한편에서는 전통적인 분과에 의지한 분야(문학, 법학, 물리학)에 대하여, 비전문가가 질문을 쏟아붓는다고 하는 형태의 새로운 형식의 교재를 개발중이다. 게다가 일본의 지적유산으로서의 교양 수용의 역사를, 여러 나라와 비교를 해서 종합하는 서적을 준비 중이다.

셋째, 자칫하면 교양과 무관하거나 대립하는 분야라고 생각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실무가도 여러 개 그룹에 참가하고 있다. 벌써 그 성과는 공표되기 시작하고 있다(아래와 같이 사쿠라이 히로시 저서 참조).

▶ <사회 제언에 대해>

첫째, 2005년 9월, 센다이에서 개최된 공개 심포지엄에서 주장한 것이지만, 종래의 대학교육으로 『교양교육』이 이루어왔던 『사회와 자기와의 거리를 유지한다』라는 의의를 재확인하고 진행하는 『현장주의(예, 인턴쉽)』에 대해서, 하나의 선택지를 제시한다.

둘째, 『교양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해 주는 응원단을 대학 외에 요구해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본 프로젝트 내지 그룹 연구에 참가시켜, 또 내외에 발신 모체가 되어 준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인물이나 고등학교 등의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벌써 발굴하고 있다.

셋째, 교양 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과제의 중요성의 국제 비교 및 국제 제언을 실시한다. 학교 교육(수험 교육), 전문화·고도화하는 과학기술 교육 중에서, 대학생이 자기를 잃는 문제는, 외국에서도 심각하다(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대학 입학 자격자의 몇할인가는, 『갭 이어』라고 칭하고, 1년간 해외 연수를 한다). 일본의 경험은 반드시, 해외에서도 흥미가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 <인재육성에 대해>

종래 본 연구 그룹에 있어서, 『젊은 인재 [연구자]의 육성』문제가 가장 곤란한 과제였다. 그러나, 차츰 두 개의 방향으로 타개의 실마리가 보여 왔다.

첫째, 교양 시스템과의 관련으로 구체화한다. 즉 『교양 교육』의 전문가 육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일정한 전문성을 가진 교육자가, 그와 관계없이 담당해야 할 교육 분야(외국어·일본어 교육을 포함한다)와 그 교육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나아가 신진 연구자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하는 능력·자격 개발의 프로그램(일종의 졸업 증서 코스의 설치)을 제언해,

실험적으로 일부 시도한다.

둘째, 교양 교육 내용 부분이다. 본프로젝트의 연구 보조를 실시해 온 신진 연구자가, 교양 교육에 관련되는 테마를 취급하면서, 유학을 포함할 수 있는 연구를 개시한 점이다(예, 『과학기술의 일본에의 이전』에 관심을 가지고, 근대 일본의 공학 교육에 영향을 준 스코틀랜드에의 유학 사례, 서양 교양 교육의 기초인 레토릭 수용사 연구.)

이것들 이외에, 비교 교양사, 교양 교육제도를 전공하는 신진 연구자를 내포하는 『시민성 교육』그룹과의 협동에 의해서, 한층 더 인재를 발굴해 가고 싶다.

1.2. 영국: AHRC와 RCUK

1) 영국의 인문학 전통과 고등교육개혁의 영향

1-1) 영국 인문학의 전통

영국 인문학의 전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이 영국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Art and Humanities로 번역되는 인문학은 영어 표기가 말해주는 것처럼 예술과 인간에 관한 모든 학문을 아우르는 분야를 일컫는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인문학이 지금과는 달리 과학까지도 포함해서 인간의 삶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망라하는 학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6세기경에 교회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든, 헨리 6세가 설립한 이튼스쿨(Eton College)³⁰⁾ 등의 세속적 학

30) 이튼스쿨은 1440년에 헨리 6세에 의해서 'The King's College of Our Lady of Eton beside Windsor' 이름으로 세워졌다. 70명의 학자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시작했고, 윈저(windsor) 지방에 사는 소수의 학생들에게 무상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에 이곳의 졸업생들이 1441년에 세워진 Cambridge 대학의 King's college 로 옮겨가 캠브리지 대학의

교든, 다루는 것은 주로 인문학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³¹⁾. 그리고 이러한 시대의 인문학은 주로 신학과 윤리학에 중점을 둔 학문이었고, 교회와 군주가 다스리는 영국을 교육을 통해 공고하게 지탱하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설립되면서 대학이라는 새로운 교육기관이 영국 사회에 출현한 12세기 경 이후에는 좀 더 전문적인 의미의 인문학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영국 최초의 대학인 옥스퍼드의 설립연도는 확실히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1167년에 영국 학생들이 더 이상 파리 대학 (University of Paris)에서 수학할 수 없게 되면서 설립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유력한 견해이다. 이후에 옥스퍼드의 몇몇 직원들이 13세기 초에 캠브리지 지역으로 옮겨가 설립한 대학이 바로 캠브리지 대학이다. 지금까지도 영국을 대표하는 이 두 대학은 주로 인문학을 연구하고 가르쳤는데, 그 과목들은 신학(Theology), 법학(Law), 예술(Arts) 등이었고, 귀족이나 상류계급의 사람들만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³²⁾ 당시 고등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귀족 계층의 직업교육과 이러한 직업에 필요한 지식 습득에 있었다. 즉 성직자, 변호사, 의사의 양성이 가장 큰 목표였다.³³⁾ 물론 직업의 성격이나 직업

근간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설립당시에는 성직자들이 연구할 수 있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무상교육도 실시하였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일부 상류층의 교육을 담당하는 Public School(사립학교)로 변모해 갔다.

31) 영국의 최초의 학교는 6세기 경에 교회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Henry 6세가 Eton School을, 그리고 Edward 6세가 Grammer School을 세웠다(박덕규, 강연희, 김지순, 2002).

32) Graham, Gordon (2008), *Universities: The Recovery of An Idea*, Leicester: Societas.

33) 특정 계급의 직업 교육에 중점을 둔 이 당시 대학의 교육을 지금 관점에서 보면 실용적인 학문에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실용적' 학문의 개념은 현재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현대의 생물학이나 화학에 바탕을 둔 의학은 18세기 이후에 의학으로 편입된 것이고, 법학 또한 종교에 중점을 두었기에 지금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교육의 성격이 지금과는 큰 차이가 있다. 대학은 현대적 개념의 실용적인 (혹은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직업 교육을 담당하기보다는, 종교를 공고히 하고 군주제를 지탱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을 담당했으며, 이를 통해 영국 사회를 영국 국교회와 군주를 중심으로 안정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잉글랜드의 유일한 대학³⁴⁾이었던 12세기부터 18세기까지 대학 교육은 신학을 중심에 두고 진행되었고, 이 당시 인문학의 개념과 영역은 신과 종교에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계몽주의(Enlightenment, 17-8세기)의 영향으로 영국의 대학도 큰 변화를 겪게 되고, 인문학의 개념과 영역 또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유럽 전역에 큰 변화를 몰고온 계몽주의는 신 중심의 사회를 인간과 이성 중심의 사회로 이동시켰다. 지금까지 사회를 지배해온 종교에 무조건적인 복종과 신을 향한 믿음에 바탕을 둔 사회인식이 과감하게 폐기되고,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인간 해방에의 열망, 과학과 지식에 대한 신뢰, 그리고 역사의 진화³⁵⁾ 등에 초점을 맞춘 사회 인식이 유럽 전역에 널리 퍼지게 된다. 대학 또한 이러한 계몽주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유럽의 대학들은 ‘중세의

34) 잉글랜드 내에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유일한 대학이었지만, 스코틀랜드에는 4개의 대학 (St. Andrews, Glasgos, Aberdeen 그리고 Edinburgh)이 15세기 초반부터 설립되어 지금까지 명문대학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고, 아일랜드에는 더블린의 Trinity College가 1591년에 설립되었다.

35) 계몽주의는 지금까지도 사회과학과 인문학에서 끊임없이 논의되어오고 있는 주제이다. 특히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논쟁에서 계몽주의는 모더니즘의 시발점이자 철학적 배경으로 논의되고 있다. 모더니즘과 계몽주의에 관한 논의 중 아도르노와 호크하이머는 1972년도에 발표한 『계몽의 변증법』(Dialectic of Enlightenment)에서 계몽주의의 가장 큰 성격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조정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고, 인간은 이성(instrumental rationality)을 통해 관료제도 속에서 살게 된다고 주장한다. 관료주의적 교육기관의 설립 뿐 아니라 자연과학이 인문학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대학 (Medieval University)'에서 '현대의 대학(Modern University)'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즉 신학과 종파에 바탕을 둔 인문학 중심의 중세의 대학은 종교와 거리를 둔 독립적 과학 분야로 이루어진 새로운 형태의 '현대의 대학'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을 선두로 많은 대학들이 과학 특히 자연과학을 새로운 학문으로 인정하고 인문학과 분리시켰으며, 베를린 대학의 경우 1809년도에 실험실을 갖추고 실험 과학 영역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게 된다. 하지만 영국 대학의 경우에는 그 변화 속도가 유럽보다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영국은 19세기 초반 신학 중심에서 탈피한 지식과 교육의 기관으로 런던대학(London University, 현 University College of London)을 1827년에 설립했으며, 이로부터 4년 후에 세워진 킹스 칼리지를 비롯한 새로운 대학들을 중심으로 인문학 전통의 옥스퍼드 및 캠브리지와는 다른 학문과 교육의 형태를 만들어 가게 된다. 특히 런던 대학과 더럼대학(University of Durham)은 영국 국교회 신자가 아닌 사람들(유태인 그리고 로마 카톨릭 신자들)에게도 대학의 문호를 개방하고, 종교와의 거리를 분명히 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된다. 이 새로운 현대적 대학들은 종교의 구속에서 탈피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전통적인 기숙학교 방식에서도 탈피함으로써 런던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교육의 기회가 한정된 지역이나 계급에 머무르지 않고 잉글랜드 전역으로 넓어지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와 더불어, 교과목 또한 지금까지는 신학 범위 내에서 다루었던 과학(특히 자연과학), 문학, 역사 등이 각자 독립된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된다.

계몽주의는 인간 중심의 사회인식뿐 아니라 현대 개념의 국가의 탄생에까지도 큰 영향을 끼쳤다. 군주 중심의 유럽은 18~9세기에 이르러 현대적 개념의 국가(nation state)로 주권, 국민, 영토, 법, 정치적 제도

등을 갖추어나가게 된다. 현대적 개념의 국가가 성립하는 과정에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민족주의가 큰 역할을 했다. 즉, 유럽의 경우, 국가가 먼저 성립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반으로서 공통의 민족, 문화, 역사를 재생산하고 강조하는 민족주의가 현대 국가의 성립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³⁶⁾. 홉스봄은 국가와 민족주의는 사회 지도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통’(invented tradition)을 통해서 구성된다고 주장하고, 앤더슨은 민족 정체성이 여러 가지 문화적 고안물(cultural artifact)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³⁷⁾. 즉, 현대 국가를 성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민족 정체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들이 필요한 것이다. 계몽주의 이후에 등장한 현대의 대학은 바로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을 창출하고 재생하며 구조화하는 역할을 가장 중심으로 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이전에 인문학이 신을 중심으로 했다면, 현대 들어 인문학은 국가 혹은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문학, 언어학, 역사학, 예술학, 철학 등의 인문학이 각 국가의 전통 혹은 문화적 서사를 (재)발견하고, 문화 정체성의 담론을 형성하며, 재생산된 민족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현대적 대학에서 인문학은 중세의 신학과 고대의 고전 그리고 이 학문들이 쓰여진 라틴어나 그리스어 대신, 윌리엄 셰익스피어나 워즈워드의 작품을 연구하고,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영어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며, 영국의 역사를

36) 민족주의와 현대 국가의 성립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Ernest Gellner, Eric Hobsbawm, A. D. Smith 등이 있다.

37) Hobsbawm, Eric. (1977), 'Some Reflections on "The Break-up of Britain,"' *New Left Review*, 105, PP. 3-24; Hobsbawm, Eric. (1992),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nderson, Benedict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문화유산이나 사료를 통해서 재조명하고, 엘가의 음악이나 존 콘스타블의 영국 전원 풍경이 담긴 그림을 연구함으로써 영국이라는 국가 특유의 서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문학은 민족 문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각 사회에서 원하는 지식, 윤리, 덕목 등을 재생산하는 역할 또한 수행해왔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는 이러한 ‘현대의 대학’이나 ‘현대의 인문학’ 개념에 큰 변화가 찾아온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의 위기를 운위하고, 더 나아가서는 고등교육 혹은 대학의 위기까지도 진단한다. 이는 좁게는 각 국가 고등교육 정책의 변화나 경제적 가치를 중요시 하는 실용주의의 영향일 것이고, 넓게는 계몽주의나 국가 체계에 바탕을 둔 현대 사회가 다른 단계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예컨대, 리딩스는 지금의 인문학과 대학의 위기가 크게 볼 때 세계화로 인한 민족국가의 점진적인 약화가 배경에 있다고 지적한다. 국가의 민족 서사가 재생산될 필요성이 약화됨에 따라 대학의 성격도 변화해가고, 이에 따라 현대 대학에 자리잡고 있던 인문학의 영역 또한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다³⁸⁾. 각 국가의 영토를 넘나드는 자본, 인력, 그리고 문화³⁹⁾는 인문학이 더 이상 민족 국가의 문화를 해석하고 재생산하는 것에서 머무를 수 없도록 하고, 국가를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영국에서 대학과 인문학이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수당 정권과 노동당 정권의 교육 정책과 그 배경을 이루는 영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38) Readings, Bill (1996) *The University in Ruins*,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39) 세계화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는 신자유주의 혹은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논의에서 좀 더 살펴볼 수 있다.

1-2) 영국의 고등교육 개혁

1970년대의 경제 불황에 큰 타격을 입은 영국은 보수당의 대처가 정권(1979~1990)

을 잡은 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대처정권은 철저한 자유경쟁주의와 시장우선주의를 주창하면서 공기업의 민영화사업, 사회보장제도의 최소화, 높은 세율(특히 높은 간접세의 적용), 노동조합의 탄압, 그리고 철저한 개인중심의(individualism) 사회문화를 지향했다. 사회전반에서 개인의 가치가 전체 사회나 지역사회 혹은 공동체의 가치나 문화보다 더 존중받아야 하며, 따라서 모든 정책은 대처의 개인주의에 대한 믿음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⁴⁰⁾ 대처정권은 시장중심적인 경제정책과는 반대로 정치적 측면에서는 영국 의회정치 역사상 가장 중앙 집권적이어서(혹자는 독재적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영국의 전통적인 의회의사 결정방식이나 내각의 토론을 통한 의결보다는 대처를 비롯한 몇몇 당 간부에 의해 대부분의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⁴¹⁾

이러한 대처정권의 성격은 교육부문 정책에서도 잘 나타난다. 실리 추구, 자유경쟁, 개인 간의 경쟁 유도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대처 정부의 교육 정책의 기초였다.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

40) 대처정권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영국 사회학회와 정치학회에서는 활발히 진행되는 주제이다. 스튜어트 홀(Stuart Hall, 1979)은 대처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가장 활발하게 비판해온 학자이고, 처음으로 대처리즘 'Thatcherism' 이라는 용어를 쓴 학자이기도 하다. 홀은 대처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정책과 또 한편으로는 사회, 문화, 정치적 측면의 보수주의화와 관료화를 비판해왔다. 홀은 이러한 대처정권의 정책이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시장주의(market economy)가 가장 최선이라고 대중들을 믿게 하는 헤게모니의 한 형태라고 주장한다.

41) 대처에게 모든 힘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기업의 민영화사업, 노동자의 파업(특히 광부 파업), 포클랜드 전쟁 등을 사회단체나 노동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시킬 수 있었다. .

면서도 대학들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줄어들어 높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경쟁에서 도태된 비 인기학과(많은 인문학 관련 학과들이 이에 포함된다.)가 교직원 수를 줄이거나, 교과목을 대폭 줄이는 일이 벌어진 것도 바로 대처 정부의 경쟁우선정책이 낳은 결과물이다. 경제적 가치를 직접 또 가시적으로 창출하기 어려운 인문학과의 경우에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서도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대학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의 개혁에서도 인문학에 대한 배려는 타 학과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

특히 1981년에는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표 아래 정부의 대학 보조금이 3년 동안 매해 약 5% 정도씩 삭감되었다⁴²⁾. 또한 교육(teaching)과 연구(researching)에 대한 보조금도 구분되었는데, 교육 보조금은 학생 수에 따라 받도록 되었는가 하면, 연구 보조금도 다양한 학문에 고르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양적 산출이 가능하고,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연구를 중심으로 배분되었다. 대학들과 교수들은 이러한 보조금 정책에 크게 반발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수의 학생들⁴³⁾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기회를 잃었고, 대학은 보조금의 부족으로 약 250개의 과목이 폐강되었으며, 학생 수가 유지되는 대학이라 할지라도 교직원과 교수의 수를 대폭 줄이는 일이 단행되었다.⁴⁴⁾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랭카스터 대학은 러시아학과에 학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과를 폐지했고, 에딘버러대학은 은행으로부터 3백만 파운드(한화로 약 60억)의 대출금을 받았다. 런던대

42) *First Report from the Education, Science and Arts Committee*, session 1981-82, Expenditure Cuts in Higher Education.

43) 각 대학에 따라 그 타격의 정도가 다르지만, 대부분 약 5-10%의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야기했다.

44) Kogan, M.과 Kogan, D. (1983) *Attack on Higher Education*, London: Kogan Page, pp. 12-14.

중의 하나인 임페리얼 컬리지(Imperial College)와 리버풀 대학(University of Liverpool)은 새로운 교직원의 채용을 취소하였으며, 브리스톨 대학(Bristol University)은 145명의 교직원을 임용 해지했다.⁴⁵⁾ 또한 대학들은 불충분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높은 학비를 내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줌으로써 영국 대학에서 영국 학생들의 수는 더더욱 곤두박질 쳤다. 1981년도에 행해진 정부의 대학 보조금 축소는 대학의 연구 부문에서도 큰 위축을 가져왔다. 1982년도에 알렉 메리슨 경(Sir Alec Merrison)이 이끈 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금의 감축으로 인해서 각 대학의 연구 기능이 심각하게 위축되었다.⁴⁶⁾

이러한 영국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은 1988년에 발표된 교육 개혁법(1988 Education Reform Act)을 통해 더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 법안은 30개의 폴리테크닉과 50개의 컬리지⁴⁷⁾를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독립시킨 후 정부의 직접 관리를 받도록 하고, 지금까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던 대학보조금위원회(The University Grants Committee: UGC)⁴⁸⁾를 대학재정위원회(Universities Funding Council: UFC)로 변경시켰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대학들은 정부로부터 직접

45) Kogan, M.과 Kogan, D. (1983) *Attack on Higher Education*, London: Kogan Page, pp. 60-61.

46) Advisory Board for Research Councils and UGC Working Party Report, *The Support of University Scientific Research*, 1982.

47) 폴리테크닉을 대학보다 열등한 교육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박덕규, 강연희, 김지순, 2002). 하지만 폴리테크닉이 대학(university)과 그 개념이나 성격에서 다른 것 또한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폴리테크닉은 대학보다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는 3년제 교육기관으로 보는 것이 옳다(영국은 대학도 학부 과정이 3년제이다.). 컬리지(college)의 경우 우리의 전문대학과 비슷한 성격으로 1년짜리 코스부터 3년짜리 코스까지 다양한 직업교육 교과과목을 갖고 있다. 과목으로는 요리, 의상디자인, 피부관리, 헤어디자인, 꽃꽂이, 목공, 배관, 전기기술 등이 있다.

48) The University Grants Committee(UGC)는 대학이 중심이 된 단체로서 지원금 배분뿐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관리와 감독을 받는 교육 기관으로 되었고, 각 대학들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정부에게 보여주어야만 원하는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89년 이후부터 각 대학은 이윤을 내는 사업체와 다름없이 경영 방법이나 경제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대학의 부총장⁴⁹⁾은 기업의 사장 역할을, 학과장은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해서 대학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게 된 것이다. 즉 부총장이나 학과장은 학자이거나 연구자일 필요가 없고, 대학이라는 커다란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영자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1989년 이후 보수당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의 큰 흐름이다. 연구나 교육의 질은 항상 양적으로 평가되었고, 그 평가에 따라 지원금이나 기금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1992년도에 발표된 고등교육법(Further and Higher Education Act)에 따르면, 모든 대학들은 교육 및 연구 지원금을 두고 지속적인 경쟁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모든 지원금은 고등교육 재정위원회(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HEFC)를 통해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다. 트라우(Trow)에 의하면, HEFC는 정부의 손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정부 정책을 대학에서 실행시키는 기관이다.⁵⁰⁾ 즉 HEFC와 보조금은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학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하며, 이를 통해 영국이 전통적으로 자랑하는 대학의 자율성은 포기된 반면 대학의 효율성과 경제적 가치의 극대화가 추구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학문 영역의 독립성이나 이성에 바탕을 둔 지식의 창출이라는 학문의 역할보다는 경제적 잉여 가치의 창출과 직업 교육의 강화⁵¹⁾라는 측면으로 대학 교육의 역할이 변해가는 계기가 되었다.

49) 영국에서는 대학의 관리나 학사 일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부총장이고, 총장의 경우 영국 귀족 중의 한명을 여왕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총장은 실질적인 대학의 경영이나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50) Cited in Tomlinson, S. (2005) Education in a Post-Welfare Society, Maidenhead: Open University Press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교육 정책은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1997년 이후에도 계속된다. 1997년 노동당의 압승은 약 20년간 지속되어온 보수당 정권에 대한 영국인들의 피로감을 잘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젊은 당수인 토니 블레어를 앞세워, 노동당은 과거의 분배 위주 사회민주주의 노선과는 거리를 둔 새로운 노동당(New Labour)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낸다. 정치적으로는 우파와 거리를 좁히고, 경제적으로는 보수당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노선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특히 토니 블레어는 수상이 되자마자 가장 우선에 두고 있는 분야를 ‘교육, 교육, 그리고 교육’이라고 천명함으로써 교육이 노동당 정권의 중점 분야임을 분명히 한다. 노동당 정권은 1997년에 발표된 디어링 리포트(Dearing Report)를 근간으로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디어링 리포트라고 불리는 이 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The Report of the National Committee of Inquiry into Higher Education(The Dearing Committee), Higher Education in the Learning Society”이다. 디어링 공작(Lord Dearing)이 이끈 이 위원회⁵²⁾는 14개월 동안

51) 여기서의 직업 교육은 1절에서 언급한 중세대학의 직업 교육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음을 밝혀둔다. 현대적 의미의 직업 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여할 수 있는 노동력의 창출, 즉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직업인의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고, 중세대학의 직업 교육이라는 것은 종교와 군주제를 지탱하는 특정 사회계층으로서의 직업 교육을 의미한다.

52) 디어링위원회는 여러 분야의 학자들과 교육, 금융,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되었다. 위원들의 이름과 소속은 다음과 같다. Professor John Arbutnot (Principal and Vice-Chancellor of the University of Strathclyde), Sir Ron Dearing (Chairman), Ms Judith Evans (Departmental Director of Personnel Policy, Sainsbury's), Sir Ron Garrick (Managing Director and Chief Executive of Weir Group), Sir Geoffrey Holland (Vice-Chancellor of the University of Exeter), Professor Diana Laurillard (Pro Vice-Chancellor (Technology Development) of the Open University), Mrs Pamela Morris Headteacher (The Blue School, Wells), Sir Ronald Oxburgh (Rector of Imperial College of 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 Dr David Potter (Chairman of Psion plc), Sir George Quigley (Chairman of

의 연구, 240번의 회의, 380번의 공청회를 통해서 약 1700페이지 이상에 걸쳐 전반적인 고등교육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했다. 위원회가 연구를 시작할 무렵, 영국 대학들은 보수당 정권의 고등교육 정책이 지녔던 혼선과 문제점으로 인하여 여러 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보조금의 감축으로 줄어들었던 대학의 학생수는 정부가 1992년에 폴리테크닉을 대학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1996년에는 그 수가 2배로 늘어나 있었고(1979년에 777,800명이던 대학생 수가 1996년에는 1,659,400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대학교육의 자원은 고갈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교육의 질도 크게 떨어졌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⁵³⁾ 대학의 재정은 중앙으로부터의 보조금과 지원금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즉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전통적으로 연구나 교육 부분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온 대학들은 어느 정도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들, 특히 승격된 폴리테크닉의 경우 재정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⁵⁴⁾ 이러한 상황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나온

Ulster Bank), Sir William Stubbs (Rector of the London Institute), Sir Richard Sykes (Chairman and Chief Executive of Glaxo Wellcome plc), Professor David Watson (Director of the University of Brighton), Professor Sir David Weatherall (Regius Professor of Medicine at the University of Oxford), Professor Adrian Webb (Vice-Chancellor of the University of Glamorgan), Mr Simon Wright (Academic Affairs Officer, Students Union, the University of Wales College of Cardiff

- 53) Watson, D. and Bowden, R. (1997) 'Ends Without Means: the Conservative Stewardship of UK Higher Education, 1979-1997', University of Brighton Education Research Centre Occasional Paper, University of Brighton; Watson, D. and Bowden, R. (1999) 'Why Did They Do it?' The Conservatives and Mass Higher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Policy, 14 (3), 243-56.
- 54)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007년에 발표된 대학평가에 의하면 1992년에 대학으로 승격된 폴리테크닉은 상위 50위의 대학 순위에 단 한 개의 대학도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정적인 측면에

보고서가 바로 디어링 리포트라고 하겠다. 교육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보고서는 93개의 제언을 도출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영국 교육이 역점을 두어야 할 9개의 중점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다.

- 1) 대학이나 디플로마⁵⁵⁾의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 2) 영국 대학 교육과 학위의 질에 대해 우려한다.
- 3) 정보 통신 기술을 장려한다.
- 4) 단기 지원금의 삭감은 바람직하지 않다.
- 5) 교육의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
- 6) 연구를 위한 새로운 지원금이 필요하다.
- 7)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 1년에 약 1,000 파운드 정도의 학비를 내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 문제를 해소한다.
- 8) 대학이 위치한 각 지역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다.
- 9) 대학 교직원의 보수와 활동을 긴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⁵⁶⁾.

이러한 제안은 대학교육을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연구 보조금 지급 등이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즉 보수당 정부에서 대학의 효

서도 기존의 대학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Liz Lightfoot, Daily Telegraph, 2007년 7월 31일 교육면)

55) 영국에서의 디플로마(Diploma)는 대학이나 컬리지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받는 교육 수료 학위이다. 대학의 학부학위(Bachelor)보다는 하위의 개념으로 주로 일년 과정을 마치면 받게 되는 학위이다. 최근 들어 디플로마 학위가 대학원에도 생겨났는데, 석사(Master)보다는 낮은 과정의 학위를 이수했음을 의미한다.

56) Watson, D. and Amoah, M. (eds) (2007) *The Dearing Report: Ten Years On*, London: IOE, University of London, p 9.

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대학의 보조금을 대폭 삭감한 것을 비판함과 동시에, 대학 또한 중앙 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각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당 정부 또한 대학이 높은 질의 교육과 연구를 보장할 만큼의 재원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디어링 리포트는 부족한 재정을 대학생들이 졸업을 한 후에 각자의 수입에 맞추어 학비를 내는 것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더 이상 대학 교육의 재정을 세금이나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수혜자로부터 어느 정도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시로서는 파격에 가까운 제안이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디어링 리포트는 가난한 학생들이나 소외된 계층에는 더 많은 지원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 또한 담고 있었다.

이러한 디어링 리포트의 내용은 노동당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선별적으로만 반영되었다. 노동당 정권의 교육부 장관이었던 데이빗 블랭킷(David Blunkett)은 2000년도의 연설 “고등교육의 현대화: 세계적 도전에 대한 대응”(Modernising Higher Education: Meeting the Global Challenge)에서 각 교육기관(대학, 컬리지, 폴리테크닉)이 서로 다른 목표와 성격을 유지함으로써 확보되는 교육 기관 내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노동당 정부는 교육 기관 내의 다양성이 보장될 때 교육의 질이 유지되고, 재원의 적절한 분배가 가능하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한동안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폴리테크닉의 대학 승격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은 노동당 정부로부터 거부되었고, 그 후 2003년도에 나온 백서 『고등교육의 미래』(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에서는 다양성, 자유로운 경쟁 등이 더욱 강조되면서 교육 정책에서 과거 대처 정권의 기조를 계속 따라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대학의 다양성(기존의 대학, 대학으로 승격된 폴리테크닉, 그리고 컬리지)을 보장함으로써 대학 간의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주장의 의미

는 결국 양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수치를 통해 대학별로 경쟁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양적 경쟁이 게임의 법칙이 되고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면, 대학은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학문과 그렇지 못한 학문을 구별할 수밖에 없고, 후자보다 전자를 오히려 더 지원할 수밖에 없게 된다.

고등교육에 시장의 논리를 지속시킨 노동당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교육 수혜자가 어느 정도의 교육 분담금을 내게 하는 데서 그 정점에 이르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에게서 학비를 받기보다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역의 보조금을 통해서 대학이 운영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학생들에게 3,000파운드(한화 약 600만원)의 학비로 대학의 재정을 충당하게 된다. 즉, 교육의 수혜자가 소비자가 되는 것이고,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과 학자들은 생산자로 인식되게 된다. 시장 상황에서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대학도 소비자인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대가를 요구해서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노동당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겠다. 교육의 수혜자에게 교육비용을 분담시키자는 의견은 디어링 리포트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노동당 정부는 대학생들이 학비를 내는 것은 반영하면서도 디어링 리포트에서 제안한 교육 기회의 적절한 분배를 위한 지원책과 교육 전반에 걸친 재정문제의 향상을 위한 장기 계획은 정책에 받아들이지 않았다⁵⁷⁾. 또한 공공자금이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정도는 점차 약화되어서, 1990년도에 비해 2005~6년도에는 약 37%가 감소되었다. 이렇게 열악한 대학의 재정 여건은 영국을 OECD 국가 중 대학재정에 대한 공공 자금의 지원정도가 가장 낮은 하위 3개 국가 중에 하나로 만드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⁵⁸⁾

57) Watson, D. and Amoah, M. (eds) (2007) *The Dearing Report: Ten Years On*, London: IOE, University of London, pp. 30-32.

58) Watson, D. and Amoah, M. (eds) (2007) *The Dearing Report: Ten*

1-3) 고등교육 개혁정책의 파장과 인문학의 위기상황

지난 수십 년간 고등교육 정책은 대학을 실용주의와 자유시장 경쟁 논리가 적용되는 곳으로 서서히 변화시켜나갔다. 특히 1981년, 정부의 대학 보조금 삭감, 1988년의 교육개혁법을 통해서 대학은 마치 기업과도 같이 효율성을 중시하는 조직으로 변해갔고, 이에 따라 각 학문 영역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특히 인문학은 대학 지원 체계의 변화와 효율성 및 실용 중심의 조직 개편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1981년 이후에 수많은 인문계 학과들이 더 적은 수의 학생을 받게 되거나, 혹은 과 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놓였을 뿐 아니라, 1982년 대학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발표된 유화 정책 속에서도 인문학은 타 학문에 비해 소외되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2개의 정책은, 첫째 키스 조지프 경(Sir Keith Joseph)이 더 많은 지원금을 과학공학연구회(The Science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을 통해서 배분하기로 한 것인데, 이 정책으로 과학/공학 분야에는 약 115개의 교직원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약 1000개의 학과나 코스가 신설되었다. 두 번째 정책은 정부가 약 4백만 파운드(한화로 약 80억원)를 들여 젊은 학자들을 대학에 대거 임용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창출된 약 230개의 일자리는 과학과 공학 분야에 약 200여개가 배분되었고,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는 30여개밖에 돌아오지 않았다.⁵⁹⁾ 정부의 유화정책이 과학 공학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정부의 대학 보조금 삭감이 실험실 위주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과학 공학 분야에 더 큰 타격을 입혔다는 의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연구 성과가 양적으로 산출될 수 없고 실

Years On, London: IOE, University of London, pp 36-37.

59) 대학별로 새로 임용된 교직원의 수를 살펴보면 런던대학(정보기술분야: 10/인문학 :1), 옥스포드(과학:16/인문학:1/정보기술:4), 캠브리지(인문학:1/과학:17/정보기술:6) 등이다. 정보기술분야의 약진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인문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명명백백히 미비함을 알 수 있다.

질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인문학에 대해서는 거의 노골적인 홀대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타격을 입은 인문학은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노동당 정부가 자유시장의 경쟁논리를 대학 교육에서 더 강화함으로써 인문학은 학생수나 연구 업적 등의 부분에서 끊임 없이 다른 학문과 경쟁을 하게 된다. 대학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고안된 학과 평가 제도들은 인문학과에 더 큰 부담이 되었다. 학과 평가 제도들은 대부분 양적으로 수치화되었기 때문에, 인문학은 자연과학, 공학 그리고 경제 관련 학과에 비해 연구 업적, 출판 업적, 학생 수 등에서 높은 수치를 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그만큼의 정부 지원이나 학생들을 통한 재원이 마련되고, 이로써 더 많은 학자들을 임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과목이나 연구가 가능하지만, 실용성과 경제성을 중시하는 현 사회의 분위기로 인해 점차 적은 학생들이 인문학을 지원함에 따라 많은 수의 대학들이 인문학의 규모를 대폭 줄이거나 타과와 통폐합을 하게 된다.⁶⁰⁾ 연로한 교수들이 은퇴해도 새로운 교수의 충원은 점차 어려운 일이 되면서 인문학과들은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에섹스 대학(University of Essex)이 1990년대 중반 문학과와 영화 및 연극학과를 통합하고, 최근 문예창작(Creative Writing)도 새롭게 포함시킨 것은 좋은 예가 된다. 전통적인 순수문학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최근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연극, 문예 창작 등을 포함시켜 새로운 학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노동당정부의 2003년도 교육 정책⁶¹⁾을 보면, 학과별 혹은 대학별 자

60) 학문의 통폐합은 노동당 정부 들어서 여러 곳에서 확인될 수 있다. 특히 학과의 성격을 뛰어넘어, 여러 분야들을 'School'이라는 이름 아래 한 곳에 묶는 대학들도 나타났다. 예컨대, 노팅햄대학(University of Nottingham)의 경우 지역학과 영화학과를 함께 묶어 School of American and Canadian Studies를 만들었다.

유 경쟁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비로 대학의 재정을 충당하는 변화를 보여 준다. 이 정책은 영국의 무상교육(Free Education) 원칙과 교육이 공공영역으로 분류되어 왔던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며, 대학이 자유 경쟁 시장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곳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특히 학생들은 소비자이고, 대학은 생산자의 관계로 탈바꿈하면서 점차 교육의 질이나 학사 행정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의 교육(즉 서비스)을 제공하는 곳이 대학이 되고, 학사 행정 또한 학생들의 편의와 직업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가고 있다. 에섹스 대학의 경우 학과별로 해왔던 세미나나 컨퍼런스의 수를 줄이고, 학생들의 취업준비를 돕는 다양한 세미나와 직업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력서 쓰기, 인터뷰 준비, 진학 준비 요령 등의 세미나가 매주 열리며, 직업 센터에서는 직업을 알선해주는 일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⁶²⁾.

2) 인문학 위기에 대한 영국의 대응: AHRC

1980년대부터 진행되어온 고등교육 개혁안들 속에서 인문학이 줄곧 소외되면서 위기에 처하게 되자, 영국 정부는 인문학을 지원 육성할 방안들을 내놓았다. 2003년도의 백서에는 영국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담겨 있는데, 최소한 6%로의 대학재정 지원인상, 연구지원

61) 영국에서는 공공 영역에 관한 정책은 백서(White Paper)라는 이름으로 발표된다. 이 정책은 2003년에 나온 교육 정책 백서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에서 발표되었다.

62) 대학의 이러한 변화는 최근의 일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P. Thompson은 1970년도에 이미 Warwick University LTD 라는 책에서 대학의 이러한 변화를 논의 했다. 경제 논리와 양적으로 평가되는 학과 평가 제도로 인해서, 학생들의 낙제율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것이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 만큼 돈을 낸 소비자를 낙제시키기에는 어려울 뿐 더러, 낙제율이 학과를 평가하는 잣대로 쓰이면서 높은 낙제율은 학과 평점을 깎아 먹는 역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아무리 낮더라도 낙제를 시키는 데는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과 지식교류의 증진, 인문학 지원책의 일환으로 AHRC(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의 설립,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여러 단체들의 설립, 학생들의 교육만족도 조사 및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 단행 등이 주요 내용이다.⁶³⁾

이 정책보고서에서 주목되는 것은 대학의 기능 변화에 대한 강조이다. 21세기의 대학은 단순히 지성과 학문의 상아탑이 아닌 ‘지식기반 경제의 중추적 역할’(serving the needs of a knowledge-based economy ‘64))을 하는 기관이 되어야 하며, 대학에 대한 지원도 이 새로운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연구는 이제 그 자체로 중요하다기보다, 연구 결과의 사회적 확산 및 공유 또는 사회적 필요에 입각한 연구라는 지점에서 중요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제안된 AHRC의 설립은 지금까지 순수학문과 기초 연구의 대명사로 통용되어 왔던 인문학이 어떻게 지원·육성되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지식경제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즉, 영국 정부는 새로운 예술인문학연구회(AHRC)를 설립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영국 사회가 원하는 인문학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고 하겠다.

2-1) AHRC 의 성격 및 구성

AHRC는 AHRB(Arts and Humanities Research Board)를 모태로 탄생했다. AHRB는 디어링 리포트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1998년에 설립되었으며, 잉글랜드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 스코틀랜

63)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DfES), 2003.

64) Packham, D.E. (2003) Lambert Review of Business-University Collaboration, <http://lambertreview.treasury.gov.uk/pdf/uni/uofwalesdcraaddock160403.pdf>

드 고등교육재정위원회 (SHEFC), 웨일즈 고등교육재정위원회 (HEFCW)와 북아일랜드 고등교육부(DEL) 그리고 영국 학술원(British Academy)의 공동 출자로 세운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자선기관이었다. 2005년 4월에 AHRC로 변경되기 전까지, AHRB는 연간 약 7천만 파운드(한화 약 1,400억원)의 예산으로 인문학 지원 사업을 실행해왔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영국의 오래된 인문학 전통에도 불구하고 1997년도에 나온 디어링 리포트의 제안과 1998년도에 설립된 AHRB 이전에는 영국 교육계에서 인문학에 대한 지원 기관이라든지,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거의 전무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전에도 영국 학술원을 통해 인문학을 일부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문의 한 영역으로서의 인문학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첫째로는 영국의 인문학 전통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영국에서는 중등교육부터 인문학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특별한 지원이나 육성책 없이도 인문학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고, 둘째로는 보수당 정권과 노동당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가 인문학이었기 때문이다.

AHRB는 ‘교부금 지급을 통한 연구 과제의 지원, 연구년(Research Leave) 지원, 연구 인력의 교류, 연구 수상 지원, 연구 센터의 지원, 대학원생의 장학금 지원, 잉글랜드의 경우 대학 내 박물관과 화랑의 지원’ 등의 사업을 관장해 왔다. 인문학 진흥을 위해 AHRB가 수행해온 이러한 역할은 2005년에 설립된 AHRC로 흡수되었다. AHRC로의 변화를 통해 영국의 인문학 지원 체계는 유한회사에서 정부 산하 연구지원기관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로써 RCUK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6개 타 학문분야의 연구회들⁶⁵⁾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즉, AHRC

65) AHRC 이전에 영국에는 다음과 같은 6개 학문분야들을 지원하는 연구회들이 설립, 운영되고 있었다. 이 연구회들은 모두 1994년에 세워졌다. Biotechnolgy

는 영국 과학기술국(OST: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산하기관으로서 그 수장은 국무장관에 의해 임명되고, RCUK 산하 다른 6개 연구회들과 좀 더 긴밀한 연구 및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AHRC는 인문학 지원책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인문학 전반에 대해서 정부에 자문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AHRC가 지원하는 분야는 고전, 고대 역사, 고고학, 미디어, 영문학/영어학, 역사, 언어학, 도서관학, 박물관학, 음악과 공연예술, 철학, 법학과 신학까지 무척 다양하다. AHRC의 전략적 목표는 아래와 같다.

- ▶ 세계적 수준의 인문학을 육성 지원한다.
- ▶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대학원생이 연구할 수 있고, 다른 전문분야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
- ▶ 인문학자들로 하여금 인문학 연구의 결과와 지식을 다른 분야에 널리 알리고 공유함으로써 인문학의 가치를 높인다.
- ▶ 인문학 연구의 영역을 넓히고, 이를 통해 인문학이 사회, 문화, 경제에 효율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⁶⁶⁾.

이러한 전략적 목표 아래, AHRC는 연구와 대학원생지원프로그램 등을 실행, 관리, 점검하고, 뿐만 아니라 지식의 교류를 증진시키며, 지원을 받은 연구의 결과물을 다른 분야나 대중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확산에 주력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AHRC는 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 DIUS(혁신대학기술부, 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에 속해 있고⁶⁷⁾, 그 상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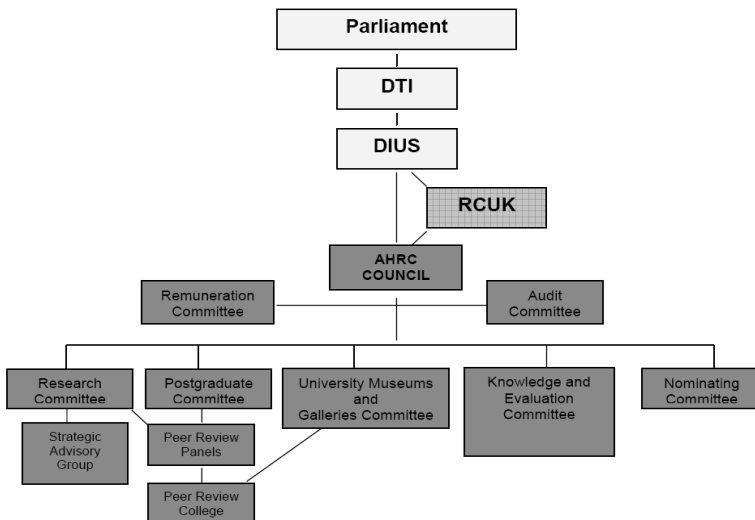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BBSRC),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ESRC),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EPSRC), Medical Research Council (MRC), 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 (NERC), Particle Physics and Astronomy Research Council (PPARC).

66) AHRC Vision and Strategy, www.ahrc.ac.uk/about/vision_and_strategic_aims.asp

관으로는 DTI(무역산업부,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가 자리잡고 있다. AHRC의 활동이나 성과는 DTI를 통해서 관리되고 국회에 보고되며, DIUS는 AHRC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영 및 재정과 관련해서는 이 두 정부기관이 AHRC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AHRC는 다른 연구지원재단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RCUK의 보호 아래에서는 타학문 분야를 지원하는 연구회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그림 39] AHRC와 정부 조직도(2007년도 Code of Prac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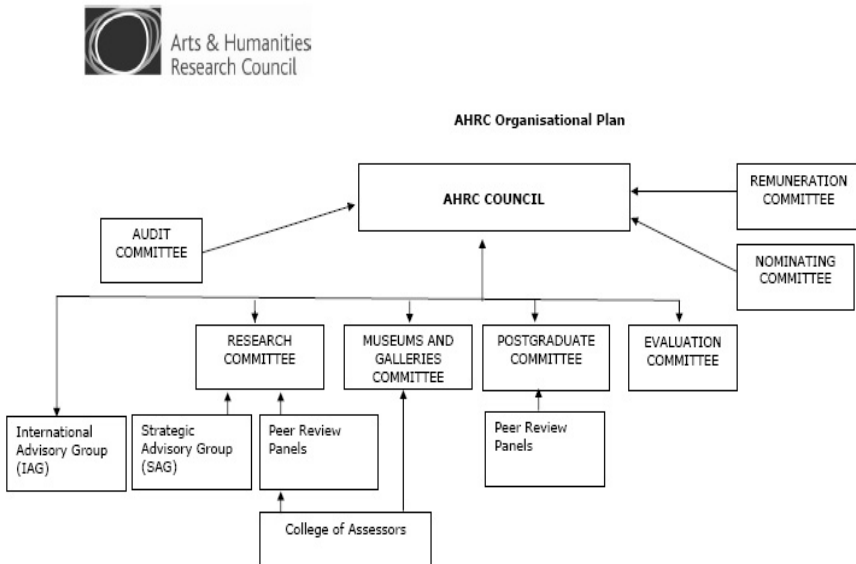
AHRC Constitutional Structure



67) AHRC는 2006년까지는 OST(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직접 관리를 받았다(2006년 AHRC에서 발행된 Code of Practice 참고). 하지만 2007년도에는 OST 대신에 DIUS(혁신대학기술부)와 DTI(무역산업부)의 공동관리를 받는 것으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2007년도 후반부터 DTI(무역혁신부)의 명칭은 BERR(Department of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로 바뀌었다. 그러나 아직 AHRC의 공식 문건에는 DTI라는 명칭이 쓰이고 있으므로 이 표에서도 DTI 명칭을 유지한다(2007, Code of Practice).

AHRC는 Research Committee(연구지원위원회), Museums and Galleries Committee(대학내박물관과화랑지원위원회), Postgraduate Committee(대학원생지원위원회), Evaluation Committee(평가위원회), Remuneration Committee(위원들의 보수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 Nominating Committee(위원을 위촉하는 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위원회들은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AHRC의 인문학 진흥 활동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다(아래 그림 참고).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인문학 지원의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연구지원위원회(연구 지원서 심사 및 선정)와 대학원생지원위원회(석/박사과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을 결정), 그리고 대학 내 박물관과화랑지원위원회(박물관과 화랑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결정)라고 할 수 있다. 이 위원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0] AHRC 조직도(AHRC, 2007년도 Code of Practice)



연구지원위원회와 대학원생지원위원회는 동료평가 패널을 통해서 지원자를 선별하고 평가한다. 연구지원위원회와 대학원생지원위원회의 구성원은 인문학자들로서, 경영적인 관심보다는 각 지원자와 지원 프로젝트의 학문적 질과 성취도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수를 받는다. 2007년도에 연구지원위원회에서 활동한 인문학자들을 살펴보면, 의장은 Professor John Caughie(글라스고 대학)가 맡았고, 그 아래 인문학과 예술 관련 8개 패널에서는 900여명의 전문가들을 이용한 동료평가를 통해 지원 선발을 주관했다. AHRC의 2007년도 연구지원위원회에서 활동한 각 패널별 위원들과 전공은 아래와 같다.

[표 18] AHRC 연구 지원 위원회 심사 패널 분야 및 주관 위원

Panel 1	Classics, Ancient History, and Archaeology (고전, 고대사, 고고학)
패널 주관 위원	Professor Martin Jones (Cambridge, 고고학)
Panel 2	Visual Arts and Media (시각/영상 예술 및 매스미디어)
패널 주관 위원	Professor Antonia Payne (Dartington, 미디어 디지털 예술)
Panel 3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영어학과 영문학)
패널 주관 위원	Professor Judie Newman (Nottingham, 중세문학)
Panel 4	Medieval and Modern History (중세/근대사)
패널 주관 위원	Professor Colin Jones (Warwick, 중/근대사)
Panel 5	Modern Language and Linguistics (근대 언어학)
패널 주관 위원	Professor Alexandra Hughes (Birmingham, 불문학)
Panel 6	Librarianship, Information and Museum Studies (도서관, 지식 및 박물관학)
패널 주관 위원	Professor Peter Willett (Sheffield, 지식경영학)
Panel 7	Music and Performing Arts (음악 및 공연예술학과)
패널 주관 위원	Professor Jonathan Stock (Sheffield, 무용)
Panel 8	Philosophy, Law and Religious Studies (철학, 법학 및 종교학)
패널 주관 위원	Professor Ian Netton (Leeds, 종교학)

한편, 대학원생의 지원을 맡고 있는 대학원생지원위원회는 Professor Rachel Cooper(랑카스터 대학)이 의장으로 있고, 연구지원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그 아래 8개의 패널이 대학원 지원 프로그램 지원자의 자격을 검증한다. 각 패널의 구성원들은 그 주제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학원생들이 낸 연구 주제의 참신함과 독창성 등을 심사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게 된다. 각 패널의 패널 주관 위원들은 아래와 같다.

〔표 19〕 AHRC 대학원생지원위원회 심사 패널 분야 및 주관위원

Panel 1	Classics, Ancient History and Archaeology
패널 주관 의원	Professor Greg Woolf (St Andrews, 고고학/전사 시대사)
Panel 2	Visual Arts and Media
패널 주관 의원	Professor Darren Newbury (UCE, 미학과)
Panel 3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패널 주관 의원	Professor Lyn Pykett (Aberystwyth, 19/20세기 문학)
Panel 4	Medieval and Modern History
패널 주관 의원	Professor Anne Curry (Southampton, 중세학)
Panel 5	Modern Languages and Linguistics
패널 주관 의원	Professor John Joseph (Edinburgh, 스페인어과)
Panel 6	Librarianship, Information and Museum Studies
패널 주관 의원	Professor Rita Marcella (Robert Gordon, 지식 경영학)
Panel 7	Music and Performing Arts
패널 주관 의원	Professor Vivien Gardner (Manchester, 공연 예술학과)
Panel 8	Philosophy, Law and Religious Studies
패널 주관 의원	Professor Christopher Tuckett (Oxford, 종교학)

또 다른 지원 위원회인 대학 내 박물관과화랑지원위원회의 경우 대학

에서 관련 학과에 종사하는 학자뿐 아니라, 미술관과 화랑에서 일을 하는 코디네이터까지 포함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좀 더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위원장은 Professor Lisa Jardine으로 런던대학 중의 하나인 퀸메리 컬리지에 있는 Centre for Editing Lives and Letters의 디렉터이고, 그 외에 Professor Stephen Bann(Professor of History of Art, University of Bristol), Ms Nichola Johnson(Director, Sainsbury Centre for Visual Arts, University of East Anglia), Mr. Michael Tooby(Director, National Museum and Gallery, Wales), Dr Evelyn Silber(Director, Hunterian Museum and Art Gallery, Glasgow), Professor John Local(PVC, University of York), Dr Charles Saumarez Smith(Director, The National Gallery), Ms Helen Wilkinson(Policy Officer, Museums Association) 등이 이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AHRC의 인문학 지원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특이한 조직이 전략적자문그룹(Strategic Advisory Group: SAG)이다. 이 그룹은 연구지원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AHRC가 최근 들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전략적연구선도(Strategic Research Initiative Programme: SRI) 프로그램(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설명한다)의 연구 주제를 제안하고,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지원한다.

전반적으로 AHRC의 구조와 운영의 특징은 권력 분산과 동료평가라고 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한 위원회에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고 프로그램별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이를 점검하고, 보충하고 감시하는 위원회를 둠으로써 연구지원에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지원을 결정할 때는 여러 단계에 걸친 동료평가를 통해서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

2007년도의 AHRC 예산은 약 1억 파운드(한화 약 2천억원)였는데, 이는 2006년도 예산에 비해 14백파운드 가량이 증액된 것이다.

[그림 41] 2006-7 년 AHRC의 지출 내역서

Statement of Net Expenditure for the Year Ended 31 March 2007			
	Notes	2006-07 £ 000	2005-06 (restated) £ 000
Expenditure			
Staff and Council Members' Costs	2	3,598	3,041
Research Awards	3	45,365	35,521
Postgraduate Awards	4	37,060	33,511
Museums & Galleries Awards	5	9,758	9,561
Other Operating Costs	6	2,811	2,068
Total Operating Costs		98,592	83,702
Income			
Operating Income	7	(46)	(78)
Net Operating Cost before Financing		98,546	83,624
Cost of Notional Capital	13	147	252
Net Expenditure for the year		98,693	83,876
Reversal of Cost of Notional Capital	13	(147)	(252)
Net Operating Cost transferred to Income & Expenditure Reserve		98,546	83,624
There have been no gains or losses other than the Net Operating Cost taken to the Income & Expenditure Reserve and therefore no Statement of Recognised Gains and Losses has been prepared.			

위와 같은 AHRC의 예산은 RCUK의 예산 중 약 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 연구회로서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진 다른 연구회들과 같은 수준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지만, 과학이나 의학을 관장하는 연구회에 비해 너무 약소한 예산이 배정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인문학 영역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이 학계의 약

25%에 달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연구지원이나 기금액의 규모에서 나는 차이는 더욱 커진다고 하겠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은 최근 들어 더더욱 악화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AHRC의 연구 예산은 약 1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7개의 연구 재단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2-2) AHRC의 최근 행보: 지식이전 프로그램(KT)과 전략적 연구선도 프로그램(SRI)

AHRC는 최근 전략적 연구 선도(Strategic Research Initiatives: SRI) 프로그램 지원에 대학원생지원프로그램의 예산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8년 현재 AHRC의 대학원생 장학금은 1,500에서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인문학을 연구하는 대학원생의 연령이 과학 분야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인문학 전공 대학원생 수의 감소와 직결되며 결국 영국 인문학의 미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HRC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인문학을 좀 더 '유용하게' 만들기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한다. 인문학을 21세기의 학문에 대한 요구, 즉 좀 더 유용하고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학문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 AHRC가 새롭게 역점을 두는 것이 지식이전(Knowledge Transfer: KT) 프로그램과 전략적 연구선도(Strategic Research Initiatives) 프로그램이다.

우선 KT(지식이전) 프로그램은 인문학적 지식을 현실에서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BBC와 AHRC가 함께 연구하는 〈Online Immersive Worlds〉가 있다. 이 연구는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웨스트민스터대학의 David Gauntlett, Jeanette Steemers, 그리고 Lizzie Jackson 교수가 참여하는 이 연구

는 BBC가 만들고자 하는 아이들을 위한 가상세계를 좀 더 바람직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BBC와 AHRC의 공동 연구는 약 7만 5천파운드(한화 약 1억 6,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연구 결과물이 BBC에서 준비 중인 어린이용 가상세계에 바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AHRC 연구 지원에 새로운 모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SRI(전략적 연구선도) 프로그램은 기존의 연구지원 방식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AHRC, 그리고 더 이전의 AHRB가 연구를 지원한 방식은 사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를 선도하기보다 연구자의 관심분야를 따르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SRI 프로그램과 더불어 AHRC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천적인 연구의 큰 테마들을 설정한 다음, 이 테마에 맞는 연구들을 선발하여 현실세계에서 필요하고 또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들을 선도한다는 새로운 연구지원방식을 도입했다. 연구 주제의 선택을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일임했던 이전의 연구 지원방식과 달리 SRI는 연구지원위원회가 연구자들로 하여금 특정 연구 분야나 주제를 연구하게끔 이끌어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SRI가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SRI 프로그램이 순수 인문학적인 주제보다는 타학문과의 교류를 통한(interdisciplinary or multidisciplinary) 통합적 연구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SRI는 인문학을 통합학문적 방향과 결합시켜 육성하려는 AHRC의 정책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다.

SRI의 테마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전략적 자문그룹(Strategic Advisory Group: SAG)이다. 2004년에 처음 결성되어 2년 임기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 SAG는 우선 여러 채널을 통해 SRI로 선정할 만한 연구 테마들을 수집⁶⁸⁾한 후에, 내

68) 주로 예술과 인문학 관련 대학과 학회, 단체 같은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SRI 테마를 공모하는 방식을 취한다.

부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⁶⁹⁾ 몇몇 연구 주제를 선정한 다음 AHRC의 연구지원위원회에 제안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연구지원위원회가 회의를 통해서 SRI 연구 테마를 결정한다. 나아가 SAG는 SRI의 연구 테마를 제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SRI 프로젝트의 진행상황 및 연구 결과를 관리 점검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SAG의 위원장은 AHRC의 임원 중 한명이 되며, 연구지원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의 대표 위원들이 이 자문그룹에 속하게 된다. 2008년 현재 AHRC에서 지원하고 있는 SRI 프로그램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0〕 2008현재 AHRC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략적 연구 프로그램 목록

SRI 프로그램	협력 연구회	예 산	기 간
Beyond Text: Performances, Sounds, Voices, Images and Objects		총 550만 파운드 (한화 약 110억원)	2007-2012
Designing for the 21st Century	+ EPSRC	총 650만 파운드 (약 130억원)	2005-2009
Diasporas, Migration and Identities		총 550만 파운드 (한화 약 110억원)	2005-2009
Digital Economy Programme	+ EPSRC, ESRC, MRC.	총 3600만 파운드 (한화 약 720억원)	2009년부터 5년간
Global Uncertainties	7개 연구회 전체	총 1400만 파운드 (한화 약 280억원)	2009 예정
ICT in and Arts and Humanities Research		총 380만 파운드 (한화 약 76억원)	2003-2008
Landscape and Environment		총 550만 파운드 (한화 약 110억원)	2005-2010

69) SAG의 정기회의는 연간 3회 개최된다.

Museums and Galleries Research		Research Project Funding에 3백만 파운드(한화 약 60억원) 투입 ⁷⁰⁾	
New Dynamics of Ageing	+ ESRC, EPSRC, BBSRC, MRC	총 300만 파운드 (한화 약 60억원)	2009년부터 7년간
Religion and Society	+ ESRC	총 1230만 파운드 (한화 약 246억원)	2007-12
Science and Heritage	+ EPSRC		2007-11

이러한 SRI 프로그램들 가운데 주목되는 몇몇 프로그램들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SRI 프로그램들 가운데 주목되는 몇몇 프로그램들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Beyond Text: Performances, Sounds, Voices, Images and Objects

21세기 들어 소통의 모든 방식이 디지털로 변화함에 따라 변화속도는 과히 상상을 초월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퍼포먼스, 소리, 이미지 그리고 사물 등의 사용과 보급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법적으로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다. 이 프로젝트는 통합학문적인 연구로서 다른 연구회들과의 협력 뿐 아니라, 학계 너머의 정책 입안자, 사회단체, 박물관과 갤러리, 도서관과 사료보관소들까지 아우르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70) <미술관과 화랑 연구> 프로그램은 Research Project Funding, Partnership, People, Impact and Evaluation이라는 네 영역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Research Project Funding을 제외하고는 예산이 나와 있지 않다.

장장 2년간의 준비기간을 통해서 결정된 이 프로젝트는 두 단계로 진행될 예정인데, 첫 번째 단계는 연구 네트워크와 워크숍의 구축, Large Research Grant와 Collaborative Doctoral Awards로서 이는 2007년 10월에 결정되었다. 연구 네트워크와 워크숍을 구축하고자 하는 학자는 약 1만5천 파운드(1년, 한화 약 3천만원)에서 3만 파운드(2년, 한화 약 6천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영국내의 네트워크 구축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교류까지도 지원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계만의 연구 네트워크가 아닌 실제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정책입안자와의 연계도 목표로 하고 있다. Large Research Grant의 경우에는 9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는데, 각 프로젝트별로 3년에 걸쳐 10만 파운드(한화 약 2억원)에서 60만 파운드(한화 약 12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된다. Collaborative Doctoral Awards는 박사과정의 학생들에게 대학이 아닌 곳에서 경험을 쌓을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학계와 비학계의 교류를 목표로 두고 있다. 5명의 박사과정생이 이 지원을 받게 될 것이고, 결과는 2008년 10월에 나오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Small Research Grant로 첫 번째 단계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의 리서치를 지원하게 된다. 각 리서치 지원자들은 약 2만 파운드(한화 약 4천만원)에서 1만5천 파운드(한화 약 3천만원)를 지원받게 되고, 약 10개의 프로젝트가 2008년 후반에 선정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총 지휘하고 있는 디렉터는 Professor Evelyn Welch (퀸 메리 컬리지, 런던대학)이다.

▶ Designing for the 21st Century Programme

AHRC와 EPSRC가 함께 약 6.5백만 파운드(한화 약 13억원)의 예산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Professor Tom Inns (Dundee 대학)를 책임자로 해서 21세기 디자인의 역할 및

가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과학의 발달이 디자인의 개념이나 형태를 바꾸었다는 주장 아래 EPSRC 영역에 있는 과학자들과의 연계연구가 눈에 띈다. 워크숍과 심포지엄 그리고 출판물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활동에도 중점을 기울이고 있다. 좀 더 자세한 연구 진행 상황은 www.design21.dundee.ac.uk 에서 살펴 볼 수 있다.

▶ Diaspora, Migration and Identities Programme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합학문 프로젝트인 디아스포라, 이동, 그리고 정체성 프로그램은 약 5백만 파운드(약 100 억)의 예산이 정해져 있다.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디아스포라, 이동(이민자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정체성을 인문학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커다란 연구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주제는 지금까지 사회과학에서는 많은 논의가 되어 왔지만 인문학적인 시각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전통, 언어, 종교, 문학, 문화, 그리고 영상/공연예술의 영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가 이 연구 프로그램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는 6개의 연구주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6개의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 a. 이동, 정착, 그리고 디아스포라: 양식, 단계 그리고 형태 (migration, settlement and diaspora: modes, stages and forms);
- b. 표현, 공연 그리고 담론(representation, performance and discourse);
- c. 언어 그리고 언어적 변화(language and linguistic change);
- d. 주관성, 감정 그리고 정체성(subjectivity, emotion and identity);
- e. 대상, 관습, 그리고 장소(objects, practices and places);

f. 믿음, 가치 그리고 법률(beliefs, values and laws).

특히 연구 프로그램에서는 연구자에게 한 가지 영역이나 주제에 한정된 연구보다는 위의 6개 연구 주제 중 2개 이상의 주제를 통합적으로 논의한 연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였다. 2개 이상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은 통합학문적인 접근법을 학자들 간의 워크숍이나 네트워크를 장려함으로써 육성 지원하고 있다.

▶ Landscape and Environment Programme

조망(landscape)과 환경(Environment)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상상되어지고,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구성되어져 왔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조망과 환경이 어떻게 문화적 과정과 환경에 의해서 구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역시 통합학문적인 연구 프로그램으로써 조망과 환경이 어떻게 문학작품, 사진, 공연, 건축이나 생활 방식 안에서 끊임없이 그 의미가 변해가는 지를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 프로그램은 6개가 연구 주제를 장려하고 있다. 그 연구 주제는 이미지, 의미 그리고 지식/Images, Values and Knowledge), 표현, 구현 그리고 의미 짓기(Representing, making and meaning), 시간, 공간 그리고 서사(Time, Space and Narrative), 정착과 이동 (Settlement and Movement), 요소와 생태학 (Element and Ecologies), 그리고 권위와 접근성 (Authority and Access)이다. 역시 연구자들은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2가지 이상의 주제를 아우르는 연구를 해야 하고, 통합학문적인 접근은 연구 네트워크와 워크숍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 육성되고 있었다. 노팅햄 대학의 Stephen Daniels 교수가 전체적은 프로그램 진행과 조율을 총괄하고 있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약 5백만 파운드가 연구자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 Museums and Galleries Research

이 프로그램은 Research Project Funding, Partnership, People, Impact and Evaluation이라는 네 영역으로 나뉘어 지원되는데, 이 가운데에서 Project Funding은 영국의 미술관, 화랑, 문서보관소와 도서관이 대학과 협력해서 진행하는 연구를 선발한다. 이 지원의 목적은 영국의 문화기관을 대학의 연구기능과 결합시켜 문화기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예술작품들에 대한 해석, 소통, 전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학계가 아닌 실제 박물관이나 갤러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연구원이나 큐레이터들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는 실제 문화나 인문학이 집행되는 곳을 지원하는 시도로서 큰 가치가 있다. 특히 대영도서관 (British Library), 대영박물관 (British Museum), National Archives, National Gallery, National Maritime Museum, National Museum Wales, National Portrait Gallery, Royal Commission on the Ancient and Historical Monuments of Scotland, Tate, 그리고 Victoria and Albert Museum 등이 AHRC에 직접 연구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New Dynamics of Ageing

이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 시작 단계로서 5개의 다른 연구회⁷¹⁾와 함께 하는 프로젝트이고, 전체적인 조율은 ESRC가 맡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5개 연구회에 속해 있는 모든 학문 영역의 연구자가 이 프로그램을 함께 연구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 결과는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나 전문가들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를 만

71) 5개의 연구회는 ESRC, EPSRC, BBSRC, MRC 그리고 AHRC이다.

들어 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약 3백만 파운드의 예산을 갖고 이제 연구 지원자 선정 작업을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통합학문적인 연구 방법론을 만들어나가는 것 뿐 아니라, 통합학문적인 분석 방법 등을 제안하는 것에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⁷²⁾.

▶ Religion and Society(2007-12)

이 프로젝트는 처음으로 AHRC와 ESRC가 함께 공동 연구를 하는 프로젝트이다.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역할이라는 최근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를 연구하는 것으로 2007년에 시작되어 약 6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예산은 12.3백만 파운드(한화 약 246억원)이고, 위의 Beyond Text와 같은 형태로 2 단계에 걸친 연구비 지원을 통해 Large Research Grants, Collaborative Research Studentship, Research Networks and Workshops 그리고 Small Research Grants를 진행하게 된다. 랭카스터 대학에 있는 Professor Linda Woodhead 가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조율 및 책임을 맡고 있다.

▶ Science and Heritage

과학과 전통이라는 이 연구 주제는 AHRC와 EPSRC(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가 공동으로 후원하여 역시 통합학문적인 연구를 지향한다. 문화적 유적지나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과학 분야와의 협력으로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 주제의 목표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문화유산은 특정 학문 분야의 소관으로 치부되면서 낙후된 환경에 의해 많이 손실되어 왔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문화유산의 의미뿐 아니라 과학적 복원까지도

72) The New Dynamics of Ageing: An Interdisciplinary Research Programme, www.esrcsocietytoday.ac.uk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주제의 취지이다. 이미 연구원들의 선정이 완료되었고, 현재 문화인류학, 고고학, 고고 표본 연대 측정학, 예술사, 건축학, 생물학, 화학, 컴퓨터 공학, 문화재 관리, 문화재 관리 과학, 전자 공학, 환경공학, 역사학, 경영학, 재료과학, 철학, 물리학, 계측 공학 등의 학문을 아우르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각 연구자들은 3만 파운드(한화 약 6천만원)의 연구기금을 받을 수 있고, 대학원 학생들, 석사나 박사과정 학생들도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University College London 내의 UCL Centre for Sustainable Heritage이고 프로그램의 진척사항은 다음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heritagescience.ac.uk)

이와 같이 전략적 연구 선도 프로그램에는 AHRC가 다른 RC들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 쟁점으로 떠오른 문제와 관련해서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계뿐 아니라 현실에서 쓰이고 있는 인문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또한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이는 최근 AHRC의 Chief Executive인 Philip Esler의 인터뷰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정부의 AHRC 지원금의 수준을 보장하는 방편으로 각 개인의 연구 및 논문에 지원하기보다는 통합 학문적일 뿐 아니라, 학계 이외의 분야도 아우르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가치 창출'("economic impact")을 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⁷³⁾.

이 같은 AHRC의 최근의 행보는 여러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혹은 지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개인 연구자로서 연구자금을 지원받기가 힘들어진 점과 대학원생 및 박사과정의 지원이 약해짐으로써 앞으로 인문학의 미래가 더

73) Corbyn, Z. (2008) 'AHRC Plans Spark Mixed Response', *Times Higher Education*, 24, June, 2008

어두워진다는 우려가 대부분이었고,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의 경우 통합적 학문연구가 더욱 활발해 질 것을 기대하는 학자들과 큰 프로젝트를 통해서 단순히 영국 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프로젝트(특히 유럽 연구 기금이 지원하는)가 수월해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3) RCUK: 학문의 통합 발전을 추구하는 영국연구회연합회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은 AHRB를 설립했지만, AHRC로의 승격 이후 통합 학문적 방향에서 인문학을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인문학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 학문과 함께 진행하는 학문통합적인 연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원활한 학문통합적 연구의 추진이라는 지점에서 RCUK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절에서는 RCUK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본다.

3-1) RCUK의 조직 및 예산

RCUK는 2001년에 발표된 Quinquennial Review에 의해서 제안된 후에 2002년에 설립된 기구이다. 이 조사는 1994년도에 설립된 6개의 연구회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앞으로의 제안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 조사 보고서에서는 6개의 연구회가 각자 위치를 잘 잡고 각 분야의 연구에 대한 지원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6개의 연구회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특히 6개의 각기 다른 연구회가 함께 연구할 때 각 위원회의 구조가 다르고, 연구 진행 방식이 다른 것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을 뿐 아니라, 공공부분의 자금을 쓰고 있는 6개의 연구회의 활동이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6개

연구회를 통합하면서 좀 더 큰 연구의 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⁷⁴⁾

이러한 진단에 의해서 2002년 5월에 만들어진 기관이 바로 RCUK이다. RCUK의 목표와 임무는 아래와 같다⁷⁵⁾.

- ▶ RCUK는 각 연구회의 목표 성취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다양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 RCUK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국의 연구회들이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에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 ▶ RCUK는 연구회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영국에 혜택을 주도록 한다.
- ▶ RCUK는 각 연구회의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연구 지원방침을 전달함으로써 연구회의 활동이 영국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도록 한다.
- ▶ RCUK는 각 연구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운영되고 기여하도록 한다.

RCUK는 현재 AHRC, BBSRC, ESRC, EPSRC, MRC, NERC, STFC의 총 7개 연구회를 관리, 조율,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⁷⁶⁾이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RCUK도 다른 연구회들과 같이 무역산업부(DTI) 산하 과학기술국(OST) 소속이다.

74) Gibson, I. and Stocker, p. (2001) *Quinquennial Review of the Grant Awarding Research Councils*

75) House of Commons,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2005) *The Work of Research Councils UK*, p. 6-7.

76) 연구회는 최근까지도 8개로 운영이 되어 오다가, the Council for the Central Laboratory of the Research Councils(CCLRC)과 the Particle Physics and Astronomy Research Council(PPARC)가 2007년 4월에 합병되면서 Science Technology Facilities Council(STFC)가 만들어 졌다. 최근의 국회 자료에는 8개의 연구회가 언급되고 있지만, 현재 합병된 것이 명확해 보이므로 RCUK 산하에는 7개의 연구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옳다.

〔그림 42〕 RCUK와 정부 조직과의 관계
(The Work of Research Councils UK,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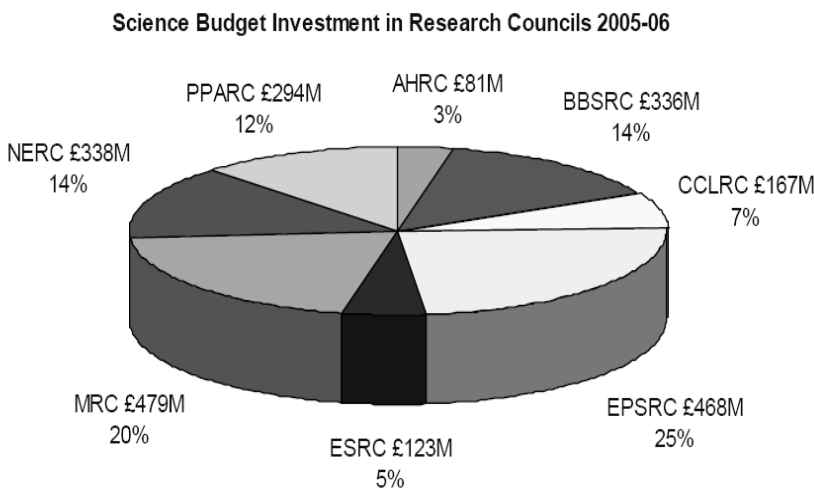


그러나 RCUK가 설립, 운영되고 1년 후에 나온 2003년도의 OST 보고서는 RCUK가 각 연구회의 세부적인 내용에 너무 깊게 관여하면서 전체적인 조율이나 큰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RCUK가 산하 연구회들의 운영과 정책 방향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RCUK와 OST는 Joint OST/RCUK Working Group for Strategy, or Joint Strategy Group을 결성한다. 7개 연구회의 회장들을 비롯해서 정부과학자문위원(The Government Chief Scientific Adviser), 과학기술국의 혁신위원장(The Director-General Innovation at DTI), 그리고 OST의 관

료들이 참여하는 이 기구를 통해 정부 부서와 RCUK가 함께 정책방향과 연구의 큰 틀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조율하는 방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RCUK의 예산은 정부의 과학 예산(Science Budget)에서 편성되는데, 2005~6년과 2007~8년 및 향후 3년간의 예산⁷⁷⁾은 아래와 같다.

[그림 43] RCUK 2005-06 예산(www.rcuk.ac.uk)



77) Department of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2007) The Allocations of the Science Budget,

〔그림 44〕 과학예산 편성표 2007-8(www.dius.gov.uk)

RCUK 관련 예산은 상단 녹색계열 행들을 참고.

2000	CSRO7				CSRO7 Total	End CSRO7 Increase
	2007-08	2008-09	2009-10	2010-11		
Research Councils:						
Arts & Humanities Research Council	96,792	103,492	104,397	108,827	316,716	12.4%
Biotechnology & Biosciences Research Council	386,854	427,003	452,563	471,057	1,330,620	21.8%
Economics & Social Research Council	149,881	164,924	170,614	177,574	512,112	18.2%
Engineering &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711,112	785,057	814,528	843,465	2,452,050	18.6%
Medical Research Council	543,399	605,528	628,472	707,025	1,971,025	20.1%
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	272,398	292,150	403,162	438,000	1,216,312	17.1%
Science & Technology Facilities Council	573,464	623,841	630,337	651,836	1,905,614	13.6%
Sub Total Research Councils:	2,835,900	3,111,802	3,239,073	3,365,584	9,746,459	19.8%
Less Depreciation & Impairments	-35,748	-124,748	-941,748	-153,748	-420,244	79.2%
Total Research Councils - Note 1	2,740,152	2,987,054	3,097,325	3,211,836	9,326,215	18.0%
National Academies:						
Royal Society	41,072	43,260	45,823	48,528	137,341	18.2%
Royal Academy of Engineering	9,752	10,279	12,128	12,826	35,243	21.2%
British Academy	21,385	22,540	25,062	26,448	74,050	23.7%
Total Academies:	72,209	76,179	83,023	87,832	247,054	21.6%
Capital Funding						
Large Facilities Capital Funding	104,681	104,831	128,428	265,285	508,194	152.4%
University Capital	200,000	266,711	258,149	214,821	739,711	-28.4%
Knowledge Transfer						
Higher Education Innovation Fund	85,000	85,000	99,000	112,000	297,000	32.9%
Public Sector Research Establishments	14,000	12,500	12,500	12,500	27,500	-10.7%
Science & Society						
Science & Society	11,441	12,441	12,441	17,441	46,223	52.4%
Other Programmes	46,840	8,857	11,557	17,678	38,092	-62.3%
Total Science Budget	3,382,423	3,554,423	3,715,423	3,970,423	11,340,269	17.4%

출처: DIUS, The Allocations of Science Budget 2008/09 to 2010/11(2007, www.dius.gov.uk)

7개의 연구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약 28억 파운드(한화 약 5조 6천억 원)가량임을 알 수 있는데, RCUK는 통합학문 프로젝트의 예산을 각 연구회에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RCUK의 경우에는 이 기관에 정해진 예산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한다기보다는 각 연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과학 예산을 각 프로젝트에 맞게 산하 위원회에게 배분하고 감독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RCUK은 전략적으로 7개의 연구회가 함께 연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으로서, 과학, 사회과학, 기술, 공학,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RCUK는 각각의 연구회가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연구회가 지원한 연구들이 최대한의 효율성을 갖고, 연구결과와 지식들이 다른 분야들로 빠르게 전이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목표는 RCUK의 다음과 같은 사명, 즉 “RCUK의 사명은 연구회들이 함께 일하고 목표를 성취해 나갈 수 있으며 연구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고안해 내는 것이다”에 잘 드러나 있다.⁷⁸⁾

RCUK의 조직은 AHRC의 조직보다 더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RCUK의 Chief Executive Group(7개 연구회장 모임)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연구회들 사이의 학문통합적인 연구를 조율해 나간다. 이 그룹의 회장은 일 년에 한번씩 7개의 연구회장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게 되는데, 현재는 ESRC의 위원장이 RCUK Chief Executive Group의 장을 겸하고 있다. 현재 RCUK Chief Executive Group의 멤버는 아래와 같다.

78) RCUK's Mission cited in www.rcuk.ac.uk

〈표 21〉 현 RCUK Chief Executive Group의 구성원

Sir Leszek Borysiewicz	Medical Research Council
Professor Philip Esler	Arts & Humanities Research Council
Professor Ian Diamond	Economic & Social Research Council
Mr Steve Visscher	Biotechnology &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Professor Keith Mason	Science and Technology Facilities Council
Professor David Delpy	Engineering &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Professor Alan Thorpe	Natural Environment Research

이 연구회장 모임(Chief Executive Group)에서 결정할 안건들은 RCUK 사무국(Secretariat)에서 7개 연구회의 사무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준비된다. 사무국은 상위 정부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RCUK의 정책과 전략 등을 정하게 된다. 사무국은 작은 조직이지만 상위 정부 조직과 7개의 연구를 잘 조율하고, 영국의 미래를 위한 연구 청사진을 제시할 뿐 아니라, 연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략까지 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또한 RCUK는 7개 위원회들의 공동 사무국(Joint Business Unit), 통합위원회 모임(Cross Council Groups), 공동 프로젝트(Joint Projects) 등을 설치하여 통합 학문 추진 기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⁷⁹⁾ 지정학적으로도 RCUK는 7개의 연구회 가운데 5개 연구회가 위치해 있는 영국 남부의 스윈돈(Swindon)에 위치하여, 각 연구회들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유기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79) RCUK Delivery Plan 2008/9 to 2010/11, www.rcuk.ac.uk

3-2) 산하 연구 기관들의 유기적인 연구 활동을 위한 RCUK의 노력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RCUK는 태생적으로 산하 연구 기관들의 학문 통합적인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 7개 연구회가 참석하는 의사 결정 기관으로서 RCUK는 각 위원회들이 서로 통합, 조율, 협력할 수 있는 연구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RCUK가 중점을 두고 있는 목표는 통합학문적인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영국이 연구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데 있다. RCUK는 2007년 향후 추진할 6개의 통합학문 연구 영역을 발표하였는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⁸⁰⁾

1. 에너지 (Energy)

최근에 들어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에너지이다. 연구 활동을 통해서 친환경적이면서도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EPSRC, BBSRC, ESRC, NERC 그리고 STFC가 함께 새로운 대체에너지를 찾아 경제 사회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2. 환경 변화 속에 살아가기(Living with environmental change)

화석 에너지는 급격한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은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연구 주제는 10년에 걸쳐서 7개의 연구회가 함께 진행하는 연구 주제이다. 약 6500만 파운드(한화 약 1,300억원)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연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전 세계적 불확실성: 변화하는 세계 속의 만인을 위한 안보 (Global uncertainties: security for all in a changing world)

80) RCUK (2007) RCUK Delivery Plan 2008/9 to 2010/11, www.rcuk.ac.uk

이제 범죄나 테러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빈곤 등의 문제는 세계 안보의 가장 큰 위협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역시 7개의 연구회가 1,400만 파운드(한화 약 280억원)를 들여서 이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4. 노화: 건강하고 행복한 삶(Ageing: Life Long Health and Wellbeing)

2051년에는 인구의 약 40%가 50세 이상이 되고, 25%는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노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이 연구 주제 하에 통합학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통합연구센터들의 설립을 지원하고, 선택된 연구 센터들은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5.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기술과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 냈다. 급속한 속도로 변화해 가는 이 시기에, 디지털 경제는 미래의 영국의 번영을 약속하는 중요한 분야임에 분명하다. 디지털 경제시대에 필요한 인재와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이 연구 주제의 목표이다. EPSRC, AHRC, ESRC 그리고 MRC가 함께 디지털 경제와 의료, 운송, 그리고 문화산업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다.

6. 나노과학의 공학과 실용(NanoScience through Engineering Application)

나노 기술은 과히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나노 기술이 다른 영역에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 특히 에너지, 환경, 디지털 경제, 의료등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 통합학문적인 접근

이 필요하다. 이 연구 주제는 현재 EPSRC, BBSRC, ESRC, MRC, NERC 그리고 STFC의 연구회가 약 100만 파운드의 예산으로 함께 연구하고 있다.

위의 주제들에서 알 수 있듯이, RCUK의 조율 아래 영국의 연구회들은 현 시대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선정하여서 여러 학문이 함께 연구하여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정해진 학문의 틀에서 연구할 경우 소기의 결론이나 방안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정책이나 실생활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한 통합적인 연구 결과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 들어 RCUK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2개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앞서 AHRC의 최근 행보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지식이전사업(Knowledge Transfer)이다. 이 사업을 통해 RCUK는 7개의 연구회가 통합 학문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물을 사회의 다른 부분들(기업, 공공부분, 정부, 학계)도 쉽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RCUK의 지식이전사업은 특히 연구 결과물이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으로 이어져 연구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점에 중점을 두며, 이를 위해 출판, 데이터 베이스 구축, 컨퍼런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식 공유 사업의 일환으로 학계와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도록 RCUK가 가교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두 번째로는 다른 나라와의 공동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RCUK는 다른 나라의 연구 흐름이나, 정책 그리고 재정 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European Research Councils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European Heads of Research Councils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RCUK는 영국의 학자들에게 해외 연구

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이는 글로벌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영국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주제들도 이를 더 효과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통합학문적인 접근방법과 함께 다른 나라의 학자들과 교류가 절실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RCUK의 해외 연구를 위한 전략은 아래의 5가지이다⁸¹⁾.

1. 영국의 연구자들과 세계 유수의 외국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를 진흥시킨다. 이러한 기회는 영국 학자로 하여금 창의적인 생각을 할 기회를 줄 뿐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 학자의 연구를 영국 학자가 자신의 연구와 비교함으로써 향후 발전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RCUK는 영국의 학자들에 이런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자 할 때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영국 학자, 특히 젊은 영국 학자들에게 외국에서 연구하는 것을 장려한다. 외국에 나가서 새로운 경험과 기술을 익혀 영국에 돌아와 더 좋은 연구로 기여 할 수 있도록 한다.
3. 영국 학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자료, 기기, 그리고 자원을 제공한다. RCUK는 지금까지 좀 더 좋은 연구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애썼지만, 외국에 좀 더 좋은 연구 조건이 있을 경우, 그 연구 자원들을 제공하도록 한다.
4. 영국이 세계의 아젠다 형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영국은 연구 선진국

81) House of Commons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2007) International Policies and Activities of the Research Councils: Government Response to the Committee's Ninth Report of Session 2006-7.

으로서 세계의 연구 정책이나 연구 자료 정리 등에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RCUK 외국 사무실을 통해서 영국이 세계 연구 흐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5. 영국을 연구와 혁신의 메카로 세계에 널리 알린다.

2007년 발행된 국회자료에 의하면 RCUK는 RCUK International Team을 구성하고 RCUK 해외사무실을 중국, 미국 그리고 인도에 설립하였다. RCUK의 해외사무실은 각 국가의 연구 동향과 연구 과제 등을 영국에 있는 RCUK에 보고하며, 이를 통해서 영국의 학자들이 외국의 학자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제공하면서 해당 지역에서의 연구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1.3. 프랑스: SHS와 CNRS

1) 프랑스의 인문학 전통과 고등교육개혁의 영향

1-1) 프랑스의 인문학 전통

데카르트 이래로 프랑스의 인문학, 특히 철학은 서유럽뿐 아니라 서구 사유 전반에 걸쳐 이성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프랑스 인문학의 뿌리를 따져보자면, 그 기원은 프랑스 최초의 대학인 중세의 파리 대학을 훨씬 앞질러 프랑스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5세기경의 갈로-로맹(Gallo-Romain)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에서 이렇게 태동한 지식 개발과 전수의 움직임은 13세기에 파리 대학이 설립되면서 제도적 형태로 발현되었다.

파리 대학은 각종 전쟁으로 혼란했던 11세기 이래로 수도회에 의해 운영

되던 교육기관 콜레쥬(collège)를 떠난 학생과 교수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만들어졌으며, 이에 따라 교수들의 동업조합 형태로 운영되었다. 즉, 파리 대학은 교수들이 강의를 짜고 강의를 들을 만한 지적인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식으로 운영되었던 것이다. 당시의 모든 대학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비교적 잘 짜인 골격을 갖추고 있었던 파리 대학은 4개의 학부, 즉 하나의 교양학부와 3개의 고등학부인 신학부, 법학부, 의학부를 운영했다. 학생들은 교양학부과정을 마쳐야만 3개 고등학부로 진학이 가능했다. 이 과정에 따라 위계화된 학위들이 존재했는데, 우선 지원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학생들을 가르칠 권리를 부여하는 학위인 리상스(licence), 고등교육을 계속 한다는 의미의 통과의례 시험인 매트리즈(maîtrise), 그 상위 수준의 학위인 독토라(doctorat)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중세 대학의 학위 명칭은 현대 프랑스 대학으로까지 이어진다. 현재 대입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라든가 학사 학위인 리상스, 석사 학위인 매트리즈, 그리고 박사 학위인 독토라가 그 유산들이며, 이러한 학위 과정의 위계적인 구성 방식 역시 현대 대학의 교과 과정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렇게 중세로부터 면면히 이어져온 프랑스의 고등교육의 전통은 탄탄한 인문학 교육을 바탕에 두는 것이 특징이었으며, 실제생활에서 활용할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철학적 원리나 사물의 이치를 터득할 수 있는 지성을 갖춘 다음의 일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1-2) 고등교육의 개혁

프랑스에서 인문학을 중시하는 이러한 풍토는 1789년의 프랑스 혁명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대혁명 하에서 대학은 귀족주의에 물들었다는 이유로 폐쇄되기에 이르렀으며, 혁명주체들에 의한 새로운 고등교육기관, 즉 그랑제꼴(Grandes écoles)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당시 대학은 중세

의 질서에 의거한 소수 계급의 특권을 옹호하는 단체로 간주되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혁명 이후의 사회에서 대학은 철폐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사실 혁명 이전의 대학은 오직 고대의 지식 전수에만 몰두하고 있었으며, 연구를 추진하고 지식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일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로 인해 교육의 긍정적 기능과 그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혁명주체들은, 그들이 보기에 더 이상 혁신적인 변모를 기대할 수 없는 대학을 폐지하고 그 대신 새로운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했다. 공화국의 발전에 있어 책임과 의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 목표였던 만큼, 혁명 세력들은 제 2공화정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에서 유용한 지식의 생산을 우선시했다. 그 예로 당시 설립된 그랑제꼴들을 들 수 있는데, 후에 에꼴 폴리테크닉(Ecole polytechnique)이 될 중앙공공사업학교(Ecole centrale des travaux publics), 공예·직업학교(Conservatoires des arts et des métiers), 동양어학교(Ecole des langues orientales), 미술학교(Ecole des Beaux-arts), 자연사 박물관(Musée d'histoire naturelle), 사범학교(Ecole normale), 에꼴 드 마르스(Ecole de Mars), 그 밖에 3개의 위생학교 등이 이에 속한다.⁸²⁾ 그러나 이처럼 실용성에 기반을 둔 의도에도 불구하고, '공화주의 정신(l'esprit républicain)'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에 급급했던 혁명주체들은 구체제의 유산을 모두 폐기처분하려 했고, 정치적 단절에 대한 욕구를 성급하게 교육의 영역에 적용하고 말았다.

이쯤에서 전통적인 대학과 그랑제꼴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다. 첫째, 대학이 교수들의 조합으로 결성된 자율적인 교육기관이었던 반면, 그랑제꼴은 공공교육위원회, 즉 국민의회(Convention)에 예

82) 『프랑스의 고등교육』, 원운수, 류진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p. 29.

속된 기관이었다. 둘째, 대학이 역사를 통해 축적된 학문 연구의 전통과 자율성의 전통을 이어왔던 데 반해, 민주정치와 의회정치를 표방했던 혁명 주체들은 그랑제꼴로 대학을 대체함으로써 대학보다 더 타율적이고 효율 위주의 교육 방식을 정당화하는 모순을 낳고 말았다. 그 결과, 혁명주체들에 의해 타율적으로 폐지된 대학이 본래의 모습으로 역사에 재등장하기까지는 약 1세기 반의 시간이 필요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대학과 그랑제꼴이라는 이원적 교육체계의 확립은 대혁명기의 교육개혁이 남긴 또 하나의 부정적 영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예속기관의 성격을 가진 고등교육기관은 나폴레옹 집권기에 한층 더 강화되었다. 나폴레옹은 1806년에 제국대학(Université impériale)이라는 이름의 국립교육기관을 창설했는데, 이 기관은 국가가 통제하는 교육 독점체제로서의 교육기관이었다. 사실 나폴레옹은 너무 유식한 신하를 원하지 않았고, 다만 학교를 졸업하는 즉시 민간 또는 군사업무에 종사하여 제국을 무리 없이 운영할 능력을 가진 인재만을 요구했을 뿐이었다. 따라서 제국대학 역시 실용 위주의 교육만을 추구했다. 요컨대, 혁명의 여파 속에서 대학의 운명은 전통과 급격한 단절을 겪으며 실용적인 기능과 정치권의 영향력에 좌우되는 운명을 맞닥뜨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이 권위를 되찾게 된 것은 1848년 2월 혁명 후 같은 해 12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보나파르트가 당선되고 1851년 12월 2일의 쿠데타로 제2제정이 성립되면서이다. 더욱이 1870년 보불전쟁의 패배로 프랑스인들은 독일과의 비교를 통해 프랑스 전반의 문화와 제도를 반성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의 대학체제에 비해 프랑스 대학이 지닌 취약점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의 고등교육은 혁명기와는 다른 현대적인 의미로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이 개혁의 초점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던 프랑스 고등

교육에 대한 개선책들로 모아졌다.

프랑스 고등교육의 개혁은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제 3·4 공화국 아래에서도 계속되었지만, 진정한 개혁은 제 5 공화국의 출범에서 비롯된다. 1968년 5월의 학생혁명⁸³⁾으로 시작된 교육 혁신은 결국 1968년 11월 12일 “포르(Faure) 법안”이라 불리는 유연한 성격의 교육 기본법 채택으로 귀결되었다. 그랑제꼴 교장들이 이 법의 적용을 거부함에 따라 이 법은 오직 대학과 대학부설기관들에만 적용되게 되는 한계가 있긴 했지만, 중도적 성격의 이 법안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교육제도의 중요한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 법은 자율과 참여, 다학과성(pluridisciplinarité)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명시했는데, 우리는 다학과성이라는 원칙에 특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1968년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에드가 포르(Edgar Faure)는 이미 지식의 분할 및 그것의 고착화가 지식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학문 자체의 요구에도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이전까지 대학의 구성단위였던 단과대학을 교육연구원(UER: Unité d'enseignement et de recherche)로 나누고 그 교육연구원들을 더욱 큰 단위들로 통합함으로써 지식의 서로 다른 분야들 사이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지만 같은 현상을 연구하는 학과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나의 연구에 있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는 학과들을 연합할 수 있도록 하여 학문의 통합적 발전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그 기본적인 취지였다.

이후 1981년 프랑스 교육법은 다시 한 번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대학에서의 직업교육 강화를 그 골자로 하는 “사바리(Savary) 법안”이

83) “68년의 학생혁명의 원인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몇 가지만 짚어본다면 우선 전례 없이 증가한 학생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경직된 대학 체계, 문제의 본질은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되풀이되는 정부의 교육 개혁 정책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같은 책, p. 46.

바로 그것이다. 1981년 알랭 사바리(Alain Savary)가 교육부 장관이 되었을 때, 포르의 법안은 이미 여덟 차례나 수정을 거친 상태였으나 사회적 변화로 제기되는 보완책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바리는 “포르 법안”이 제시했던 “자율, 참여, 다학문성”의 세 가지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고등교육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당시의 사회적 변화가 고등교육에 바랐던 바는 구체적으로 직업교육의 강화, 각각의 교육단계에 해당하는 교육과 연구의 밀접한 결속, 대학 정규과정 내에 개설된 평생 교육 과정,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학 교과과정의 편성 등이었다.

이런 요청에 따라 보완된 사바리의 법은 대학과 그랑제꼴을 포함한 모든 고등교육기관들이 사회적 의무(연구 발전에의 기여, 국가와 지역 발전에의 기여, 다양한 사회 불평등 해소에의 기여), 교육적 사명(기본·평생 교육의 보장, 과학기술연구개발, 연구 성과의 적용, 지식의 보급, 국제 공조 발전), 종교분리원칙 존중, 교육 기관과 그 구성원의 중립성 준수 등을 명시하였다. “사바리 법안”은 현재까지도 프랑스 대학의 운영과 조직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한편,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이 법안의 실행으로 “포르 법안” 시절 단과 대학을 구성하는 기본단위였던 교육연구원(UER: Unité d’enseignement et de recherche)가 “사바리 법안”에서는 양성연구원(UFR: Unité de formation et de recherche)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대학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쳐오던 인문학이 아니라 일생동안 몇 번이나 바뀌게 될지 모르는 직업에 대한 불안감에서 기인한 직업교육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인 동시에, 실용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인문학에 대한 고정관념이 프랑스인들 사이에도 없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학의 교육과정에 새로이 편입된 직업교육은 인문교양교육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초 학문과의 조화를 통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설령 “사바리 법안”의 근본 취지가 인문교양학과 직업교육의 조화를 통한 고등교육의 실현에 있다 하더라도, 이 법안의 도입에 배경이 된 프랑스인들의 인문학에 대한 경시를 간과할 수는 없다. 인문학 경시 풍조는 이미 일반적 현상이며, 이를 쇄신하기 위한 노력이 프랑스 학계 일각에서 이미 일고 있다. 그렇다면, 프랑스 인문학 경시는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기로 하겠다.

1-3) 프랑스에서의 인문학 위기

프랑스에서 교육은 초·중·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그랑제꼴 예비반까지를 일컫는 “국민교육”과 대학 및 그랑제꼴을 아우르는 “고등교육”으로 구분된다. 중세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프랑스의 고등교육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사회와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 변화해왔다. 특히 공화국 체제로 접어들면서, 프랑스 고등교육은 고급두뇌양성과 교육평등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그랑제꼴과 대학이라는 양대 고등교육기관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 둘 사이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서로의 장점을 살리려는 노력이 프랑스 고등교육의 현상황이다.

그러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프랑스 교육의 현실은 우리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가 고등교육을 마치면 어엿한 직업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에 따라 일반 대학보다는 그랑제꼴을 현저하게 선호한다. 이들에게 인문학은 그자체로 “가치있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의 학부모들은 인문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그것은 자식들을 그랑제꼴로 보내기 위한 길의 일부, 즉 그랑제꼴 입학시험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필수적인 하나의 도구일 뿐인 것이다.

실제로 1990년에서 1991년 사이에 대략 67,500명의 학생들이 그랑제꼴 예비반에 들어갔는데, 이는 바칼로레아 합격자의 10명 중 1명꼴로

예비반에 등록한 셈이 된다. 이처럼 그랑제꼴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계속되는 경제위기 하에서 그랑제꼴 졸업생들이 일반 대학 졸업생들보다 일자리를 얻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다. 그랑제꼴에의 입학은 곧 어느 분야에서나 높은 책임과 권리가 부여된 중요한 직책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둘째로, 에꼴 폴리테크닉, 고등 사범학교, 에꼴 쌍트랄, 국립 행정학교, 고등상업전문학교와 같은 학교는 사회적으로 출세하려는 야망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다. 대부분의 장관들이나 고위 공직자들, 문화계의 저명인사들이 그랑제꼴 출신들이며, 사실 그랑제꼴들은 후일의 고위 관료, 대학 교수, 산업계의 전문경영인 등을 양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랑제꼴과 일반대학의 성격상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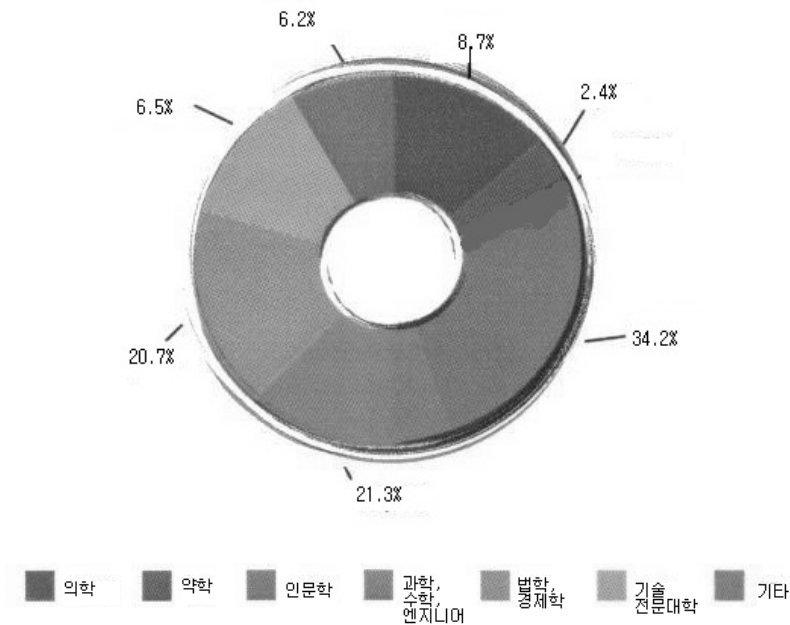
고위 공직자들과 엔지니어, 그리고 고급 경영자층을 양성하는 그랑제꼴의 다른 한편에 교양과 연구를 지향하는 대학이 있다. 전통적으로 이런 이원적인 체계에서 예외적으로 직업인을 양성하는 대학기관은 법과대학과 의과대학뿐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는 대학이 양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지원자 수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바칼로레아 이후 학생들의 진로가 정부 주도의 각종 직업 및 기술교육보다는 일반 대학으로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학생 수의 증가로 인한 대학의 양적 팽창 문제는 대학 학위의 평가절하의 문제로 이어졌다. 대다수의 중등교육 이수자는 지원자의 70%가 합격하는 바칼로레아를 거쳐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학위를 취득하여 사회로 진출한다. 이러한 학위 소지자들이 대량으로 늘어날 경우 그들이 소지한 학위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상실하게 됨은 당연한 귀결이다. 졸업생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교원과 연구자들을 양성하는 기능을 담당해왔던 대학이 이제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첫째, 노동 시장, 즉 기업의 요청 때문이다. 요컨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지식을 갖춘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랑제꼴이나 전문직업교육기관에서 배출해내는 인재들로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주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그리고 대학 정원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새로운 교육방식의 제시로서 프랑스 고등교육은 직업교육화 경향을 띠게 되었다. 둘째, 프랑스 교육이 유럽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심각한 실업 문제로 인해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프랑스 교육 전반에 대한 비판은 대학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실제로 16-25세 사이의 프랑스 젊은이들의 실업문제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층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 학위 소지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는 것 때문에 대학에서의 전문 직업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1970년대 초부터 가시화하기 시작한 대학에서의 전문 직업교육은 “구체적 목표를 가진” 학사와 석사 과정의 신설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이론과 응용을 병행할 뿐 아니라 기업과의 보다 긴밀한 연계 같은 혜택을 입기에 이르렀다. 특히 1981년 제정된 “사바리 법안”은 대학에서의 직업교육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노동시장의 구체적인 요구에 부응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직업교육의 강화는 결국 1990년대 이후 이공계열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인문학 쪽은 그 비율이 감소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림 45] 각 분야의 학생 분포(1992년)



사실 20세기에 접어들어 눈부신 신기술의 개발과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고등교육기관 내에서의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초적인 학문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실용적인 직업인 양성에만 몰두하는 것은 결국 고등교육의 존재이유를 무화시키게 될 뿐이다. 오로지 시대적 요구에만 매달려 빠르게 앞서가는 신기술 개발에만 매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기술의 노예가 되어버린 직업인의 양산이라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프랑스 대학교육에서 직업교육과 순수학문 사이의 접목을 통한 양자의 상승효과를 지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하겠다. 진정한 직업교육이란 기초 학문들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며, 고등교육이란 이상의 두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임을 프랑스 교육계 종사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프랑스 학계의 일각에서는 보다 확고한 인문 교육을 통해 급속히 진행되는 사회 변화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지성을 양성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은 이미 고등교육의 범주를 넘어 연구기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차원의 인문학 진흥 노력이 프랑스 학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프랑스의 인문학 진흥체계를 보면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정부와 연구기관, 그리고 연구자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대학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연구부(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가 인문학 지원의 기본 업무(법적 지위 및 재정)를 수행하고, 연구기관은 연구기반과 환경을 조성하며, 대학은 연구자 양성(교육) 기관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정부 및 연구기관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⁸⁴⁾

이미 기술한 세 개의 기관 모두가 프랑스의 인문학 진흥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프랑스 국립학술원(Centre National des Recherches Scientifiques/이하 CNRS)을 중심으로 하여 인문학 진흥의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CNRS가 정부부처인 교육연구부와 연구자 양성기관인 대학 사이를 연결하는 관계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문사회과학을 중심으로 학제 간 학술연구프로그램 정책의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CNRS의 하부 연구조직인 인문사회과학부(Sciences Humaines et Sociales/이하 SHS)의 활동에 주목

84)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문정책연구총서』 2004~05, 『선진국 인문학 진흥체계와 한국 인문정책 연구기관 운영방안』, 인문사회연구회, p. 105를 참조하라.

할 것이다. 이는 프랑스의 인문학 진흥정책뿐만 아니라, 인문학이 중심이 된 프랑스의 학문 통합 정책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이해를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2) CNRS 산하 인문사회과학부(SHS)와 학제 간 연구프로그램 정책
총 6개로 이루어진 CNRS 학술연구부⁸⁵⁾ 중 하나인 SHS는 프랑스에 일반화된 인문학 경시풍조에 대응하기 위해 CNRS 내의 SHS 입지 강화에 우선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제부터 CNRS의 학술연구프로그램들 가운데 SHS가 추진하고 있거나 참여하는 학제 간 연구프로그램을 통하여 CNRS 내의 학제 간 연구프로그램에서 SHS가 차지하는 위상과 프랑스의 인문학 진흥정책의 현상황을 가늠하고자 한다. 하지만 학제 간 연구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SHS 전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2-1) SHS의 구성 — 조직과 예산

▶ 기본 조직

마리-프랑수아즈 쿠렐(Marie-Françoise Courel)을 수장으로 하는 SHS는 CNRS의 총 40개 분과 가운데 31-40에 이르는 10개의 분과로 구성되는 연구부와 행정부(Secrétariat Général), 홍보와 학술적 정보 교류를 담당하는 학술 커뮤니케이션부(Communication scientifique), 그리고 국제 협력을 맡아서 행하는 국제부(International)로 이루어진다. SHS를 구성하는 CNRS의 31-40까지의 연구부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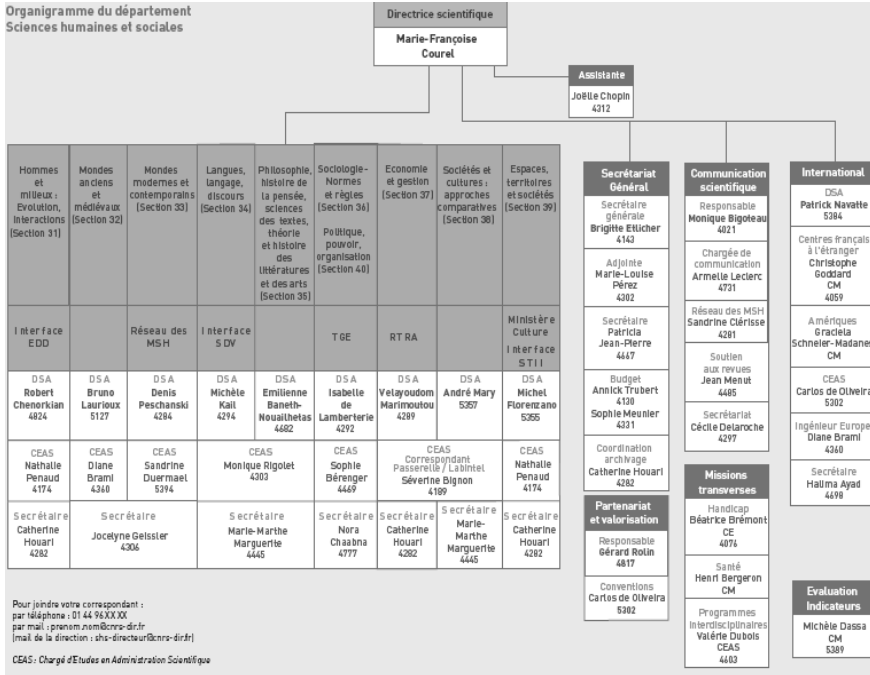
85) CNRS 학술연구부에 대해서는 이후 CNRS 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하겠다.

Section 31	인간과 환경, 발전과 상호작용
Section 32	고대 및 중세 세계
Section 33	현대 및 동시대 세계
Section 34	랑그, 언어, 담론
Section 35	철학, 사상사, 문헌학, 문학과 예술의 이론과 역사
Section 36	사회학 : 규범과 규율
Section 37	경제와 관리
Section 38	사회와 문화 : 비교에 기반을 둔 접근
Section 39	공간, 영토, 사회
Section 40	정치, 권력, 조직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SHS의 연구 체계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관례적으로 구성하는 개별 하위 분과들로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과의 경계를 넘어선 학제 간 연구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개별 분과들은 이러한 학제적 연구 주제 아래에서 세부 주제를 개발하고 연구팀을 구성한 뒤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2002년의 시점에서 이 SHS 소속 10개 분과에 소속되어 있던 인력은 총 463 연구팀에 관련 연구원 2,160명, 엔지니어 및 기술행정요원 1,752명이었으며 총 예산은 2,301만 8천유로(한화 약 368억 2,880만원⁸⁶⁾), 출처: 인문정책연구총서, 2002-48, p.95)였는데, 연구원의 전공은 고고학, 역사학, 동양학, 인류학, 민족학, 언어학, 철학, 과학사, 문학, 음악학, 관리학, 사회학, 법률학, 정치학, 지리학, 도시학 등 인문학과 사회과학 나아가 예술학까지 매우 광범위한 분과 체계를 포괄했다.

86) 1유로=1600원으로 환산.

〔그림 46〕 SHS의 조직도



- 왼쪽 사각형 첫째 줄 - SHS 산하 연구분과 31에서 40의 명칭
둘째 줄 - 참여 혹은 협동 프로그램 명칭.
셋째 줄 - 학술분과장(DSA: Directeur Scientifique Adjoint)
넷째 줄 - 학술행정연구담당자(CEAS: Chargé d'Etudes en Administration Scientifique)
다섯째 줄 - 비서
출처: CNRS 홈페이지, 2008년

▶ 네트워크 체계: MSH(Maison des Sciences Humaines)

인문학의 집(MSH: Maison des Sciences Humaines/이하 MSH)은 SHS 산하의 연구실들과 연구 설비들이 지역에 따라 재편성된 것이다. MSH는 SHS 산하 연구실과 지역 대학 연구실의 협력체제로 구성된다. MSH의 편성 기준은 두 가지이다. 즉, 연구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인

로 동참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국제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사실 기초학문육성을 목적으로 했던 초기 CNRS와 그 산하기관인 SHS의 연구는 제한적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었다. 반면, 대학에서의 인문학 연구는 비교적 자유로웠다.⁸⁷⁾ 연구 영역에 있어 상호보완의 성격을 가진 두 기관은 1990년대에 이르러 MSH라는 이름으로 연계되기에 이른다.

MSH는 네트워크라는 특성을 갖는데, 이는 프랑스 전역에 걸쳐 연구를 고르게 활성화하려는 정책에서 비롯되었다.⁸⁸⁾ CNRS의 입장에서 보자면, MSH의 네트워크는 SHS의 연구 거점을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분배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의 실행과 지방분권의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연구기관과 CNRS를 포함한 전문 연구기관을 연계하여 연구 활동을 증진시키려는 취지로 만들어

87) “대학과 전문연구기관의 인문사회학 영역 학문의 조직체계를 보면 CNRS는 인류학 같은 몇몇의 고유 학문연구팀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문사회학의 전통적인 몇 학문영역에만 제한되어 있다. 가령 CNRS는 국문학, 외국문학, 예술 등의 연구영역은 크게 발전시키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CNRS는 기초과학 영역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반면 대학은 CNRS가 약한 영역의 인문사회학 과목을 발전시켜왔다. 그래서 프랑스의 인문사회학 영역은 연구의 양적, 질적 면에서 대학과 CNRS는 서로 상반되면서도 보충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CNRS는 인문사회학 영역에서도 특히 사회인류학과 사회학의 여러 과목 그리고 철학, 과학역사, 비유럽권 지역의 사회역사, 음악학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한 언어학(특히 실험언어학), 노동사회학, 조직사회학, 고고학의 몇 분야와 인지 인류학, 법 역사, 정치학(공공정치학)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문학과 예술영역에서는 부수적인 역할만 해왔다. 반면에 대학은 서양사회의 역사(특히 철학역사와 지리)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했다.” ; 『인문정책연구총서』 2002-48, 『국내외 인문학 지원체제 비교 연구』, 인문사회연구회, p.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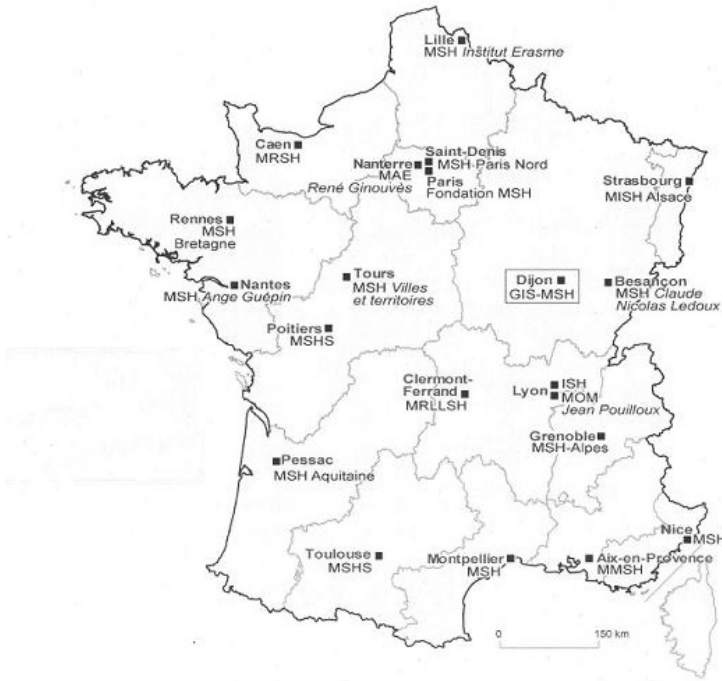
88) 프랑스는 본래 중앙집권화로 대표되는 나라이며, 따라서 모든 프랑스의 공공기관들이 어떤 식이든 중앙정부의 감독과 지배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1년 미테랑 대통령이 이끄는 사회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지방분권화정책을 주도하고 나섰지만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 온 고질적인 관행을 금방 뿌리 뽑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방분권강화는 여전히 프랑스 정부뿐 아니라 CNRS가 표방하는 정책의 일부이다.

졌던 MSH는 이제 지역적 특성과 연구 목적에 따른 개개의 MSH에 고유한 정체성을 보증해주기에 이른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연구 활동뿐 아니라 연구 목적에 따른 제 학문 사이의 상호연계 및 신진연구원 양성이 보다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MSH의 특성인 네트워크로 인해 연구결과의 효율적인 소통 또한 가능하게 될 것이다.

MSH는 또한 지방 역량의 강화라는 효과도 견인한다. 실제로 전 국토에 골고루 분포된 MSH의 전체 연구원 구성을 보면, 총 연구원의 절반이 CNRS 산하의 지역 SHS 소속 연구원들이며, 1/3은 지역 대학에 출강하는 교원-연구원들이고, 박사후 과정에 있는 연구원들과 박사과정 학생들이 나머지 연구원 층을 형성한다. SHS 소속 연구원의 경우, 연구총괄자는 주로 중앙 SHS에서 파견되는 것으로 보이며, 연구담당자의 경우에는 현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지원하여 연구원으로 채용되거나 각각의 MSH가 담당하는 고유한 테마에 관심있는 연구원들이 해당 지역 MSH로 전근하게 된다. 또한 박사후 과정이나 박사과정 학생들은 대부분의 경우 과정을 마친 후 수도권 연구원직에 지원하는 대신 자신이 소속되어 있었던 지방 MSH에서 연구원직을 시작하게 된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고급 두뇌를 지방으로 이주시킴으로써 지방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된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1990년-2000년 사이에 설립된 MSH의 네트워크 체계는 2008년 현재 프랑스 전역에 다음 그림과 같이 22개의 MSH를 두고 있다.⁸⁹⁾

89) 2006년 도표 이후 로렌 지방, 즉 메츠, 낭시를 관할하는 MSH Lorraine이 설립됨으로써, 2008년 총 22개가 되었다.

[그림 47] MSH 전국 분포도



출처: 2006년, CNRS/SHS

특히, 2006년 2월 16일에는 SHS 부서장과 17개 대학 총장들이 모여 “MSH의 전국적 네트워크 체계”에 관한 협약을 맺음으로써, 지방분권 강화와 더불어 연구협력체제 강화라는 SHS의 모토에 더욱 부합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 예산

SHS에 할당된 예산은 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⁹⁰⁾

90) 2003년-2006년까지의 예산 내역에는 각 분과별 지급 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예산 내역이 해당 년도 별로 조금씩 다르다.

과 정부보조금의 규모에 대한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21〕 2007년 - 2008년 SHS에 할당된 예산 비교표

	금액 (환산된 한화/총 예산, 유로)	퍼센티지(총 예산액 중)
2007년	2억 4,681만 7천유로 (3,949억 720만원 /23억 4,093만 6천유로)	10.54%
2008년	2억 5,309만 4천유로 (4,049억 5040만원 /24억 3,342만 9천유로)	10.40%

〔표 22〕 2005년 - 2006년 SHS에 할당된 정부보조금 비교

	금액 (환산된 한화 / 총 예산, 유로)	퍼센티지 (총 예산액 중)
2005년	2061만 유로 (329억 7,600만 원 /2억 5,179만 4천유로)	8.19%
2006년	2409만 7천유로 (385억 5,520만 원 / 2억 9,171만 2천유로)	8.26%

하지만, 이 예산은 모두 학술연구 결과물에 대한 평가에 따라 지원받는 형식으로 집행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CNRS의 학제 간 연구 활성화 정책 부분에서 행해질 것이다.

2-2) SHS의 학술정책⁹¹⁾

SHS의 학술정책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후속세대 양성

91) 이 보고서의 SHS의 학술정책에 대한 부분은 2006년 5월 10일과 9월, Courel SHS 부서장이 SHS 구성원들에게 보낸 2통의 편지와 같은 해 6월 19-20일에 열린 CNRS 학술회의에서의 선언문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다.

을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TGE(Très Grand Equipement /거대 설비) ADONIS를 통한 지식의 축적·보급의 확대, 연구 및 산·학 협력체제 증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학문의 균형있는 발전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로는, DSA (Directeur Scientifique Adjoint) International(국제학술분과장)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협력의 활성화, 셋째, SHS의 특성을 한껏 살린 학문상호연계성 중심의 정책이 SHS 학술 정책의 기본 방침이 된다.

▶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세 가지 정책

- ① 지식의 축적과 보급의 확대: 전자출판의 활성화 - TGE ADONIS
CNRS는 CNRS 내의 연구공동체 전체를 위해 국내, 유럽 및 국제적 협력 하에 TGE/TGI(Très Grandes Equipements et Infrastructures de recherche)라는 연구지원팀을 운영한다. TGE/TGI를 통해 CNRS 연구원이면 누구나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최첨단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CNRS는 2004년 7월 1일 TGE/TGI 위원회(Comité TGE/ TGI)를 설립하였는데, 이것은 연구협력 프로그램과 연구공동체에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CNRS의 장기정책 결정 과정에서 CNRS 학술연구부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이다.

한편, SHS는 2007년 3월 SHS 연구공동체를 위해 TGE/TGI와는 별도로TGE(Très Grand Equipement/거대 설비) ADONIS (이하 TGE ADONIS)를 결성하였다. TGE ADONIS는 SHS 연구결과물의 출판, 재활용 및 가치평가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프랑스 연구결과물들의 국제적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요컨대, TGE ADONIS는 상호학문연계성을 특성으로 하는 SHS가 목적과 대상을 달리하는 연구들을 상호 보완하고 재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연구결과물을 출판하고 보급하는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SHS 내부의 상호학문연계성을 제대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기존의 연구결과물들을 디지털화하여 연구원들이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른 한 편으로는 국내의 연구결과물들을 디지털화함으로써 그것들에 대한 외국에서의 접근 또한 용이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문학 출판의 저조를 프랑스 인문학의 위기를 나타내는 표지로 삼는 Sophie Barluet에 따르면, 1995년 이후로 프랑스에서 다른 출판물 판매율이 100% 이상의 성장을 보였을 때조차도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출판물 성장률을 겨우 5%에 그쳤다는 것이다.⁹²⁾ 이것이야말로 인문사회과학 경시풍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이며, 인문사회과학 출판의 저조는 인문사회과학 연구결과물의 보급을 어렵게 하여 그것의 가치평가 및 재활용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프랑스 인문사회과학 발전은 악화일로를 거듭하게 되고 결국 국제 인문사회과학계에서 그 입지가 좁아지게 됨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연구결과물의 보급을 담당하는 TGE ADONIS가 연구의 동력원임을 자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구공동체의 협력을 위한 구조, 즉 인프라 구축을 공고히 함으로써 연구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그 주된 과제이다.

이상과 같은 목적으로 TGE ADONIS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연구주체들, 즉 MSH와 국립·사립 연구기관, 그리고 주요 도서관들과 주요 출판업자들 및 연구성과를 평가해 줄 전문가 패널들로 짜여진 TGE ADONIS 학술위원회(Comité scientifique-TGE ADONIS)의 긴밀한 협조 아래 출판 대상물들을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연구

92) *Edition de sciences humaines et sociales: le coeur en danger*, Sophie BARLUET, PUF, Paris, 2004, p. 18.

결과물들은 SHS의 재정지원으로 전자출판을 하게 되고, 이 출판물들은 열린 매체를 통해 누구나 접근가능한 정보로 자리 잡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연구 성과물들의 평가와 보급을 관장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지원하고 SHS 연구공동체 전체의 상호보완을 가능하게 해주어야 하는 TGE ADONIS의 소명이다.

② 연구 및 산·학 협력체제 강화

CNRS 산하 기구인 SHS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프랑스의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 연구기관들 중 가장 중요한 지위를 점한다. 왜냐하면, CNRS는 제도권 내의 연구기관들 중 가장 많은 수의 교원-연구원과 대학 내 안내소를 갖기 때문이며, SHS는 바로 이 CNRS의 산하 기구이기 때문이다. SHS는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협력 체제의 강화 및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데, MSH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협력의 대상은 이미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대학으로부터 EHESSE(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파리사회과학고등연구원), Ecole Normale Supérieure de Paris(ENS Paris/파리고등사범학교), Ecole Normale Supérieure de Lyon (ENS Lyon/리옹 고등사범학교), Collège de France⁹³⁾, EPHE (Ecole Pratique des Hautes Etudes/프랑스고등교육실천원)⁹⁴⁾와 행정부처들, 예컨대, 문화부, 외무부, 법무부 등으로 넓혀지고 있다.

93) 1530년에 설립된 프랑스 지성인들의 모임. 연구결과, 새로운 학문 등을 공개하는 발표회, 토론회, 강연회 등을 개최한다. 소르본느가 격식높은 학문적 품위를 주장하는 반면에 끌레쥬 드 프랑스는 자유와 학문을 중시하는 석학들의 모임이라는 성격에 맞게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

94) 1868년 소르본느 대학 내에 박사과정으로 설립되었다. 이 과정은 3개 분야로 구성된 전문 대학연구소이며, 3개 전문 분야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역사와 문헌, 종교학이다.

산·학 협력체제의 경우, 그 대부분은 연구실과 기업체 사이의 연구 협력체제 내지는 연구실이 기업체에 주는 자문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1,200여 개에 이르는 CNRS 전체 연구단위와 행정관리실 중 90% 가까이가 고등교육기관이나 프랑스의 다른 연구조직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러한 연구 및 산·학 협력체제의 결과로 CNRS 산하 연구실들은 2006년 말까지 총 2897개의 특허를 취득했으며, 2006년 한 해 동안 204개의 특허를 새로이 신청했다. 이 특허를 기반으로 연구실들과 기업들 사이에 677개의 라이선스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2006년 한 해 동안 체결된 기업들과의 상용화 계약 또한 1611개에 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9년 이후 CNRS 연구조직이 그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설립한 건은 320여 개에 달한다.

③ 지방분권 강화

연구 및 산·학 협력체제 강화와 더불어 SHS가 힘쓰는 것이 또한 지방분권의 강화이다. 프랑스는 중앙집권적 국가 모델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고등사범학교와 같은 그랑제꼴들이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과 발맞추어, SHS의 연구 단위들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⁹⁵⁾ 특히 산·학 협력체제를 추구하는 CNRS의 경우 지역의 특화산업들과 연계된 연구 또한 필요한데, 이는 모든 산업이 파리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뮈루즈 지역의 항공공학과 프랑스의 실리콘 벨리라 불리는 그르노블지역과의 연계를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95) [그림 47] 참조.

2007년도 SHS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SHS 연구단위의 전국적 분포는 프랑스 본토 내의 총 309개 단위 가운데 수도권 162개(파리 112개), 지방 147개로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CNRS와 그 하위 구성체인 SHS가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그 결과는 차후에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SHS가 표방하는 세 가지의 중심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세 가지 정책 중 우선 TGE ADONIS는 지식의 총화를 생산하고 전수하며 유포하여 후속세대를 양성한다는 CNRS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 협력체제 강화와 지방분권의 강화는 전방위적으로 차세대 연구원을 확보·양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특히 SHS의 파트너십 대상은 교육기관 및 다른 연구기관들, 기업 등 자국 내의 학술적·경제적 기구들뿐 아니라 국제적인 연계를 구축하는 데까지 확대되고 있다.

▶ 국제 협력의 활성화: DSA International

최근 연구직에 종사하는 프랑스의 고급 인력이 대우가 훨씬 좋은 미국으로 대거 이주하는 사태로 인해 CNRS는 각 부처 및 지역 연구기관, 유럽 및 외국 연구소들과의 긴밀한 제휴 등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다.

CNRS의 국제화 노력에 부응하여, SHS는 DSA(Directeur Scientifique Adjoint) International(국제학술분과/이하 DSA International)이라는 전담팀을 조직함으로써 국제적 연계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DSA International은 총책임자인 국제학술분과장(Patrick Navatte), 외국 소재 프랑스 센터 담당자(Christophe Goddard), 아시아 담당자(François Lachaud), 미대륙 담당자(Graciela Schneier-Madanes)와 행정직원,

그리고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구성된다. DSA International은 외무부와외의 협력뿐 아니라 외국 유수의 연구실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하여 연구의 질을 함양하고, 나아가 프랑스 학문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의 수와 해당 지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3] SHS의 국제협력프로그램

	PICS(Projets Internationaux de Coopération scientifique / 국제학술협력프로그램)	LE(I)A(Laboratoire Européen/International Associé / 유럽 및 국제 연구실협력)	GDRE(I)(Groupement De Recherche Européen/International / 유럽 및 국제 연구그룹)
유 럽	14	10	17
아프리카와 중동	1	0	7
아시아	4	1	0
아메리카	4	0	5
계	23	11	29

출처 : <http://www.cnrs.fr> (2008)

이 표에서 미루어 볼 때, 대부분의 국제협력프로그램은 여전히 유럽과의 협력에 중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 특히 유럽연합 국가와의 협력에 편중되고 있는 현 상황은 CNRS 전체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상호학문연계성 중심의 정책

SHS는 그 성격상 다양성을 기반으로 삼는다. 그런데, 이 다양성은 SHS의 연구 대상이나 연구 수행 방식을 통해 드러난다. SHS의 다양성이 갖는 힘은 우선 SHS 산하 10개의 분과를 구성하는 학과들과 그 연

구 대상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말하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인간과 사회의 과거와 그 진화에 대한 연구, 문화의 다양성이나 인간이 공간을 점유하는 양태에 대한 연구, 혹은 제도와 구성 방식에 따른 사회와 그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연구 등, 인간과 사회에 대한 연구만도 정말 다양하다. 이런 이유로, SHS의 연구영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분과 내부의 학제 간 교환이 있어 왔다. SHS의 꾸렐 부서장의 말을 빌자면, 이러한 학제 간 교환을 SHS만의 전유물이라 여긴 적은 없지만, SHS의 특성상 이러한 유형의 문제제기를 전담해 온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⁹⁶⁾ SHS가 가진 힘의 원천은 바로 인간과 사회를 연구하는 데서 비롯되는 다양성에 있으며, 또한 SHS의 모든 연구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에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개척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전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그것이 비록 학술정책이라 할지라도, 연구의 대상이나 연구의 실행에 따르는 사안들뿐 아니라 연구 외적인 제도적인 정황까지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바로 여기서 학제 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하여 정책이나 학술 프로그램의 입안 과정에서부터 학제간의 상호연관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는 학술부서 내적으로도 부서 상호적으로도 행해질 수 있다. 특히 상호학문연계성이 SHS의 특성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SHS는 학술정책, 특히 학제간 연구프로그램의 수립 단계에 참여할 것을 주장한다. 이제부터는 SHS가 추구하는 상호학문연계성이 학제 간 연구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96) 2006년 6월 19-20일, CNRS의 학술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 가운데 SHS의 학술정책의 특성 중 일부.

2-3) SHS 참여 학제 간 연구프로그램

1997년부터 시작된 CNRS의 학제 간 연구프로그램은 CNRS의 내부 연계를 강화하고 지식의 진보와 경제적·기술적 발전, 그리고 사회에서 제기되는 복잡한 문제들의 해법을 찾는 데 유용한 상호학문연계성을 전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CNRS 학술부서 중 하나인 SHS는 그 고유한 특성상 부서 내부, 즉 인문학과 사회과학 사이의 연계가 잦았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의 대두로 인해, 부과된 SHS의 임무는 단순히 부서 내부의 상호연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사실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빚어진 문제에 대한 SHS의 임무는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가져온 윤리적·사회적 파장을 분석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SHS의 활동은 오히려 인간과 사회를 염두에 두고 다른 분과와의 연계를 통해 미래지향적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프로그램을 발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연구진행 및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재정의되었다.

▶ SHS 주도 학제 간 연구프로그램

CNRS의 6개 분과와 2개 연구기관 중 SHS가 주도하는 학제 간 프로그램은 다음의 3가지이다.

1. 도시(도시와 환경/2006.11.07-2009.11.07): 현재 산업화된 지역 인구의 80%가 도시화되어 있는 반면, 산업화가 보다 덜 된 지역 인구의 도시화는 40%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지역들도 빠르게 산업화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도시와 그 환경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더불어 도시인의 삶에 대한 연구를 병행한다. 즉, 도시 영향력의 확장과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압박, 그리고 그에 따라 정치적·사회적 층위에서 제기되는 도시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다루는 것이다. 동시에 온도, 수자원, 에너지 등

의 환경 변이가 도시 시스템의 역동성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SHS 주도로 이루어지며, Mppu, EDD, ST2I가 동참한다.

2. 장수와 노령화(2007.11.02-2011.11.02): 이 프로그램은 20세기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령화 사회에 대한 다각적 연구를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생명공학으로부터 인문사회학, 그리고 첨단 공학에 이르기까지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상호학문 연계적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SHS 주도로 이루어지며, SDV, ST2I가 동참한다.

3. Mousson(서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의 계절풍)(2006.11.07- 2009. 11.07): 국제적 연계 프로그램으로 서아프리카의 계절풍인 무송(Mousson)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현지에서의 무송으로 인한 사막화, 기아, 질병을 연구하고 현지인에 대한 원조 또한 병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SHS 주도로 이루어지며, INSU, EDD가 동참한다.

▶ SHS 참여 학제 간 프로그램

SHS가 참여하는 학제 간 연구 프로그램은 다음의 10가지이다.

프로그램 명 칭	기 간	추진 분과	참여 분과	내 용
1. 아마존	2007.02.11 -2011.02.11	EDD	Mppu, INSU, Chimie, SDV, SHS, ST2I,	아마존 지역 생물의 다양성을 연구, 분석하여 생태학적 모델을 제시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과 아 울러, 아마존의 자원, 인간 및 문화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2. 물과 땅	2007.11.02 -2010.11.02	EDD	Mppu, INSU, SDV, SHS,	hydrosystem의 작용과 그것이 땅에 미치는 작용 및 양자 사이의 상호관 계를 탐구하고 현행 혹은 이후의 정 책에 비전을 제시한다. 이때의 땅이 란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인간의 사 회적 활동이 행해지는 공간, 즉 어업, 농업, 수렵, 관광 등의 상징적 공간 도 포함된다.
3. 대륙과 연안의 생태	2006.11.07 -2009.11.07	EDD	INSU, Chimie, SDV, SHS,	해안지역에서의 환경문제에 대한 생 물학적이고 생태학적인 측면뿐 아니 라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도 고려 한 연구를 수행한다.
4. 에너지	2006.11.07 -2009.11.07	ST2I	Mppu, IN2P3, INSU, Chimie, SDV, SHS, EDD,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생산, 저장, 분 배와 그것의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분석을 수행한다.
5. 생태공학	2007.04.04 -2010.04.04	EDD	INSU, Chimie, SHS, ST2I,	지역별 상황에 맞는 생태계 제어 연 구를 수행한다. 또한 생태공학의 사 회적, 경제적, 법률적, 도덕적 부분에 대한 연구도 병행한다.
6. 새로운 전염병	2006.11.07 -2009.11.07	SDV	Mppu, Chimie, SHS, EDD, ST2I,	조류 독감과 같은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그것이 사회에 미 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 연구한다.
7. 신경정보	2007.04.04 -2010.04.04	SDV	Mppu, SHS, ST2I,	신경시스템의 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이론적, 실용적 도구를 신경

프로그램 명 칭	기 간	추진 분과	참여 분과	내 용
학 (neuroin for-mati que)				학에 제공하기 위한 연구이다. 여기 에는 인지학도 포함된다.
8. 분자와 천체	2007.11.02 -2010.11.02	IN2P 3	Mppu, INSU, SHS, EDD, ST2I,	천체물리학이나 분자물리학을 통해 오랜 기간동안 신화나 종교에서 다루 어왔던 우주의 기원이나 우주의 현상 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또한, 기후와 재난에 대한 대책을 세 우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9. 원자력 에너지	2007.04.04 -2010.04.04	IN2P 3	Mppu, INSU, Chimie, SHS, EDD,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 개발에 대한 연구 및 방사능 폐기물의 처리에 관 한 방안을 연구한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
10. 커뮤니케 이션학	2007.04.04 -2010.04.04	ISCC (정보 학 연구소 , 2006 년 11월 설립)	Mppu, Chimie, SDV, SHS, EDD, ST2I,	커뮤니케이션은 인간 활동의 어느 하 나에라도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 이 없다. 인지학이나 신경학, 정치, 자연언어 혹은 예술이나 문화에 이르 기까지 거의 전방위적으로 관여된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연구 또한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학과상호 연계적인 연구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SHS 참여 학제 간 연구 프로그램 수(SHS 주도 학제 간 연구프로그램 포함)는 CNRS에서 진행하는 총 20개 학제 간 연구 프로그램 중 13개에 달한다. 현재 진행 중인 SHS 참여 학제 간 프로그램은 지난 회기, 즉 2003~2007년까지 진행·완료된 SHS 참여 학제 간 프로그램들⁹⁷⁾과 비교해볼 때, 다음과 같

97) 완료된 인문학 참여 학제 간 연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의 복잡성(2004.07.29-2007년 말/SDV 주도)
2.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2003.04.13-2007.04.13/SHS 주도)

은 특징들을 갖는다. 첫째, 이전의 프로그램들과 지금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을 비교해보면, 비슷한 주제의 연구의 경우 이전에는 SHS의 참여가 없었으나 이후 현행 프로그램에서는 SHS가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의 경우 1997년 5월 29일부터 2006년 12월 30일까지 행해진 PACE(Programme sur l'Aval du Cycle Electronucléaire) 프로그램에는 SHS가 참여하지 않았으나, 2007년 4월 4일부터 시작되어 2010년 4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새 프로그램, PACEN(Programme sur l'Aval du Cycle et l'Energie Nucléaire)에서는 SHS가 연구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2003년-2007년까지의 지난 회기 학제 간 프로그램들에서는 50%에 불과하던 SHS의 참여율이 20%나 증가하여 전체 프로그램의 70%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CNRS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제 간 연구가 단순히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 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나의 지식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까지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입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셋째, SHS 내부의 쇄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측면 또한 찾아볼 수 있다. 2006년 2월, 새로이 SHS에 부임한 꾸렐 부서장은 SHS 내부의 인적 자원을 재정비하고 연구원들에게 새로운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CNRS 내에서 미약했던 SHS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힘써왔다. 그 결

-
3. 에너지 (2002.05.23-2006.05.22/ST2I 주도)
 4. 바이오테크놀러지가 농업생태계에 미치는 충격 (2001.07.09-2006.06.30 /SDV 주도)
 5. 생물의학, 건강과 사회 (2001.07.09-2006.06.30/SDV 주도)
 6. 정보의 사회 (2001.07.09-2006.06.30/SHS 주도)
 7. 아마존 시스템 (2004.04.13-2007.12.31/EDD 주도)
 8. SHS(인문사회학)의 복잡한 체계 (2003-2007/SHS 주도)
 9. 지식, 학습, NTIC 처리 (2003.04.13-2007.04.13/SHS 주도)
 10. 지식의 역사 (2003.04.13-2007.04.13/SHS 주도)
- [총 CNRS 총 19개 학제간 연구 프로그램 중 10개]

과, SHS는 학제 간 연구에의 참여 기회 확대뿐 아니라 연구프로그램의 입안 및 학술정책의 수립에까지 참여하게 되었고, 지식의 축적과 보급, 인간과 사회의 원활한 소통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3) 지식통합 성격의 공공기관: CNRS

3-1) CNRS의 조직과 예산

▶ 설립과 연혁

프랑스 국립학술원(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이하 CNRS)은 2차 대전 발발 후 국력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알베르 르브렁(Albert Lebrun) 대통령이 1939년 10월 19일 설립했다. CNRS의 설립목적은 당시 특성화되어 있지 못했던 기초학문 분야 및 응용학문 분야의 국가 연구기관들을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여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호협력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⁹⁸⁾ 사실 CNRS 설립을 위한 포석은 1926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였던 장 페랭(Jean Perrin)이 1938년 국립학술연구기금(la Caisse nationale de la recherche scientifique)과 국립학술·발명청(l'Office national des recherches scientifiques et des inventions)의 통합을

98) 당시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는 총 9개가 있었는데 CNRS도 그 중 하나였다. 이 9개의 기관을 일컬어 EPST(Etablissement Public à caractère Scientifique et Technologique)라 하고, 그 산하 기관으로 CEMAGEF, INED, INRA, INRETS, INRIA, INSERM, IRD, LCPC, CNRS의 총 9개가 있다. 이들 기관은 모두 재정적 자율권과 윤리적 법인격을 부여받은 공공기관으로서 연구부 장관(Ministre délégué de la recherche)의 보호와 감독을 받았는데, CNRS도 마찬가지였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인문정책연구총서』 2004-05, 『선진국 인문학 진흥체계와 한국 인문정책 연구기관 운영방안』, 인문사회연구회, p.106을 참조하라.

주도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전쟁 중이던 설립 당시 핵실험과 방사능 연구, 식량 증산 등의 군사 목적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던 CNRS는 2차대전 종전 이후부터는 기초 학문 분야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그 후 1966년에 이르러 CNRS는 연구제휴협약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대학 연구실을 비롯한 다양한 국립·사립 연구소들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 인력 및 재정 부문의 취약을 보강하기 시작했다. 1970년~1980년대에는 과학기술분야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CNRS의 기능과 역할이 건강,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관련 국·공립 연구소 및 민간연구소 등과 함께 광범위한 산·학 협력체제가 구축되기에 이르렀다. 기초학문과 산업부문의 연계는 여러 학문 분야의 연계를 통한 연구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제 학문 사이의 상호연계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⁹⁹⁾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국제화·세계화의 가치를 내걸고 유럽 및 미 대륙, 아시아 등에 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해외 진출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 CNRS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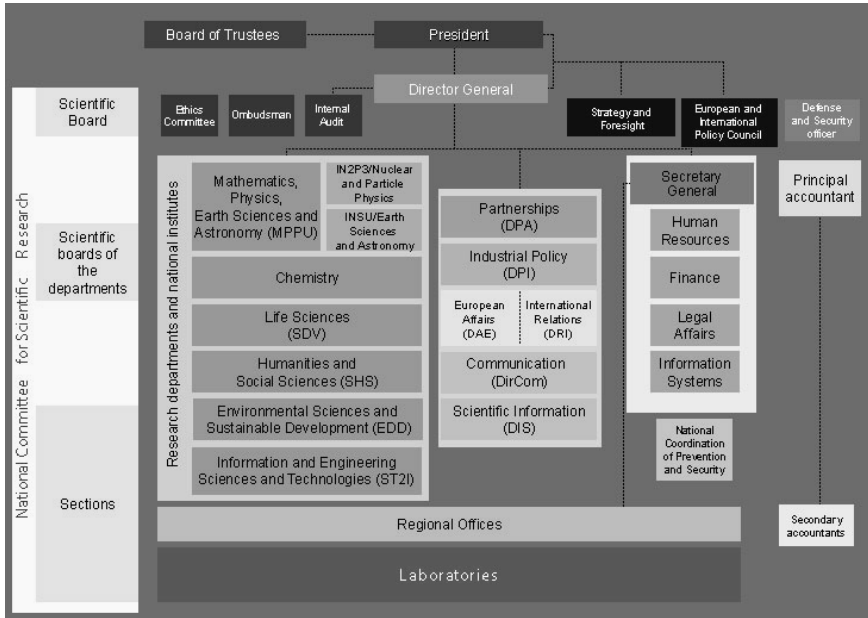
CNRS는 2008년 5월 현재 11,600여 명의 연구원과 14,400여 명에 달하는 엔지니어, 그 외에 기술자, 행정직 종사자를 포함한, 총 32,000명 이상의 인적 자원과 그들이 구성하는 1,200여 개의 연구단위 및 행정·

99) “1970년대에 들어 CNRS는 공학연구센터(the department of engineering sciences)를 설립하면서 다시금 응용학문분야로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당시 공학연구센터 설립의 목적은 기초학문의 발전과 산업부문에서의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함이었다. 이후 80년대를 거치면서 이를 통해 많은 연구업적들이 양산되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여러 학문분야의 연구를 혼합한 이른 바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y)’의 산물이었다. 또한 이 시기에 CNRS는 CNRS와 사기업 혹은 공기업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혼합 연구팀(mixed units)을 만들면서 INSERM(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Institute)과 같은 다른 연구기관 혹은 사기업체들과 협동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 같은 책, p.107

관리실로 구성된다.

CNRS 조직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8] CNRS 조직도



① 이사회

우선, CNRS는 학술원장(President/Président)과 이사회(Board of Trustees/Conseil d'administration)를 중심으로 조직된다. 이사회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문화적·경제적·사회적 요구에 따라 국가위원회 산하 학술위원회가 제시한 CNRS의 기본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채택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이사회는 또한 사회·경제 파트너, 즉 국내외의 대학들 및 기업들과의 협력관계 체결에 필수적인 원칙을 정하고 그것을 명시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고등교육·연구부 장관이 임명하는 4인과 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4인, 대학총장회의 대표 1인, 학술·기술 능력에 따라 위촉된 4인, 직능 대표 4인, 사회·경제인 대표 4인, CNRS 선출 4인, 이사회 보조 인원 5인의 총 30인으로 구성된다.

② 학술 부서

CNRS의 연구 일반은 아래의 6개 학술 부서와 2개의 국립 연구소로 재편된다.

※ 학술 부서

수학, 물리학, 지구과학, 천문 (MPPU: Mathematics, Physics, Earth Sciences and Astronomy)
화학(Chimie)
생명과학(SDV: Sciences du vivant)
인문사회학(SHS: Sciences Humaines et Sociales)
환경과 지속적 발전(EDD: Environnement et développement durable)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학(ST2I: Sciences de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ingénierie)

※ 국립 연구소 (MPPU 구성체)

국립 핵물리학·분자물리학 연구소(IN2P3)
국립 천체학 연구소(INSU)

또한 이들 각 부서 및 연구소에 속해있는 연구단위의 수는 아래와 같다.

※ 부서별 연구단위 수

소 속 부 서	연구팀 수
국립 핵물리학·분자물리학 연구소(Nuclear and Particle Physics/ IN2P3)	21
물리학과 수학(Physical Sciences and Mathematics)	150
정보통신과학(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83
기초공학(Engineering Sciences)	97
화학(Chemical Sciences)	202
천체과학(Science of the Universe)	105
생명과학(Life Sciences)	243
인문사회과학(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344
외부 학과 및 연구소(Outside departments and institutes)	11
계	1,256

[출처 : <http://www.cnrs.fr> (2008)]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CNRS에는 총 1,256개의 연구단위가 소속되어 있다. 부서별 현황을 보면 인문사회과학 분야가 344개로 단일 학술부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국가위원회(Comité national)

CNRS에서 진행되는 모든 학술연구에 대한 평가는 CNRS 산하의 연구주체들과는 별도의 기구인 국가위원회(Comité national/이하 국가위원회)가 담당한다. 국가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국가학술연구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Scientific Research/ Comité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이며, 학문의 선진화를 이루고, 그를 통한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이루는 데 일조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학문의 진보를 담보하는 모든 연구의 실행을 돕고 또한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삼는다.

국가위원회는 CNRS에 상주하는 독립된 성격의 국가기구로서 1945년 설립되었으며, 연구에 대한 조언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국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하위기관들, 즉 1개의 학술위원회(CS: Conseil Scientifique), CNRS 내의 6개 학술부서와 2개의 국립연구소를 관장하는 8개의 학술부서위원회(CSD: Conseil Scientifique de Département), 40개의 분과(section)를 담당하는 40개의 분과위원회(Section), 학제 간 연구를 담당하는 7개의 학제위원회(CID: Commission Interdisciplinaire)를 갖는다. CNRS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위원회는 학술정책의 구상 및 수립에 관여한다. 국가위원회는 각 학술단체에서 선출된 선출직 위원과 학술·경제 공동체로부터 임명된 임명직 위원들로 이루어지고, 각 구성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가능하다.

국가위원회의 하부조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술위원회(CS: Conseil Scientifique/이하 학술위원회)는 CNRS의 학술정책이 국가위원회의 정책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기 위해 CNRS 전체의 구조, 인적자원 및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기관이다. 학술위원회는 CNRS의 기본 학술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 각 학술부서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의 고른 배분뿐 아니라, 학술프로그램, 국립연구소, 공동 관리체계, 장기 계약, 국가위원회 내 관리기구나 학술부서의 설립, 학술프로그램과 국립연구소 및 연구단위의 개설과 철폐, 외부평가위원회 위원 임명 등을 심의한다. 이상과 같은 안전을 협의하기 위해 학술위원회는 매년 3회 이상 개최된다. 인적 구성은 총 30명으로 이루어지는데, CNRS 내외에서 CNRS 활동에 기여한 사람들에 의해 선출된 11명과 대외경제부 장관에 의해 임명된 3명을 포함한 재계 전문가 11명, 그리고 8인의 외국 국적의 학자들(그 중 5명이 유럽인)로 이루어

진 19명이 이에 해당한다. 학술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위원들의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술부서위원회(CSD: Conseil Scientifique de Département /이하 학술부서위원회)는 CNRS의 학술정책 가운데 각 부서 영역에 해당하는 사안을 준비하거나 실행하는 데 있어 각 부서장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는다. 또한 학술부서위원회는 영역별 프로그램에 대한 학술적 분석과 프로그램의 전개에 대한 전망을 담당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학술부서위원회는 국가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Section)가 내놓는, 학술프로그램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이용한다. 학술부서위원회는 각 부서의 연구직 임용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연구단위의 개설과 철폐에 관한 경우, 학술분과의 의견과 상위기관인 학술부서의 입장에 차이가 있을 때 학술부서위원회가 의견을 조율하게 된다. 학술부서위원회는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12명은 연구원들에 의해 선출되며 나머지 12명은 학술위원회가 추천한 6명을 포함하여 사무국장(Director General)이 추천한 인물들로 채워진다.

국가위원회 산하에는 또한 1991년 이후로 CNRS의 40개의 분과에 대응하는 40개의 분과위원회(Section/이후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이 분과위원회의 명칭이나 개수는 해당 분과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임무는 연구단위들이 수행하는 연구 활동을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분과위원회는 연구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신입연구원 채용을 위해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기도 한다.

분과위원회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14명은 국가위원회 내부에서 선출되며, 나머지 7명은 CNRS 사무국장의 의견에 따라 연구부 장관이 임명한다. 이 외에, CNRS 내의 학제 간 연구프로그램을 심의·평가하기 위한 담당 부서는 학제위원회(CID: Commissions interdisciplinaires)이며, 학제위원회는 다음의 8개 분과로 구성된다.

CID 41.	연구관리 (Gestion de la recherche)
CID 42.	건강과 사회 (Santé et société)
CID 43.	나노기술의 발달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Impacts sociaux du développement des nanotechnologies)
CID 44.	생체시스템의 모델화와 생체정보과학 (Modélisation des systèmes biologiques, bioinformatique)
CID 45.	인지, 언어, 정보처리, 자연체계와 인공체계 (Cognition, language, traitement de l'information, systèmes naturels et artificiels)
CID 46.	환경 위기와 사회 (Risques environnementaux et société)
CID 47.	천체분자학 (Astrparticules)
CID 48.	커뮤니케이션학 (Sciences de la communication)

학제위원회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14명은 국가위원회 내부에서 선출되며, 나머지 7명은 CNRS 사무국장의 의견에 따라 연구부 장관이 임명한다. 학제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개인자격 연구원의 연구 활동과 CNRS와 연계된 연구팀들의 작업을 분석·사정·평가하는 것이다. 연구팀들의 작업평가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5-7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를 담당하며, 그들의 의견은 새로운 연구팀의 결성, 연구기간의 연장 및 연구팀 해체에 반영된다.

하지만, CNRS의 연구지원은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연구단위에 지원될 뿐 개인이 행하는 연구에 대한 지원은 없다.¹⁰⁰⁾ 예산 집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학제 간 연구에 대한 지원 또한 개인연구프로그램에 대한

100) 연구자 개인 차원의 연구 지원은 ANR(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에서 이루어진다.

지원은 아니며, 연구원들이 관심에 따라 학제 간 연구팀을 별도로 구성할 때 비로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모든 연구단위는 4년마다 재평가를 받으며 그중 약 25% 정도는 재구성(재편 또는 해체)된다.

▶ CNRS 연구원

CNRS 소속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선발 시험¹⁰¹⁾을 거쳐야 한다. 선발 시험을 통해 채용된 연구원은 수습연구원 → 2급 연구담당자 → 1급 연구담당자 → 2급 연구총괄자 → 1급 연구총괄자 → 연구직 중역이 되는 수순으로 내부진급을 하게 되는데, 이와 별도로 외부에서 해당 직급으로 바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다.¹⁰²⁾ 내부 진급의 경우 지원자들 모

101) 연구원 채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CNRS는 모든 학술 영역에서 채용 시험을 통해 신입연구원들을 선발한다. 채용 시험은 매년 실시된다. 박사학위소지자와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연구원직과 연구팀장직에 응시할 수 있다(2005년 8월 2일자 행정 명령에 의거하여 나이제한은 없음).

채용 시험은 서류 심사를 통한 자격 심사와 채용 승인이라는 두 단계로 행해진다. 자격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연구원, 각 분과 구성원, 그리고 국가위원회(Comité national)의 학제 간 연구 담당부서 심의위원들로 구성된다.

- 1단계 : 자격 심사 단계는 채용 승인에 앞서 행해지는 첫 단계이다. 자격 심사는 서류 심사와 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 면접은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원직 지원자의 경우 필수사항이지만 연구팀장급 이상에 지원한 지원자의 경우 임의로 조정될 수 있다. 그 까닭은 지원자들의 면접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가위원회의 각 섹션의 몫이기 때문이다.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구성되는 1단계가 끝나면, 1차 심사의 합격자 발표가 있게 된다.

- 2단계 : 채용 승인은 1차 심사 때 제출된 서류를 재심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끝나면 최종 합격자 명단이 발표된다.

해마다 실시되는 연구원 선발 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다.

12월 초 : 지원서류 접수 개시

다음 해 1월 중순 : 지원서류 접수 마감

같은 해 2월-7월 : 3단계에 걸친 선발 시험

(3단계 : 시험 참가 허가-서류 전형-최종 합격자 명단 발표)

같은 해 10월 1일부터 근무 시작

102) 평균적으로 선발시험을 통해 연구총괄자로 진급하기까지는 연구담당자로 채용된 이후 12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간은 어떤 이들의 경우 8년으로 단

두가 시험을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높은 직급일수록 외부에서 채용되는 경우가 잦았던 CNRS는 소속 연구원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고, 그 결과 내부 진급을 원활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노에미(NOEMI : 내부자 우선 진급 심사제도)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2006년 한 해 동안 행해진 신규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4] CNRS 연구직 2006년도 신규채용 현황. <CNRS 결산 평가, 2006>.

2006년	선발 시험						계		
	외 부			내 부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계
2 급 연구총괄자	7	2	9	173	69	242	180	71	251
1 급 연구담당자	60	27	87				60	27	87
2 급 연구담당자	147	74	221				147	74	221
총계	214	103	317	1		1	387	172	559

출처 : <http://www.cnrs.fr>

일반적으로 CNRS 정규직 연구원 중 약 40%가 연구총괄자와 연구부문 중역이며, 나머지 60%가 연구담당자 층을 형성한다. 그 가운데 1급 연구총괄자나 연구부문 중역에 해당하는 인원은 총 연구원의 약 10%이다.

축될 수도 있는데, 이는 그에 해당되는 이가 신규채용 당시 1급 연구담당자급으로 바로 채용됨으로써 학술능력을 검증받는 경우이다. 2급 연구담당자의 경우 연구총괄자가 되기까지는 14년이 걸리는데, 이는 2급 연구담당자가 1급 연구담당자가 되기까지 보통 6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연구총괄자로 진급하는 데 있어 여성은 3년을 더 추가해야 한다. ; <CNRS 결산 평가, 2006>, 출처 : <http://www.cnrs.fr>

위의 표를 보면, 2급 연구총괄자의 경우 내부진급으로 이 지위에 오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따라서 여기까지는 내부자 우선 진급 심사제도의인 노에미 정책이 잘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급 연구담당자와 1급 연구담당자의 경우 모두 외부에서 채용된다는 표의 내용으로 미루어, 2급 연구담당자가 1급 연구담당자로 진급하기보다는 1급 연구담당자에 해당하는 연구원은 외부에서 선발시험을 거쳐 신규 채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연구원의 남성과 여성 비율에 있어서는 그 균형이 남성 연구원에게로 크게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두드러진다.

다음으로 CNRS 연구원(정규직)의 직급별 보수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5] *2명의 자녀 수당, 3% 주택수당 및 직무수당을 포함한
정규직 월 급여 세전 수령액]

(단위: 상단은 유로, 괄호안은 원화)

등 급	수 령 액*		
	세전 최소	세전 평균	세전 최고
연구부문 중역	5,551 (8,881,600)	5,942 (9,507,200)	6,274 (10,038,400)
1급 연구총괄자	4,014 (6,422,400)	4,974 (7,958,400)	5,551 (8,881,600)
2급 연구총괄자	3,232 (5,171,200)	3,923 (6,276,800)	4,654 (7,446,400)
1급 연구담당자	2,348 (3,756,800)	3,208 (5,132,800)	3,979 (6,366,400)
2급 연구담당자	2,226 (3,739,680)	2,471 (3,953,600)	2,751 (4,401,600)

출처: 〈2006년 CNRS 결산보고서〉, <http://www.cnrs.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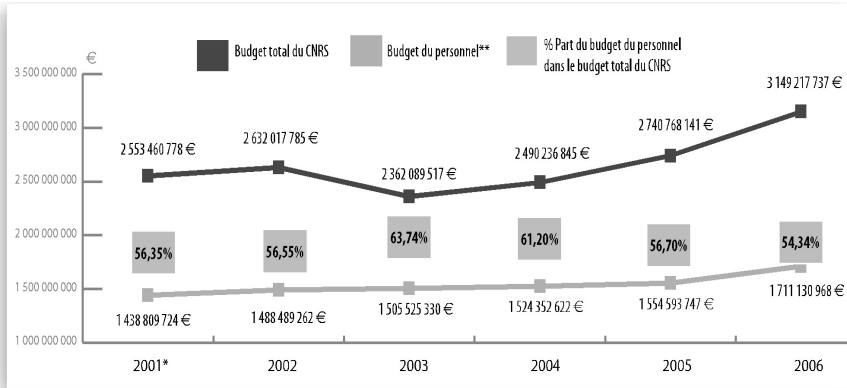
위와 같은 상근 정규직의 세전 월급에는 주택 수당, 가족 수당, 직무 수당, 출장 수당과 같은 실행 수당, 규정에 따른 분기별 성과급 등이 포함된 것이다. 한편 계약직 직원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 계산법에 의거하여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된다.

이제 CNRS 연구원의 근속년수에 대해 살펴보자. 2006년 12월 31일 실행된 조사에 따르면, CNRS 직원(연구원, 연구보조기술자, 테크니션 포함)의 평균 근속년수는 2002년 이래로 점차 짧아져서 2006년 당시 16년 2개월에 불과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연구원의 경우 이보다는 훨씬 길며, 실제로 정규직 연구원의 50.7%가 15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있다. 사실 평균 근속년수가 짧아지는 원인은 신입 연구원들의 평균연령 상승에서 찾을 수 있다. 2005년과 2006년에 행해진 조사 결과, 퇴직자 평균 연령은 8개월 앞당겨진 반면, 2005년과 2006년 실시된 신규 채용에서 신입연구원의 평균연령은 32.5세에서 33.5세로 1년이 높아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신입연구원 평균연령의 상승은 2005년 행해진 연구담당자 채용에서의 나이제한 철폐와도 관계가 있다.

특히, SHS는 연구원 평균연령이 50세 3개월로 학술부서 가운데 연구원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부서이다. SHS의 고령화는 사실 SHS 신입연구원들의 나이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실제로 SHS의 2급 연구담당자의 평균연령이 32세 10개월이고 1급 연구담당자의 평균연령이 39세 2개월로 SHS가 전체 학술부서들 가운데 신입연구원의 평균연령이 가장 높다.

▶ CNRS 예산

[그림 49] 2001년에서 2006년까지의 CNRS 예산
(2006년 12월 31일 기준)



* Montants convertis en euros.

** Y compris les dépenses de vacances et de formation.

[빨강: CNRS 총예산, 베지: 인건비예산, 노랑: CNRS 총예산에서 인건비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출처: <http://www.cnrs.fr> (2008)]

위 그림을 보면, 2001년 약 25억 5300만 유로(한화 약 4조 848억 원)이던 CNRS 총예산이 2006년에는 약 31억 4,900만 유로(한화 약 5조 384억 원)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1년~2006년에 이르기까지 인건비가 꾸준히 5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CNRS가 인력 확보 및 인력 관리에 큰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점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 다음의 논의 대상이 될 것인데, 이는 CNRS가 지금 활성화중인 정책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3-2) CNRS의 정책 기초 — 제학문의 상호연계성 증대 지향

CNRS는 고등교육·연구부(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산하의 연구기관으로서 학술적·기술적 성격의 연구를 수행하는 공공 기관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CNRS는 지식을 산출하고 그 지식을 사회에 적용·보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제 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우선 기술발전과 경제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 현대사회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학과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런 학제 간 연구의 결과로 산출된 지식은 사회에 보급되고 적용됨으로써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이유로 CNRS는 지식통합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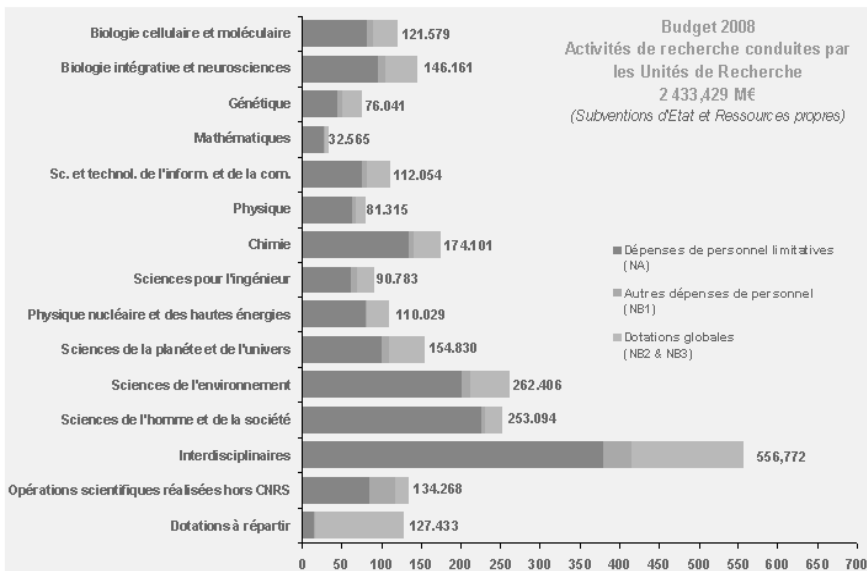
실제로 CNRS는 프랑스 내에서 혁신적인 학제 간 연구 활동을 조직하고 학과들 내에 존재하는 연구단위들을 그 연구 활동에 투입·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임을 자처한다.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하는 CNRS의 학제 간 연구프로그램은 최첨단의 연구팀들과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들을 접목시키는 한편, 이웃한 학과들 사이의 상호보완 및 목적에 따른 제학문의 상호연계성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CNRS는 학제간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학술정책과 조직구성전략을 수립하며 그것을 활성화하기에 이른다. 물론 이러한 활동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CNRS가 추진하는 학제 간 연구프로그램들은 제 학문 사이의 상호연계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감수함으로써 새로운 학문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그 가능성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프랑스의 주된 학제 간 성격의 연구 기관인 CNRS가 수행하는 연구프로그램들은 학술적·기술적·사회적 분야의 모든 연구를 담당하기에 이른다. 이는 학술연구 전반을 다 아우르는 것으로, 수학, 물리

학, 정보통신과학, 분자물리학과 고급에너지, 천체지구학, 화학, 생명공학, 인문사회학, 환경학, 기초공학 등이 CNRS 연구 분야에 해당된다.

CNRS가 학제 간 연구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은 CNRS의 예산에서 학제 간 연구프로그램에 할당되는 재정지원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도 예산에서 학제 간 연구가 차지하는 비용은 5억 5,677만 2천유로(한화 약 8,908억원)로 총 예산 24억 3,342만 9천유로(한화 약 3조 8,934억원)의 22.88%에 달한다. 다른 연구 주제들에 할당된 금액과 비교해 볼 때, 학제 간 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0] 산하 분과별 연구활동에 할당된 2008년 CNRS 예산
그래프(각 그래프는 인건비와 비품비가 합산된 것임.)



학제 간 연구(Interdisciplinaires) 예산은 밑에서 세 번째 막대, SHS 예산은 밑에서 네 번째 막대.

출처: <http://www.cnrs.fr> (2008)]

위 그림을 통해 우리는 CNRS의 학술연구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지식 통합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CNRS의 이러한 성격은 향후 CNRS의 정책의 향방을 정하는 강령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2007년 “지평 2020(Horizon 2020)”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CNRS의 강령은 CNRS 내에서 차지하는 학제 간 연구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지평 2020”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다음 3개의 큰 범주와 그 하위의 12개의 목표로 이루어진다.

〔표 26〕 CNRS의 12대 목표 〈지평 2020〉

1) CNRS 임무의 중심 - 연구	2) CNRS와 지식사회	3) 2020년, 당면 문제들에 더욱 잘 부합하는 기구, CNRS
1. 지식전선의 진일보		
2. 지구가 당면한 주요 문제들의 진단	6.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서의 CNRS	
3. 이론과 첨단과학의 연계	7. 연수의 원동력 그리고 대학의 파트너로서의 CNRS	10. 인력 확보 - CNRS 미래의 동인
4. 연구 테마에 따른 학과들의 연계	8. 사회 내의 원동력으로서의 CNRS	11. 양질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체제 구축
5. 연구에 필수적인 장비의 상호보완	9. 유럽과 국제적 원동력으로서의 CNRS	12. 전술적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의 실행

2020년까지 실행 예정인 CNRS의 12개 목표 가운데, 지식전선의 진일보, 지구가 당면한 주요 문제들의 진단, 이론과 첨단과학의 연계, 연구 테마에 따른 학과들의 연계, 연구에 필수적인 장비의 상호보완이라는 5가지 목표는 CNRS가 진행하는 모든 연구의 중심에 학제 간 연구를 위치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것은

CNRS가 제학문의 상호연계성, 즉 공동의 연구목적 수립을 통한 공동의 연구가 새로운 개념을 창출해내고, 그 결과 새로운 연구 영역을 규정하고 그 연구 영역을 확대시키리라 믿기 때문이다.

CNRS가 지식의 산출과 그것의 보급을 통해 인간과 사회를 발전시켜겠다는 목표를 가진 이상, 제학문의 상호연계를 통한, 특히 인문사회과학을 주축으로 한 지식의 진보를 선택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제학문의 상호연계를 통한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CNRS 학제 간 연구의 실행은 어떤 경로를 거치는 것일까? 우선 공동의 연구를 위한 방향 설정, 즉 아젠다의 결정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이는 국가위원회와 그 산하 기구들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된 아젠다는 CNRS 연구원들에게 공고되고, 이 아젠다를 바탕으로 각 연구팀을 결성한 후 연구팀 내부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구계획서를 담당자에게 보낸다. 물론 학제 간 연구의 경우, 연구팀을 구성하고 있는 소속 연구원들 사이의 원활한 연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지원된 연구 계획서들 중 몇몇이 다시 국가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채택되고 연구비를 지원받아 실행에 옮겨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연구팀들의 재구성 및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막상 연구가 실행에 옮겨지게 되면, 그 연구는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게 된다. 이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연구실행의 과정과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 또한 국가위원회에 의해 행해진다.

이상의 논의로 미루어, “지평 2020”의 12개 목표 가운데 마지막 세 개의 목표, 즉 인력 확보, 양질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체제 구축, 전술적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의 실행은 연구의 활성화와 그 평가의 적법함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학제 간 연구 유도 정책 이외에도 CNRS는 지방분권과 세계화에 역점을 둔 다음의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다.

3-3) CNRS의 지방분권 정책

중앙집권적 국가 모델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프랑스 교육·연구정책 일반이 그 산하기구들을 지방으로 이주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SHS의 지방분권 강화 부분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런 노력은 CNRS 차원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예컨대, CNRS는 1982년 개혁안에서 연구기관으로서 CNRS 조직의 비전, 목표, 조직에 대한 이해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1) 실험실과 연구 집단의 개혁, 2) 국가적 시각과 지역적 역동성의 조화, 3) 개혁안에 따른 기구 개편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내부 조직의 개혁을 위한 과제로 첫째, 현재의 분야별 연구로 되어 있는 조직을 변경할 것, 둘째, 중앙집권화된 조직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역별 활성화를 추진할 것,¹⁰³⁾ 셋째, 지역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 넷째, 부서장에게 예산관리 재량권을 부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안의 실행으로 지방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그 예로 지역대표부 설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8년 5월 알자스 대표부(10) 신설에 따라 2004년 18개였던 CNRS의 지역대표부가 현재 19개로 늘어났다는 사실은 CNRS 차원의 지방분권화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하겠다.

103) CNRS의 지방분권 활성화 정책은 지방에 전권을 부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지방의 역동성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는 국가적 시각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CNRS 개혁자들은 ‘국가 연구기관은 분명히 그의 활동전체에 국가적 시각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확신은 지역적 역동성의 중요성보다 앞서는 것이며 어느 것들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CNRS의 국가지도부의 위원은 각 지역간 장들은 지역 내 국가의 장이 될 것이고, 국가의 관점을 지역에 전달하는 사명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특히, CNRS의 지도부는 사무총국장 곁에 CNRS의 학술정책을 구성하고 그것을 실현하는데 책임을 가진 학문책임자이다’라고 함으로써 CNRS가 프랑스의 국가 연구를 주도해 나가는 연구기관임을 확신하고 있다.” 『인문정책연구총서』 2006-04, 『외국에서의 인문학의 학제 간 연구·교육 및 인문진흥관련 법 사례 조사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p. 138-139.

이 지역대표부들은 중앙과 지부 사이의 연계뿐 아니라 연구실들 간, 그리고 지역 내의 파트너들과 자국 내의 공동체들 간의 연계를 공고히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대표부들이 지역에 고유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 경제 공동체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표 27〕 CNRS 지역 대표부. 2008년 현재 총 19개, 괄호 안의 숫자는 지역 대표부의 고유 번호

일드프랑스 지역	파리(Paris) A(01) 파리(Paris) B(02) 일드프랑스(Ile-de-France) 동쪽(03) 일드프랑스(Ile-de-France) 남쪽(04) 일드프랑스(Ile-de-France) 서쪽과 북쪽(05) 파리 미셸-앙쥬(Paris Michel-Ange)(16)
프랑스 동부	중동부(06) 알자스(Alsace)(10)
프랑스 서북부	쌍트르(Centre)와 뿌아뚜-샤랑뜨(Poitou-Charente)(08) 브르타뉴(Bretagne)와 뻬이 드 라 르와르(Pays de la Loire)(17) 노르(Nord), 빠 드 칼레(Pas de Calais) 그리고 뻬까르디(Picardie)(18) 노르망디(Normandie)(19)
프랑스 남동부	론(Rhône)과 오베르뉴(Auvergne)(07) 알프스(Alpes)(11) 프로방스(Provence)와 코르시카(Corse)(12) 코따쥐르(Côte-d'Azur)(20)
프랑스 남서부	랑그독 루씨용(Languedoc-Roussillon)(13) 미디 뻬레네(Midi-Pyrénées)(14) 아키텐 리무쟁(Aquitaine-Limousin)(15)

출처: CNRS 결산 평가 2006, <http://www.cnrs.fr> (2008)

지역대표부뿐 아니라 CNRS 직원의 지역별 분포도를 통해서도 CNRS 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활성화 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실제로 2006년 보고

된 바에 따르면, CNRS 직원 전체의 79.2%(연구원은 81.1%, 연구지원기술자는 77.6%)가 전체 24개 지역(해외 프랑스 자치령과 외국 포함) 가운데 6개 지역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6개 지역 중에서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다(다음 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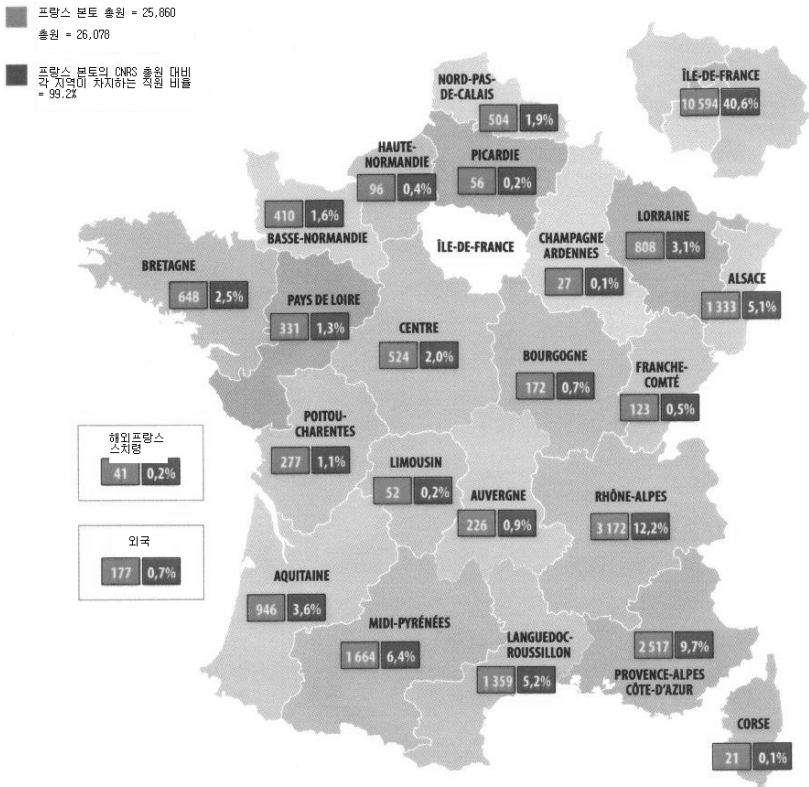
[표 28] CNRS 직원의 지역별 분포도

수도권: 일드프랑스(Ile-de-France)	40.6%
론알프(Rhône-Alpes)	12.2%
프로방스-알프-코다쥐르(Provence-Alpes-Côte-d'Azur)	9.7%
미디-피레네(Midi-Pyrénées)	6.4%
랑그독-루시옹(Languedoc-Roussillon)	5.2%
알자스(Alsace)	5.1%

출처 : CNRS 결산 평가 2006, <http://www.cnrs.fr> (2008)

결국, 나머지 18개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은 20.8%에 불과하다. 하지만 CNRS의 분권화 정책에 의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아래 그림 참조],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지방 근무자 비율이 5.5% 증가했다는 것으로 뒷받침된다.

[그림 51] CNRS 직원의 지역별 인원수 및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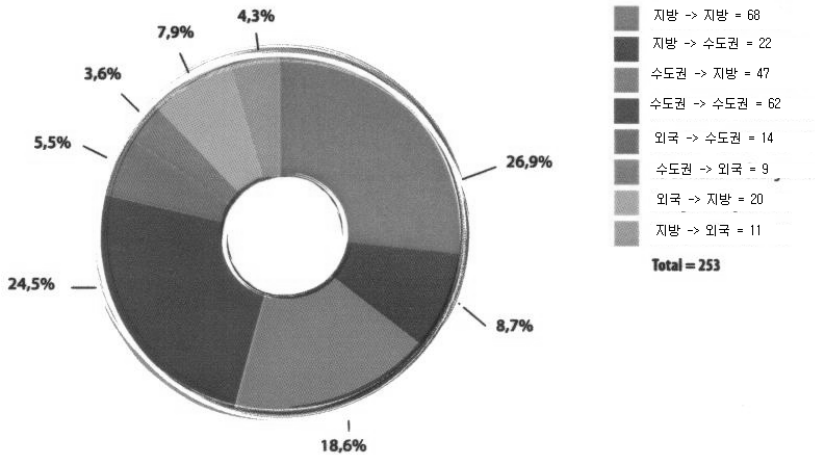
Flash

본토내 수도권(Île-de-France) 이외 지역의 비중

1996	53.5%
2001	56.6%
2006	59.0%

뿐만 아니라, 2006년 행해진 총 전근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전근과 지방에서 지방으로의 전근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볼 때에도 지방 근무자 비율의 증가 추세는 확연히 드러난다.

〔그림 52〕 CNRS 직원 전근의 성격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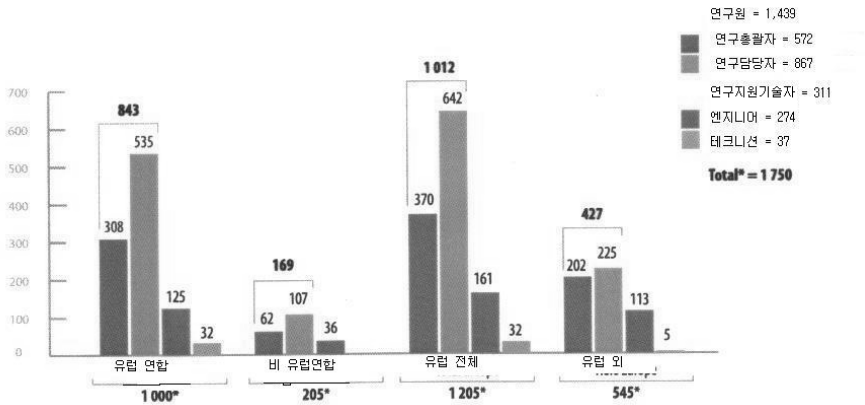
3-4) 세계화 정책

최근 미국으로의 두뇌유출로 인해 잔뜩 긴장한 CNRS가 각 부처 및 지역 연구기관, 유럽 및 외국의 연구소들과의 긴밀한 제휴 등을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SHS의 국제 협력의 활성화 부분에서 살펴본 바 있다. 실제로 CNRS는 세계화 정책의 일환으로 조직 전체 차원에서 해마다 5,000여 명의 외국인 연구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2005년 현재, 외국인 연구원 중 1,714 명은 CNRS의 세계화를 골자로 하는 “Projet pour le CNRS(CNRS 기획)”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정해진 외국인 연구원 자격이며, 이들 외국 국적 연구원 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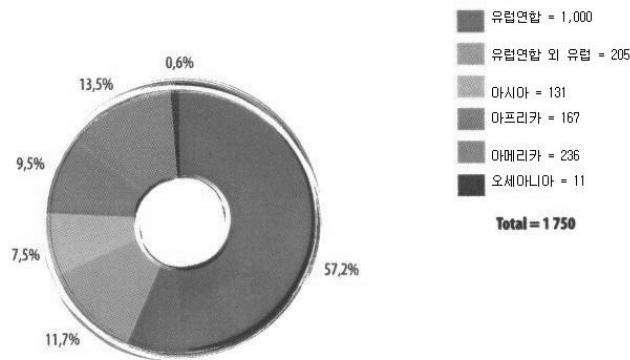
데 정규직 연구원의 수가 1,340명에 달한다. 그러나 당시 외국 국적 정규직 연구원의 3분의 2가 유럽연합국 출신이었으며, 또한 지난 2년간 행해진 신규채용에서 정규직 연구원의 22%를 차지한 외국인 연구원들 중 3분의 2가 유럽인이었다는 사실은 외국인 연구원 영입을 통한 CNRS의 국제화 노력이 실상 유럽과의 협력에 치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정규직 직원 가운데 외국 국적 직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더욱 잘 알아볼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외국인 직원은 CNRS 총 연구원의 12.4%와 연구에서의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는 연구지원기술자 총원의 2.2%를 차지하는데, [그림 53]과 [그림 54]를 통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기술자 집단에 비해 연구원 집단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 다음으로 유럽연합국 출신의 직원들이 과반수를 넘어선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 두 특징은 모두 유럽학술공동체의 조성을 향한 노력과 CNRS가 채택한 “연구원 유럽 헌장”(Charte européenne du Chercher) 덕택인데, 이를 통해 유럽연합국 사이에서 연구원들의 이동이 매우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10년 전만해도 40%에 불과했던 유럽연합 국가 출신의 연구원들이 2006년 현재 가장 많은 수(57.1%)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그림 53]과 [그림 54] 참조).

[그림 53] 외국 국적 정규직 직원 일람표
(2006년 12월 31일자 집계)



[그림 54] 대륙별 외국인 직원 수(2006년 12월 31일자 집계)



외국 국적 연구원들의 영입 외에도, CNRS는 산하에 “유럽 및 국제관계국(DREI: Direction des relations Européennes et Internationales /이하 DREI)”을 조직하여 대외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DREI는 CNRS의 해외 사무소 및 제휴 연구기관에 본부의 업무 지침을 전달

하고, CNRS 해외 사무소 및 제휴기관들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특허 제출 등 프랑스의 이익증진 방안을 강구하는 기관이다. 이 외에도 DREI는 CNRS 관련 국제 포럼과 콜로키움(colloque)을 개최하고, 각종 연구 성과물의 해외 출판을 주선하는 일을 담당한다. 또한 CNRS의 해외사업에 대한 예산 결산과 해외 연구 인력의 원활한 수급 업무도 겸한다.

특히 CNRS는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 마련된 학술적 전략에 의거하여, 주요 국가들에 대표부를 두고 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외국 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유럽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을 목표로 하는 CNRS는 유럽 국가들과 다양한 협동연구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필두로 세계 60개국과 85개의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밖에 학술 협력에 의거한 310개의 국제 협력 프로그램, 범 유럽 및 국제적으로 연합된 91개의 연구실과 92개의 연구 단체, 14개에 달하는 국제 규모의 협동과정이 있으며, 이런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여 외국인 연구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밖에서 행해지는 CNRS 연구과제의 70%가 유럽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CNRS의 국제적 학술협력이 여전히 유럽에 편중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겠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CNRS는 브뤼셀, 요하네스버그, 모스크바, 북경, 칠레의 산티아고, 동경, 워싱턴과 하노이에 대표부를 두어 국제적 연계망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CNRS의 대외협력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의 협력 현황 (2005년 현재)〉

예 산	10억 유로(한화로는 약 1조 6,000억원)
해외대표부사무소(8곳)	브뤼셀, 하노이, 유하네스버그, 모스크바, 북경, 산티아고(칠레), 도쿄(일본과 한국 담당), 워싱턴
인력수급현황	해외 초빙연구자가 연간 5,000명(박사과정학생, 포스트닥터, 초빙연구원)
대의연구협력	유럽 및 국제 연구실험력(LE(I)A: Laboratoire Européen/International Associé) 54개, 유럽 및 국제 연구그룹(GDRE(I): Groupement De Recherche Européen/International) 56개, 국제학술협력프로그램(PICS: Projets Internationaux de Coopération scientifique) 316개 ¹⁰⁴⁾
제휴연구기관	외국의 80개 연구소와 제휴*

* 2005년 우리나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파스퇴르연구소와 제휴 협정을 맺음

CNRS의 해외대표부사무소는 CNRS 산하 연구기관들과 주재 국가의 연구기관들 간의 협력을 추진하고, 주재 국가의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삼는다. 특히, CNRS 연구결과물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CNRS와 주재 국가의 주요 연구 기관 사이의 연구협력을 강화하고, CNRS의 연구결과물의 재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CNRS가 외국과의 협력 하에 취득한 지적 재산권 보호에 힘쓴다.

이상과 같은 임무를 위해 해외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업무를 수행한다. CNRS의 해외대표부사무소는 주재 국가의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주재 국가의 학술연구에 대한 동향 보고서를

104) [표 23]과 비교해보면, SHS가 국제협력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SHS 참여 프로그램 수/총 프로그램 수)

유럽 및 국제 연구실험력(LE(I)A): 11/54

유럽 및 국제 연구그룹(GDRE(I)): 29/56

국제학술협력프로그램(PICS): 23/316

CNRS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국가 연구기관을 직접 돌리볼 수 있도록 CNRS 산하 연구기관 책임자들의 방문을 주선한다. 또한 CNRS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주재국의 유관 기관에 CNRS의 가치와 역할을 알리는 한편, 주재국의 신진연구원들에게 홍보를 통해 CNRS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일을 한다.

2. 외국의 학문지원정책: 분석과 시사점

지금까지 2장 1절에서 살펴본 외국의 인문학 진흥과 학문 분야 간 상호연계 증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국가별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2.1 일본

일본의 경우는 1980년대의 나카소네 정권 시절부터 2000년대의 고이즈미 정권 시절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가 압도하는 고등교육 개혁이 단행되었고, 이와 더불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이라는 국가주의적 고등교육정책이 과학기술진흥에 편중됨에 따라, 2000년대 들어 인문사회 분야의 대학원생 진학률이 급감하는 등 인문사회 분야의 위기가 표면화되었다. 이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출범한 것이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심의회(이하 '인사특위'로 약칭)이다. 인사특위는 2002년 5월까지 약 1년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인문사회과학의 진흥에 대하여-21세기에 기대되는 역할에 부응하기 위한 당면의 진흥방책』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한 후 해산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2003년 10월부터 2008년 현재까지 일본학술진흥회가 지원하고 있는 인문사회과학진흥프

로젝트(이하 ‘인사프로젝트’로 약칭)의 모태가 된다.

인사프로젝트는 ‘21세기의 인문사회과학의 사명’ ‘일본의 인문사회과학의 현상과 과제’ ‘인문사회과학의 진흥방책’으로 구성된 인사특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사업인 만큼, 인문사회과학의 세분화된 분과 체계를 극복하고 통합적이면서도 실천적인 연구를 지향하며, 구체적으로 협동 연구, 연구자 육성, 국제 교류, 연구기반 정비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인사프로젝트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으로는 과제설정형 연구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연구¹⁰⁵⁾인데, 이는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통합적, 실천적 성격의 연구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영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통합적 인사프로젝트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특히 인사프로젝트에 투자되는 예산의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2008년 현재 일본학술진흥회의 예산은 2,406억엔(한화 약 3조 6,090억원)인 데 비해, 인사프로젝트에 배분되는 예산은 1.1억엔(한화 약 16억 5천만원)에 불과하다. 이 예산은 진흥회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¹⁰⁶⁾인 데 반해, 일본의 학술지원정책과 예산은 여전히 과학기술 분야에 편중되고 있다. 따라서 인사프로젝트가 지식기반사회라는 새 시대의 요청에 맞는 인문학의 변화와 통합 학문 체계에 기여하는 학문 간 상호연계에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인문학의 진흥 방향을 올바르게 수립하고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일본의 상황은 인문학을 통합 학문적으로 상호연계하는 데 주축이 될 수 있는 인문정책기구의 제도적 설립이 필요함에

105) 인사프로젝트의 5개 연구영역 및 세부주제에 대해서는 2장 3절 3-2) 참고.

106) 참고로 영국의 경우 인문사회과학 지원 예산은 AHRC(3%), ESRC(5%)를 합쳐 8%(2005-06년도 기준)에 달하고, 프랑스의 경우 SHS가 총 예산의 10%를 꾸준히 상회하는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한국의 경우 학술진흥재단의 2008년도 예산(1조 425억 6,900만원)에서 인문사회학술조성사업비(1,538억 4천만원)가 차지하는 비중도 14%를 상회한다.

대한 강력한 반증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입증된다.

2.2 영국

영국의 경우는 1980년대에 단행된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이 인문학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고, 또한 90년대 들어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표면화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우와 흥미로운 시간적 일치를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와 다른 점은, 영국 정부가 인문학의 위기를 단순히 한 학문 분야의 쇠퇴 차원이 아니라 학문적 균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인문학의 문제 상황을 단독으로 접근하지 않고 통합 학문적 각도에서 접근했다는 점이다. 이는 인문학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한 영국 정부의 노력이 AHRB의 설립(1998년)에 그치지 않고 RCUK의 7번째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AHRC로 확대(2005년)되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AHRC 이외의 6개 연구회들은 1994년에 설립된 6개의 연구회¹⁰⁷⁾에 이어 RCUK의 7번째 산하기관이 되었는데, RCUK는 2001년에 실시된 6개 연구회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영국의 학문 분야들의 연구를 각각 지원하는 연구회들에게 향후 요청되는 공동 연구의 필요성을 전망하면서, 연구회들의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학문적 통합을 견인하기 위한 조직으로 2002년 5월에 설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RCUK는 2007년 7개의 연구회들이 공동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도출한 6개의 통합연구영역을 발표했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¹⁰⁸⁾

107) Biotechno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BBSRC),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ESRC),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EPSRC), Medical Research Council (MRC), 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 (NERC), Particle Physics and Astronomy Research Council (PPARC)

통합연구영역	참여 연구회
에너지	EPSRC BBSRC ESRC NERC STFC
환경 변화 속에 살아가기	7개 연구회 전체
전세계적 불확실성: 변화하는 세계 속의 만인을 위한 안보	7개 연구회 전체
노화: 건강하고 행복한 삶	7개 연구회 전체
디지털 경제	EPSRC, AHRC, ESRC, MRC
나노과학의 공학적 응용	EPSRC, BBSRC, ESRC, MRC, NERC, STFC

그런데 이렇게 기존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통합적 정책은 RCUK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AHRC 내부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AHRC는 연구지원위원회(Research Committee) 아래 전략적자문그룹(Strategic Advisory Board: 이하 ‘SAG’로 약칭)을 두고, 전략적연구선도프로그램¹⁰⁹⁾(Strategic Research Initiative: 이하 ‘SRI’로 약칭)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SRI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08) 이 6개 통합연구영역에 대한 상세 설명은 2장 1절 3-2) 참고.

109) SRI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2장 1절 2-2) 참고.

SRI 프로그램
Beyond Text: Performances, Sounds, Voices, Images and Objects (2007-12)
Designing for the 21st Century (2005-09)
Diasporas, Migration and Identities (2005-09)
Digital Economy Programme (2009-13 예정)
Global Uncertainties (2009 예정)
ICT in and Arts and Humanities Research (2003-08)
Landscape and Environment (2005-10)
Museums and Galleries Research
New Dynamics of Ageing (2009-15 예정)
Religion and Society (2007-12)
Science and Heritage (2007-11)

위와 같은 SRI에는 AHRC가 지원하는 인문학과 예술의 여러 분과들이 상호연계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른 RC들과도 연계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쟁점으로 떠오른 문제와 관련해서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또한 학계뿐 아니라 현실에서 활용되는 인문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이는 AHRC의 지원이 전통적인 인문학 연구의 방식, 즉 개인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개별 연구를 지원하는 방식과 더불어 새로운 연구의 방식, 즉 학제간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상향식 개별 연구 지원방식은 연구자 개개인의 관심사를 존중하고 자발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 방식으로 는 개별 연구자의 전공 분야를 뛰어넘는 학제 간 연구나 통합적 연구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SAG가 제시하는 SRI의 통합적 연구영역들은 개별 연구자들에게 그 영역에 해당되는 융합적 연구주제를 개발하고 탐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견인 장치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2.3 프랑스

영국의 RCUK와 AHRC과 형식상 유사해 보이는 프랑스의 조직이 CNRS와 SHS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점은 영국의 두 기구가 전적으로 학문지원기구인 데 반해, 프랑스의 두 기구는 자체 연구원을 확보하고 있는 학문기구라는 점에 있다. 2차대전의 도입부였던 1939년 10월에 설립된 CNRS는 처음부터 기초학문 및 응용 학문 분야의 국가 연구기관들을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상호협력 연구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프랑스의 경우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관련하여 논의되기 시작한 통합적인 학문 연구를 일찍이 20세기 중엽부터 선구적으로 시작한 사례로 받아들일 수 있다.

CNRS의 연구조직은 SHS를 포함, 총 6개의 연구부¹¹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연구부들 산하에 총 40개의 연구분과들이 있으며, 이 가운데 31-40까지의 분과가 인문사회분과, 즉 SHS에 해당된다. CNRS의 6개 연구부도 RCUK의 7개 연구회들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처럼 통합적 연구를 공동 수행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간략한 목록은 다음과 같다.¹¹¹⁾

프로그램 명칭	기 간	추진 분과	참여 분과
1. 도시	2006.11.07 -2009.11.07	SHS	Mppu, EDD, ST21
2. 장수와 노령화	2007.11.02 -2011.11.02	SHS	SDV, ST21

110) SHS 이외 다섯 개의 연구부는 MPPU(수학, 물리학, 지구과학, 천문학), Chimie(화학), SDV(생명과학), EDD(환경과 지속적 발전), ST21(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학)이다.

111) 이 프로그램들의 자세한 내용은 2장 2절 2-3) 참고.

프로그램 명칭	기 간	추진 분과	참여 분과
3. 계절풍	2006.11.07 -2009.11.07	SHS	INSU, EDD
4. 아마존	2007.02.11 -2011.02.11	EDD	Mppu, INSU, Chimie, SDV, SHS, ST2I
5. 물과 땅	2007.11.02 -2010.11.02	EDD	Mppu, INSU, SDV, SHS,
6. 대륙과 연안의 생태	2006.11.07 -2009.11.07	EDD	INSU, Chimie, SDV, SHS,
7. 에너지	2006.11.07 -2009.11.07	ST2I	Mppu, IN2P3, INSU, Chimie, SDV, SHS, EDD,
8. 생태공학	2007.04.04 -2010.04.04	EDD	INSU, Chimie, SHS, ST2I,
9. 새로운 전염병	2006.11.07 -2009.11.07	SDV	Mppu, Chimie, SHS, EDD, ST2I,
10. 신경정보학 (neuroinfor-matique)	2007.04.04 -2010.04.04	SDV	Mppu, SHS, ST2I,
11. 분자와 천체	2007.11.02 -2010.11.02	IN2P3	Mppu, INSU, SHS, EDD, ST2I,
12. 원자력 에너지	2007.04.04 -2010.04.04	IN2P3	Mppu, INSU, Chimie, SHS, EDD,
13. 커뮤니케이션학	2007.04.04 -2010.04.04	ISCC (정보학 연구소, 2006년 11월 설립)	Mppu, Chimie, SDV, SHS, EDD, ST2I,

이러한 통합 연구의 노력과 더불어 프랑스의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제도가 인문학의 집(MSH)이다. MSH는 전통적으로 병존해온 정부의 인문학 연구기관 SHS와 대학의 인문학 연구를 결합시키는 동시에 지방 연구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2008년 현재

CNRS의 SHS는 전국적으로 22개의 MSH를 설치하고 중앙 SHS에서 파견되는 연구원들과 지방 대학의 인문학 연구자들을 결합시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된 인문학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취업 박사인력의 적체가 극심한 한국의 현실에서 커다란 시사점을 주는 프랑스의 사례는 CNRS가 모든 학술 영역에서 매년 채용 시험을 통해 박사학위소지자와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국적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연구원으로 선발한다는 것이다. 2008년 5월 현재 CNRS에 채용¹¹²⁾되어 있는 연구원 수는 11,600명이며, 이 연구원들은 수습연구원 → 2급 연구담당자 → 1급 연구담당자 → 2급 연구총괄자 → 1급 연구총괄자 → 연구직 중역의 순으로 진급을 하게 된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연구직의 최하급인 2급 연구담당자는 월 급여 세전 평균 수령액으로 2,471유로(한화 약 390만원)를 받으며, 연구직의 최상급인 연구부문 중역의 월급여 세전 평균 수령액은 5,942유로(한화 약 950만원)이다. 2006년에 실시된 CNRS 자체 조사에 의하면, 정규직 연구원의 50.7%가 15년 이상 장기근속중이고, 2005년의 나이 제한 철폐 조치 이후 신입 연구원의 평균연령은 32.5세에서 33.5세로 한 살 더 높아졌다.

112) CNRS의 연구원 채용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장 2절 3-1) 참고.

제4장 인문학 진흥과 학문 분야 간 상호연계 정책 개선 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해외 사례들, 즉 영국, 프랑스, 일본의 경우를 분석·종합할 때, 위기에 처한 인문학을 진흥하고 이를 통해 지식기반사회에 필수적인 학문 분야간 상호연계를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1) 우선 인문학의 연구역량을 결집·활용하기 위한 학문기구의 설립이 필요불가결하다. 실제로 2002년부터 한국에서 유일하게 인문정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온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인문정책연구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인문정책을 담당하는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¹¹³⁾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한국의 현실은 이제껏 그러한 제도적 기구의 설립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21세기로 진입한 지 이미 10여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인문정책기구의 설립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긴급사항이다(인문정책기구의 설립에 관해서는 [2007-01] 홍성걸 외, 『인문정책연구기관 설립추진을 위한 실행로드맵』 참고).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특별위원회로 설치되어 있는 인문정책연구위원회를 인문정책연구

113) 인문정책연구위원회에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수행한 정책연구사업의 성과로 나온 84개의 인문정책연구 보고서 가운데에서 인문정책 전담 기구의 설립과 직접 관련된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2004-01] 박성수 외, 『21세기 인문지식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식공유체계의 재정립 및 활성화 방안』, [2004-05] 전영평 외, 『선진국 인문학 진흥체계와 한국 인문정책 연구기관 운영방안』, [2005-02] 안삼환 외, 『인문학 활용 국가발전전략 연구』, [2007-01] 홍성걸 외, 『인문정책연구기관 설립추진을 위한 실행로드맵』.

원으로 독립,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 2) 그러나 인문정책기구의 설립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해외의 사례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식기반사회에서 인문학은 제반 학문 분야들과 정책적으로 상호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과학기술 부문에만 배타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R&D)가 인문·사회 분야를 포함한 학문의 전 영역에 배분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개편 혹은 확대되어야 한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주력기간산업기술><거대기술><국가주도기술><첨단융복합기술><사회기반기술> 전문위원회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문·사회>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국가 R&D 예산의 운용 현황 및 국과위 개편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부록 1> 참고).
- 3) 최근 개편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위원 구성에 학문 분야별 안배가 필요하다. 현재 15인의 민간 자문위원 가운데 대학과 출연연을 대변하는 위원은 총 9인인데, 이 가운데 3인의 총장과 1인의 대학원장을 제외하고 남는 5인의 학계 인사 가운데 4인이 과학기술분야 위원들이며 마지막 1인은 교육학 전공의 위원이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기능이 대통령에게 학문과 교육에 관한 자문을 하는 것이고, 학문과 교육에 대한 오늘날의 요청이 융합 학문 및 통합 교육임을 상기할 때, 이런 인적 구성으로는 21세기의 시대적 요청에 충실한 자문을 대통령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인문·사회 분야의 위원이 적어도 1인씩은 포함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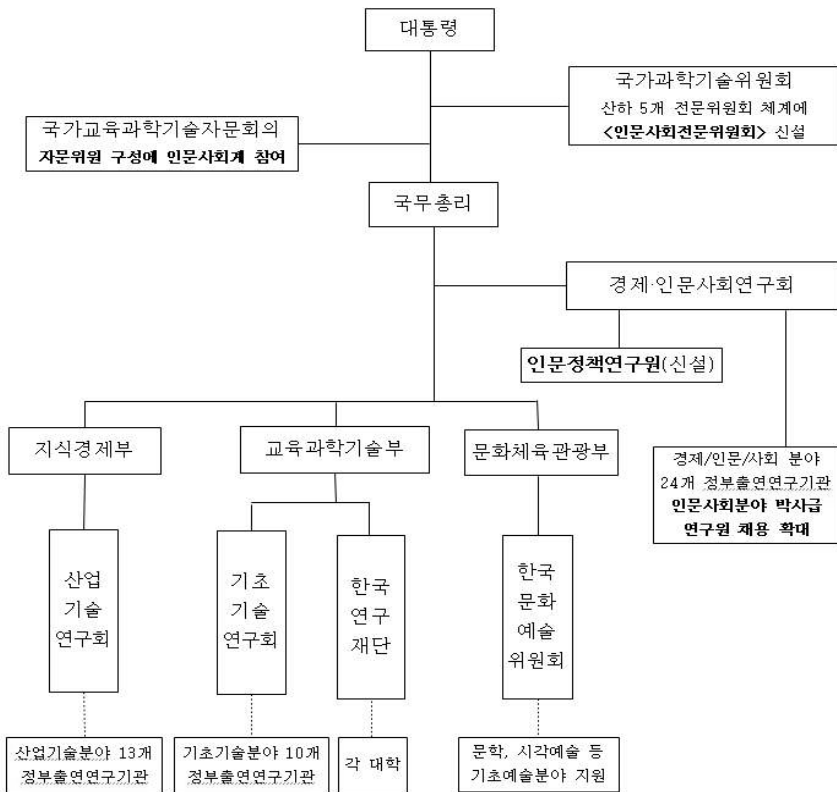
4)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에서 제안한 인문정책연구위원회의 인문 정책연구원으로의 독립, 발전 방안과는 별도로, 현재 존재하는 산하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 구성을 21세기가 요구하는 통합 연구형으로 변화시켜나가야 한다. 2007년 8월 현재 경인연 산하 출연연에는 연구책임자급 이상의 박사 연구위원이 총 1,162명 있는데, 이들의 전공 분포를 살펴보면 인문학 전공자는 교육개발원과 교육과정평가원, 단 두 곳에 19명이 고작으로, 1.6%에 불과하다. 반면에 경제학 전공은 414명으로, 35.6%를 차지하며, 경영학과 무역학 같은 경제학 유관 전공(45명)을 더하면 459명으로 연구책임자급 이상 전체 박사수의 40%를 육박한다(〈부록 2〉참고). 이러한 전공 분포는 경제개발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가 정부출연연의 제1 임무였던 20세기 산업사회의 연구수요를 반영한다. 그러나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복합적으로 통합해내는 연구를 요구하며, 3장의 해외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새로운 연구 수요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결합 없이는 의미있는 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 프랑스의 SHS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변화를 위한 좋은 사례가 된다. CNRS 산하에서 인문사회분야의 연구를 추진, 지원하는 SHS는 2002년 현재, SHS 산하의 10개 주제별 연구 영역에서 2,160명의 연구원을 채용하고 있었으며, 10개의 연구 영역이 인문학과 사회과학 나아가 예술학까지를 아우름에 따라 연구원들의 전공도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인 양상을 나타냈다.¹¹⁴⁾ 이렇게 인문·사회 분야의 박사학위자들을 경인연 산하 출연연에서 채용하는 것은 경인연의 이름을 실체화하고 그 기능을 21세기의 통합적 연구를 향해 조정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

114) SHS의 10개 연구 영역과 SHS 소속 연구원들의 전공 분포에 대해서는 3장의 2절, 특히 2-1) 참고.

의적 대학개혁 이후 실질적 유희인력으로 낭비되고 있는 인문·사회 분야의 고급 인력자산을 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이 보고서가 제안한 정책 제안을 도표로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5] 학문의 균형 발전과 통합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한국의 학문·예술 기구 개편 제안도



<부록 1>

한국 R&D 예산의 운용 현황 및 국과위 개편의 필요성

한국의 연구개발비(R&D)는 민간을 포함하여 GDP 대비 3.23%로 세계 5위¹¹⁵⁾ 수준이며, 2008년 현재 연구개발비의 예산 및 기금 규모는 10조 8,423억원이다. 10조원이 넘는 연구개발비란 대단히 큰 규모로, 이러한 규모에 의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중국, 이탈리아 이어 세계에서 8번째로 연구개발비 10조원 국가에 진입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연구개발비의 규모만을 따진다면, 중국 이외에 세계 유수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겨루게 되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 큰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는 대목이다.

연구개발비는 크게 기초연구와 개발연구로 나뉘어 투자되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기초연구 비중은 2배 이상이 낮고, 개발연구의 비중은 5배에서 17배가량이나 높다.

〔표 1〕 한국, 미국, 영국 R&D 예산의 기초연구 및 개발연구 비중

	한국('06)	미국('05)	영국('05)
기초연구 예산비중(국방제외)	24%	46%	43%
개발연구 예산비중(국방제외)	50.2%	11.1%	3.1%

출처: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

115) 참고로 1위에서 4위까지의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06, 4.65%), 스웨덴('06, 3.73%), 핀란드('06, 3.45%), 일본('05, 3.39%).

이는 정부와 민간 R&D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고, 또한 양 부문 R&D 사이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의 R&D 예산은 정부예산 증가율 7.5%보다 높은 10.72%로 증가했으며, 민간 R&D 투자율은 이를 훨씬 상회한다.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민간 R&D 투자 증가율은 15.3%로, 이는 미국(6.3%)의 약 2.5배, 일본(8.2%)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다. 그런데 정부와 민간의 R&D 비용은 모두 기초연구보다 개발연구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 2006년도에 투자된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정부와 민간 R&D 단계별 비중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정부 R&D 단계별 비중('06)	23.4%	24.4%	52.2%
민간 R&D 단계별 비중('06)	11.9%	15.6%	72.5%

출처: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

경제성과 직결되어 있는 산업의 주체인 민간 부문이 개발연구에 치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정부의 R&D 예산조차 개발과 응용에 집중투자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예산 배분 현황이 중복과 불필요한 경쟁의 소지를 안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는데, 이는 2008년 8월 12일 심의에 부쳐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에서 예산배분의 기본방향 4가지¹¹⁶⁾ 가운데 “창의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 투자 확대”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데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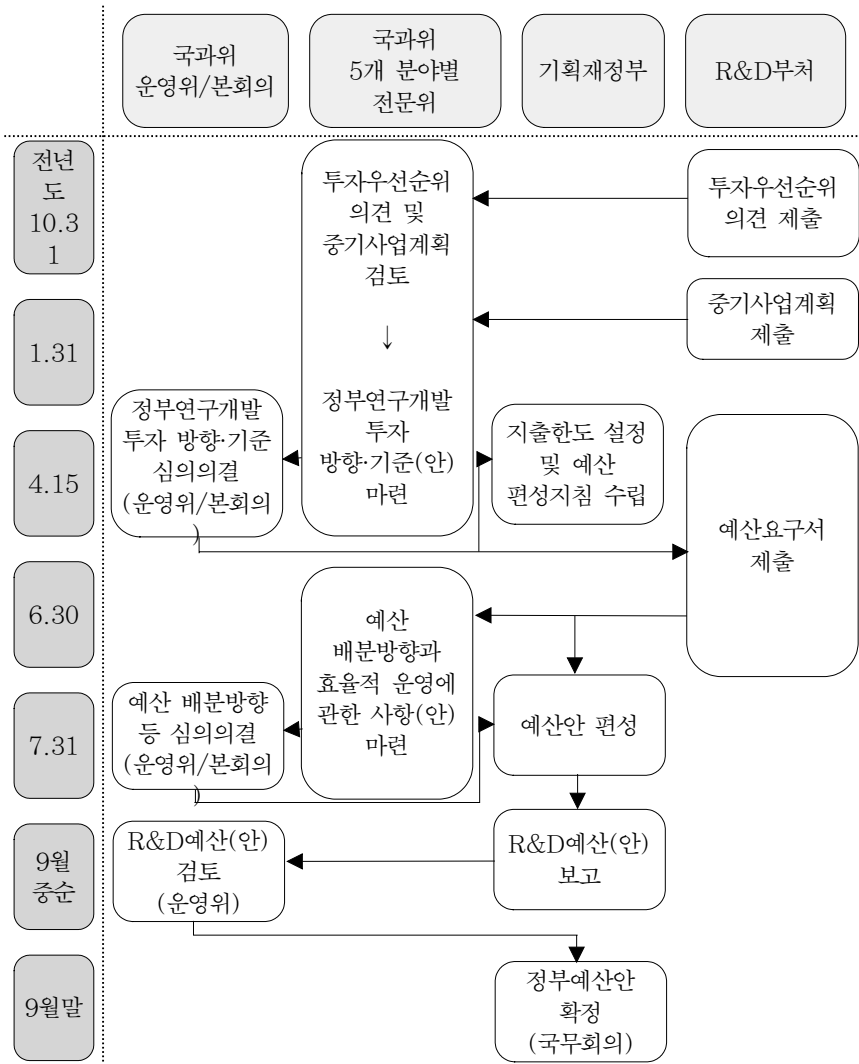
116) 나머지 세 항목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연계를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정부부처 역할분담 및 사업간 연계 강화”, “국가적 현안·전략분야 집중 지원”이다.

특히 정부는 기초연구 가운데에서도 개인과 소규모 집단연구 지원 비중이 낮아 창의적 연구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인식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2006년 현재 일본(13.4%, '05), 미국(14.3%, '06)의 약 1/2 수준이고, 영국(25.6%, '05)에 비해서는 약 1/3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개인·소규모 및 집단연구 지원 비중(7.6%)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한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정확하게 해야 할 것은 정부의 이러한 기초연구 투자 확대가 학문의 기초를 이루는 전 분야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술의 창출”이라는 과학기술 분야에만 뚜렷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5개 전문위원회가 <주력기
간산업기술><거대기술><국가주도기술><첨단융복합기술><사회기반기술>이
라는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로만 이루어져 있는 데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귀결이다. 그러나 한 국가의 연구개발비가, 특히 기초연구에 투자되는 연
구개발비가 과학기술이라는 제한된 영역이 아니라 학문의 전 기초영역에
투자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학문의
융합에 부응할 수 있으려면, 인문·사회 분야를 포함하도록 국가과학기술
위원회를 개편 또는 확대하는 작업이 불가피하다.

이 작업을 위한 토대는 사실 2008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
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했을
때 이미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듯이, 현재 4실 체
제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술 부문은 과학기술정책실과
학술연구정책실이 나란히 담당하고 있다.

[표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 절차



출처: 『국가연구개발사업 배분방향』(2008)

이 표에 의하면, R&D 예산 편성의 출발점은 R&D 관련 정부부처에서 제출하는 투자우선순위의견 또는 중기사업계획이다. 이 의견 및 사업

계획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과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방향』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주력기간산업기술전문위원회를 제외한 국과위의 4개 전문위원회에 모두 9개의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그 사업 계획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4〕 교육과학기술부 제출 R&D 예산배정사업 심의 현황

소관 전문위	사업명 (부처명)	예산(백만원)		투자등급
		'08예산	'09요구	
거대기술 전문위	우주발사체개발(교과부)	60,864	70,000	총사업비 사업
	우주센터건설(교과부)	50,682	9,000	총사업비 사업
	다목적실용위성개발 (교과부, 지경부 등)	102,280	107,000	총사업비 사업
국가주도 기술전문위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ITER, KSTAR 사업 포함) (교과부, 지경부)	59,000	122,800	전년수준유지 (국제분담금)
	원자력기술개발사업 (교과부)	133,900	126,000	투자확대
	기후변화대응 기초원천기술개 발사업[신규] (교과부)	-	20,000	타당성 인정(축소)
첨단융복합 기술전문위	미래기반기술개발 (교과부)	87,500	118,800	투자 확대
사회기반 기술 전문위	방사광가속기공동연구지원 (교과부)	18,500	20,000	투자 확대
	뇌과학원천기술개발 [신규](교과부)	-	7,076	타당성 인정 (축소)

출처: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방향』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은 모두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구성과 성격으로 인한 제한일 가능성이 크다. 20세기의 추격형 산업화 시대에 국가 연구개발비가 산업과 직결되는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양보하더라도, 국가의 연구개발비를 학문의 특정 분야가 독점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며, 더욱이 학문의 균형 발전을 통한 지식생태계의 보존과 육성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게 된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에서 인문사회 분야의 국가 R&D 참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연이다.

<부록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 연구책임자급
이상 연구위원 전공 현황

2007년 8월 현재

	전공별 연구위원 수(최종학위)	총원
과학	경제학(18), 경영학(8), 행정학(4), 과학기술학(3), 산업공학(3), 지리학(3)사회학(2), 환경공학(2), 구조공학(2)	52명
국토	도시및지역계획학(28), 지리학(8), 경제학(5), 행정학(5), 경영학(3), 교통공학(3), 지역경제학(2), 토목공학(2), 환경공학(2)	70명
대외	지역학(2), 경제학(40)	44명
산업	경제학(61), 경영학(3)	72명
에너지	경제학(38), 경영학(4)	44명
정보	경제학(29), 경영학(5), 사회학(3), 법학(2), 신문방송학(2)	44명
통일	정치학(21), 경제학(4), 경영학(2)	30명
KDI	경제학(45)	52명
교육	교육학(48), 철학(2)	53명
평가원	교육학(81), 문학(10), 철학(7), 이학(과학/수리과학)(4)	105명
교통	교통공학(25), 교통계획학(14), 도시공학(8), 경제학(5), 행정학(3), 토목공학(2)	64명
노동	경제학(22), 경영학(4), 사회학(6), 법학(3)	38명
농촌	농업경제학(50), 경제학(13)	68명
법제	법학(27)	27명
보건	보건학(16), 사회복지학(12), 경제학(11), 사회학(7), 통계학(3)	60명

	전공별 연구위원 수(최종학위)	총원
여성	사회학(14), 교육학(5), 경제학(4), 사회복지학(3), 경영학(2), 법학(2), 심리학(2), 여성학(2), 정치학(2)	44명
조세	경제학(26)	27명
직능원	교육학(31), 경제학(21), 사회학(8), 경영학(3), 행정학(2)	78명
청소년	교육학(11), 사회학(7), 심리학(5), 사회복지학(2)	32명
해양	경제학(9), 경영학(5), 수산학(5), 법학(4), 무역학(3), 산업공학(3), 농업경제학(2), 물류시스템공학(2), 행정학(2)	40명
행정	행정학(25), 정치학(3)	29명
형사	법학(16), 사회학(7), 심리학(2)	27명
환경	환경공학(13), 경제학(9), 생물학(8), 경영학(3), 화학공학(3), 환경계획학(3), 대기과학(2), 지리학(2), 지질학(2), 토목공학(2)	62명
총합		1,162명

- ※ 1.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동일전공 최종학위자가 1명인 경우 기술하지 않음.
 2. 총원은 2007. 8.기준으로 연구책임자급 이상의 현인원을 의미함.

참 고 문 헌

-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현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인문학』, 백의, 1994.
-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의 전통과 새로운 지평』, 계명대학교출판부, 2004.
- 김민희,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효율성 탐색』,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6권 제2호, 2007.
- 김영식, 『과학, 인문학 그리고 대학』, 생각의 나무, 2007.
- 김영한, 『과학 시대의 인문학』,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4.
- 김종기 외, 『생명가치와 환경윤리 학제 간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문화정책백서』, 2007.
- 박경하, 『국가산업에서의 인문학 기여도 평가지표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7.
- 박경하 외, 『人文學 振興을 위한 制度的 基盤形成 研究』인문사회연구회, 2002.
- 박경하 외, 『한국 인문진흥 정책 기반조성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
- 박금식, 『생명공학과 정보통신의 발달이 인문학적 사유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인문사회연구회, 2002.
- 박덕규 외, 『국내외 인문학 지원 체제 비교 연구』, 인문사회연구회, 2002.
- 박성수 외, 『21세기 인문지식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식공유체계의 재정립 및 활성화 방안』, 인문사회연구회, 2004.
- 박용태, 『과학기술과 사회과학의 연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7.

- 소광희 외, 『현대의 학문 체계: 대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민음사, 1994.
- 안삼환 외, 『인문학 활용 국가발전전략 수립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
- 염재호 외, 『한국 인문정책의 변동과정 및 정책과제 연구』, 인문사회연구회, 2002.
- 이종수, 『한국 학제간 연구 지원 사례 분석』, 『중앙행정논집』 제14권 제1호, 2000.
- 이태수 외, 『외국에서의 인문학의 학제간 연구·교육 및 인문진흥 관련 법 사례 조사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
- 전영평 외, 『선진국 인문학 진흥체계와 한국 인문정책 연구기관 운영방안』, 인문사회연구회, 2004.
- 정대현 외, 『표현 인문학』생각의 나무, 2000.
- 학술단체협의회,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현재와 미래』푸른숲, 1998.
-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 학술연구지원통계연보』, 2007.
-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진흥재단 소식지 1996』, 1996.
-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진흥재단 소식지 2008-7』, 2008.
- 한국학술협의회, 『인문정신과 인문학』, 아카넷, 2007.
- 홍성욱 외,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인문학 활용현황과 활성화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
- Advisory Board for Research Councils and UGC Working Party
Report (1982) The Support of University Scientific Research
- AHRB (2004) AHRB Strategic Plan 2004-9
- AHRC (2005) AHRC Delivery Plan
- AHRC (2005) Programme Specification of Diasporas, Migration
and Identities

AHRC (2005) Research Programme Specification of Landscape and Environment

AHRC (2005) The Bright Path: The Strategy for Arts and Humanities Research in the UK 20004-9

AHRC (2007) AHRC Code of Practice

AHRC (2007) Annual Report, www.ahrc.ac.uk

AHRC (2007) Research Programme Specification of AHRC Beyond Text: Performances, Sounds, Images, Objects Programme

AHRC (2008) Programme Specification of The New Dynamics of Ageing: An Interdisciplinary Research Programme

Anderson, Benedict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Barr, Nicholas A. and Crawford, I. 'The Dearing Report and the Government's Response: A Critique, Political Quarterly, 69 (1), pp 72-84

Bassnett, S. (2002) 'Is There Hope for the Humanities in the 21st Century?' Art and Humanities in Higher Education, Vol 1, no 1, pp 101-110

Conference Proceedings (2006)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in Europe: New challenges, New Opportunities

Corbyn, Z. (2008) 'AHRC Plans Spark Mixed Response', Times Higher Education 24, June

E.P. Thompson (1970) Warwick University LTD, London: Penguin Press

First Report from the Education, Science and Arts Committee,

- Session 1981-2, Expenditure Cuts in Higher Education
- Gibson, I. and Stocker, P. (2001) *Quinquennial Review of the Grant Awarding Research Councils*
- Gombrich, R. F. (2000) 'British higher Education Policy in the Last Twenty Years: The Murder of a Profession', Conference Paper at the Graduate Institute of Policy Studies (GRIPS)
- Graham, Gordon (2008) *Universities: The Recovery of An Idea*, Leicester: Societas
- Griffin, G. (2006) 'Balancing Agendas: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in Europe', *Arts and Humanities in Higher Education*, Vol 5, no 3, pp 229-241
- Hall, S. (1990) 'The Emergence of Cultural Studies and the Crisis of the Humanities', *October*, Vol 53, The Humanities as Social Technology, pp 11-23
- Hall, Stuart (1979) 'The Great Moving Right Show', *Marxism Today*, January
- Hall, Stuart and Jacques, Martin (1983) *The Politics of Thatcherism*, London: Lawrence and Wishart
- Hobsbawm, Eric (1977) 'Some Reflection on "The Break-up of Britain"', *New Left Review*, 105, pp 3-24
- Hobsbawm, Eric (1992)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use of Commons,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2007) *International Policies and Activities of the Research Councils: Government Response to the Committee's Ninth Report of Session 2006-7*, Seventh Special Report of

Session 2006-7

House of Commons,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2005)
The Work of Research Councils UK, Sixth Report of Session
2004-5

House of Commons,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2007)
Chief Executive of the 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Introductory Hearing

Jan Parker (2007) 'Future Priorities of the Humanities in
Europe: What Have the Humanities to Offer?': Report of a
round table conference held to draft a manifesto for the
European Commissioner and working paper for the EC
Working Part on Future Priorities for Humanities Research,
Art and Humanities in Higher Education, Vol 16, no 1, pp
123-7

Kogan, M. and Kogan D. (1983) Attack on Higher Education,
London: Kogan Page

Love, J.H. and McNicoll, I.H. (1990) 'The Economic Impact of
University Funding Cuts', Higher Education, 19, pp
481-496

Peckham, D.E. (2003) Lambert Review of Business-University
Collaboration, <<http://lambertreview.treasury.gov.uk/pdf/files/uni/uofwalesdcraddock160403.pdf>>

RCUK (2007) RCUK Delivery Plan 2008/9 to 2010/11

Readings, Bill (1996) The University in Ruins,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Tomlinson, S. (2005) Education in a Post-Welfare Society,

- Maidenhead: Open University Press
- Watson, D. and Amoah, M. (eds) (2007) *The Dearing Report: Ten Years On*, London: IOE, University of London
- Watson, D. and Bowden, R. (1997) 'Ends Without Means: The conservative Stewardship of UK Higher Education, 1979-1997', University of Brighton Education Research Centre Occasional Paper, University Brighton
- Watson, D. and Bowden, R. (1999) 'Why Did They Do It? The Conservatives and Mass Higher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Policy*, 14 (3), 243-66
- Allegre, C. *L'Age des savoirs, Pour une renaissance de l'université*, Gallimard, 1993.
- Barluet, S. *Edition de sciences humaines et sociales: le coeur en danger*, Paris, 2004.
- Courel, M-F. 'Lettre de la directrice du département Sciences de l'homme et de la société', 2006. 05.
- 'Lettre de la directrice du département Sciences humaines et sociales', 2006. 09.
- Renaut, A. 'Du système éducatif à l'emploi. Redéfinir les fonctions de l'université', *Cahiers français*, n.285, 1998.
- 'Bilan social, 2006', CNRS 인사부 자료.
- 'MCPI-CP', CNRS 인사부 자료, 2006.
- 'Note MCPI-CP', CNRS 인사부 자료, 2006.
- <http://www.cnrs.fr>
- 문부과학성(2002), 『문부과학백서2001년판』.
- 문부과학성(2003), 『문부과학백서2002년판』.

문부과학성(2007), 『문부과학백서2006년판』.

문부과학성(2008), 『문부과학백서2007년판』.

佐藤 學(사토마나부), 『학술의 동향』, 재단법인일본학술협력재단(2007).

江藤 裕之(에도우히로유키, 2006), 『나가노현 간호대학 기요8』, 나가노현
간호대학,

일본교직원조합(2003), 『일교조의 정책 제도요구와 제언 2003-2004년도
판』.

藤田英典(후지카히데노리) 大内裕和(오오우찌히로카즈), 『現代思想』2008년
4월 vol.36-4, 청토사(靑土社).

교육기본법개정정보센터(2006), 『이미 시작된“교육기본법 개정후의 세계”』.

荻谷剛彦(1995), 『대중교육사회의 향방, 학력주의와 평등신화의 전
후사』, 중공신서

中井浩一編(2001), 『논쟁·학력붕괴』, 중공신서라크레.

中井浩一編, 『現代思想2002年4月号』.

大沼宏史(2003), 『교육개혁의 원더란드』, 책의 샘사.

문부과학성 홈페이지<http://www.mext.go.jp/>

아사히신문 홈페이지<http://www.asahi.com/>

요미우리신문 홈페이지<http://www.yomiuri.co.jp/>

일본학술진흥회 홈페이지<http://www.jsps.go.jp/>

인문사회과학 진흥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www.jsps.go.jp/jinsha/index.html>

일본교직원조합 홈페이지<http://www.jtu-net.or.jp/>

위키백과사전 홈페이지<http://ja.wikipedia.org/>

〈성명서〉

일본학술회의(2001.4.26) 『21세기에 있어서 인문사회과학의 역할과 그
중요성』

전국대학교전(高專)교직원조합중앙집행위원회(2003.2.8) 「국립대학법인법
안에 대한 성명」

일본사립대학교직원조합연합(2003.6.2) 「국립대학법인법안 등 관계6법안
의 중의원가결에 대한 항의성명」

고등교육과 연구의 현재를 생각하는 모임(2003.6.30) 「국립대학법인법안에
의 아레제르 일본의 성명」

인문정책연구총서 2008-03

인문 정책과 경제사회·예술·과학기술 정책의 상호연계 증대방안

발 행 2008년 12월 일

발 행 인 김 세 원

발 행 처 경 제·인 문 사 회 연 구 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2동 1376-1

외교센터 301호, 302호

전화:(02)571-8312~5

인 쇄 처 양동문화사(02-2272-1767)

보고서 내용은 무단 복제를 금함.